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767-14

# 한국의 인권통계 2022

2022. 11.





# 목차

I. 인권통계의 작성 .....	1
1. 인권통계의 업데이트와 신규 작성 .....	3
1) 인권통계 업데이트 .....	3
2) 인권통계 신규 작성 .....	5
3) 인권통계 영역 변경과 보고형식 개선 .....	6
2. 인권통계의 구성 .....	7
1) 인권영역별 구성 .....	7
2) 권리유형별 구성 .....	7
3) 인권주제별 구성 .....	8
4) 인권영역·권리유형·인권주제별 구성 .....	9
II. 한국의 인권통계 2022 .....	11
1. 시민권과 참여 .....	13
선거투표율 .....	14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	15
여성 국회의원 비율 .....	16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비율 .....	17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	18
정치활동 공정성에 대한 인식 .....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	20
청년 국회의원 후보자 비율 .....	21
시위·집회 참여 경험률 .....	22
집회·결사의 자유 존중도 .....	23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찬성률 .....	24
청소년 거리집회 및 문화행사 참여율 .....	25
비영리민간단체 수 및 증감률 .....	26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기소율 .....	27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률 .....	28
사상·양심의 자유 존중도 .....	29
종교의 자유 존중도 .....	30
종교활동 참여율 .....	31
1인당 전자민원서비스 신청건수 .....	32
공공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존중도 .....	33
과세와 납세 공정성에 대한 인식 .....	34
대공무원·정치인 민원전달 경험률 .....	35
대정부·언론 의견제시 경험률 .....	36

병역의무이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	37
부패인식지수 .....	38
불매운동 참여 경험률 .....	39
서명운동 참여 경험률 .....	40
아동·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	41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인식 .....	42
온라인 의견피력 경험률 .....	43
전자정부발전지수 순위 .....	44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	45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만족도 .....	46
정당활동 참여율 .....	4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소통에 대한 인식 .....	4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투명성에 대한 인식 .....	4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	50
행정기관 공정성에 대한 인식 .....	51
행정서비스 이용률 .....	52
행정정보 공개율 .....	53
국가자긍심 .....	54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 수 .....	55
국가배상청구 인용률 .....	56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제출 경험률 .....	57
환경분쟁 배상결정률과 배상률 .....	58

<b>2. 사법정의 .....</b>	<b>59</b>
경찰 1인당 담당인구 .....	61
경찰예산 비율 .....	62
또래로부터의 갈취 피해율 .....	63
또래로부터의 따돌림 피해율 .....	64
또래로부터의 성희롱·성추행 피해율 .....	65
또래로부터의 심부름 피해율 .....	66
또래로부터의 욕설·모욕 피해율 .....	67
또래로부터의 폭행 피해율 .....	68
범죄 검거율 .....	69
범죄 발생률 .....	70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	71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	72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	7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74
성폭력 검거율 .....	75
성폭력 발생률 .....	76
성폭력에 대한 인식 .....	77
아동·청소년 거주지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	78
아동·청소년 성적 피해 경험률 .....	79
아동·청소년 인터넷 따돌림 피해율 .....	80

아동·청소년 인터넷 성희롱 피해율 .....	81
아동·청소년 인터넷 욕설·모욕 피해율 .....	82
아동·청소년 인터넷 협박 피해율 .....	83
안전권 존중도 .....	84
야간보행 두려움 .....	85
장애인 학대 및 폭력 피해율 .....	86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 .....	87
장애인학대 발생률 .....	88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	89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 .....	90
청소년 갈취 피해 경험률 .....	91
청소년 강제 성관계 피해 경험률 .....	92
청소년 강제 심부름 피해 경험률 .....	93
청소년 고의적 신체접촉 피해 경험률 .....	94
청소년 성적 모욕 피해 경험률 .....	95
청소년 스토킹 피해 경험률 .....	96
청소년 온라인 따돌림·괴롭힘 피해 경험률 .....	97
청소년 온라인 스토킹·성희롱 피해 경험률 .....	98
청소년 왕따 피해 경험률 .....	99
청소년 욕설 피해 경험률 .....	100
청소년 폭행 피해 경험률 .....	101
청소년 폭행위협 피해 경험률 .....	102
취약집단 실종 발생건수 .....	103
학교폭력 검거건수 .....	104
홍악범죄 발생률 .....	105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험률 .....	106
교내 교육비미납정보 공개 경험률 .....	107
교내 시험성적 공개 경험률 .....	108
교내 학생징계정보 공개 경험률 .....	109
국가기관 통신기록 수집·조사 반대율 .....	110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반대율 .....	111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존중도 .....	112
아동·청소년 인터넷 사생활공개 피해율 .....	113
청소년 복장검사 경험률 .....	114
청소년 소지품검사 경험률 .....	115
청소년 용모검사 경험률 .....	116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	117
사법기관 공정성에 대한 인식 .....	118
사법기관 투명성에 대한 인식 .....	119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	120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존중도 .....	121
국선변호 법률구조율 .....	122
기소율 .....	123
무죄율 .....	124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	125
법률구조율 .....	126
인구 10만 명당 변호사 수 .....	127
형사보상금 지급건수 .....	128
교정시설 수용정원 대비 수용자 비율 .....	129
구속영장 발부율 .....	130
수용자 1000명당 의료인력 수 .....	131
수용자 1인당 예산 .....	132
수용자 1인당 의료비 지출액 .....	133
수용자 사망률 .....	134
수용자 자살률과 자살미수율 .....	135
수용자 징벌률과 입건송치율 .....	136
수용자 청원율 .....	137
신체의 자유 존중도 .....	138
피의자 구속영장청구율과 구속률 .....	139
<b>3. 생존권과 빈곤 .....</b>	<b>141</b>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	142
개인경제상황 불안정자 비율 .....	143
고령자 국민연금 수급률 .....	14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145
기준 중위소득 .....	146
목돈 빌릴 사람이 없는 비율 .....	147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존중도 .....	148
복지혜택 공정성에 대한 인식 .....	149
비자발적 실업 경험률 .....	150
사회보장제도 향상에 대한 인식 .....	151
아동인구 1000명당 시설수용 보호아동 수 .....	152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 .....	153
장애보호대상아동 비율 .....	154
중병 대처 경제력 부족자 비율 .....	155
경제·사회적 분배구조 공정성에 대한 인식 .....	156
노인 상대적 빈곤율 .....	157
사회보장권 존중도 .....	158
상대적 빈곤율 .....	159
소득5분위배율 .....	160
소득분위별 소득성장률 .....	161
재정정책 재분배효과 지수 .....	162
지니계수 .....	163
<b>4. 주거와 교통 .....</b>	<b>165</b>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	166
노인 도로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 .....	167
도로교통사고 발생률 .....	168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169
아동·청소년 거주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	170
어린이 도로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 .....	171
어린이 스쿨존 도로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 .....	172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 .....	173
장시간 통근·통학인구 비율 .....	174
저상버스 보급률 .....	175
특별교통수단 보급대수 .....	176
거주 안전에 대한 인식 .....	177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	178
공과금 납부 어려움 경험률 .....	179
노인주거복지시설 수용률 .....	180
단칸방 및 지하·옥탑방 거주율 .....	181
도시가스 보급률 .....	182
무주택가구율 .....	183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	184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185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	186
자가 거주율 .....	187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단칸방 거주율 .....	188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주거시설별 사용률 .....	189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주거안전성 .....	190
주거권 존중도 .....	191
주거면적 .....	192
주거비 부담도 .....	193
주거환경 만족도 .....	194
주택 만족도 .....	195
주택 양호도 .....	196
주택보급률 .....	197
집세 상승으로 인한 이사 경험률 .....	198
최저주거기준 미달률 .....	199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 거주율 .....	200

<b>5. 가족 .....</b>	<b>201</b>
노인 학대피해 경험률 .....	202
노인학대 발생률 .....	203
노인학대 발생유형별 비율 .....	204
배우자폭력 피해율 .....	205
부모로부터의 욕설 경험률 .....	206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률 .....	207
아동 10만 명당 아동학대 검거건수 .....	208
아동학대 발생률 .....	209
아동학대 사망자 수 .....	210
인구 10만 명당 가정폭력 검거건수 .....	211

<b>6. 노동</b> .....	<b>213</b>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	215
고령자 고용률 .....	216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률 .....	217
고령자 기준고용률 적용대상 사업장 고령근로자 비율 .....	218
고령자 실업률 .....	219
사회적 약자 우대조치 찬성률 .....	220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221
여성 고용률 .....	222
여성 관리·전문직 비율 .....	223
여성 실업률 .....	224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	225
이민자·귀화자·외국인 경제활동참가율 .....	226
이민자·귀화자·외국인 고용률 .....	227
이민자·귀화자·외국인 실업률 .....	228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	229
장애인 고용률 .....	230
장애인 실업률 .....	231
장애인 취업률 .....	232
직장 내 여성 채용 차별에 대한 인식 .....	233
취업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	234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임금격차 .....	235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	236
임금5분위배율 .....	237
장애인근로자 임금 비율 .....	238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임금격차 .....	239
직장 내 여성 교육기회 차별에 대한 인식 .....	240
직장 내 여성 구조조정 차별에 대한 인식 .....	241
직장 내 여성 급여 차별에 대한 인식 .....	242
직장 내 여성 승진 차별에 대한 인식 .....	243
직장 내 여성 업무배치 차별에 대한 인식 .....	244
직장 내 여성차별에 대한 인식 .....	245
직장 내 차별 경험률 .....	246
경제활동참가율 .....	247
고용률 .....	248
노동권 존중도 .....	249
모성 고용률 .....	250
모성 취업시간 .....	251
실업률 .....	252
직장어린이집 수 .....	253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	254
청년실업률 .....	255
취업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정도 .....	256
고용 불안감 .....	257



고용보험 가입률 .....	258
귀화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	259
귀화 및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 .....	260
근로계약서 서면작성률 .....	261
근로여건 만족도 .....	262
근로환경 만족도 .....	263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와 출연액 .....	264
산업재해 사망률 .....	265
산업재해율 .....	266
아플 때 일한 경험률 .....	267
업무수행 중 폭력피해 경험률 .....	268
월간 근로시간 .....	269
월평균 임금 .....	270
육아휴직자 수 .....	271
일·가정 균형에 대한 인식 .....	272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	273
임금근로자 상여금 및 시간외수당 수혜율 .....	274
임금근로자 유급휴가 수혜율 .....	275
임금근로자 퇴직급여 수혜율 .....	276
작업위험요인 노출도 .....	277
장시간근로자 비율 .....	278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편의시설 설치 사업장 취업 비율 .....	279
저임금근로자 비율 .....	280
주관적 업무위험도 .....	281
청소년 부당노동 피해율 .....	282
청소년 부당노동피해 경험률 .....	283
최저임금 비율 .....	284
최저임금 수준 및 인상률 .....	285
출산전후휴가자 수 .....	286
공무원노동조합 조직률 .....	287
교원노동조합 조직률 .....	288
노동조합 조직률 .....	289
임금결정률 .....	290

<b>7. 건강과 보건 .....</b>	<b>291</b>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비율 .....	293
시도별 공공의료기관병상 비율 .....	294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 .....	295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	296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공공보건기관 인력 수 .....	297
시도별 필요의료 미충족률 .....	298
군 사고사망자 수 .....	299
노인 자살생각 이유 .....	300
노인 자살생각률 .....	301

사고사망률 .....	302
사형제도 폐지 찬성률 .....	303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304
자살률 .....	305
자살충동률 .....	306
장애인 자살생각률 .....	307
정신질환자 자살률 .....	308
정신질환자 초과사망비 .....	309
청소년 자살생각률 .....	310
청소년 자살시도율 .....	311
1인당 정신보건 예산액 .....	312
건강검진 수검률 .....	313
건강권 존중도 .....	314
결핵환자 발생률 .....	315
급성심정지 뇌기능회복률 .....	316
급성심정지 생존율 .....	317
기대수명 .....	318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319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	320
스트레스 인지율 .....	321
아동·청소년 수면 부족률 .....	322
아동·청소년 주관적 건강수준 .....	323
암 5년 상대생존율 .....	324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 .....	32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326
주관적 건강수준 .....	327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	328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 .....	329
식비 부족으로 인한 결식 경험률 .....	330
식생활안정성 확보가구 비율 .....	331
아침식사 결식률 .....	332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	333
유통식품 안전검사 부적합률 .....	334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 .....	335
학교 식중독 발생률 .....	336
건강보험 보장률 .....	337
공공의료기관 비율 .....	338
공공의료기관병상 비율 .....	339
공공의료비 지출률 .....	340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용률 .....	341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미진료 경험률 .....	342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만족도 .....	343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한 인식 .....	344
본인부담 의료비 .....	345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 .....	346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담당인구 .....	347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 .....	348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 .....	349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	350
인구 10만 명당 공공보건기관 인력 수 .....	351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	352
장애인 본인부담 의료비 .....	353
장애인 필요의료 미충족률 .....	354
중증외상환자 1시간 이내 응급실도착률 .....	355
모성사망비 .....	356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357
영아사망률 .....	358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	359
저체중아 비율 .....	360
조산아 비율 .....	361
청소년 출산율 .....	362

<b>8. 교육 .....</b>	<b>363</b>
교육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	364
소득수준별 교육비 부담도 .....	365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	366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	367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	368
교사로부터의 욕설 경험률 .....	369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률 .....	370
아동·청소년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인식 .....	371
아동·청소년 자퇴 충동률 .....	372
아동·청소년 학습시간 .....	373
장시간 학습 아동·청소년 비율 .....	374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아동·청소년 비율 .....	375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376
고등교육 이수율 .....	377
교사로부터의 존중감 .....	378
교원 1인당 학생 수 .....	379
교육권 존중도 .....	380
교육기회 충족도 .....	381
교육비 부담도 .....	382
기초학력 미달률 .....	383
성인 문해력 .....	384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수 .....	385
어린이집 취원율 .....	386
유치원 취원율 .....	387
장애 아동·청소년 사교육 참여율 .....	388

장애 아동·청소년 특수교육 만족도 .....	389
청소년 학교생활 만족도 .....	390
취학률 .....	391
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 .....	392
평생학습 참여율 .....	393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	394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	395
학급당 학생 수 .....	396
학비 마련 어려움 경험률 .....	397
<b>9. 문화·미디어·정보 .....</b>	<b>399</b>
난민 수용 찬성률 .....	401
난민 인정률 .....	402
난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403
남녀대우 공정성에 대한 인식 .....	404
노인 차별 경험률 .....	405
다른 인종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406
다문화 지향성 .....	407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408
북한이탈주민 차별 경험률 .....	40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도 .....	410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도 .....	411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412
여성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41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위협 인식 .....	414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415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에 대한 포용도 .....	416
장애인 차별 경험률 .....	417
장애인가정의 차별피해에 대한 인식 .....	418
장애인시설 설립 반대율 .....	419
장애인에 대한 포용도 .....	420
장애인차별 만연에 대한 인식 .....	421
전과자에 대한 포용도 .....	422
차별 경험률 .....	423
청소년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 .....	424
취약집단의 선출직 당선에 대한 태도 .....	425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존중도 .....	426
한부모가족 차별 경험률 .....	427
혐오표현 법적 규제 찬성률 .....	428
혐오표현 접촉 시 표현대상 .....	429
혐오표현 접촉경로 .....	430
혐오표현 접촉도 .....	431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존중도 .....	432
1인당 문화재정 .....	433

공공공연시설 비율	434
공연시설 장애인석 보유율	435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436
문화권 존중도	437
문화여가비 지출률	438
생활체육 참여율	439
여가비용 충족도	440
여가생활 만족도	441
여가여건 향상에 대한 인식	442
월평균 여가비 지출액	443
인구 10만 명당 공공도서관 수	444
인구 10만 명당 공연시설 수	445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446
인구 대비 공공체육시설 수와 면적	447
휴가 활용률	448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	449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450

## 10. 환경과 생태 ..... 451

1인당 도시공원 면적	452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	453
7대 도시 미세먼지(PM10) 농도	454
7대 도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	455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456
녹지환경 만족도	457
대기환경 만족도	458
도시 소음도	459
소음환경 만족도	460
시도별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 초과율	461
시도별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초과율	462
토양환경 만족도	463
환경권 존중도	464
환경분쟁조정 발생건수	465
환경성질환 유병률	466
환경예산 비율	467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율	468
수질오염사고 발생건수	469
하천환경 만족도	470

## 11. 가치와 의식 ..... 471

본인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472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473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474
정부의 인권침해 및 차별 대응에 대한 평가	475

차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	476
청소년의 가정 내 인권존중감 .....	477
청소년의 교내 인권존중감 .....	478
청소년의 사이버공간 내 인권존중감 .....	479
청소년의 한국사회 인권존중감 .....	480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 .....	481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경험률 .....	482
‘인권’ 접촉도 .....	483
인권교육 경험률 .....	484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	485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시 대처방법 .....	486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시 대처하지 않은 이유 .....	487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시 도움 요청 기관 .....	488
인권침해 및 차별 대처방법 인지도 .....	489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주도해야 하는 집단 .....	490
인권활동 참여율 .....	491
장애인 인권교육 경험률 .....	492
장애인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	493
장애인으로서의 존중감 .....	49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	495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 .....	496
혐오표현 접촉 시 대처방법 .....	497
효과적 인권증진 방안 .....	498

# I 인권통계의 작성





## 1 인권통계의 업데이트와 신규 작성

인권통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매년 작성하는 연례적 통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에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2019년에 처음으로 인권통계를 작성하였다. 2022년 인권통계는 2019년과 2020년, 2021년에 이어 네 번째로 작성된 것이다.

인권통계는 몇 가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작성된다. 먼저, 인권통계는 2018년에 개발된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는 11개 인권영역과 3개 권리유형, 41개 인권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의 영역·권리·주체에 부합하는 통계들을 대상으로 인권통계가 작성된다. 인권통계는 통계의 신뢰성을 갖추기 위하여 정부 부처를 포함하는 국가기관과 국제기구의 공식 통계로 작성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과 국가지표포털(index.go.kr)에서 제공되는 공인 통계를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 보고서나 연감에 수록된 자료도 이용된다. 인권통계는 대표성을 갖도록 국가 수준에서 작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또는 전국민 단위로 집계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다. 인권통계가 인권 상황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으려면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인권통계는 동일 반복 자료를 활용한 시계열 통계로 작성되기 때문에 인권 상황의 개선이나 악화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인권통계는 이용자의 통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만 포함하여 간결한 형태로 작성된다. 작성된 통계표에는 선별된 핵심 통계치만 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2022년 인권통계는 2021년에 작성된 통계를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함과 동시에 전수 검수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거나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한층 개선되었다. 업데이트 과정에서 자료 생산이나 통계 공표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인권통계에서 제외하였다. 「인권의식실태조사」가 2019년과 2020년, 2021년에 이어 4년째 실시됨에 따라 이 조사의 반복 문항 결과를 집계하여 4개년 시계열 통계로 작성하였다. 새롭게 발굴된 통계는 인권통계 적절성 검토를 거쳐 신규로 작성하였다.

### 1) 인권통계 업데이트

인권통계 업데이트는 2021년에 작성된 474건의 인권통계 전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최신 자료 공표 여부를 확인하여 업데이트가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자료 공표 상황에 따라 공표, 미공표, 공표 중단으로 통계를 구분하였다. 최신 자료가 공표된 경우 공표된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를 실시하였고, 자료 미공표 통계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중단하였다. 자료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집계되지 않아 공표 중단 상태에 있는 통계는 인권통

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전체 474건의 인권통계 중 343건이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되었다.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전에 작성된 통계의 수치가 정확한지 최신 자료로 확인하여 오류가 발견되면 모두 바로잡았다.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 산출방법이나 통계치를 변경하기도 하였고 이용된 자료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의 명칭도 더 적절한 형태로 변경하였다. 통계 변경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통계 변경사항

통계명	변경사항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존중도	조사문항 분리로 통계를 '사상·양심의 자유 존중도'와 '종교의 자유 존중도'로 분리
범죄 발생률	분모를 「추계인구」에서 「주민등록인구」로 변경
범죄 검거율	자료를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에서 검찰청 「범죄분석통계」로 변경
성폭력 검거율	자료를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에서 검찰청 「범죄분석통계」로 변경
성폭력 발생률	자료를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에서 검찰청 「범죄분석통계」로 변경
흉악범죄 발생률	분모 자료를 「추계인구」에서 「주민등록인구」로 변경
어린이 스쿨존 도로교통사고 발생률	사망률 통계를 추가하고 통계명을 '어린이 스쿨존 도로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로 변경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고령자 기준을 5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
고령자 고용률	고령자 기준을 5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
고령자 실업률	고령자 기준을 5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
장애인·북한이탈주민 우대조치 찬성률	통계명을 '사회적 약자 우대조치 찬성률'로 변경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율	통계를 변경(설치 외에 수당, 위탁도 포함)하고 통계명을 '직장 어린이집 의무이행률'로 변경
임금근로자 퇴직급여 지급률	통계명을 '임금근로자 퇴직급여 수혜율'로 변경
장애인 자살생각률과 자살생각 이유	통계명을 '장애인 자살생각률'로 변경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	분모 자료를 「등록외국인」에서 「장기체류외국인」으로 변경
장애아동청소년 보호자 특수교육 만족도	통계명을 '장애 아동·청소년 특수교육 만족도'로 변경
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과 취업률	통계명을 '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로 변경
동성애자에 대한 포용도	통계명을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도'로 변경
7대 도시 미세먼지(PM2.5) 농도	통계명을 '7대 도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로 변경
시도별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초과율	통계명을 ' 시도별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초과율'로 변경
장애인 존중감과 권리에 대한 인식	통계명을 '장애인으로서의 존중감'으로 변경

최근 여러 해 동안 공표되지 않거나, 조사문항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산출되지 않는 통계는 미공표 통계로 판단하고 인권통계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공표가 중단된 통계는 총 18건으로,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공표 중단 통계

자료	통계명
인권의식실태조사	학생 체벌 반대율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종교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시설 충족도
사회조사	건강보험료 부담도
	국민연금보험료 부담도
조정·심판사건통계	노동분쟁 해결률
지역사회건강조사	시도별 보건기관 이용률
한국복지패널조사	교육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노인 생활지원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보건 및 건강보험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빈곤층 생활지원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장애인 생활지원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주거지원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환경 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한국의사회복지지출

2) 인권통계 신규 작성

인권통계 업데이트에 이어 새로운 인권통계를 발굴하여 신규로 작성하였다. 이번에 신규로 작성한 통계는 총 10건으로, 「국가공무원인사통계」에서 1건, 「노인실태조사」에서 1건, 「사회조사」에서 3건, 「장애인삶패널조사」에서 4건, 그리고 OECD 자료에서 1건을 발굴하였다. 신규 작성 통계는 아래 <표 3>에 수록되어 있다.

<표 3> 신규 작성 통계

자료	통계명	자료	통계명
국가공무원인사통계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장애인삶패널조사	장애인 인권교육 경험률
노인실태조사	노인 자살생각 이유		장애인 필요의료 미충족률
사회조사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한 인식		장애인가정의 차별피해에 대한 인식
	사회보장제도 향상에 대한 인식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
	여가여건 향상에 대한 인식	OECD	최저임금 비율

### 3) 인권통계 영역 변경과 보고형식 개선

인권통계 전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자문한 결과 일부 인권영역의 명칭 변경이 제안되었고,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인권통계 작성에 반영하였다. 4개 영역에 대한 명칭 변경이 제안되었는데 이 제안에 따라 ‘거버넌스’를 ‘시민권과 참여’로, ‘물질적 생활수준’을 ‘생존권과 빈곤’으로, ‘건강’을 ‘건강과 보건’으로, ‘환경’을 ‘환경과 생태’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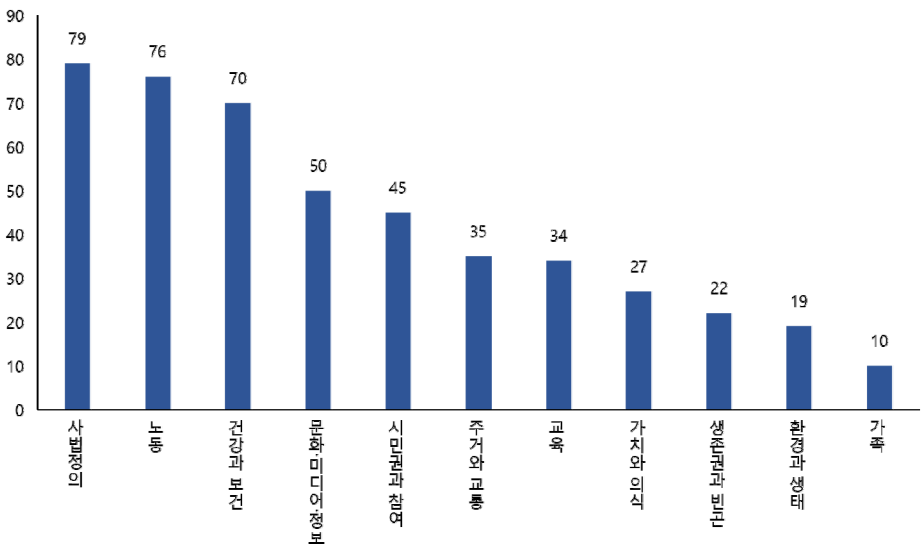
인권통계가 보고되는 형식도 최근의 통계 보고 동향에 맞게 개선하였다. 2021년까지는 간략한 통계정보(통계분류, 통계정의)에 그래프와 통계표만 제공하는 형태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계표와 통계정보(통계분류, 산출방법, 단위, 자료, 자료출처, 수록기간)에 더해 통계해설까지 작성하여 통계설명형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통계해설은 해당 통계가 나타내는 현상의 종단적 변화와 횡단적 비교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였다.

## 2 인권통계의 구성

인권통계는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체의 세 축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프레임워크, 즉 분류체계에 따라 작성된다. 이 체계에 따라 인권통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권영역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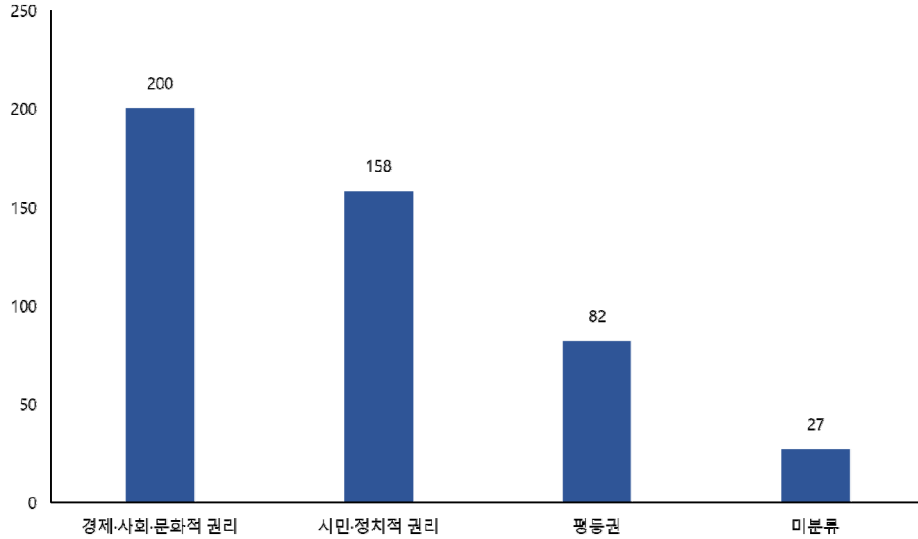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의 인권영역 구분에 따라 인권통계는 시민권과 참여, 사법정의, 생존권과 빈곤, 주거와 교통, 가족, 노동, 건강과 보건, 교육, 문화·미디어·정보, 환경과 생태, 가치와 의식 등 11개 영역으로 분류된다. 영역별 인권통계의 수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법정의 79건, 노동 76건, 건강과 보건 70건, 문화·미디어·정보 50건, 시민권과 참여 45건, 주거와 교통 35건, 교육 34건, 가치와 의식 27건, 생존권과 빈곤 22건, 환경과 생태 19건, 가족 10건 등으로 집계된다.



[그림 1] 인권영역별 통계 수

### 2) 권리유형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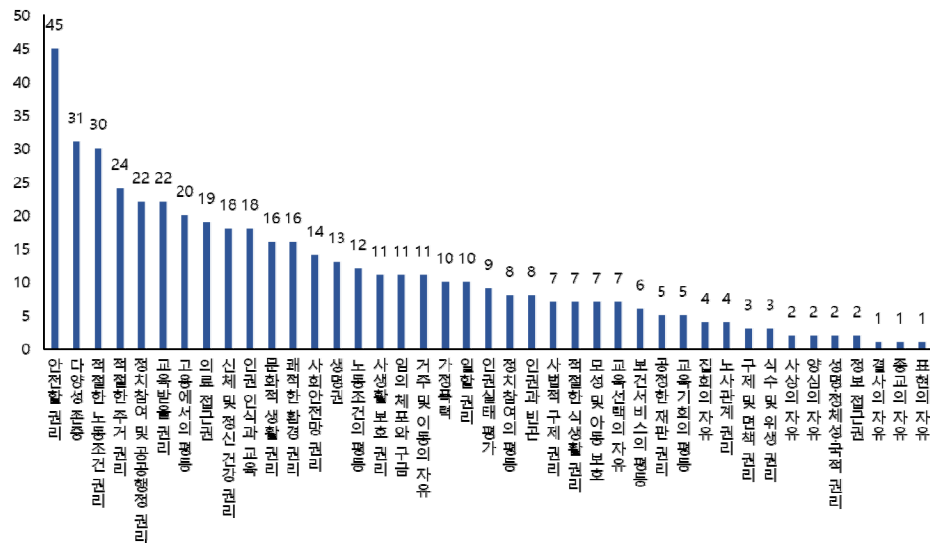
인권통계는 권리유형에 따라서도 분류된다. 인권통계 프레임워크에서는 권리의 유형을 평등권,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나누고 있다. 이 세 가지 권리유형에 따라 인권통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림 2]에서 살펴보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20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민·정치적 권리가 158건이며 평등권이 82건으로 가장 적다. 미분류된 27건은 권리유형이 없는 가치와 의식 영역에 포함된 통계이다.



[그림 2] 권리유형별 통계 수

### 3) 인권주제별 구성

인권통계 프레임워크는 인권영역별 권리유형에 따라 전체 41개의 인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의 인권주제별 인권통계 분포를 살펴보면, 안전할 권리(45건)가 가장 많고 이어 다양성 존중(31건),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30건), 적절한 주거 권리(24건),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22건)와 교육받을 권리(22건), 고용에서의 평등(20건) 등의 순으로 많다. 반면 집회의 자유(4건), 노사관계 권리(4건), 구제 및 면책 권리(3건), 식수 및 위생 권리(3건), 사상의 자유(2건), 양심의 자유(2건), 성명·정체성·국적 권리(2건), 정보 접근권(2건), 결사의 자유(1건), 종교의 자유(1건), 표현의 자유(1건) 등은 통계 수가 적은 주제들이다.



[그림 3] 인권주제별 통계 수

#### 4) 인권영역·권리유형·인권주제별 구성

이상의 인권통계 구성을 종합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인권영역·권리유형·인권주제별 통계 수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 수
시민권과 참여 (45)	평등권 (8)	정치참여의 평등	8
		집회의 자유	4
	시민·정치적 권리 (37)	결사의 자유	1
		사상의 자유	2
		양심의 자유	2
		종교의 자유	1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22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2
		구제 및 면책 권리	3
		사법정의 (79)	시민·정치적 권리 (79)
		사생활 보호 권리	11
		공정한 재판 권리	5
		사법적 구제 권리	7
		임의 체포와 구금	11
생존권과 빈곤 (2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2)	사회안전망 권리	14
		인권과 빈곤	8
주거와 교통 (35)	시민·정치적 권리 (11)	거주 및 이동의 자유	1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4)	적절한 주거 권리	24
가족 (10)	시민·정치적 권리 (10)	가정폭력	10
노동 (76)	평등권 (32)	고용에서의 평등	20
		노동조건의 평등	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44)	일할 권리	10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30
		노사관계 권리	4
		건강과 보건 (70)	평등권 (6)
	시민·정치적 권리 (13)	생명권	1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51)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18
		적절한 식생활 권리	7
		의료 접근권	19
		모성 및 아동 보호	7
교육 (34)	평등권 (5)	교육기획의 평등	5
	시민·정치적 권리 (7)	교육선택의 자유	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2)	교육받을 권리	22
문화·미디어·정보 (50)	평등권 (31)	다양성 존중	31
	시민·정치적 권리 (1)	표현의 자유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8)	문화적 생활 권리	16
		정보 접근권	2
환경과 생태 (1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9)	쾌적한 환경 권리	16
		식수 및 위생 권리	3
가치와 의식 (27)		인권실태 평가	9
		인권 인식과 교육	18
합계			467





## Ⅱ 한국의 인권통계 2022



# 1 시민권과 참여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체	통계번호	통계명	취약집단				
시민권과 참여	평등권	정치참여의 평등	CTZ-10101	선거투표율					
			CTZ-10102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CTZ-10103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여성				
			CTZ-10104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비율	여성				
			CTZ-10105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여성				
			CTZ-10106	정치활동 공정성에 대한 인식					
			CTZ-101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CTZ-10108	청년 국회의원 후보자 비율					
			시민·정치적 권리	집회의 자유		CTZ-20201	시위·집회 참여 경험률		
						CTZ-20202	집회·결사의 자유 존중도		
	CTZ-20203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찬성률							
	CTZ-20204	청소년 거리집회 및 문화행사 참여율				이동청소년			
	결사의 자유					CTZ-20301	비영리민간단체 수 및 증감률		
						사상의 자유	CTZ-20401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기소율	
							CTZ-20402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률	
	양심의 자유					CTZ-20501	사상·양심의 자유 존중도		
						CTZ-20502	종교의 자유 존중도		
	종교의 자유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CTZ-20601	종교활동 참여율	
				CTZ-20701	1인당 전자민원서비스 신청건수				
				CTZ-20702	공공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존중도				
				CTZ-20703	과세와 납세 공정성에 대한 인식				
				CTZ-20704	대공무원·정치인 민원전달 경험률				
				CTZ-20705	대정부·언론 의견제시 경험률				
				CTZ-20706	병역의무이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CTZ-20707	부패인식지수				
				CTZ-20708	불매운동 참여 경험률				
				CTZ-20709	서명운동 참여 경험률				
				CTZ-20710	아동·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이동청소년		
				CTZ-20711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인식		이동청소년		
				CTZ-20712	온라인 의견피력 경험률				
				CTZ-20713	전자정부발전지수 순위				
				CTZ-20714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CTZ-20715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만족도				
				CTZ-20716	정당활동 참여율				
				CTZ-2071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소통에 대한 인식				
				CTZ-2071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투명성에 대한 인식				
				CTZ-2071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CTZ-20720	행정기관 공정성에 대한 인식							
	CTZ-20721	행정서비스 이용률							
	CTZ-20722	행정정보 공개율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CTZ-20801	국가자긍심					
			CTZ-20802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 수					
			구제 및 면책 권리	CTZ-20901	국가배상청구 인용률				
CTZ-20902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제출 경험률								
CTZ-20903	환경분쟁 배상결정률과 배상률								

통계번호 CTZ-10101

통계명 선거투표율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평등권

정치참여의 평등

산출방법

단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분석」.

자료출처

수록기간 1996-2020

통계해설 정치참여의 대표적 지표인 투표율은 선거의 종류별로 집계된다.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2007년을 제외하면 70% 이상을 나타내지만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투표율은 60% 안팎에 그친다. 투표율은 대체로 20-30대에서 가장 낮고 나이가 들수록 높아져 60-70대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인다.

통계표 연령별 선거투표율, 1996-2020

연도	전체	연령별												
		18세	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70-79세	70세 이상	80세 이상
1996(b)	63.9	-	-	44.8	43.8	57.7	68.0	75.3	81.3	-	74.4	-	-	-
1997(a)	80.7	-	-	66.4	69.9	80.4	84.9	87.5	89.9	-	81.9	-	-	-
1998(c)	52.7	-	-	37.8	30.5	40.3	51.8	62.4	73.8	-	71.2	-	-	-
2000(b)	57.2	-	-	39.9	34.2	45.1	56.3	66.8	77.6	-	75.2	-	-	-
2002(a)	70.8	-	-	57.9	55.2	64.3	70.8	76.3	83.7	-	78.7	-	-	-
2002(c)	48.9	-	-	36.3	27.0	34.5	44.8	56.2	70.0	-	72.5	-	-	-
2004(b)	60.6	-	-	46.0	43.3	53.2	59.8	66.0	74.8	-	71.5	-	-	-
2006(c)	51.6	-	37.9	38.3	29.6	37.0	45.6	55.4	68.2	-	70.9	-	-	-
2007(a)	63.0	-	54.2	51.1	42.9	51.3	58.5	66.3	76.6	-	76.3	-	-	-
2008(b)	46.1	-	33.2	32.9	24.2	31.0	39.4	47.9	60.3	-	65.5	-	-	-
2010(c)	54.5	-	47.4	45.8	37.1	41.9	50.0	55.0	64.1	-	69.3	-	-	-
2012(a)	75.8	-	74.0	71.1	65.7	67.7	72.3	75.6	82.0	-	80.9	-	-	-
2012(b)	54.2	-	47.2	45.4	37.9	41.8	49.1	52.6	62.4	-	68.6	-	-	-
2014(c)	56.8	-	52.2	51.4	45.1	45.1	49.9	53.3	63.2	74.4	-	-	67.3	-
2016(b)	58.0	-	53.6	55.3	49.8	48.9	52.0	54.3	60.8	71.7	-	73.3	-	48.3
2017(a)	77.2	-	77.7	77.1	74.9	74.3	74.1	74.9	78.6	84.1	-	81.8	-	56.2
2018(c)	60.2	-	54.1	52.9	51.0	53.0	55.4	58.6	63.3	72.5	-	74.5	-	50.8
2020(b)	66.2	67.4	68.0	60.9	56.7	56.5	57.6	63.5	71.2	80.0	-	78.5	-	51.0

주: 1) 전체 투표율은 실제 투표 결과이고, 연령별 투표율은 선거 후 표본조사 결과임.

2) (a)는 대통령선거, (b)는 국회의원선거, (c)는 지방선거임.

통계번호 CTZ-10102

통계명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평등권

정치참여의 평등

산출방법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 (여성 고위공무원 수 ÷ 전체 고위공무원 수) × 100.

단위 %

자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사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4&tblId=DT\\_163002\\_A02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4&tblId=DT_163002_A025&conn_path=I3)

수록기간 2018-2021

통계해설 전체 고위공무원 중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율은 2018년 6.7%에서 2019년 7.9%, 2020년 8.5%, 2021년 10.0%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율은 2018년과 2021년 사이 일반직과 특정직에서는 높아졌지만 별정직에서는 절반으로 낮아졌다.

**통계표**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2018-2021

연도	전체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2018	6.7	6.9	3.9	22.9
2019	7.9	7.8	5.9	27.3
2020	8.5	8.9	6.8	7.1
2021	10.0	10.5	7.1	11.4

통계번호 CTZ-10103

통계명 여성 국회의원 비율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평등권

정치참여의 평등

산출방법 여성 국회의원 비율 = (여성 국회의원 수 ÷ 전체 국회의원 수) × 100.

단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통계」.

자료출처 <http://info.nec.go.kr>

수록기간 2004-2020

통계해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을 대표적으로 보여 준다. 국회에서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13.0%에서 2012년 15.7%, 2020년 19.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에서 여성의원은 59.6%로 절반을 넘는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는 여성의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통계표** 여성 국회의원 비율, 2004-2020

연도	전체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남성 의원 수(명)	여성 의원 수(명)	여성 의원 비율(%)	남성 의원 수(명)	여성 의원 수(명)	여성 의원 비율(%)	남성 의원 수(명)	여성 의원 수(명)	여성 의원 비율(%)
2004	260	39	13.0	233	10	4.1	27	29	51.8
2008	258	41	13.7	231	14	5.7	27	27	50.0
2012	253	47	15.7	227	19	7.7	26	28	51.9
2016	249	51	17.0	227	26	10.3	22	25	53.2
2020	243	57	19.0	224	29	11.5	19	28	59.6

통계번호 CTZ-10104

통계명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비율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평등권

정치참여의 평등

산출방법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비율 =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수 ÷ 국회의원 후보자 수) × 100.

단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통계」.

자료출처 <http://info.nec.go.kr>

수록기간 2004-2020

통계해설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여성 후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여성의 국회 참여 가능성도 높아진다.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비율은 2004년 11.5%, 2008년 16.5%, 2012년 13.0%, 2016년 15.8%로 등락하다가 2020년에 26.7%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직전 선거의 15.8%에 비해 10%p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 통계표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비율, 2004-2020

연도	국회의원 후보자 수(명)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수(명)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비율(%)
2004(17대)	1,356	156	11.5
2008(18대)	1,301	215	16.5
2012(19대)	1,090	142	13.0
2016(20대)	1,092	173	15.8
2020(21대)	1,402	374	26.7

주: 1)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합한 수치임.

통계번호 CTZ-10105

통계명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평등권

정치참여의 평등

산출방법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 (여성 위원 수 ÷ 전체 위원 수) × 100.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소속위원회여성참여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00400127&con\\_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00400127&con_n_path=I3)

수록기간 2011-2021

통계해설 여성의 공공부문 참여 수준은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위원의 비율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정부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2011년 24.8%에서 2014년 31.7%, 2018년 39.2%로 꾸준히 높아졌고 2019년에는 40.5%에 달하였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9.5%와 39.8%로 4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표**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2011-2021

연도	전체 위원 수(명)	여성 위원 수(명)	여성 참여율(%)
2011	7,647	1,900	24.8
2012	7,585	1,949	25.7
2013	6,873	1,902	27.7
2014	8,305	2,630	31.7
2015	7,543	2,575	34.1
2016	7,725	2,805	36.3
2017	7,901	3,028	38.3
2018	9,060	3,548	39.2
2019	8,700	3,522	40.5
2020	9,129	3,607	39.5
2021	9,450	3,765	39.8

주: 1) 각년 하반기 기준임.



통계번호 CTZ-10106

통계명 정치활동 공정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평등권

정치참여의 평등

산출방법 우리 사회의 정치활동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우리 사회에서 정치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27.7%에서 2020년 39.5%로 높아졌고 2021년에는 50.4%로 더욱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40대, 교육수준별로는 초졸 이하와 대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정치활동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27.7	26.4	26.5	26.5	29.0	32.4	-	31.7	30.2	26.9	27.6
2014	28.0	29.7	24.4	28.3	28.7	29.5	-	30.3	25.1	28.4	27.7
2015	30.0	32.5	25.4	27.2	30.9	36.7	-	39.1	32.1	30.6	27.7
2016	26.9	26.4	21.5	26.0	31.4	29.7	-	31.6	29.9	26.6	26.2
2017	28.0	26.0	26.0	28.7	30.3	28.7	-	32.7	28.1	27.5	28.1
2018	30.0	30.4	28.2	30.4	31.4	29.4	-	28.8	31.3	32.0	28.4
2019	32.2	35.8	32.5	30.2	31.5	31.1	-	20.9	27.4	33.1	32.6
2020	39.5	43.8	40.0	38.1	37.4	-	39.0	41.4	38.9	37.4	41.2
2021	50.4	48.7	49.3	52.7	48.3	-	52.1	51.4	48.8	49.5	51.4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10107

통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평등권

정치참여의 평등

산출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이 공정한지에 대해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2&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46.2%에서 2017년 55.2%로 높아졌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3.6%와 66.7%로 더욱 높아졌다. 연령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 공정성을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교육수준별로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통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46.2	40.3	40.6	47.4	50.3	55.9	-	55.2	47.1	44.9	46.0
2014	46.5	44.4	41.9	46.9	49.7	50.6	-	46.0	45.8	46.6	46.4
2015	44.4	42.7	40.8	39.5	47.9	55.0	-	59.5	46.8	45.1	41.3
2016	47.9	42.7	40.2	47.1	53.0	59.0	-	58.2	51.5	48.8	45.2
2017	55.2	55.0	51.5	55.4	56.5	58.2	-	57.3	54.9	55.6	54.7
2018	58.9	63.4	58.2	55.9	58.7	58.5	-	59.2	55.0	57.1	60.8
2019	53.5	53.5	51.4	51.1	55.5	56.6	-	64.2	57.2	52.1	53.6
2020	63.6	63.2	63.1	63.6	63.6	-	64.4	67.4	64.2	61.9	64.4
2021	66.7	66.7	67.1	67.4	65.8	-	66.6	66.5	68.2	67.2	66.1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10108

통계명 청년 국회의원 후보자 비율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평등권

정치참여의 평등

산출방법 청년 국회의원 후보자 비율 = (청년 국회의원 후보자 수 ÷ 국회의원 후보자 수) × 100.

단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통계」.

자료출처 <http://info.nec.go.kr>

수록기간 2004-2020

통계해설 청년 국회의원 후보자 비율은 청년층의 정치참여 수준을 나타낸다.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중 30세 미만 후보자의 비율은 2004년 0.9%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2.4%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 서는 청년 후보자 비율이 1.9%로 감소하였다.

**통계표** 청년국회의원후보자 비율, 2004-2020

연도	국회의원 후보자 수(명)	청년 국회의원 후보자 수(명)	청년 국회의원 후보자 비율(%)
2004(17대)	1,356	12	0.9
2008(18대)	1,301	17	1.3
2012(19대)	1,090	18	1.7
2016(20대)	1,092	26	2.4
2020(21대)	1,402	27	1.9

주: 1)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합한 수치임.  
2) 청년 국회의원 후보자는 30세 미만 후보자임.

통계번호 CTZ-20201

통계명 시위·집회 참여 경험률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집회의 자유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시위나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7&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시위나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6년까지 10% 미만에 그치다가 2017년에 크게 늘어나 14.4%까지 높아졌다. 이후 2018년에 4.9%까지 낮아졌으나 다시 늘어나 2021년에는 11.3%까지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시위·집회 참여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7.5	7.5	6.8	8.4	8.3	5.5	-	6.6	8.7	8.3	6.3
2014	9.2	7.5	8.2	8.7	11.7	10.4	-	10.0	11.6	10.0	7.9
2015	7.6	6.4	7.8	8.8	6.7	8.4	-	8.4	8.8	7.5	7.3
2016	6.9	7.9	7.8	7.5	5.7	5.1	-	7.0	7.4	6.2	7.6
2017	14.4	18.0	16.7	15.1	11.3	10.4	-	8.8	5.8	13.7	16.8
2018	4.9	5.4	5.2	5.1	4.8	3.5	-	2.6	4.0	5.0	5.0
2019	8.9	8.9	7.6	9.9	8.8	9.4	-	11.5	12.7	8.5	8.8
2020	9.8	9.8	9.3	9.1	11.3	-	9.7	12.4	8.4	10.2	9.2
2021	11.3	12.4	9.6	8.8	11.0	-	13.2	16.0	13.7	12.7	9.3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202

통계명 집회·결사의 자유 존중도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집회의 자유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집회·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집회·결사의 자유가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79.8%, 2020년 83.3%, 2021년 78.7%, 2022년 81.0%로 80% 안팎 수준에 있다. 이 비율은 성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집회·결사의 자유 존중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79.8	81.2	78.6	79.8	82.1	79.6	77.6	80.4	78.8	78.9	80.9	84.7
2020	83.3	83.9	82.8	85.6	88.5	87.4	79.9	78.6	77.8	82.6	86.7	87.7
2021	78.7	78.5	79.0	78.4	80.7	80.3	76.6	78.4	80.6	77.6	78.7	83.3
2022	81.0	80.5	81.5	81.6	79.2	80.0	79.8	83.0	83.9	80.3	80.3	84.5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203

통계명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찬성률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집회의 자유

산출방법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 또는 제한하는 것에 대해 ‘보장해야 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64.4%, 2020년 69.1%, 2021년 75.3%, 2022년 72.2%로 70% 안팎 수준에서 등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약간 더 높다.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찬성률,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64.4	65.1	63.6	78.0	74.6	68.6	59.0	48.8	50.2	62.9	72.2	68.5
2020	69.1	72.3	65.9	77.4	74.3	72.6	65.3	61.3	57.6	66.1	76.7	85.8
2021	75.3	76.5	74.2	80.0	79.1	77.3	76.1	68.5	66.0	75.5	78.5	87.3
2022	72.2	73.7	70.7	80.0	76.0	74.4	72.6	63.9	61.6	71.4	76.4	84.5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204

통계명 청소년 거리집회 및 문화행사 참여율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집회의 자유

산출방법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가끔 참여한다' 또는 '자주 참여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8\\_1&conn\\_pat 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8_1&conn_pat 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거리집회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6-9% 수준이다. 최근으로 한정하여 보면 2019년 9.1%, 2020년 6.5%, 2021년 5.7%로 하락 추세를 보인다.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높다.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고 학생의 참여율이 특성화계고 학생보다 약간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거리집회 및 문화행사 참여율,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3	8.1	8.2	8.0	9.4	-	7.2	5.1
2014	7.2	6.0	8.5	7.7	-	6.9	5.9
2015	6.7	6.0	7.3	7.4	-	6.2	5.1
2016	7.3	6.7	7.8	8.3	6.4	6.7	5.1
2017	17.2	14.0	20.7	16.4	17.8	18.6	14.7
2018	12.2	10.3	14.2	11.5	12.7	13.2	10.4
2019	9.1	7.8	10.7	8.3	9.9	9.8	10.2
2020	6.5	5.6	7.5	6.0	7.0	7.5	4.9
2021	5.7	4.8	6.7	5.1	6.3	6.5	5.5

주: 1)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301

통계명 비영리민간단체 수 및 증감률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결사의 자유

산출방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  
간단체의 수와 전년 대비 증감률임

단위 개소, %

자료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6](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6)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전국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2000년 2524개소에서 2010년 9603개소로 4배가량  
증가하였고 이후 계속 늘어나 2021년에는 1만 5458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새로 설립  
되는 신규 단체의 수는 최근 크게 감소하였다. 과거에는 500개 이상의 단체가 매년 설립  
되었으나 2017년 이후로는 매년 300-400개의 단체가 신규로 설립되고 있다.

**통계표 비영리민간단체 수 및 증감률, 2000-2021**

연도	누적 단체 수 (개소)	신규 단체 수 (개소)	전년 대비 증감률(%)	연도	누적 단체 수 (개소)	신규 단체 수 (개소)	전년 대비 증감률(%)
2000	2,524	-	-	2011	10,209	606	6.3
2001	3,451	927	36.7	2012	10,889	680	6.7
2002	3,972	521	15.1	2013	11,579	690	6.3
2003	4,588	616	15.5	2014	12,252	673	5.8
2004	5,232	644	14.0	2015	12,894	642	5.2
2005	5,953	721	13.8	2016	13,464	570	4.4
2006	6,699	746	12.5	2017	13,933	469	3.5
2007	7,241	542	8.1	2018	14,275	342	2.5
2008	8,175	934	12.9	2019	14,699	424	3.0
2009	9,003	828	10.1	2020	15,051	352	2.4
2010	9,603	600	6.7	2021	15,458	407	2.7



통계번호 CTZ-20401

통계명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기소율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사상의 자유

산출방법 기소율 = (기소인원 ÷ 전체 처분인원) × 100.

단위 %

자료 검찰청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4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45)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중 기소 처분된 사람들의 비율은 2005-2007년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까지 줄곧 50%를 웃돌았다. 하지만 이 비율은 2014년에 30%대로 낮아졌고 2018년부터는 10% 내외로 떨어졌다.

**통계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기소율, 2000-2021

연도	처분인원(명)				기소율 (%)	연도	처분인원(명)				기소율 (%)
	기소	불기소	기타	합계			기소	불기소	기타	합계	
2000	169	142	19	330	51.2	2011	91	62	18	171	53.2
2001	133	93	8	234	56.8	2012	110	82	18	210	52.4
2002	154	100	11	265	58.1	2013	197	25	38	260	75.8
2003	111	51	1	163	68.1	2014	83	134	53	270	30.7
2004	81	38	4	123	65.9	2015	73	80	30	183	39.9
2005	41	41	2	84	48.8	2016	35	97	10	142	24.6
2006	34	77	1	112	30.4	2017	27	84	7	118	22.9
2007	36	47	8	91	39.6	2018	26	243	8	277	9.4
2008	42	23	5	70	60.0	2019	15	278	13	306	4.9
2009	51	21	7	79	64.6	2020	26	137	16	179	14.5
2010	76	62	11	149	51.0	2021	41	42	226	309	13.3

주: 1) 불기소에는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포함되고, 기타에는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 보류, 타관 이송 등이 포함됨.

통계번호 CTZ-20402

통계명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률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사상의 자유

산출방법 국가보안법을 유지 또는 폐지하는 것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22.7%에서 2020년 23.3%, 2021년 25.9%, 2022년 29.0%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여성,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성률도 낮게 나타난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률,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22.7	25.7	19.6	18.8	24.2	30.1	25.5	16.4	17.5	19.7	26.6	37.8
2020	23.3	25.0	21.7	23.9	25.3	30.6	24.7	15.9	15.2	20.7	28.9	37.0
2021	25.9	27.3	24.5	25.7	27.9	31.8	30.6	17.7	15.6	23.9	31.2	42.4
2022	29.0	31.6	26.5	32.3	34.1	33.1	30.2	21.2	18.3	27.5	34.4	34.7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501

통계명 사상·양심의 자유 존중도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양심의 자유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사상·양심의 자유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사상·양심의 자유가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2년 84.9%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남성 84.4%, 여성 85.4%로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연령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 고졸 및 대졸, 대학원졸 이상의 순으로 높아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사상·양심의 자유 존중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88.2	88.4	88.0	84.9	89.6	87.9	87.8	90.4	89.4	86.8	88.9	90.8
2020	90.1	90.3	89.9	89.2	91.9	92.3	88.6	89.2	87.8	89.9	91.5	90.5
2021	88.6	89.0	88.2	88.9	88.8	89.0	88.1	88.5	89.6	88.0	88.8	88.3
2022	84.9	84.4	85.4	84.5	82.6	84.3	84.9	86.8	88.2	84.2	84.4	80.5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21년까지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를 질문함.

통계번호 CTZ-20502

통계명 종교의 자유 존중도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종교의 자유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2년 91.0%로 높게 나타난다. 이 비율은 남녀 모두 91.0%로 차이가 없다. 연령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학원졸 이상 학력층이 97.0%로 다른 학력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종교의 자유 존중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88.2	88.4	88.0	84.9	89.6	87.9	87.8	90.4	89.4	86.8	88.9	90.8
2020	90.1	90.3	89.9	89.2	91.9	92.3	88.6	89.2	87.8	89.9	91.5	90.5
2021	88.6	89.0	88.2	88.9	88.8	89.0	88.1	88.5	89.6	88.0	88.8	88.3
2022	91.0	91.0	91.0	90.1	90.1	90.6	90.7	92.4	92.4	91.1	90.1	97.0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21년까지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를 질문함.

통계번호 CTZ-20601

통계명 종교활동 참여율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종교의 자유

산출방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7년까지 16-18%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부터 14% 안팎 수준으로 낮아졌다. 최근으로 한정해서 보면 2020년과 2021년 공히 14.7%로 나타난다. 종교활동 참여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종교활동 참여율,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2013	17.9	15.6	20.3	12.7	15.0	18.3	23.0	21.8	-
2014	18.2	14.5	22.2	15.1	14.9	17.2	22.0	24.1	-
2015	17.7	13.8	21.7	16.8	14.4	19.3	17.0	22.1	-
2016	16.4	11.9	21.2	12.8	13.9	15.1	20.2	21.7	-
2017	16.0	12.2	19.9	10.1	14.4	15.6	20.2	19.9	-
2018	14.4	10.8	18.1	8.4	13.8	12.7	17.0	21.3	-
2019	13.8	11.6	16.1	9.2	12.5	14.5	16.1	16.9	-
2020	14.7	10.5	18.8	10.6	12.0	15.2	16.1	-	17.0
2021	14.7	11.7	17.6	11.2	13.3	13.2	15.8	-	17.7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01

통계명 1인당 전자민원서비스 신청건수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1인당 전자민원서비스 신청건수 = 연간 신청건수 ÷ 총인구.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임.

단위 건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26](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26)

수록기간 2002-2021

통계해설 국민의 정부민원포털(<https://www.gov.kr>) 서비스 신청건수는 2005년 1000만 건에 도달한 후 매년 급성장하여 2008년에는 5000만 건을 넘어섰다. 이후 2019년까지는 6000-7000만 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억 1300만 건과 1억 5800만 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민 1인당으로는 보면 2005년 0.22건에서 2021년 3.06건으로 약 14배 증가하였다.

**통계표** 1인당 전자민원서비스 신청건수, 2002-2021

연도	연간 신청건수	1인당 신청건수	연도	연간 신청건수	1인당 신청건수
2002	1,437,612	0.03	2012	68,735,863	1.35
2003	7,734,925	0.16	2013	64,406,624	1.26
2004	7,799,409	0.16	2014	63,435,386	1.24
2005	10,839,656	0.22	2015	65,191,141	1.27
2006	22,467,762	0.46	2016	58,460,802	1.13
2007	30,124,713	0.61	2017	61,893,547	1.20
2008	53,503,010	1.08	2018	68,359,627	1.32
2009	63,131,924	1.27	2019	79,889,349	1.54
2010	62,347,405	1.23	2020	113,231,243	2.18
2011	68,261,760	1.35	2021	158,268,426	3.06

통계번호 CTZ-20702

통계명 공공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존중도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공공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공공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59.7%, 2020년 65.8%, 2021년 67.3%, 2022년 71.5%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공공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존중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59.7	59.1	60.3	67.6	56.3	54.4	56.4	62.9	64.8	58.9	58.0	59.6
2020	65.8	64.2	67.3	72.5	65.8	65.8	60.0	65.6	66.6	65.4	65.9	64.4
2021	67.3	66.8	67.8	69.9	66.3	66.5	66.9	67.2	68.2	67.0	67.4	62.8
2022	71.5	70.8	72.2	73.9	70.2	69.5	69.9	73.0	74.0	71.9	70.7	61.0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03

통계명 과세와 납세 공정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우리 사회의 과세와 납세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우리 사회의 과세와 납세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7년까지 30% 후반대였다가 2018년에 40%를 넘어섰다. 이 비율은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57.4%로 높아졌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400-500만 원 미만 소득계층에서 가장 낮고 600만 원 이상 소득계층에서 가장 높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과세와 납세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13	37.6	36.0	31.8	39.9	39.4	43.1	-	38.6	38.1	35.6	38.9	39.7	34.7	36.9
2014	35.8	34.6	31.0	35.7	39.7	38.6	-	37.1	30.9	32.6	35.9	37.5	35.7	42.2
2015	38.5	37.6	33.8	35.6	42.6	45.7	-	39.7	41.6	36.6	36.5	36.1	40.5	42.7
2016	36.4	34.8	32.0	34.5	40.4	41.9	-	34.0	31.7	35.5	38.7	36.2	37.8	36.8
2017	35.8	33.9	33.4	34.8	37.2	40.8	-	38.6	37.5	35.3	37.0	34.5	37.7	32.7
2018	40.1	41.3	38.2	36.9	43.6	40.7	-	42.3	32.5	37.9	38.0	43.1	40.5	43.1
2019	45.8	45.7	46.8	45.2	44.2	47.4	-	46.2	45.1	47.9	43.1	46.0	44.5	47.5
2020	52.1	52.9	48.3	51.6	52.5	-	54.0	52.1	51.7	47.5	51.6	49.0	56.3	55.3
2021	57.4	56.1	56.3	55.5	59.5	-	58.2	58.6	57.5	58.1	53.6	48.5	58.8	62.5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04

통계명 대공무원·정치인 민원전달 경험률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민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7&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민원을 전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까지 9-10%였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5-7%로 낮아졌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0.4%와 11.7%로 높아졌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민원전달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대공무원·정치인 민원전달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9.4	8.2	8.9	10.4	10.5	8.0	-	8.6	9.7	10.1	8.5
2014	10.3	8.2	10.3	9.5	12.2	11.9	-	9.7	11.2	11.0	9.5
2015	9.1	7.0	9.8	10.2	8.3	10.5	-	8.9	11.2	8.9	9.1
2016	6.1	4.9	6.5	7.1	6.5	4.9	-	7.6	6.3	5.4	6.7
2017	5.6	4.6	5.3	6.8	4.7	6.8	-	7.2	4.4	5.7	5.6
2018	4.7	4.0	5.3	5.3	5.0	3.5	-	3.6	4.5	4.4	5.0
2019	7.4	8.0	7.3	6.5	7.9	7.0	-	7.0	9.4	6.9	7.6
2020	10.4	9.4	9.7	11.1	10.9	-	10.6	12.6	10.5	10.9	9.5
2021	11.7	13.1	9.7	10.5	10.8	-	13.1	15.6	13.3	13.1	9.9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05

통계명 대정부·언론 의견제시 경험률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정부나 언론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7&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정부나 언론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4년 9.5%에서 2018년 4.8%로 낮아졌다. 하지만 2019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0.8%와 12.5%로 높아졌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초졸 이하 학력층에서 가장 높고 대졸 이상 학력층에서 가장 낮다.

통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대정부·언론 의견제시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8.1	8.6	7.2	9.0	7.9	7.2	-	7.9	7.6	8.5	7.6
2014	9.5	8.1	9.2	9.2	11.5	9.1	-	10.5	11.9	9.8	8.5
2015	8.8	7.4	11.1	8.3	8.3	8.8	-	7.6	9.0	8.1	9.6
2016	6.7	6.5	8.6	6.7	6.0	5.4	-	6.4	7.4	5.9	7.6
2017	6.4	6.9	5.9	6.6	5.7	7.5	-	8.0	7.5	7.0	5.6
2018	4.8	4.0	5.8	6.1	4.4	3.2	-	2.3	4.0	4.1	5.6
2019	7.8	7.6	8.4	7.9	7.5	7.3	-	9.6	11.7	6.3	8.4
2020	10.8	10.4	11.2	10.5	12.3	-	10.1	12.6	9.6	10.5	11.0
2021	12.5	13.8	9.9	10.9	12.8	-	13.9	16.3	14.0	14.3	10.5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06

통계명 병역의무이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우리 사회의 병역의무이행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21

통계해설 우리 사회의 병역의무이행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 48.2%에서 2018년 53.7%로 늘어났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3.0%과 65.2%로 더욱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녀 간에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20대 이하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병역의무이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15-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2015	48.2	48.9	47.6	49.7	43.0	44.4	51.5	55.6	-
2016	47.5	45.7	49.3	45.0	43.7	44.4	52.2	54.2	-
2017	49.5	50.4	48.6	44.3	48.3	49.4	52.7	53.3	-
2018	53.7	53.6	53.7	51.8	53.6	52.7	56.2	53.8	-
2019	51.2	53.0	49.4	51.2	48.8	51.7	51.3	53.4	-
2020	63.0	61.0	64.9	62.4	59.8	61.4	63.1	-	66.1
2021	65.2	65.0	65.2	62.0	67.3	64.9	63.3	-	67.1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07

통계명 부패인식지수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점수임. 0-100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나타냄.

단위 점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3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35)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평가한 한국 정부의 부패인식지수(청렴도)는 2000년 40점에서 2005년 50점으로 높아졌고 이후 2017년까지 50점 중반대를 등락하였다. 2018년부터는 매년 상승하여 2021년에는 62점으로 높아졌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국제순위는 2000년까지만 해도 상위 53.3%(90개국 중 48위)에 그쳤지만 이후 꾸준히 올라 2021년에는 상위 17.8%(180개국 중 32위)로 도약하였다.

**통계표** 부패인식지수와 부패인식지수 한국순위, 2000-2021

연도	부패인식지수 (점)	조사대상 국가 수	한국순위	한국순위 백분율(%)	연도	부패인식지수 (점)	조사대상 국가 수	한국순위	한국순위 백분율(%)
2000	40	90	48	53.3	2011	54	183	43	23.5
2001	42	91	42	46.2	2012	56	176	45	25.6
2002	45	102	40	39.2	2013	55	177	46	26.0
2003	43	133	50	37.6	2014	55	175	44	25.1
2004	45	146	47	32.2	2015	54	168	43	25.6
2005	50	159	40	25.2	2016	53	176	52	29.5
2006	51	163	42	25.8	2017	54	180	51	28.3
2007	51	180	43	23.9	2018	57	180	45	25.0
2008	56	180	40	22.2	2019	59	180	39	21.7
2009	55	180	39	21.7	2020	61	180	33	18.3
2010	54	178	39	21.9	2021	62	180	32	17.8

주: 1) 2011년까지는 10점 만점, 2012년부터는 100점 만점임. 시계열 비교를 위해 10점 만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함.  
2) 한국순위 백분율 = (한국순위 ÷ 조사대상국가 수) × 100.

통계번호 CTZ-20708

통계명 불매운동 참여 경험률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불매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7&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불매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8년까지 10% 안팎에 그치다가 2019년에 43.5%로 급증하였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4.0%와 15.6%로 줄면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불매운동 참여율은 대체로 20대 이하 연령층과 대졸 이상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불매운동 참여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9.8	11.1	11.3	10.7	8.3	5.7	-	6.8	7.6	10.1	10.3
2014	12.8	12.7	14.0	12.2	12.2	12.7	-	10.4	13.7	13.0	12.7
2015	9.2	9.3	9.7	10.1	7.9	8.7	-	7.1	9.1	8.8	10.0
2016	10.3	11.2	14.1	10.7	8.7	5.4	-	7.3	6.9	9.0	12.7
2017	8.5	9.5	10.6	9.1	6.6	6.4	-	7.5	5.2	8.7	8.9
2018	5.9	6.8	8.2	5.3	5.1	3.7	-	3.4	3.6	5.4	6.7
2019	43.5	49.0	46.6	46.5	40.4	33.9	-	24.6	30.9	41.0	47.7
2020	24.0	32.2	28.5	25.6	23.9	-	15.6	14.2	13.0	23.6	28.1
2021	15.6	18.1	16.4	14.6	15.8	-	14.4	15.7	14.9	15.4	15.9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09

통계명 서명운동 참여 경험률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서명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7&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서명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4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15% 안팎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대졸 이상 학력층에서 가장 높다.

**통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서명운동 참여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17.8	21.2	19.8	20.0	15.8	8.3	-	9.6	11.6	17.0	21.7
2014	21.2	26.6	24.6	21.1	17.7	13.1	-	12.0	14.7	20.1	24.9
2015	17.5	19.6	18.9	21.1	14.0	11.5	-	10.4	13.0	15.8	21.1
2016	14.9	20.4	16.7	15.8	12.3	7.2	-	8.3	8.6	13.2	18.6
2017	14.5	18.4	18.1	16.0	9.9	9.1	-	7.9	8.1	14.2	16.2
2018	11.2	13.7	13.6	13.6	8.5	5.4	-	4.3	7.0	9.8	13.2
2019	16.0	17.9	19.2	16.3	14.3	12.0	-	13.0	14.1	14.3	17.6
2020	16.6	19.3	20.8	16.5	17.7	-	11.9	13.4	9.7	15.2	19.6
2021	13.8	16.0	14.2	13.5	13.0	-	13.0	16.3	13.9	14.4	13.0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10

통계명 아동·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아동·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다’ 또는 ‘매우 동의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아동·청소년도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1년 71.2%, 2022년 69.4%로 70% 안팎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아동·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41.9	41.3	42.7	56.4	50.1	45.8	36.6	27.8	27.1	41.8	48.7	47.8
2020	47.5	46.8	48.2	61.0	54.4	49.4	44.1	36.1	36.3	47.5	52.9	51.9
2021	71.2	71.8	70.7	76.1	76.1	75.3	70.1	63.6	61.5	71.5	74.8	77.0
2022	69.4	69.8	69.1	75.0	74.0	74.3	69.3	60.9	59.9	69.6	73.4	65.1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11

통계명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4&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초·중·고 학생 중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2013년 51.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72.6%까지 높아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높다. 고등학교의 경우 특성화계고 학생이 일반계고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은 비슷하지만 하위권 학생은 이들보다 낮다.

통계표

학교급 및 학업성적별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전체	학교급별					학업성적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2013	51.6	75.6	47.7	-	33.4	44.3	50.6	55.7	46.4
2014	58.7	82.7	58.1	-	39.0	53.1	58.9	61.3	54.6
2015	58.1	77.6	59.9	-	40.5	50.0	59.2	59.2	54.8
2016	54.2	82.3	52.9	36.0	33.6	46.0	56.8	55.8	48.6
2017	60.7	81.0	59.6	46.6	44.6	54.8	62.1	62.1	56.3
2018	62.2	82.2	63.0	45.5	43.7	53.4	66.3	63.7	53.3
2019	68.6	82.2	69.5	55.9	54.5	61.9	70.4	70.1	62.8
2020	71.0	80.9	71.0	61.5	60.2	66.7	71.6	72.4	67.2
2021	72.6	82.7	73.6	61.2	59.0	70.0	74.3	73.6	67.7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12

통계명 온라인 의견피력 경험률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7&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8년을 제외하면 12-15% 수준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 학력층에서 대체로 높다.

통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온라인 의견피력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14.2	24.4	13.8	13.0	10.8	6.8	-	8.0	9.4	14.7	15.6
2014	15.0	18.5	15.2	14.6	14.7	10.4	-	11.8	14.0	14.7	16.0
2015	14.7	19.6	17.9	14.5	10.6	9.5	-	8.8	9.2	14.1	17.0
2016	13.3	18.6	18.4	13.0	8.7	6.8	-	6.7	7.9	11.1	17.5
2017	12.2	17.3	15.6	11.9	8.2	7.4	-	8.3	7.8	11.9	13.4
2018	9.5	13.8	12.0	9.6	7.2	4.0	-	4.2	5.1	8.3	11.3
2019	12.7	17.7	13.7	13.5	9.9	8.2	-	8.5	12.7	11.1	14.1
2020	13.5	14.4	16.2	16.0	12.8	-	10.4	12.9	10.2	11.9	15.7
2021	14.4	16.1	13.1	13.7	14.1	-	15.0	16.4	14.5	16.4	12.8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13

통계명 전자정부발전지수 순위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UN이 작성한 전자정부발전지수의 국제순위임.

단위 순위

자료 UN, *E-Government Survey*.

자료출처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egovkb/en-us/Data/Compare-Countries>

수록기간 2003-2020

통계해설 한국의 전자정부발전지수는 2003년 0.744점에서 2010년 0.879점으로 높아졌고 2020년에는 0.956점으로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자정부발전지수 국제순위는 13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 현재는 덴마크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통계표 전자정부발전지수 순위, 2003-2020

연도	전자정부발전지수(점)	전자정부발전지수 국제순위
2003	0.744	13
2004	0.858	5
2005	0.873	5
2008	0.832	6
2010	0.879	1
2012	0.928	1
2014	0.946	1
2016	0.892	3
2018	0.901	3
2020	0.956	2

통계번호 CTZ-20714

통계명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간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29N\\_03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29N_036&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21

통계해설 지난 1년간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2년 51.2%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89.5%까지 늘어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이용률이 여성보다 약간 더 높고,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의 이용률이 50대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수준별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이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2012-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성	여성	1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4세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2012	51.2	54.3	48.0	51.3	73.7	72.7	57.2	30.4	13.9	-	-	-
2013	56.9	61.7	52.1	48.6	79.9	83.6	69.1	38.1	9.0	-	-	-
2014	72.5	76.0	69.0	91.8	92.3	91.7	85.1	56.9	21.1	34.2	72.2	91.7
2015	76.7	81.1	72.2	94.7	93.8	93.0	83.3	69.3	34.7	49.6	74.9	93.0
2016	85.8	87.5	84.1	92.8	97.3	96.5	93.3	84.5	52.6	54.1	86.0	97.2
2017	86.7	88.8	84.5	96.7	97.7	98.3	95.0	83.9	54.3	65.9	84.1	96.5
2018	87.5	89.8	85.1	98.2	98.1	98.5	94.7	85.3	58.1	59.4	83.2	96.1
2019	87.6	89.4	85.7	98.7	99.1	98.6	95.5	84.9	58.1	46.8	83.5	97.2
2020	88.9	90.0	87.8	100.0	99.1	99.7	99.4	88.0	59.2	69.7	84.2	98.6
2021	89.5	90.9	88.0	94.6	99.1	99.5	96.4	91.6	65.0	71.3	84.8	98.4

주: 1) 16-7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15

통계명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만족도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 또는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29N\\_06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29N_063&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21

통계해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까지 90% 초반대 이하에 그치다가 2016년부터 90% 후반대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98.0%에 달하였다. 2021년에는 97.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녀의 만족도가 비슷하고,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의 만족도가 50대 이상보다 약간 더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 학력층의 만족도가 대체로 조금 더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만족도, 2012-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성	여성	1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4세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2012	91.2	92.8	89.3	89.9	93.9	90.9	89.6	91.0	90.0	-	-	-
2013	83.7	83.0	84.6	82.3	83.6	86.1	83.0	83.3	71.8	-	-	-
2014	85.9	86.3	85.2	87.5	83.8	88.1	84.2	88.0	80.4	83.9	85.7	86.2
2015	93.5	93.5	93.6	93.9	92.7	95.4	95.4	92.5	87.0	87.9	92.2	96.4
2016	95.7	95.7	96.0	97.8	96.3	97.3	96.2	95.3	90.9	92.7	94.8	97.6
2017	96.5	96.5	96.7	95.8	97.8	97.6	97.3	96.5	92.1	93.5	96.7	97.3
2018	97.2	97.4	97.1	96.6	98.4	97.8	98.3	97.0	93.4	93.2	96.2	98.5
2019	97.8	97.4	98.4	97.2	98.1	97.2	98.6	97.8	97.7	98.3	97.3	98.2
2020	98.0	98.3	97.8	96.3	99.6	98.4	97.6	98.0	96.9	97.4	97.4	98.7
2021	97.9	98.1	97.5	97.3	98.9	98.9	98.5	96.4	96.3	95.1	97.4	98.7

주: 1) 16-7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16

통계명 정당활동 참여율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정당에 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0년까지 1-2% 수준에 그치다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에 8.0%로 급증하였다.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학력층보다 고졸 이상 학력층에서 두 배가량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정당활동 참여율,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2.0	2.3	1.9	1.8	1.5	2.3	2.5	2.5	-	2.3	3.0	2.0	2.0
2014	2.2	2.8	1.6	1.2	1.5	3.0	2.9	2.5	-	1.6	1.9	2.1	2.4
2015	1.6	2.1	1.1	1.6	1.6	1.7	1.4	1.6	-	2.0	0.9	1.7	1.6
2016	1.2	1.6	0.7	0.4	0.8	1.2	2.0	1.7	-	1.0	1.2	1.4	1.0
2017	1.3	1.3	1.3	0.7	1.2	1.1	2.2	1.1	-	1.1	1.0	1.4	1.2
2018	1.2	1.4	1.2	0.5	0.7	2.3	1.5	1.3	-	1.5	0.8	1.1	1.5
2019	1.9	2.3	1.4	1.1	1.0	2.3	2.5	2.5	-	1.1	2.1	2.2	1.6
2020	2.0	2.1	1.8	1.7	2.3	1.9	2.5	-	1.5	1.7	1.2	1.6	2.5
2021	8.0	8.0	7.8	9.3	7.8	6.9	7.3	-	8.3	4.0	3.5	7.9	9.0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17

통계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소통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국민 소통에 대해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2&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중앙정부와 국민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22.1%에서 2016년 16.8%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7년에 42.5%로 크게 증가한 후 등락하다가 2021년에는 50%를 넘어섰다. 이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난다. 지방정부와 국민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25.5%에서 2017년 35.7%로 증가한 후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3.4%와 49.1%로 더욱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통계표 연령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소통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체	연령별						전체	연령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2013	22.1	20.5	17.8	21.9	25.4	27.0	-	25.5	23.9	19.1	26.9	29.7	29.6	-
2014	20.0	19.7	17.7	18.7	21.3	24.9	-	23.3	25.5	20.7	22.6	23.0	25.3	-
2015	21.8	21.1	17.4	20.7	23.1	29.5	-	26.7	25.3	21.4	25.2	29.1	35.8	-
2016	16.8	15.9	13.6	16.1	19.0	20.4	-	25.4	24.1	21.3	25.1	26.5	31.4	-
2017	42.5	46.8	43.1	43.5	41.9	35.4	-	35.7	33.8	32.9	36.1	35.6	41.5	-
2018	43.2	47.9	46.6	42.3	41.1	37.6	-	37.4	38.4	35.7	37.4	38.0	37.4	-
2019	36.2	40.5	40.3	37.8	32.9	29.1	-	34.0	33.3	33.3	35.6	33.2	34.2	-
2020	42.4	43.4	45.7	42.4	43.4	-	39.4	43.4	42.9	44.0	42.2	46.0	-	42.2
2021	52.9	51.0	51.5	53.3	54.8	-	53.1	49.1	46.4	46.9	52.2	50.8	-	48.4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18

통계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투명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약간 청렴하다’ 또는 ‘매우 청렴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9&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9&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중앙정부가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27.5%에서 2016년 20.1%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7년에 31.1%로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 2021년에는 50.0%에 달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가장 낮고 40대에서 가장 높다. 지방정부에 대해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34.7%에서 2018년 40.3%로 증가한 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49.1%와 52.8%로 더 늘어났다. 이 비율은 특히 60대 이상에서 더욱 높다.

**통계표** 연령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투명성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체	연령별						전체	연령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2013	27.5	24.7	24.1	26.0	32.3	32.7	-	34.7	31.9	29.2	33.7	39.2	42.9	-
2014	26.7	23.9	25.2	26.9	29.1	29.6	-	29.9	28.1	27.2	31.0	32.4	30.6	-
2015	27.2	24.7	20.7	26.7	30.6	36.0	-	32.6	29.9	27.5	30.1	36.6	42.5	-
2016	20.1	16.0	16.2	19.9	24.7	24.4	-	33.9	30.4	28.5	32.3	38.0	42.5	-
2017	31.1	31.1	31.1	30.4	32.4	30.9	-	36.9	33.4	33.2	35.4	40.6	42.9	-
2018	33.9	32.8	34.4	34.1	34.8	33.6	-	40.3	38.7	38.5	39.6	43.4	41.5	-
2019	33.9	35.2	35.9	34.3	33.8	29.2	-	38.9	38.6	36.0	38.5	38.9	43.2	-
2020	41.3	40.5	41.2	40.7	40.6	-	42.6	49.1	45.0	46.4	49.6	50.5	-	51.6
2021	50.0	49.5	47.2	52.1	48.3	-	51.3	52.8	50.5	50.4	52.3	52.5	-	55.8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19

통계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약간 믿는다’ 또는 ‘매우 믿는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8&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중앙정부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35.3%에서 2016년 24.6%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7년에 40.8%로 증가한 후 등락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49.4%와 56.0%로 더 늘어났다. 이 비율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55% 이상으로 높다. 지방정부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44.9%에서 2018년 49.8%로 증가하였고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57.1%와 58.6%로 더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보다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통계표 연령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2013-2021

연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체	연령별						전체	연령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2013	35.3	31.5	29.2	36.2	40.0	42.3	-	44.9	42.1	39.6	44.7	49.0	52.1	-
2014	32.9	28.1	28.0	32.3	39.0	38.9	-	39.9	35.5	35.7	40.0	45.3	43.9	-
2015	31.9	28.8	27.3	30.1	35.1	41.9	-	42.0	40.3	36.1	39.9	46.6	49.5	-
2016	24.6	19.3	18.8	23.5	31.0	32.1	-	41.6	36.8	36.0	41.7	47.3	47.0	-
2017	40.8	42.0	41.5	40.1	41.3	38.8	-	45.4	41.5	41.6	44.3	48.5	52.1	-
2018	45.3	45.5	43.5	45.7	45.9	45.7	-	49.8	47.8	47.3	50.2	51.3	52.7	-
2019	38.3	40.6	38.7	40.5	37.1	34.1	-	44.9	43.9	42.0	43.4	47.9	47.6	-
2020	49.4	48.7	50.1	49.2	45.3	-	52.2	57.1	54.6	51.3	57.5	57.1	-	61.7
2021	56.0	57.2	53.7	56.7	55.9	-	56.1	58.6	55.1	56.5	60.5	58.1	-	60.4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20

통계명 행정기관 공정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이 공정한지에 대해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2&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47.0%에서 2016년 63.7%, 2017년 73.0%로 증가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 81.0%와 81.3%로 더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행정기관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47.0	44.0	42.3	46.9	49.0	57.4	-	57.5	47.6	47.0	45.2
2014	44.8	44.5	39.9	45.2	47.2	48.3	-	49.4	45.2	44.1	44.8
2015	44.6	45.9	40.3	40.6	45.1	55.1	-	58.5	45.0	45.8	41.4
2016	63.7	60.9	59.6	61.4	65.9	73.5	-	74.5	71.7	62.4	62.6
2017	73.0	73.7	71.3	73.3	73.0	74.0	-	69.4	70.0	72.5	74.2
2018	73.2	74.4	72.2	69.9	75.2	74.9	-	73.3	71.4	70.3	75.8
2019	68.6	65.4	68.1	68.9	70.7	70.0	-	70.9	69.3	67.9	69.0
2020	81.0	81.9	79.7	80.6	79.9	-	82.1	85.1	81.2	78.8	82.1
2021	81.3	79.6	81.1	80.4	80.4	-	83.5	81.8	83.3	80.0	82.0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21

통계명 행정서비스 이용률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서비스이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29N\\_0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DT_11029N_003&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21

통계해설 지난 1년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2년 88.6%에서 2021년 99.1%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행정서비스 이용률은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 60대 이상 연령층과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 약간 낮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행정서비스 이용률, 2012-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성	여성	1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4세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2012	88.6	89.5	87.7	70.8	91.2	94.8	94.3	89.9	77.0	-	-	-
2013	84.4	85.6	83.3	64.4	92.6	97.5	93.3	85.3	60.7	-	-	-
2014	90.3	91.6	88.9	86.6	93.2	96.2	94.4	89.7	76.1	73.7	92.3	95.7
2015	93.1	93.8	92.3	92.6	96.7	96.3	97.0	94.3	79.3	83.1	93.5	97.7
2016	94.5	95.0	93.9	93.5	97.9	99.2	96.7	93.8	84.3	81.5	94.9	98.7
2017	97.2	97.9	96.6	99.4	99.2	99.9	99.0	97.9	89.1	90.9	97.1	99.5
2018	97.6	98.2	97.0	99.4	99.9	99.8	98.6	97.9	91.4	91.7	96.8	99.3
2019	98.0	98.9	97.1	100.0	100.0	100.0	100.0	99.9	90.3	83.8	98.4	99.9
2020	98.9	98.9	98.8	100.0	100.0	100.0	100.0	100.0	94.5	95.7	98.7	99.9
2021	99.1	99.4	98.7	98.5	99.8	99.8	99.5	98.9	97.8	97.9	98.6	99.8

주: 1) 16-7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722

통계명 행정정보 공개율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정치참여 및 공공행정 권리

산출방법 행정정보 공개율 = (행정정보 공개건수 ÷ 행정정보 청구건수) × 100.

단위 %

자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3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38)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2000년 5만 8711건에서 꾸준히 늘어나 2020년에는 83만 6080건으로 14배가량 증가하였다.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청구건수 대비 전부 또는 부분 공개된 건수의 비율은 90-95%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통계표** 행정정보 공개율, 2000-2020

연도	행정정보 청구건수(건)	행정정보 공개건수(건)	행정정보 공개율(%)	연도	행정정보 청구건수(건)	행정정보 공개건수(건)	행정정보 공개율(%)
2000	58,711	54,309	92.5	2011	335,706	304,570	90.7
2001	80,165	72,842	90.9	2012	333,006	316,446	95.0
2002	102,319	96,538	94.4	2013	364,806	349,516	95.8
2003	186,087	178,271	95.8	2014	381,496	364,661	95.6
2004	96,187	86,501	89.9	2015	458,059	440,016	96.1
2005	120,879	109,467	90.6	2016	504,147	481,812	95.6
2006	132,964	120,393	90.5	2017	563,597	538,466	95.5
2007	197,617	179,437	90.8	2018	671,504	638,726	95.1
2008	229,650	209,238	91.1	2019	846,953	800,393	94.5
2009	301,332	275,286	91.4	2020	836,080	791,607	94.7
2010	322,018	289,010	89.7				

주: 1) 공개건수는 전부공개와 부분공개를 합한 수치임.

통계번호 CTZ-20801

통계명 국가자긍심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산출방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7&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80.0%에서 2016년 62.5%까지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7년에 75.4%로 증가한 후 등락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 85.5%와 87.9%로 더 늘어났다. 국가자긍심은 성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보다 50대 이상에서 약간 더 높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국가자긍심,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2013	80.0	79.1	81.0	76.4	71.9	79.7	85.7	90.5	-
2014	71.4	70.2	72.6	67.0	64.4	69.5	78.7	80.7	-
2015	73.7	72.6	74.9	68.5	66.9	70.9	80.0	86.8	-
2016	62.5	59.5	65.7	53.1	52.3	61.7	71.7	76.9	-
2017	75.4	75.9	74.9	70.0	71.9	73.9	80.4	81.8	-
2018	80.4	80.0	80.8	75.9	78.0	79.7	83.4	85.5	-
2019	76.3	75.0	77.8	73.5	76.3	74.7	78.3	79.0	-
2020	85.5	85.4	85.5	84.2	83.5	85.1	85.1	-	88.0
2021	87.9	87.8	87.9	85.5	87.5	85.9	89.1	-	89.9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802

통계명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 수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성명·정체성·국적 권리

산출방법

단위 명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8&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귀화나 국적회복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수는 2000년 643명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 1만 6509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2009년에는 2만 6738명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2010년부터는 감소하여 최근까지 매년 1만 5000명 내외에 그친다.

**통계표**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 수, 2000-2020

연도	귀화자 수	국적회복자 수	합계	연도	귀화자 수	국적회복자 수	합계
2000	199	444	643	2011	16,084	2,264	18,348
2001	719	901	1,620	2012	10,538	1,987	12,525
2002	2,807	817	3,624	2013	11,270	2,686	13,956
2003	5,973	1,550	7,523	2014	11,314	2,886	14,200
2004	6,679	1,894	8,573	2015	10,924	2,609	13,533
2005	11,887	4,622	16,509	2016	10,108	2,303	12,411
2006	7,100	557	7,657	2017	10,086	2,775	12,861
2007	8,479	1,781	10,260	2018	11,556	2,698	14,254
2008	11,512	3,740	15,252	2019	9,914	2,443	12,357
2009	25,030	1,708	26,738	2020	13,885	1,764	15,649
2010	16,299	1,010	17,309				

통계번호 CTZ-20901

통계명 국가배상청구 인용률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구제 및 면책 권리

산출방법 국가배상청구 인용률 = (국가배상청구 인용건수 ÷ 국가배상청구 처리건수) × 100.

단위 %

자료 법무부, 「국가배상통계」.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5)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국가배상청구 인용률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건 중 국가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건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2000년 31.3%에서 2009년 68.5%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2010년 54.8%로 낮아지기 시작해 2015년 34.7%, 2021년 24.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통계표** 국가배상청구 인용률, 2000-2021

연도	국가배상청구 처리건수(건)	국가배상청구 인용건수(건)	국가배상청구 인용률(%)	연도	국가배상청구 처리건수(건)	국가배상청구 인용건수(건)	국가배상청구 인용률(%)
2000	1,551	485	31.3	2011	2,058	736	35.8
2001	1,115	533	47.8	2012	2,127	1,063	50.0
2002	625	400	64.0	2013	3,299	1,767	53.6
2003	511	347	67.9	2014	2,915	1,177	40.4
2004	637	416	65.3	2015	3,047	1,057	34.7
2005	634	401	63.2	2016	3,598	1,154	32.1
2006	573	316	55.1	2017	2,921	801	27.4
2007	721	392	54.4	2018	4,054	1,129	27.8
2008	752	456	60.6	2019	3,452	895	25.9
2009	927	635	68.5	2020	3,768	1,109	29.4
2010	1,162	637	54.8	2021	3,228	779	24.1

통계번호 CTZ-20902

통계명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제출 경험률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구제 및 면책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탄원서나 진정서, 청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27&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탄원서나 진정서, 청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4년 8.8%에서 2018년 3.8%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점차 늘어 2021년에는 12.3%로 증가하였다. 2021년으로 한정하여 보면,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통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제출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7.7	7.3	7.0	8.8	8.7	5.5	-	7.1	7.6	8.8	6.3
2014	8.8	6.7	6.7	9.5	11.9	9.0	-	10.6	11.9	9.6	7.0
2015	7.9	6.3	8.1	9.0	7.9	7.9	-	7.9	7.8	8.1	7.6
2016	5.6	5.1	6.7	5.3	6.5	4.2	-	6.2	6.8	5.6	5.5
2017	5.8	4.9	5.9	6.7	5.0	6.8	-	8.3	7.2	6.0	5.2
2018	3.8	3.4	4.1	4.2	3.7	3.2	-	2.3	3.7	4.0	3.6
2019	6.4	6.5	4.9	5.9	7.6	6.9	-	10.8	12.0	5.9	6.0
2020	10.5	10.8	10.5	9.7	12.0	-	9.7	12.0	8.6	10.6	10.3
2021	12.3	15.1	11.1	10.8	11.3	-	12.9	15.3	14.6	13.8	10.5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TZ-20903

통계명 환경분쟁 배상결정률과 배상률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구제 및 면책 권리

산출방법 배상결정률 = (배상결정건수 ÷ 처리건수) × 100.  
배상률 = (배상결정액 ÷ 배상신청액) × 100.

단위 %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자료출처 <http://stat.me.go.kr/portal/compose/surveyBulletinPage.do>

수록기간 2004-2019

통계해설 환경분쟁 배상결정률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중 배상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 비율은 2004년 35.9%에서 2007년 61.6%로 높아진 후 50-70% 사이를 등락하고 있다. 환경분쟁 배상신청액 대비 배상결정액 비율인 환경분쟁 배상률은 2008년에 12.2%까지 높아졌다가 2015년에는 5.9%까지 낮아지는 등 10%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

통계표

환경분쟁 배상결정률과 배상률, 2004-2019

연도	처리건수 (건)	배상결정건수 (건)	배상결정률 (%)	배상신청액 (1,000원)	배상결정액 (1,000원)	배상률 (%)
2004	223	80	35.9	28,267,030	2,645,041	9.4
2005	174	74	42.5	30,469,412	2,566,881	8.4
2006	165	62	37.6	29,794,319	1,577,988	5.3
2007	172	106	61.6	51,825,297	5,507,865	10.6
2008	209	127	60.8	38,152,875	4,652,794	12.2
2009	283	169	59.7	61,748,044	3,846,670	6.2
2010	176	90	51.1	32,582,557	2,672,850	8.2
2011	184	129	70.1	36,885,952	2,682,637	7.3
2012	255	132	51.8	38,877,162	2,596,775	6.7
2013	191	134	70.2	47,140,671	5,218,586	11.1
2014	237	120	50.6	32,197,056	2,377,948	7.4
2015	210	109	51.9	20,204,833	1,191,783	5.9
2016	162	102	63.0	20,555,775	2,066,839	10.1
2017	160	109	68.1	22,407,222	2,362,210	10.5
2018	238	171	71.8	44,178,820	3,840,672	8.7
2019	256	153	59.8	48,062,347	4,952,666	10.3

주: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 사건임.



## 2 사법정의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체	통계번호	통계명	취약집단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JUS-21001	경찰 1인당 담당인구	
			JUS-21002	경찰예산 비율	
			JUS-21003	또래로부터의 갈취 피해율	아동청소년
			JUS-21004	또래로부터의 따돌림 피해율	아동청소년
			JUS-21005	또래로부터의 성희롱·성추행 피해율	아동청소년
			JUS-21006	또래로부터의 심부름 피해율	아동청소년
			JUS-21007	또래로부터의 욕설·모욕 피해율	아동청소년
			JUS-21008	또래로부터의 폭행 피해율	아동청소년
			JUS-21009	범죄 검거율	
			JUS-21010	범죄 발생률	
			JUS-21011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JUS-21012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JUS-21013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아동청소년
			JUS-21014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JUS-21015	성폭력 검거율	
			JUS-21016	성폭력 발생률	
			JUS-21017	성폭력에 대한 인식	
			JUS-21018	아동·청소년 거주지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
			JUS-21019	아동·청소년 성적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JUS-21020	아동·청소년 인터넷 따돌림 피해율	아동청소년
			JUS-21021	아동·청소년 인터넷 성희롱 피해율	아동청소년
			JUS-21022	아동·청소년 인터넷 욕설·모욕 피해율	아동청소년
			JUS-21023	아동·청소년 인터넷 협박 피해율	아동청소년
			JUS-21024	안전권 존중도	
			JUS-21025	야간보행 두려움	
			JUS-21026	장애인 학대 및 폭력 피해율	장애인
			JUS-21027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	장애인
			JUS-21028	장애인학대 발생률	장애인
			JUS-21029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JUS-21030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	
			JUS-21031	청소년 갈취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JUS-21032	청소년 강제 성관계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JUS-21033	청소년 강제 심부름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JUS-21034	청소년 고의적 신체접촉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JUS-21035	청소년 성적 모욕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JUS-21036	청소년 스토킹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JUS-21037	청소년 온라인 따돌림·괴롭힘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JUS-21038	청소년 온라인 스토킹·성희롱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JUS-21039	청소년 왕따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번호	통계명	취약집단	
사법정의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JUS-21040	청소년 욕설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JUS-21041	청소년 폭행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JUS-21042	청소년 폭행위협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JUS-21043	취약집단 실종 발생건수	중복	
			JUS-21044	학교폭력 검거건수	아동청소년	
			JUS-21045	흉악범죄 발생률		
			사생활 보호 권리	JUS-21101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험률	
				JUS-21102	교내 교육비미납정보 공개 경험률	아동청소년
				JUS-21103	교내 시험성적 공개 경험률	아동청소년
				JUS-21104	교내 학생징계정보 공개 경험률	아동청소년
				JUS-21105	국가기관 통신기록 수집·조사 반대율	
		JUS-21106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반대율		
		JUS-21107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존중도		
		JUS-21108		아동·청소년 인터넷 사생활공개 피해율	아동청소년	
		JUS-21109		청소년 복장검사 경험률	아동청소년	
		JUS-21110		청소년 소지품검사 경험률	아동청소년	
		JUS-21111		청소년 용모검사 경험률	아동청소년	
		공정한 재판 권리	JUS-21201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JUS-21202	사법기관 공정성에 대한 인식		
			JUS-21203	사법기관 투명성에 대한 인식		
			JUS-21204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JUS-21205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존중도		
		사법적 구제 권리	JUS-21301	국선변호 법률구조율		
			JUS-21302	기소율		
			JUS-21303	무죄율		
			JUS-21304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JUS-21305	법률구조율		
			JUS-21306	인구 10만 명당 변호사 수		
			JUS-21307	형사보상금 지급건수		
		임의 체포와 구금	JUS-21401	교정시설 수용정원 대비 수용자 비율		
			JUS-21402	구속영장 발부율		
			JUS-21403	수용자 1000명당 의료인력 수		
			JUS-21404	수용자 1인당 예산		
			JUS-21405	수용자 1인당 의료비 지출액		
			JUS-21406	수용자 사망률		
			JUS-21407	수용자 자살률과 자살미수율		
			JUS-21408	수용자 징벌률과 입건송치율		
			JUS-21409	수용자 정원율		
			JUS-21410	신체의 자유 존중도		
		JUS-21411	피의자 구속영장청구율과 구속률			

통계번호 JUS-21001

통계명 경찰 1인당 담당인구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경찰 1인당 담당인구 = 총인구 ÷ 경찰인력 수. 총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명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5)

수록기간 2001-2020

통계해설 경찰인력의 규모는 치안 역량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경찰인력 수는 2001년 9만여 명에서 2010년 10만 명을 넘었고 이후에도 매년 늘어나 2020년에는 12만 6000명에 이른다. 경찰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경찰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2001년 522명에서 2020년 411명으로 100명 이상 감소하였다.

**통계표** 경찰 1인당 담당인구, 2001-2020

연도	경찰인력 수 (명)	경찰 1인당 담당인구 (명)	연도	경찰인력 수 (명)	경찰 1인당 담당인구 (명)
2001	90,819	522	2011	101,239	493
2002	91,592	520	2012	102,386	490
2003	92,165	520	2013	105,357	479
2004	93,271	516	2014	109,364	464
2005	95,336	505	2015	113,077	451
2006	95,613	507	2016	114,658	447
2007	96,324	505	2017	116,584	441
2008	97,732	502	2018	118,651	435
2009	99,554	495	2019	122,913	421
2010	101,108	490	2020	126,227	411

주: 1) 경찰인력에 별정직·일반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과 전·의경 및 해양경찰은 포함되지 않음.

통계번호 JUS-21002

통계명 경찰예산 비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text{경찰예산 비율} = (\text{경찰예산} \div \text{중앙정부 총예산}) \times 100.$

단위 %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자료출처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경찰예산은 국가의 치안예산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경찰의 연간 예산은 2000년 3조 7011억 원에서 2010년 7조 5036억 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1조 6165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국가예산에서 경찰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96%에서 2007년 3.73%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3.01%로 낮아졌다.

통계표 경찰예산 비율, 2000-2020

연도	경찰예산(억 원)	경찰예산 비율(%)	연도	경찰예산(억 원)	경찰예산 비율(%)
2000	37,011	2.96	2011	77,630	3.30
2001	43,987	3.26	2012	80,103	3.22
2002	49,359	3.38	2013	82,994	3.15
2003	54,764	3.52	2014	88,364	3.22
2004	54,269	3.40	2015	93,856	3.28
2005	58,234	3.48	2016	98,092	3.32
2006	62,512	3.56	2017	101,138	3.34
2007	65,995	3.73	2018	105,362	3.18
2008	69,684	3.57	2019	109,757	3.03
2009	72,746	3.35	2020	116,165	3.01
2010	75,036	3.32			

통계번호 JUS-21003

통계명 또래로부터의 갈취 피해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돈이나 물건을 한 번이라도 빼앗긴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2\\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2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초·중·고 학생 중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갈취를 당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2015년과 2016년 1%대였으나 이후 2%대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과 2021년에 1.6%와 1.7%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 비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두 배가량 높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높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계고보다 특성화계고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또래로부터의 갈취 피해율,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3	3.4	4.4	2.4	3.2	4.6	-	2.1	3.1
2014	2.2	3.0	1.7	2.3	2.9	-	1.6	2.4
2015	1.8	2.6	1.0	2.2	2.1	-	1.4	1.8
2016	1.9	2.7	1.1	2.1	2.3	1.4	1.7	0.6
2017	2.3	3.4	1.2	2.2	3.3	1.7	1.2	3.1
2018	2.5	3.3	1.6	2.7	2.8	2.1	1.6	4.6
2019	2.2	2.8	1.4	2.1	3.2	1.3	1.3	1.0
2020	1.6	2.3	0.8	1.6	1.7	1.4	0.9	3.3
2021	1.7	2.2	1.1	2.9	1.5	0.7	0.5	1.3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04

통계명 또래로부터의 따돌림 피해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따돌림을 한 번이라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2\\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2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초·중·고 학생 중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2019년까지 대체로 5%를 넘는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 4.1%로 감소하였다. 이후 2021년에는 4.5%로 약간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녀 학생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또래로부터의 따돌림 피해율,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3	6.4	5.3	7.6	9.8	6.7	-	2.7	4.5
2014	5.2	4.6	5.6	8.7	5.1	-	2.4	2.9
2015	5.3	4.8	5.7	9.1	4.5	-	2.6	4.0
2016	4.7	4.3	5.2	7.6	4.6	2.4	2.4	3.4
2017	5.3	5.2	5.5	9.1	5.0	2.7	2.5	4.1
2018	5.6	5.4	5.7	9.3	4.4	3.5	2.8	7.1
2019	5.2	5.4	5.0	9.4	4.3	2.2	2.0	2.3
2020	4.1	4.2	4.1	7.1	2.9	2.4	1.7	4.6
2021	4.5	4.5	4.4	8.9	2.9	1.6	1.6	1.4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05

통계명 또래로부터의 성희롱·성추행 피해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을 한 번이라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2\\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2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초·중·고 학생 중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2017년까지 2-3%대에서 등락하다가 2018년과 2019년에 4%를 상회하였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 2.1%와 2.2%로 낮아졌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피해율이 여학생보다 높다. 학교급별로는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또래로부터의 성희롱·성추행 피해율,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3	3.5	4.5	2.4	3.2	3.7	-	3.6	3.1
2014	2.7	3.7	1.6	1.9	2.9	-	3.2	3.5
2015	3.3	4.4	1.9	2.5	3.7	-	2.9	5.4
2016	2.9	3.5	2.2	1.8	3.3	3.2	3.0	4.3
2017	3.9	4.7	2.9	3.4	4.2	3.9	3.5	5.6
2018	4.3	4.3	4.1	3.2	5.1	4.5	3.7	7.8
2019	4.0	4.5	3.7	3.9	5.0	3.3	3.1	4.4
2020	2.1	2.8	1.4	2.3	1.8	2.4	2.0	4.4
2021	2.2	2.7	1.6	2.8	2.4	1.5	1.5	1.1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06

통계명 또래로부터의 심부름 피해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가 시킨 심부름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2\\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2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4-2021

통계해설 초·중·고 학생 중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가 시킨 심부름을 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2015년 1.6%에서 2017년 2.1%로 높아졌다가 점차 감소하여 2020년과 2021년에는 1.3%로 낮아졌다. 이 비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높다. 학교급별로는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또래로부터의 심부름 피해율, 2014-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4	2.2	3.0	1.1	1.8	2.5	-	1.6	3.5
2015	1.6	2.3	0.8	2.1	1.6	-	1.3	1.3
2016	1.5	2.4	0.7	1.5	2.0	1.1	1.2	1.1
2017	2.1	3.2	1.0	2.7	2.3	1.5	1.1	3.1
2018	2.0	2.7	1.0	2.3	1.7	1.7	1.3	3.7
2019	1.9	2.6	1.1	2.0	2.1	1.7	1.7	1.6
2020	1.3	2.0	0.7	1.9	0.7	1.6	1.1	3.7
2021	1.3	1.7	0.8	2.2	1.0	0.6	0.6	0.7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07

통계명 또래로부터의 욕설·모욕 피해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2\\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2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초·중·고 학생 중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2019년까지 15% 안팎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 9.8%로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12.2%로 다소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또래로부터의 욕설·모욕 피해율,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3	16.6	19.7	13.1	20.8	16.1	-	12.2	19.2
2014	14.7	18.1	11.0	17.1	15.0	-	12.5	12.8
2015	14.3	18.0	10.4	15.4	14.2	-	12.9	17.1
2016	13.4	16.2	10.3	14.2	13.3	12.9	11.7	17.2
2017	15.2	17.8	12.5	18.7	16.0	12.1	11.1	16.3
2018	15.0	17.3	12.6	19.7	15.9	10.6	9.7	15.0
2019	15.3	18.0	12.5	20.6	16.1	10.1	9.6	12.3
2020	9.8	12.3	7.5	14.4	9.0	6.5	5.6	9.7
2021	12.2	14.9	9.3	20.0	11.1	5.7	5.2	7.9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08

통계명 또래로부터의 폭행 피해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폭행이나 구타를 한 번이라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2\\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2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초·중·고 학생 중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2015년 5.4%에서 2019년 7.8%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 4.4%로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5.6%로 다소 늘어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피해율이 여학생보다 높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피해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또래로부터의 폭행 피해율,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3	7.2	10.8	3.1	15.3	4.3	-	3.0	4.4
2014	5.8	8.8	2.7	13.7	2.8	-	2.5	3.6
2015	5.4	8.1	2.6	12.8	2.5	-	2.5	3.9
2016	5.5	7.9	3.1	13.0	3.0	2.2	2.0	3.2
2017	6.9	9.9	3.6	15.9	3.9	2.5	2.0	5.0
2018	6.6	9.0	3.9	16.3	2.6	2.3	1.6	5.2
2019	7.8	11.2	4.1	18.6	3.7	1.7	1.7	2.4
2020	4.4	6.9	2.0	10.5	1.1	1.6	1.1	3.6
2021	5.6	7.7	3.5	14.8	1.7	0.5	0.5	0.3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09

통계명 범죄 검거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범죄 검거율 = (범죄 검거건수 ÷ 범죄 발생건수) × 100.

단위 %

자료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N\\_1A001A&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N_1A001A&conn_path=I3)

수록기간 2002-2020

통계해설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포함하는 전체 범죄의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즉 검거율은 2002년 92.4%에서 2013년 76.9%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증가하여 최근까지 8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범죄 검거율은 특별법범죄가 형법범죄보다 높다. 형법범죄의 경우 흉악범죄와 폭력범죄 검거율은 높지만 재산범죄와 공무원범죄 검거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통계표

범죄 유형별 검거율, 2002-2020

연도	전체	형법범죄									특별법 범죄
		재산 범죄	강력범죄 (흉악)	강력범죄 (폭력)	위조범죄	공무원 범죄	풍속 범죄	과실 범죄	기타 형법범죄	합계	
2002	92.4	77.9	96.9	94.3	90.4	93.7	98.5	69.3	89.5	85.3	97.1
2003	88.6	69.2	94.9	93.2	82.4	88.6	96.9	70.1	88.7	79.5	95.4
2004	89.5	69.2	90.9	95.6	85.5	87.5	96.2	84.9	92.5	80.7	95.3
2005	85.8	64.7	85.5	91.8	83.6	87.7	94.6	75.2	92.1	76.8	92.7
2006	85.8	65.0	90.8	93.9	79.4	87.2	96.8	79.5	93.7	77.3	92.8
2007	87.5	67.7	89.4	94.6	78.2	88.4	97.1	82.6	94.9	79.0	93.9
2008	87.4	67.6	89.2	94.9	81.8	88.5	96.4	84.5	95.5	79.0	93.3
2009	89.2	76.6	92.3	95.7	78.3	87.9	94.1	87.0	95.5	84.2	93.4
2010	84.5	65.9	88.4	92.1	69.3	87.2	95.7	80.9	93.7	75.6	93.1
2011	78.6	55.8	84.2	89.2	59.1	82.1	94.6	76.0	91.0	68.1	90.3
2012	76.9	51.9	83.6	91.2	55.8	75.1	94.2	81.7	91.8	65.9	89.5
2013	76.9	52.3	88.6	91.5	64.9	66.4	93.2	83.5	90.1	65.8	89.3
2014	78.5	56.2	94.7	92.5	65.6	53.5	92.6	87.2	88.7	69.5	88.6
2015	81.1	63.4	96.3	94.2	76.3	73.6	94.5	88.1	87.6	74.9	87.8
2016	84.2	68.0	96.1	95.2	75.8	72.7	94.6	89.7	87.7	78.5	90.0
2017	85.3	68.2	96.2	95.1	74.3	66.6	93.8	89.7	87.0	78.5	92.8
2018	84.4	66.3	95.5	94.6	80.3	59.8	91.4	89.7	85.5	76.7	94.5
2019	83.7	66.1	95.4	94.6	77.3	62.5	92.3	89.4	84.8	76.0	94.8
2020	81.6	64.1	95.1	93.9	74.4	55.0	92.2	88.3	82.7	73.5	94.3

통계번호 JUS-21010

통계명 범죄 발생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범죄 발생률 = (범죄 발생건수 ÷ 총인구) × 100,000.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임.

단위 건/10만 명

자료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N\\_1A001A&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N_1A001A&conn_path=I3)

수록기간 2002-2020

통계해설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포함하는 전체 범죄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는 2008년에 4420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700-3900건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범죄 발생률은 이후에도 감소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300-3500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형법범죄 중에서는 재산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어 폭력범죄, 흉악범죄 등의 순으로 많다. 폭력범죄는 2002년 570건에서 2020년 406건으로 줄어 들었지만 흉악범죄는 같은 기간 37건에서 63건으로 늘어났다.

통계표 범죄 유형별 발생률, 2002-2020

연도	전체	형법범죄									특별법 범죄
		재산 범죄	강력범죄 (흉악)	강력범죄 (폭력)	위조 범죄	공무원 범죄	풍속 범죄	과실 범죄	기타 형법범죄	합계	
2002	4,100	862	37	570	45	4	37	15	85	1,653	2,447
2003	4,142	973	42	589	41	3	30	14	80	1,772	2,370
2004	4,283	920	40	570	47	4	30	12	80	1,702	2,581
2005	3,882	906	41	573	49	3	25	13	82	1,693	2,189
2006	3,734	931	43	513	59	3	39	12	90	1,690	2,044
2007	3,990	953	42	518	51	3	29	12	107	1,716	2,275
2008	4,420	1,016	46	529	57	3	30	12	120	1,812	2,608
2009	4,356	1,129	52	542	56	3	71	12	131	1,995	2,361
2010	3,795	1,126	54	473	47	4	32	12	111	1,859	1,936
2011	3,750	1,193	58	489	51	5	30	14	126	1,966	1,785
2012	3,817	1,252	53	493	51	6	23	14	147	2,039	1,779
2013	3,924	1,312	62	461	42	5	20	14	152	2,068	1,855
2014	3,768	1,202	66	455	42	5	19	14	176	1,980	1,788
2015	3,922	1,207	68	483	41	6	20	15	194	2,033	1,888
2016	3,885	1,109	64	487	36	6	31	15	198	1,945	1,939
2017	3,524	1,047	70	461	38	7	23	16	189	1,852	1,673
2018	3,354	1,113	68	450	34	9	18	17	199	1,907	1,447
2019	3,409	1,210	68	448	32	7	22	18	203	2,008	1,401
2020	3,308	1,272	63	406	30	7	21	17	199	2,015	1,293

- 주: 1) 재산범죄에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이 포함됨.
- 2) 폭력범죄에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기타 폭력행위 등이 포함됨.
- 3) 흉악범죄에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이 포함됨.

통계번호 JUS-21011

통계명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범죄안전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 또는 '매우 안전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A020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A020R&conn_path=I3)

수록기간 2010-2022

통계해설 범죄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6년까지 10% 미만에 그치다가 2018년 17.2%, 2020년 26.8%로 크게 늘어났다. 2022년에는 큰 변화 없이 25.9%로 나타난다.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낮다.

**통계 표** 성·연령·소득수준별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2010-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남자	여자	15-19세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10	8.2	10.0	6.4	7.0	-	8.3	6.8	9.2	8.7	8.4	8.1	6.2	7.6	8.1	8.5	11.6	13.9
2012	9.1	11.4	6.8	-	9.7	9.7	8.1	9.3	8.9	9.2	8.9	7.2	8.5	8.3	11.6	10.8	13.5
2014	8.9	11.5	6.4	-	10.7	11.5	8.3	7.6	8.0	8.6	8.7	7.5	8.1	7.4	9.5	10.7	14.2
2016	9.2	11.9	6.6	-	11.5	10.2	8.4	8.6	8.9	9.1	9.8	7.9	8.3	8.4	9.9	10.5	12.1
2018	17.2	21.8	12.7	-	19.9	19.3	18.7	19.3	15.8	13.3	14.9	14.3	15.4	16.4	17.6	21.0	22.8
2020	26.8	32.1	21.6	-	29.7	28.4	30.1	32.8	25.9	19.5	18.8	22.3	24.5	26.1	28.4	32.1	35.7
2022	25.9	30.9	20.9	-	30.8	31.3	27.0	27.8	24.9	20.6	21.4	21.0	23.8	23.3	27.1	28.7	32.4

주: 1)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12

통계명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 (당해 연도 재범자 수 ÷ 당해 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 × 100.

단위 %

자료 법무부, 「보호관찰통계」.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6](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6)

수록기간 2004-2021

통계해설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자의 비율, 즉 재범률은 2008년 6.5%에서 이듬해인 2009년에 7.6%로 높아진 후 2020년까지 7%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에 6.4%로 낮아졌다. 재범률은 소년이 성인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성인 재범률은 5% 안팎에 그치지만 소년 재범률은 10%를 넘는다.

**통계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2004-2021

연도	전체	소년대상자	성인대상자
2004	8.1	9.7	6.8
2005	7.5	9.4	6.3
2006	5.8	8.1	4.3
2007	6.4	9.1	4.6
2008	6.5	9.0	4.6
2009	7.6	11.3	4.6
2010	7.2	10.6	4.1
2011	7.6	11.4	4.1
2012	7.9	12.0	4.1
2013	7.6	11.1	4.5
2014	7.4	10.6	5.1
2015	7.6	11.7	5.2
2016	7.9	12.3	5.6
2017	7.8	12.8	5.6
2018	7.2	12.3	5.1
2019	7.2	12.8	5.0
2020	7.3	13.5	5.0
2021	6.4	12.0	4.5

통계번호 JUS-21013

통계명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보호대상아동 발생률 = (보호대상아동 수 ÷ 0-17세 인구) × 100,000.

0-17세 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명/10만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3)

수록기간 2008-2021

통계해설 시설입소나 가정보호와 같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의 수는 2008년 아동(17세 이하) 10만 명당 88.3명에서 2021년 48.8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발생원인별로는 학대·유기가 가장 많고 이어 부모 관련, 미혼부모·혼외자, 비행·가출·부랑, 미아 등의 순으로 많다. 학대·유기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발생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부모 관련 원인에 의한 보호대상아동 발생은 줄어들고 있다.

**통계표** 보호대상아동 원인별 발생률, 2008-2021

연도	전체	발생원인별				
		학대·유기	부모 관련	미혼부모·혼외자	비행·가출·부랑	미아
2008	88.3	10.4	47.4	22.3	6.7	1.4
2009	87.5	12.3	38.2	29.8	6.9	0.3
2010	85.4	12.2	35.5	27.9	7.7	2.1
2011	76.1	13.7	28.5	25.6	7.5	0.8
2012	72.1	14.1	29.4	20.7	7.4	0.5
2013	64.2	15.0	27.2	16.4	5.5	0.2
2014	54.7	15.2	20.4	13.4	5.6	0.1
2015	50.6	15.9	19.9	10.5	4.0	0.3
2016	52.8	20.7	18.5	9.8	3.6	0.1
2017	48.9	20.2	15.8	10.0	2.7	0.1
2018	48.0	21.2	16.0	7.6	2.8	0.2
2019	51.2	21.8	17.5	5.9	6.0	0.1
2020	53.5	25.2	16.1	6.0	6.1	0.1
2021	48.8	24.9	15.0	5.1	3.9	0.0

주: 1)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아동은 보호대상아동 수에 포함되지 않음.  
 2) 2017년부터 기아아동을 유기아동으로 분류함.  
 3) 부모 관련 원인에는 부모빈곤·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교정시설입소, 부모이혼 등이 포함됨.

통계번호 JUS-21014

통계명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 또는 '매우 안전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A010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A010R&conn_path=I3)

수록기간 2008-2022

통계해설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6년까지 10% 안팎 수준에 그쳤으나 2018년에 큰 폭으로 늘어나 20.5%에 달하였고 이후 2020년에는 31.8%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2년에도 33.4%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통계표** 성·연령·소득수준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남자	여자	15-19세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08	8.2	9.3	7.2	8.1	-	8.8	6.9	8.5	8.2	8.9	7.8	7.9	7.4	8.6	8.9	9.5	10.8
2010	11.3	13.4	9.2	11.5	-	11.3	9.3	12.7	11.9	11.3	10.8	8.9	10.1	11.2	12.0	17.7	19.2
2012	13.8	16.2	11.4	-	16.1	14.1	12.0	13.9	13.8	13.5	13.5	11.9	13.2	13.2	15.3	14.9	19.9
2014	9.5	11.7	7.4	-	14.4	10.7	7.6	8.1	8.5	10.2	9.5	8.6	9.0	8.3	9.8	10.9	13.3
2016	13.2	15.9	10.6	-	17.6	13.5	11.6	12.2	12.9	13.6	13.8	12.4	11.9	12.5	13.0	14.5	16.9
2018	20.5	24.5	16.6	-	26.8	23.1	20.3	21.5	19.1	17.2	19.2	17.6	19.6	19.3	19.6	23.1	26.3
2020	31.8	36.0	27.6	-	39.6	33.0	34.9	37.9	30.2	23.9	24.5	26.1	28.9	31.9	33.2	38.3	40.4
2022	33.4	37.0	29.7	-	40.9	38.0	36.0	35.8	32.1	26.8	27.8	27.2	31.5	29.7	33.7	36.9	42.0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15

통계명 성폭력 검거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text{성폭력 검거율} = (\text{성폭력 검거건수} \div \text{성폭력 발생건수}) \times 100.$

단위 %

자료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N\\_1A001A&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N_1A001A&conn_path=I3)

수록기간 2002-2020

통계해설 성폭력 검거율은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02년 93.8%에서 점차 낮아져 2012년에 83.8%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4년에 95.2%로 높아진 후 최근까지 95-9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표 성폭력 검거율, 2002-2020

연도	발생건수(건)	검거건수(건)	검거율(%)
2002	9,435	8,848	93.8
2003	10,365	9,555	92.2
2004	11,105	10,220	92.0
2005	11,757	10,365	88.2
2006	13,573	12,501	92.1
2007	13,634	12,361	90.7
2008	15,094	13,577	89.9
2009	16,156	14,902	92.2
2010	19,939	17,652	88.5
2011	22,034	18,591	84.4
2012	21,346	17,892	83.8
2013	26,919	23,839	88.6
2014	29,863	28,420	95.2
2015	31,063	29,981	96.5
2016	29,357	28,197	96.0
2017	32,824	31,585	96.2
2018	32,104	30,706	95.6
2019	32,029	30,550	95.4
2020	30,105	28,675	95.2

통계번호 JUS-21016

통계명 성폭력 발생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성폭력 발생률 = (성폭력 발생건수 ÷ 총인구) × 100,000.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임.

단위 건/10만 명

자료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N\\_1A001A&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N_1A001A&conn_path=I3)

수록기간 2002-2020

통계해설 성폭력 발생건수는 2003년 1만 건에 달한 후 2011년과 2015년에 각각 2만 건과 3만 건을 넘어섰다. 이후 2017년에 3만 2824건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 2020년에는 3만 건을 조금 넘는 데 그쳤다. 성폭력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건수로 나타내는데, 이 수치는 2002년 19.6건에서 2017년 63.4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8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58.1건으로 떨어졌다.

**통계표 성폭력 발생률, 2002-2020**

연도	발생건수(건)	발생률(건/10만 명)	연도	발생건수(건)	발생률(건/10만 명)
2002	9,435	19.6	2012	21,346	41.9
2003	10,365	21.4	2013	26,919	52.6
2004	11,105	22.9	2014	29,863	58.2
2005	11,757	24.1	2015	31,063	60.3
2006	13,573	27.7	2016	29,357	56.8
2007	13,634	27.7	2017	32,824	63.4
2008	15,094	30.5	2018	32,104	61.9
2009	16,156	32.5	2019	32,029	61.8
2010	19,939	39.5	2020	30,105	58.1
2011	22,034	43.4			

통계번호 JUS-21017

통계명 성폭력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성폭력 관련 진술에 대해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12\\_009&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12_009&conn_path=I3)

수록기간 2010-2019

통계해설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에 대해 36.2%가 동의하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동의한다. “여자들은 싫지 않을 때도 ‘싫다’고 말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32.7%가 동의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이 의견에 더 많이 동의한다.

**통계표** 성폭력에 대한 인식, 2010-2019

연도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여자들은 싫지 않을 때도 ‘싫다’고 말한다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0	29.2	23.9	34.1	32.3	38.1	26.8
2013	26.8	27.8	25.9	25.2	33.5	16.8
2016	26.3	22.0	30.7	28.1	35.7	20.1
2019	36.2	32.6	40.1	32.7	38.8	26.1

주: 1) 19-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18

통계명 아동·청소년 거주지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살고 있는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7\\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7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초·중·고 학생 중 살고 있는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2013년 56.8%에서 2017년 75.9%, 2021년 86.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 여학생이 범죄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2019년까지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높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소득수준에 따라 범죄안전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상위층이 가장 높고 하위층이 가장 낮다.

**통계표** 성·학교급·소득수준별 아동·청소년 거주지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소득수준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2013	56.8	65.1	47.6	68.4	53.8	-	51.6	42.5	64.4	55.2	40.4
2014	61.3	68.3	53.7	72.9	59.1	-	55.2	51.2	67.6	60.1	46.4
2015	64.5	72.0	56.3	75.1	63.3	-	57.4	58.7	71.6	60.8	46.2
2016	66.5	73.9	58.4	77.4	65.2	59.4	60.0	56.6	72.1	64.3	48.7
2017	75.9	81.9	69.4	83.2	73.9	72.1	72.4	70.8	80.6	72.8	61.7
2018	77.8	84.1	71.0	85.1	75.1	74.2	73.8	75.4	82.0	74.8	64.1
2019	77.5	83.2	71.4	80.4	76.5	76.0	76.3	74.7	80.8	76.0	62.8
2020	86.4	88.8	83.8	87.6	85.8	85.6	85.3	87.1	88.7	85.3	73.6
2021	86.8	89.3	84.1	87.7	85.9	86.7	86.5	87.0	89.2	85.5	75.1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19

통계명 아동·청소년 성적 피해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성적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9&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9&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초·중·고 학생 중 지난 1년 동안 성적인 놀림이나 신체부위 접촉과 같은 성적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2017년까지 3-4%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 5.1%로 늘어난 후 2020년과 2021년에 3% 안팎으로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남녀 학생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학교급별로는 대체로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2019년까지 하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학교급·소득수준별 아동·청소년 성적 피해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소득수준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2013	3.3	2.9	3.7	2.6	3.8	-	3.5	2.8	3.0	2.7	5.4
2014	4.0	4.4	3.5	4.8	3.8	-	3.4	3.8	4.3	3.2	4.6
2015	3.9	3.9	4.0	4.3	3.9	-	3.6	3.9	3.3	4.0	6.3
2016	4.3	4.2	4.5	4.8	4.4	4.0	3.9	4.1	3.9	4.0	7.2
2017	3.8	3.5	4.2	5.3	3.8	2.7	2.7	2.9	3.9	3.4	4.6
2018	5.1	4.2	6.2	6.3	5.2	4.1	4.0	4.5	5.1	4.6	7.5
2019	4.4	4.2	4.7	6.7	4.2	2.6	2.6	2.3	4.4	3.9	6.8
2020	2.9	2.8	3.0	5.1	1.3	2.3	1.9	3.9	3.0	2.5	3.5
2021	3.1	3.1	3.1	6.7	1.5	1.1	1.0	1.6	3.3	2.5	3.7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20

통계명 아동·청소년 인터넷 따돌림 피해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에서 따돌림을 한 번이라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3\\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3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초·중·고 학생 중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에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2018년 2.4%까지 늘어났다가 매년 조금씩 감소하여 2021년에는 1.7%로 줄었다. 이 비율은 대체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조금 더 높다. 학교급별로는 2018년까지 중학교에서 가장 높았으나 2019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중상위층에 비해 하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학교급·소득수준별 아동·청소년 인터넷 따돌림 피해율,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소득수준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2013	2.4	2.7	2.1	1.9	2.8	-	2.0	4.2	2.0	2.4	3.7
2014	1.7	1.8	1.8	1.6	2.0	-	1.5	1.3	1.5	1.8	2.2
2015	1.7	1.9	1.5	1.8	2.0	-	1.4	1.2	1.2	1.8	2.6
2016	1.6	1.5	1.5	1.5	2.6	0.8	0.7	1.2	1.6	1.2	2.4
2017	2.0	2.1	2.1	1.8	2.7	1.8	1.6	2.8	1.7	2.5	3.2
2018	2.4	2.0	2.6	1.8	2.8	2.2	1.6	5.2	2.1	2.4	3.6
2019	1.9	2.4	1.4	2.6	2.1	1.1	1.0	1.8	1.9	1.5	3.5
2020	1.8	2.1	1.4	2.4	1.4	1.4	1.3	2.6	1.8	1.4	2.6
2021	1.7	1.8	1.5	2.8	1.3	0.9	0.9	1.1	1.4	1.6	2.7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21

통계명 아동·청소년 인터넷 성희롱 피해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에서 성희롱(성적 놀림)을 한 번이라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3\\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3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초·중·고 학생 중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2018년에 4%를 넘었으나 이후 3%대로 낮아지며 감소 추세에 있다. 성별과 학교급별로는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소득수준별로는 중상위층 학생에 비해 하위층 학생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학교급·소득수준별 아동·청소년 인터넷 성희롱 피해율,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소득수준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2013	4.5	6.4	2.4	2.8	4.2	-	5.6	9.0	3.7	4.1	7.1
2014	3.0	3.8	2.0	2.3	3.2	-	3.2	3.3	2.6	2.7	4.7
2015	2.8	3.6	1.9	2.4	3.2	-	2.6	4.1	2.2	3.0	4.3
2016	2.5	2.8	2.3	2.1	3.1	2.3	2.1	3.0	2.1	2.6	4.5
2017	3.2	3.3	3.0	2.4	4.0	3.1	2.9	3.9	2.9	3.2	4.5
2018	4.1	4.2	4.3	2.9	4.8	4.7	4.3	6.0	3.8	4.1	6.3
2019	3.7	3.5	4.0	3.1	4.7	3.6	3.5	3.5	3.4	3.0	8.1
2020	3.0	3.1	2.9	2.8	2.6	3.5	3.4	4.5	2.8	3.1	4.8
2021	3.1	2.9	3.3	3.1	3.4	2.6	2.7	2.1	2.5	3.3	5.4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22

통계명 아동·청소년 인터넷 욕설·모욕 피해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3\\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3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초·중·고 학생 중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2013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16% 안팎 수준이다. 2021년에는 18.2%로 이전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인터넷 욕설 피해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높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소득수준별로는 하위층 학생의 피해율이 가장 높다.

**통계표 성·학교급·소득수준별 아동·청소년 인터넷 욕설 피해율,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소득수준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2013	22.2	30.0	13.5	17.3	24.4	-	23.8	25.4	20.0	21.6	28.7
2014	17.6	21.7	13.4	15.8	20.4	-	16.3	17.8	17.0	16.1	23.3
2015	15.8	20.0	11.2	15.0	17.6	-	14.0	17.4	14.7	15.8	20.5
2016	14.1	17.0	10.8	12.2	17.1	12.8	12.1	15.5	12.9	13.9	18.6
2017	16.2	18.2	14.0	13.3	21.4	14.0	13.7	15.3	15.1	16.4	21.5
2018	16.5	17.6	15.4	14.0	21.1	14.9	14.1	18.6	15.3	16.6	23.6
2019	15.6	16.5	14.5	13.1	19.9	13.9	14.0	13.3	14.3	15.1	24.1
2020	16.1	17.3	14.7	16.7	20.7	11.3	11.4	10.3	16.0	15.3	21.4
2021	18.2	19.2	17.1	19.7	22.3	12.3	12.4	11.6	17.9	16.4	25.6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23

통계명 아동·청소년 인터넷 협박 피해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에서 협박을 한 번이라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3\\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3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초·중·고 학생 중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에서 협박을 당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대체로 2-3%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피해율이 여학생보다 높다. 학교급별로는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소득수준별로는 하위층 학생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학교급·소득수준별 아동·청소년 인터넷 협박 피해율,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소득수준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2013	3.5	5.2	1.4	2.4	3.0	-	3.9	7.9	3.0	3.1	5.4
2014	2.0	2.9	1.0	1.5	2.2	-	2.2	2.0	1.9	1.7	2.9
2015	2.1	3.4	0.6	2.4	2.1	-	1.7	2.0	1.9	1.9	3.1
2016	1.8	2.7	1.2	1.6	2.7	1.4	1.2	2.2	1.7	1.5	3.3
2017	2.2	2.9	1.4	1.9	2.8	1.8	1.6	2.8	1.8	2.4	3.3
2018	2.4	2.9	1.9	2.4	2.2	2.7	2.0	5.4	2.1	2.5	3.6
2019	2.5	3.1	1.8	2.7	2.7	2.0	1.8	2.8	2.2	2.6	3.9
2020	2.3	3.0	1.5	2.6	2.0	2.1	2.0	2.7	2.1	2.1	4.4
2021	3.0	3.3	2.4	4.1	3.0	1.5	1.3	2.5	2.3	3.2	4.9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24

통계명 안전권 존중도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안전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안전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65.7%, 2020년 74.4%, 2021년 75.8%, 2022년 77.2%로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다소 더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안전권 존중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65.7	69.4	62.0	61.5	63.7	63.5	65.4	71.8	71.0	61.7	66.5	72.0
2020	74.4	76.0	72.7	72.6	75.5	75.8	71.3	75.8	74.9	73.0	75.2	77.2
2021	75.8	77.0	74.6	75.8	72.5	75.1	76.3	77.7	79.3	74.9	75.3	72.3
2022	77.2	78.7	75.7	76.0	75.8	75.8	77.4	79.3	81.8	76.3	76.3	74.2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25

통계명 야간보행 두려움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밤에 혼자 걸을 때 ‘약간 불안하다’ 또는 ‘매우 불안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A132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A132R&conn_path=I3)

수록기간 2001-2022

통계해설 야간보행 두려움, 즉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2년 29.6%로 2020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과거에는 젊은층에서 야간보행 두려움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거주지역별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과거에는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야간보행 두려움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지역 간 차이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통계표 성·연령·거주지역별 야간보행 두려움, 2001-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남자	여자	15-19세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도시	농어촌
2001	48.6	37.8	58.8	57.8	-	54.9	50.8	50.3	43.3	32.6	51.0	39.1
2005	42.6	30.8	53.9	53.8	-	49.8	48.1	42.7	37.5	26.1	44.4	34.4
2008	40.8	27.6	53.5	51.4	-	46.9	48.5	42.9	33.3	25.0	42.1	35.1
2010	40.6	29.1	51.7	50.8	-	48.2	47.5	43.7	35.1	23.5	41.8	35.1
2012	44.0	30.9	56.7	-	54.6	53.4	55.3	46.3	36.2	24.8	45.6	36.3
2014	42.6	29.1	55.5	-	52.6	49.9	52.0	46.3	36.8	25.8	43.8	36.8
2016	40.9	29.4	52.2	-	49.4	49.0	50.3	44.5	36.6	25.4	41.5	38.4
2018	36.5	25.7	47.0	-	41.5	42.5	44.5	40.2	33.7	24.7	37.0	34.0
2020	33.6	16.9	49.8	-	36.5	35.1	34.9	34.6	33.1	30.5	34.0	31.7
2022	29.6	15.1	44.0	-	31.1	30.3	28.9	30.1	29.5	29.2	29.9	28.4

주: 1) 2018년까지는 ‘밤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2)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3) 도시는 동 지역, 농어촌은 읍면 지역임.

통계번호 JUS-21026

통계명 장애인 학대 및 폭력 피해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장애인이란 이유로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학대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F009&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F009&conn_path=I3)

수록기간 2018-2020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학대나 폭력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의 비율은 2019년 4.7%에 이어 2020년에는 4.2%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피해유형 중 장애인이 가장 많이 겪는 피해는 따돌림이나 무시와 같은 언어 및 정서 학대이다.

**통계표** 장애인 학대 및 폭력 피해율, 2018-2020

연도	전체	피해유형별					
		언어 및 정서 학대 (따돌림, 무시)	신체 폭력 (학대)	성희롱, 성적 폭력	방임 및 유기	경제적 착취	종교적 폭력 및 강요
2018	9.5	9.2	1.7	0.5	1.0	0.5	0.3
2019	4.7	4.4	0.5	0.3	0.2	0.4	0.1
2020	4.2	4.0	0.3	0.1	0.1	0.1	0.0

주: 1) 전체 피해율은 한 가지라도 피해를 당한 응답자의 비율임.  
2)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27

통계명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평상시 생활하는 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안전한 편이다’ 또는 ‘매우 안전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D02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D027&conn_path=I3)

수록기간 2018-2020

통계해설 평상시 생활환경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2018년 85.0%에서 2019년 88.2%, 2020년 90.1%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비율은 성별에 따라 그리고 장애정도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장애인의 성 및 장애정도별 안전에 대한 인식, 2018-2020

연도	전체	성별		장애정도별	
		남성	여성	중증	경증
2018	85.0	84.5	85.8	84.9	85.2
2019	88.2	88.7	87.6	86.9	89.0
2020	90.1	89.8	90.6	89.0	90.8

주: 1)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28

통계명 장애인학대 발생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장애인학대 발생률 = (학대피해장애인 수 ÷ 등록장애인 수) × 100,000.

단위 명/10만 명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08\\_C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08_C001&conn_path=I3)

수록기간 2018-2020

통계해설 장애인학대 발생률은 등록장애인 10만 명당 학대피해장애인 수로 나타낸다. 학대피해 장애인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피해를 신고하여 학대사례 판정을 받은 장애인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장애인학대 발생률은 2018년 34.4명, 2019년 36.1명, 2020년 38.3명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학대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장애인학대 발생률, 2018-2020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18	34.4	32.6	36.8	141.0	222.6	121.4	56.7	28.8	6.2
2019	36.1	32.8	40.6	179.6	212.6	136.4	65.9	30.9	5.5
2020	38.3	32.1	46.7	181.9	282.0	141.5	72.5	27.5	5.8

주: 1) 전체에는 연령미상자가 포함됨.

통계번호 JUS-21029

통계명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중 해당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12\\_019&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12_019&conn_path=I3)

수록기간 2010-2019

통계해설 지난 1년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음란전화 피해자 2.1%, 신체접촉 성폭력 피해자 0.4%, 성희롱 피해자 0.4%, 성기노출 피해자 0.3%, 불법촬영 피해자 0.1% 등이다. 음란전화 피해를 제외하면 여성의 피해율이 남성보다 높다.

**통계표** 성별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2010-2019

연도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폭력			음란전화 등			성기노출 등			성희롱			불법촬영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10	2.9	4.7	0.9	34.2	27.1	41.8	2.0	2.7	1.1	1.4	2.4	0.2	-	-	-
2013	1.5	2.7	0.3	27.8	26.4	29.2	1.7	3.0	0.3	0.9	1.9	0.0	-	-	-
2016	0.8	1.5	0.1	5.5	4.0	7.0	1.0	1.6	0.4	0.5	0.9	0.1	0.1	0.1	0.0
2019	0.4	0.8	0.0	2.1	2.0	2.3	0.3	0.6	0.1	0.4	0.8	0.0	0.1	0.1	0.0

주: 1) 19-6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신체접촉 성폭력에는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이 포함됨.

통계번호 JUS-21030

통계명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최근 3년 이내 직장에서 해당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3450011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34500118&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18

통계해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은 피해유형에 따라 1% 미만에서 5%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피해유형별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전화, 문자 및 SNS 포함),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의 순으로 높다.

**통계표 성·연령집단·고용형태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 2015-2018**

성희롱 피해유형	2015	2018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3.9	5.3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전화, 문자 및 SNS 포함)	3.0	3.4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2.5	2.7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1.3	1.5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0.9	1.2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0.5	0.6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0.6	0.4
성인 잡지(각종 이미지)나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0.3	0.4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0.2	0.3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0.1	0.1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0.2	0.1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0.0	0.1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평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0.0	0.0

주: 1)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31

통계명 청소년 갈취 피해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8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88&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0

통계해설 청소년 갈취 피해는 학교폭력 피해의 한 유형으로, 갈취 피해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6년과 2018년에 1.0%였다가 2020년에 0.7%로 약간 감소하였다. 2018년까지는 남학생의 피해율이 여학생의 두 배 이상으로 높았으나 2020년에는 남녀 학생이 비슷해졌다. 갈취 피해는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갈취 피해 경험률, 2016-2020**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6	1.0	1.4	0.6	1.1	1.2	0.8	0.8	0.9
2018	1.0	1.3	0.6	1.1	1.1	0.8	0.7	1.3
2020	0.7	0.8	0.7	1.1	0.7	0.5	0.4	0.7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32

통계명 청소년 강제 성관계 피해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강제 성관계 시도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7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702&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0

통계해설 청소년 강제 성관계 피해는 성폭력 피해의 한 유형으로, 강제 성관계 피해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강제 성관계 시도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매년 0.1% 수준으로 조사된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여학생의 피해율이 남학생보다 높다. 특히 특성화계고 학생의 피해율은 일반계고 학생보다 크게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강제 성관계 피해 경험률, 2016-2020**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6	0.1	0.2	0.1	0.1	0.1	0.2	0.2	0.2
2018	0.1	0.1	0.2	0.2	0.1	0.1	0.1	0.4
2020	0.1	0.1	0.2	0.1	0.1	0.1	0.1	0.4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33

통계명 청소년 강제 심부름 피해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강제 심부름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9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91&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0

통계해설 청소년 강제 심부름 피해는 학교폭력 피해의 한 유형으로, 강제 심부름 피해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강제 심부름을 당한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6년 0.5%에서 2018년 0.2%로 줄었고 2020년에는 0.3%에 그친다. 강제 심부름 피해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다. 학교급별로는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강제 심부름 피해 경험률, 2016-2020**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6	0.5	0.6	0.3	0.3	0.3	0.7	0.7	0.7
2018	0.2	0.4	0.1	0.2	0.3	0.3	0.2	0.7
2020	0.3	0.3	0.2	0.4	0.2	0.2	0.2	0.2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34

통계명 청소년 고의적 신체접촉 피해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7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701&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0

통계해설 청소년 고의적 신체접촉 피해는 성폭력 피해의 한 유형으로, 고의적 신체접촉 피해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6년과 2018년에 1.0%였으나 2020년에 0.3%로 떨어졌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피해율이 여학생보다 높다. 학교급별로는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고의적 신체접촉 피해 경험률, 2016-2020**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6	1.0	1.4	0.6	1.4	1.0	0.8	0.7	1.0
2018	1.0	1.2	0.8	0.8	1.2	1.0	1.0	0.9
2020	0.3	0.3	0.2	0.5	0.2	0.1	0.1	0.4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35

통계명 청소년 성적 모욕 피해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60&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60&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0

통계해설 청소년 성적 모욕 피해는 성폭력 피해의 한 유형으로, 성적 모욕 피해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2016년 1.4%에서 2018년 1.7%로 약간 올랐다가 2020년에는 0.9%로 떨어졌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피해율이 남학생보다 높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성적 모욕 피해 경험률, 2016-2020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6	1.4	1.3	1.5	1.8	1.4	1.0	1.0	1.1
2018	1.7	1.5	1.9	1.8	1.8	1.5	1.5	1.3
2020	0.9	0.6	1.1	1.5	0.7	0.4	0.3	0.9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36

통계명 청소년 스토킹 피해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59&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59&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0

통계해설 청소년 스토킹 피해는 성폭력 피해의 한 유형으로,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6년과 2018년 0.4%, 2020년 0.3%로 큰 변화가 없다. 성별로는 남녀 학생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학교급별로는 2016년과 2020년에 초등학교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스토킹 피해 경험률, 2016-2020**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6	0.4	0.6	0.3	0.6	0.3	0.4	0.4	0.4
2018	0.4	0.4	0.4	0.3	0.4	0.4	0.4	0.9
2020	0.3	0.3	0.4	0.6	0.2	0.2	0.1	0.3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37

통계명 청소년 온라인 따돌림·괴롭힘 피해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5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52&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0

통계해설 청소년 온라인 따돌림·괴롭힘 피해는 학교폭력 피해의 한 유형으로, 온라인 따돌림·괴롭힘 피해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6년 0.8%, 2018년 0.9%, 2020년 1.1%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여학생의 피해율이 남학생보다 약간 더 높고 초등학생의 피해율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크게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온라인 따돌림·괴롭힘 피해 경험률, 2016-2020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6	0.8	0.9	0.8	0.9	0.7	0.9	0.9	1.3
2018	0.9	0.6	1.3	0.9	1.3	0.7	0.6	1.2
2020	1.1	1.0	1.2	1.8	1.0	0.6	0.5	0.9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38

통계명 청소년 온라인 스토킹·성희롱 피해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인터넷, 채팅앱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6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63&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0

통계해설 청소년 온라인 스토킹·성희롱 피해는 성폭력 피해의 한 유형으로, 온라인 스토킹·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인터넷, 채팅앱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6년 0.5%, 2018년과 2020년 0.6%로 큰 변화가 없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피해율이 남학생의 두 배 이상으로 높다. 온라인 스토킹·성희롱 피해율은 특성화계고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온라인 스토킹·성희롱 피해 경험률, 2016-2020**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6	0.5	0.3	0.7	0.2	0.6	0.5	0.5	0.9
2018	0.6	0.4	0.8	0.5	0.6	0.7	0.6	1.0
2020	0.6	0.3	1.0	0.5	0.7	0.7	0.6	0.8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39

통계명 청소년 왕따 피해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왕따(따돌림)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50&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50&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0

통계해설 청소년 왕따 피해는 학교폭력 피해의 한 유형으로, 왕따 피해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왕따(따돌림)를 당한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6년과 2018년 1.6%에서 2020년 1.3%로 낮아졌다. 왕따 피해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왕따 피해 경험률, 2016-2020**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6	1.6	1.7	1.6	2.6	1.4	1.1	1.0	1.5
2018	1.6	1.2	1.9	2.7	1.3	0.9	0.8	1.8
2020	1.3	0.9	1.8	2.3	1.2	0.6	0.5	1.0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40

통계명 청소년 욕설 피해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4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46&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0

통계해설 청소년 욕설 피해는 학교폭력 피해의 한 유형으로, 욕설 피해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6년과 2018년 6.9%에서 2020년 4.1%로 떨어졌다. 욕설 피해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높다. 학교급별로는 2016년과 2020년에는 초등학교, 2018년에는 중학교에서 가장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욕설 피해 경험률, 2016-2020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6	6.9	8.4	5.3	7.9	6.6	6.5	6.1	8.4
2018	6.9	7.8	5.9	7.3	8.1	5.6	5.1	7.8
2020	4.1	4.7	3.5	6.5	3.9	2.2	2.1	2.5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41

통계명 청소년 폭행 피해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4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47&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0

통계해설 청소년 폭행 피해는 학교폭력 피해의 한 유형으로, 폭행 피해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은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6년 2.9%에서 2018년 2.4%, 2020년 1.6%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폭행 피해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폭행 피해 경험률, 2016-2020**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6	2.9	4.0	1.8	4.3	2.7	2.0	2.0	2.2
2018	2.4	3.5	1.3	3.1	2.9	1.5	1.3	2.1
2020	1.6	2.0	1.1	3.1	1.2	0.5	0.5	0.9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42

통계명 청소년 폭행위협 피해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89&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689&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0

통계해설 청소년 폭행위협 피해는 학교폭력 피해의 한 유형으로, 폭행위협 피해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한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2016년 1.8%, 2018년 1.6%, 2020년 1.1%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폭행위협 피해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고 고등학교, 특히 일반계고에서 가장 낮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폭행위협 피해 경험률, 2016-2020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6	1.8	2.7	0.8	2.6	1.5	1.5	1.4	2.0
2018	1.6	2.2	1.1	2.2	1.6	1.2	1.0	2.1
2020	1.1	1.4	0.8	1.9	1.1	0.5	0.4	0.9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043

통계명 취약집단 실종 발생건수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경찰에 접수된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건수임.

단위 건

자료 경찰청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0)

수록기간 2011-2021

통계해설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하는 취약집단 인구의 실종사건은 2011년 4만 3000여 건에서 2015년 3만 6000여 건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후 증가세로 바뀌며 최근에는 연간 4만 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인구집단별로는 2021년 기준 아동 실종이 2만 1000여 건, 지적장애인 실종이 7000여 건, 치매환자 실종이 1만 2000여 건 발생하였다. 이 중 치매환자 실종은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실종자의 대부분은 발견되지만 최근 5년간(2017-2021) 미발견 상태로 남아 있는 실종자는 204명에 이른다.

통계표 취약집단 실종 발생건수, 2011-2021

연도	전체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신고	해제	미해제	신고	해제	미해제	신고	해제	미해제	신고	해제	미해제
2011	43,080	43,246	0	28,099	28,271	0	7,377	7,399	0	7,604	7,576	0
2012	42,169	42,230	0	27,295	27,437	0	7,224	7,154	0	7,650	7,639	0
2013	38,695	39,992	0	23,089	24,328	0	7,623	7,699	0	7,983	7,965	0
2014	37,522	37,837	0	21,591	21,832	0	7,724	7,773	0	8,207	8,232	0
2015	36,785	37,327	0	19,428	19,881	0	8,311	8,377	0	9,046	9,069	0
2016	38,281	38,375	0	19,870	19,908	0	8,542	8,551	0	9,869	9,916	0
2017	38,789	38,839	12	19,956	19,991	4	8,525	8,536	2	10,308	10,312	6
2018	42,992	42,908	13	21,980	21,911	4	8,881	8,873	7	12,131	12,124	2
2019	42,390	42,251	26	21,551	21,412	8	8,360	8,353	15	12,479	12,486	3
2020	38,496	38,426	26	19,146	19,054	13	7,078	7,089	10	12,272	12,283	3
2021	41,122	40,987	127	21,379	21,257	79	7,166	7,168	33	12,577	12,562	15

주: 1) 신고는 접수시점, 해제는 발견시점, 미해제는 실종시점 기준임.  
 2) 미해제건수는 추적을 통한 추가 발견으로 인해 매년 변동될 수 있음.  
 3) 아동은 18세 미만이며 지적장애아동은 포함되지 않음.

통계번호 JUS-21044  
통계명 학교폭력 검거건수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경찰의 학교폭력 사건 검거건수임.  
단위 건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경찰이 검거하는 학교폭력 사건은 2012년까지만해도 연간 2만 건을 넘었다. 하지만 2013년에 1만 7000여 건으로 크게 줄어든 후 2019년까지 1만 4000건 이내에 그친다. 2020년에는 1만 1000여 건으로 감소하였다. 폭력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절반을 차지하고 성폭력과 금품갈취가 각각 20%와 10% 정도를 차지한다. 지난 10년간 폭행상해와 금품갈취 사건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성폭력 사건의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통계표** 학교폭력 검거건수와 폭력유형별 비율, 2011-2020

연도	전체 검거건수(건)	폭력유형별 비율(%)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2011	21,957	67.6	17.8	2.0	12.6
2012	23,877	61.3	24.8	2.1	11.8
2013	17,385	63.5	15.0	6.1	15.3
2014	13,268	67.6	11.9	9.8	10.7
2015	12,495	73.5	9.2	10.0	7.2
2016	12,805	73.4	9.1	10.7	6.9
2017	14,000	71.7	8.5	12.1	7.7
2018	13,367	59.4	10.3	18.9	11.4
2019	13,584	55.1	9.8	22.5	12.6
2020	11,331	51.7	10.4	21.7	16.1

주: 1) 폭력유형별 비율 = (폭력유형별 검거건수 ÷ 전체 검거건수) × 100.

통계번호 JUS-21045

통계명 흉악범죄 발생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안전할 권리

산출방법 흉악범죄 발생률 = (흉악범죄 발생건수 ÷ 총인구) × 100,000.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임.

단위 건/10만 명

자료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N\\_1A001A&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N_1A001A&conn_path=I3)

수록기간 2002-2020

통계해설 흉악범죄 발생률, 즉 살인·강도·방화·성폭력을 포함하는 흉악범죄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는 2002년 36.8건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3년에 60건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70건에 근접하였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로 바뀌며 2020년에는 63.3건으로 감소하였다. 흉악범죄 중에서는 성폭력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성폭력은 202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58.1건 발생하였다. 방화나 살인, 강도 발생은 1-2건에 불과하다. 강도는 2002년 12.3건에서 2020년 1.3건으로 급격히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성폭력은 19.6건에서 58.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통계표** 흉악범죄 유형별 발생률, 2002-2020

연도	전체	범죄유형별				연도	전체	범죄유형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2002	36.8	2.0	12.3	2.9	19.6	2012	52.8	2.0	5.2	3.7	41.9
2003	42.2	2.1	15.1	3.5	21.4	2013	61.9	1.9	3.9	3.4	52.6
2004	40.2	2.2	11.9	3.3	22.9	2014	66.5	1.8	3.2	3.3	58.2
2005	40.9	2.2	10.8	3.7	24.1	2015	68.2	1.9	2.9	3.2	60.3
2006	42.9	2.2	9.6	3.4	27.7	2016	63.8	1.8	2.3	2.9	56.8
2007	42.5	2.3	9.1	3.4	27.7	2017	69.6	1.7	1.9	2.6	63.4
2008	46.4	2.3	9.7	3.9	30.5	2018	68.1	1.6	1.6	2.9	61.9
2009	51.8	2.8	12.8	3.7	32.5	2019	67.6	1.6	1.6	2.6	61.8
2010	54.4	2.5	8.7	3.7	39.5	2020	63.3	1.6	1.3	2.3	58.1
2011	57.6	2.4	7.9	3.9	43.4						

통계번호 JUS-21101

통계명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생활 보호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342005\\_B05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342005_B055&conn_path=I3)

수록기간 2014-2020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4-2016년 기간에 6-7%대였다가 2017-2019년 기간에는 1%대로 낮아졌고 2020년에는 4.0%로 다시 높아졌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0대부터 40대까지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험률은 4-6% 수준이지만 50대 이후부터는 1%대로 낮아진다.

**통계표** 연령별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험률, 2014-2020

연도	전체	연령별					
		12-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2014	7.9	4.3	8.9	10.9	6.9	7.3	-
2015	7.6	3.1	9.9	10.2	7.6	5.4	-
2016	6.5	5.1	8.8	9.1	6.0	3.4	-
2017	1.9	1.7	2.7	1.7	3.0	0.9	1.1
2018	1.7	1.1	2.4	2.7	1.9	0.9	0.8
2019	1.2	0.5	1.2	2.1	1.7	1.1	0.0
2020	4.0	4.5	6.0	4.8	6.0	1.7	1.1

주: 1) 12-69세 인구(2016년까지는 12-59세 인구) 중 최근 1개월 내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102

통계명 교내 교육비미납정보 공개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생활 보호 권리

산출방법 선생님이 교육비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는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1\\_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1_2&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학교에서 교육비를 미납한 학생의 이름 공개를 경험한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2013년 18.1%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에는 5.4%로 떨어졌다. 이 비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높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특히 특성화계고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교내 교육비미납정보 공개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3	18.1	20.0	15.9	15.7	-	16.5	38.1
2014	16.5	17.9	15.1	14.1	-	15.4	35.5
2015	13.1	14.9	11.0	13.5	-	11.1	19.1
2016	11.2	13.0	9.3	10.1	12.3	10.3	20.4
2017	11.6	14.9	7.8	10.2	12.6	11.0	19.5
2018	11.1	14.3	7.5	10.0	11.8	10.7	17.1
2019	10.0	12.8	7.1	10.0	10.0	8.9	14.7
2020	7.3	9.7	4.9	5.0	9.5	8.2	14.8
2021	5.4	6.9	3.9	4.9	6.0	4.9	9.7

주: 1)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103

통계명 교내 시험성적 공개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생활 보호 권리

산출방법 선생님이 개인의 시험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는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1\\_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1_2&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학교에서 개인의 시험성적 공개를 경험한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2013년 29.1%에서 2019년 18.4%로 낮아졌고 2021년에는 10.4%로 떨어졌다. 시험성적 공개 경험률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높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특히 특성화계고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2018년까지는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시험성적 공개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학교급·학업성적별 교내 시험성적 공개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업성적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2013	29.1	29.7	28.3	12.4	35.5	-	35.1	43.5	29.0	26.5	33.0
2014	28.1	28.8	27.4	10.4	31.5	-	37.2	46.2	27.1	25.5	32.9
2015	23.5	25.2	21.6	10.1	23.8	-	31.6	41.4	23.9	21.0	27.5
2016	24.3	25.6	22.9	10.4	24.2	34.9	34.1	38.0	21.8	23.6	28.9
2017	21.6	23.2	19.6	5.3	22.1	33.1	30.5	44.0	17.8	20.2	29.2
2018	20.2	23.4	16.8	7.4	20.0	30.5	28.5	39.0	18.3	18.9	25.2
2019	18.4	22.8	13.7	-	14.8	21.5	19.9	28.4	19.9	16.4	20.0
2020	13.5	16.1	10.9	-	8.9	17.8	14.8	30.4	13.1	12.7	15.1
2021	10.4	12.6	7.9	-	9.2	11.5	10.4	16.0	12.0	9.6	9.9

주: 1) 2018년까지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 2019년부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104

통계명 교내 학생징계정보 공개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생활 보호 권리

산출방법 학교가 학생의 징계내용과 이름을 공개하는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1\\_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1_2&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 관련 정보 공개를 경험한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2013년 31.5%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에 20.4%로 낮아졌고 2021년에는 12.4%로 떨어졌다. 이 비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높다. 학교급별로는 특성화계고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교내 학생징계정보 공개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3	31.5	33.5	29.1	30.9	27.6	-	34.6	40.1
2014	30.2	32.7	27.7	28.8	27.0	-	33.0	41.2
2015	26.3	29.4	23.0	29.8	21.2	-	25.7	40.9
2016	26.4	28.1	24.5	27.1	20.9	30.8	29.5	35.8
2017	25.0	28.3	21.3	19.2	21.5	32.1	29.7	41.9
2018	20.4	23.3	17.4	18.6	19.3	22.9	22.0	26.9
2019	18.8	21.9	15.3	18.3	17.5	20.1	20.4	19.4
2020	15.2	18.5	11.7	16.4	10.3	18.5	16.2	28.3
2021	12.4	15.6	9.0	14.4	10.7	12.2	10.9	17.4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105

통계명 국가기관 통신기록 수집·조사 반대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생활 보호 권리

산출방법 국가정보기관이 인터넷, 스마트폰의 개인 간 대화내용과 통신기록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국가기관이 개인의 통신기록을 수집·조사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0년 64.2%, 2021년 68.2%, 2022년 66.0%로 60% 중반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여성보다는 남성, 60대 이상보다는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다소 더 높다. 교육수준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국가기관의 통신기록 수집·조사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국가기관 통신기록 수집·조사 반대율,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73.7	75.8	71.6	73.4	72.2	73.2	75.6	73.9	71.7	72.7	75.1	80.4
2020	64.2	66.9	61.5	64.8	63.9	65.0	69.2	60.1	57.4	64.0	67.3	71.9
2021	68.2	68.9	67.6	67.2	70.0	69.4	70.3	65.6	63.0	67.9	70.2	77.6
2022	66.0	67.7	64.3	68.9	68.2	66.8	65.2	63.1	61.2	65.0	68.2	75.0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106

통계명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반대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생활 보호 권리

산출방법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1년까지 5% 안팎 수준에 있다가 2022년에 8.4%로 다소 높아졌다. 성별로는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반대율,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4.9	5.0	4.8	4.9	4.1	3.9	5.6	5.7	5.7	4.7	4.2	10.6
2020	4.8	5.3	4.2	4.1	3.2	4.3	5.8	5.7	6.4	4.0	4.5	7.1
2021	5.1	5.1	5.2	4.4	5.8	5.0	5.6	5.0	4.7	4.9	5.4	6.2
2022	8.4	8.2	8.5	7.7	9.4	8.3	7.7	8.6	8.2	9.0	8.0	6.0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107

통계명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존중도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생활 보호 권리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62.4%, 2020년 68.0%, 2021년 73.1%, 2022년 76.4%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교육 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존중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62.4	63.6	61.2	55.7	57.1	58.6	63.8	72.5	71.6	60.9	59.3	63.8
2020	68.0	68.6	67.4	65.5	64.2	69.4	64.7	73.2	72.7	68.2	65.6	64.4
2021	73.1	74.4	71.9	70.6	69.9	71.8	73.9	76.7	77.8	73.1	71.2	70.4
2022	76.4	76.4	76.5	75.1	74.7	74.1	75.0	80.4	81.8	76.2	75.0	66.1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108

통계명 아동·청소년 인터넷 사생활공개 피해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생활 보호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한 번이라도 공개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3\\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3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초·중·고 학생 중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공개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2020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4-5% 수준으로 나타난다. 성별 및 학교급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하위층 학생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학교급·소득수준별 아동·청소년 인터넷 사생활공개 피해율,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소득수준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2013	4.4	4.4	4.3	6.6	3.4	-	3.6	3.5	4.2	3.7	6.2
2014	5.4	5.8	5.1	4.8	4.9	-	6.6	6.6	5.9	4.2	7.7
2015	5.0	5.2	4.5	4.5	4.9	-	5.1	6.1	4.5	4.6	8.0
2016	4.9	5.2	4.7	4.0	6.0	4.8	4.7	4.6	5.1	4.0	6.8
2017	5.7	5.3	6.3	4.0	7.6	5.6	5.3	6.0	5.2	5.2	9.8
2018	5.3	5.4	5.3	4.0	6.7	5.3	4.6	7.6	4.7	5.3	8.2
2019	5.1	5.3	4.8	4.2	6.4	4.5	4.7	3.9	4.9	4.5	7.6
2020	3.2	3.0	3.3	2.8	3.3	3.2	3.1	3.9	3.2	2.7	4.9
2021	4.2	4.0	4.4	4.5	5.1	3.0	2.8	3.7	3.8	4.1	6.4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109

통계명 청소년 복장검사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생활 보호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복장검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9\\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9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복장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2014년에 53.4%까지 높았다가 2018년부터 감소 추세로 바뀌며 매년 낮아져 2021년에는 28.9%로 떨어졌다. 이 비율은 남녀 학생 간에 차이가 적지 않게 나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0%p 이상 높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복장검사 경험률이 중학생보다 일관되게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복장검사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3	52.5	41.0	65.0	50.0	-	56.8	45.6
2014	53.4	38.7	69.3	51.6	-	54.5	57.3
2015	43.6	29.7	58.7	41.9	-	45.8	42.5
2016	47.6	34.1	62.6	41.9	52.9	53.0	53.0
2017	50.1	36.0	65.4	46.0	53.5	54.9	46.9
2018	48.7	35.0	63.7	42.2	54.2	54.4	53.6
2019	43.6	30.7	57.5	37.4	48.9	48.0	52.3
2020	30.3	23.3	38.1	27.7	32.9	32.6	34.0
2021	28.9	21.1	37.6	21.9	36.0	35.5	38.3

주: 1)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110

통계명 청소년 소지품검사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생활 보호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소지품검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9\\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9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소지품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2016년 까지 등락하다가 이듬해인 2017년부터 매년 감소하여 2021년에는 6.2%로 낮아졌다.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는 차이가 별로 없지만 일반계고와 특성화계고 사이에는 차이가 크게 난다. 특성화계고 학생의 소지품검사 경험률은 일반계고 학생의 두 배 안팎 수준이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소지품검사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3	17.0	17.8	16.0	15.6	-	16.7	25.9
2014	23.2	22.3	24.1	23.5	-	15.4	56.9
2015	17.8	17.3	18.3	15.9	-	15.3	39.2
2016	21.2	22.6	19.6	18.6	23.3	19.5	38.2
2017	19.4	19.2	19.8	18.4	20.4	16.5	37.3
2018	18.0	18.7	17.1	16.9	18.9	16.7	28.2
2019	15.9	16.5	15.0	14.0	17.3	14.6	28.6
2020	9.7	11.5	7.8	10.7	9.0	6.2	20.4
2021	6.2	7.5	5.1	5.9	6.6	5.2	12.4

주: 1)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111

통계명 청소년 용모검사 경험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생활 보호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용모검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9\\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19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용모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2018년까지 50%대를 등락하다가 2019년부터 매년 감소하여 2021년에는 21.3%로 낮아졌다. 용모검사 경험률은 성별로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일관되게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용모검사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3	56.1	51.7	61.2	48.8	-	63.6	62.0
2014	57.9	48.9	67.8	52.6	-	62.3	65.7
2015	50.7	42.3	59.8	45.3	-	56.2	53.7
2016	51.4	39.7	64.2	42.8	59.1	59.1	58.8
2017	53.3	40.2	67.6	48.4	57.4	58.2	54.0
2018	52.5	38.1	68.3	46.2	57.7	57.5	58.7
2019	42.8	28.3	58.6	37.2	47.7	47.7	48.3
2020	27.8	20.4	35.7	25.9	29.5	28.2	35.1
2021	21.3	14.9	28.5	16.5	26.3	24.7	33.4

주: 1)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201

통계명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공정한 재판 권리

산출방법 우리 사회의 법집행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우리 사회의 법집행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38.9%에서 2018년 34.1%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매년 늘어나 2021년에는 54.0%로 높아졌다. 이 비율은 20대 이하에서 가장 낮고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초졸 이하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38.9	35.4	34.0	40.3	43.0	43.6	-	48.2	39.3	38.6	37.6
2014	38.8	36.1	37.8	40.7	39.0	40.7	-	42.7	35.9	38.1	39.6
2015	37.9	37.8	34.8	34.9	39.1	46.6	-	49.2	39.7	38.7	35.5
2016	36.0	32.9	31.7	34.4	41.4	40.8	-	42.7	37.4	36.1	35.1
2017	36.8	35.3	34.6	37.1	38.3	39.0	-	43.0	35.6	36.0	37.4
2018	34.1	36.9	32.5	34.1	34.6	31.8	-	36.4	28.4	34.7	34.1
2019	39.3	42.2	39.8	39.7	37.8	36.6	-	31.7	35.2	37.2	41.5
2020	46.2	47.0	43.2	47.1	44.8	-	47.7	53.1	50.9	44.9	45.2
2021	54.0	49.2	52.3	55.2	53.7	-	57.1	58.1	53.7	53.3	54.2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202

통계명 사법기관 공정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공정한 재판 권리

산출방법 법원의 업무수행이 공정한지에 대해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2&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법원의 업무수행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7년을 제외하면 30% 중후반대를 등락하다가 2019년부터 매년 늘어나 2021년에는 58.2%로 높아졌다. 이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다소 더 높다. 연령별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2021년으로 한정하여 보면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사법기관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2013	38.1	37.4	38.9	36.0	35.8	38.1	39.9	43.0	-
2014	37.5	36.8	38.4	38.1	33.9	37.9	38.0	41.4	-
2015	35.1	34.6	35.5	34.1	32.7	31.9	37.3	42.3	-
2016	37.9	36.7	39.1	34.1	34.1	37.0	42.1	43.5	-
2017	43.2	43.0	43.4	39.0	42.4	45.2	44.9	44.2	-
2018	36.6	34.7	38.6	39.3	34.3	36.2	38.4	34.0	-
2019	42.8	42.8	42.7	44.0	45.7	41.1	41.7	41.7	-
2020	54.3	52.7	55.8	54.4	52.3	55.1	55.0	-	54.1
2021	58.2	56.0	60.4	56.6	54.0	59.1	58.8	-	60.3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203

통계명 사법기관 투명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공정한 재판 권리

산출방법 법원에 대해 ‘약간 청렴하다’ 또는 ‘매우 청렴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9&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9&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법원이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0% 중후반대를 등락하다가 2019년부터 매년 늘어났고 2021년에는 46.3%에 이르고 있다. 최근 두 해로 한정하여 보면, 이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 30대 이하보다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사법기관 투명성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2013	31.8	31.8	31.8	28.2	28.7	32.1	35.1	37.3	-
2014	31.0	30.8	31.1	29.2	30.4	29.4	34.3	31.7	-
2015	28.3	28.7	27.9	27.6	23.9	26.9	29.3	37.1	-
2016	24.7	23.7	25.8	21.1	20.9	23.7	29.8	28.7	-
2017	28.2	27.5	29.0	25.0	25.4	28.9	31.8	29.8	-
2018	26.2	25.6	26.8	27.7	23.2	26.4	27.0	26.4	-
2019	32.4	32.7	32.1	31.5	35.2	33.3	30.4	31.8	-
2020	37.1	35.0	39.2	35.4	34.0	38.4	38.0	-	38.3
2021	46.3	44.2	48.2	44.0	40.9	48.0	46.5	-	49.1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204

통계명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공정한 재판 권리

산출방법 법원에 대해 ‘약간 믿는다’ 또는 ‘매우 믿는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8&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법원을 신뢰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41.0%에서 2016년 29.8%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부터 점차 늘어나 2021년에는 51.2%에 이르고 있다. 법원에 대한 신뢰는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다. 연령별로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2013	41.0	40.3	41.8	39.9	35.6	41.4	45.0	44.9	-
2014	37.6	35.9	39.3	35.7	35.5	36.7	40.3	40.9	-
2015	35.0	33.4	36.5	34.2	29.7	34.6	35.7	43.6	-
2016	29.8	27.1	32.6	27.2	24.4	29.1	34.6	34.4	-
2017	34.3	33.1	35.6	31.4	34.3	33.7	35.5	37.5	-
2018	33.0	31.2	34.8	35.3	29.6	35.0	32.9	31.4	-
2019	36.8	37.4	36.1	36.3	38.5	39.3	35.4	33.9	-
2020	41.0	39.3	42.8	39.0	37.8	42.1	41.0	-	43.5
2021	51.2	49.2	53.2	51.4	46.9	51.0	50.6	-	54.1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205

통계명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존중도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공정한 재판 권리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53.6%, 2020년 59.4%, 2021년 64.3%, 2022년 69.2%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재판받을 권리가 존중된다는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존중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53.6	54.2	52.9	53.9	50.1	48.7	52.0	60.5	61.3	52.1	51.2	55.0
2020	59.4	58.5	60.3	61.9	56.9	57.3	55.4	63.7	64.4	59.8	57.2	51.8
2021	64.3	63.7	64.9	66.1	61.8	62.4	62.3	67.4	69.2	64.4	62.7	55.7
2022	69.2	68.7	69.7	70.9	68.3	66.9	67.2	71.5	73.1	69.1	68.3	58.5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301  
 통계명 국선번호 법률구조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법적 구제 권리  
 산출방법 국선번호 법률구조율 = (국선번호 법률구조자 수 ÷ 총인구) × 100,000.  
     총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명/10만 명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현황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2&tblId=DT\\_432001\\_N\\_00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2&tblId=DT_432001_N_006&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21  
 통계해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형사사건 국선번호 법률구조자 수는 2012년 9926명에서 2015년 1만 7373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0년에 1만 610명까지 줄었다. 2021년에는 전년보다 약간 늘어난 1만 1048명으로 나타난다. 국선번호 법률구조율, 즉 인구 10만 명당 법률구조자 수는 2012년 19.8명에서 2015년 34.1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바뀌며 2020년 20.5명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21.4명으로 약간 늘어났다.

**통계표** 국선번호 법률구조율, 2012-2021

연도	국선번호 법률구조자수	국선번호 법률구조율
2012	9,926	19.8
2013	11,926	23.6
2014	16,962	33.4
2015	17,373	34.1
2016	17,294	33.8
2017	14,026	27.3
2018	13,718	26.6
2019	13,450	26.0
2020	10,610	20.5
2021	11,048	21.4



통계번호 JUS-21302

통계명 기소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법적 구제 권리

산출방법  $\text{기소율} = (\text{기소건수} \div \text{처분건수}) \times 100$ .  
처분건수에는 기소, 불기소, 이송 건수가 포함됨.

단위 %

자료 검찰청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2](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2)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검찰 기소율, 즉 검찰의 총처분건수 중 기소건수의 비율은 2000년 51.7%에서 2002년 55.6%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바뀌어 2012년에는 30%대로 낮아졌고 2019년에는 2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2021년에 다시 증가하여 38.9%로 높아졌다.

통계표 기소율, 2000-2021

연도	처분건수(건)	기소건수(건)	기소율(%)	연도	처분건수(건)	기소건수(건)	기소율(%)
2000	2,336,005	1,208,138	51.7	2011	2,259,500	917,335	40.6
2001	2,428,154	1,314,275	54.1	2012	2,316,969	902,552	39.0
2002	2,414,841	1,342,482	55.6	2013	2,389,660	910,158	38.1
2003	2,437,128	1,298,812	53.3	2014	2,374,372	870,322	36.7
2004	2,602,171	1,370,339	52.7	2015	2,495,255	852,314	34.2
2005	2,373,846	1,145,597	48.3	2016	2,581,748	894,616	34.7
2006	2,402,972	1,094,113	45.5	2017	2,407,061	809,882	33.6
2007	2,548,883	1,217,284	47.8	2018	2,290,052	719,980	31.4
2008	2,736,064	1,316,987	48.1	2019	2,361,611	699,111	29.6
2009	2,820,395	1,196,776	42.4	2020	2,215,577	662,077	29.9
2010	2,398,984	1,014,849	42.3	2021	1,483,352	576,547	38.9

통계번호 JUS-21303

통계명 무죄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법적 구제 권리

산출방법 무죄율 = (무죄 선고인원 ÷ 전체 선고인원) × 100.

단위 %

자료 검찰청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무죄율은 형사재판 선고인원 중 무죄 선고인원의 비율로 나타낸다. 1심 무죄율은 2000년 0.08%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1년에 0.99%까지 높아졌다. 2심 무죄율은 2003년 0.7%에서 2019년 2.18%까지 높아졌다가 2020년과 2021년에 1.49%와 1.47%로 낮아졌다.

통계표 1·2심 무죄율, 2000-2021

연도	1심 무죄율	2심 무죄율	연도	1심 무죄율	2심 무죄율
2000	0.08	1.00	2011	0.63	1.70
2001	0.09	0.98	2012	0.57	1.83
2002	0.11	0.75	2013	0.52	2.01
2003	0.17	0.70	2014	0.56	1.78
2004	0.16	1.27	2015	0.58	1.72
2005	0.18	1.51	2016	0.59	1.47
2006	0.21	1.76	2017	0.71	1.58
2007	0.26	1.87	2018	0.79	1.69
2008	0.30	1.81	2019	0.82	2.18
2009	0.37	1.84	2020	0.81	1.49
2010	0.49	1.72	2021	0.99	1.47

통계번호 JUS-21304

통계명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법적 구제 권리

산출방법 범죄피해구조금의 건당 지급액임.

단위 1000원

자료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09](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09)

수록기간 2004-2021

통계해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범죄 피해구조금의 평균 지급액은 2004년 876만 원에서 2021년 4848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범죄피해구조금 중 유족구조금은 같은 기간 940만 원에서 6134만 원, 장해구조금은 416만 원에서 1998만 원으로 늘어났다. 중상해구조금은 2011년 731만 원에서 2021년 1032만 원으로 늘어났다.

**통계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건수와 건당 지급액, 2004-2021

연도	전체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지급건수 (건)	건당 지급액 (1000원)	지급건수 (건)	건당 지급액 (1000원)	지급건수 (건)	건당 지급액 (1000원)	지급건수 (건)	건당 지급액 (1000원)
2004	74	8,762	65	9,400	9	4,156	-	-
2005	118	9,027	102	9,590	16	5,438	-	-
2006	117	9,085	103	9,718	14	4,429	-	-
2007	169	9,509	157	9,866	12	4,833	-	-
2008	155	9,103	141	9,539	14	4,714	-	-
2009	205	10,755	196	11,012	9	5,167	-	-
2010	209	16,348	196	16,835	13	9,013	-	-
2011	287	18,850	242	20,626	22	11,380	23	7,313
2012	291	21,480	244	23,215	18	23,413	29	5,681
2013	312	25,360	227	29,942	32	23,496	53	6,861
2014	331	21,361	233	25,995	28	19,337	70	6,747
2015	382	25,578	240	34,507	31	16,468	111	8,816
2016	279	33,180	198	40,809	26	29,263	55	7,568
2017	264	35,187	186	43,087	21	40,704	57	7,375
2018	248	41,028	188	49,120	24	30,672	36	5,679
2019	305	37,758	185	50,156	34	33,539	86	12,757
2020	206	46,442	145	56,651	27	36,492	34	10,806
2021	202	48,476	145	61,343	32	19,981	25	10,323

통계번호 JUS-21305

통계명 법률구조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법적 구제 권리

산출방법 법률구조율 = (법률구조자 수 ÷ 총인구) × 100,000. 총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명/10만 명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현황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2&tblId=DT\\_432001\\_N\\_00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2&tblId=DT_432001_N_004&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2&tblId=DT\\_432001\\_N\\_0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2&tblId=DT_432001_N_002&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21

통계해설 법률구조율, 즉 인구 10만 명당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구조를 받은 수급자의 수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00-42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 441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 363명과 331명으로 크게 줄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형사사건 법률구조는 2014년 9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21년에는 0.4명에 그쳤다. 형사 외 사건 법률구조는 2019년까지 400명 안팎에서 등락하다가 2020년 362명, 2021년 331명으로 급락하였다.

**통계표** 법률구조율, 2012-2021

연도	전체	형사사건	형사 외 사건
2012	408.6	7.3	401.3
2013	420.3	8.6	411.7
2014	417.4	9.0	408.4
2015	400.5	8.6	391.9
2016	411.6	8.1	403.4
2017	405.0	7.3	397.6
2018	416.0	5.9	410.1
2019	441.1	3.9	437.2
2020	362.5	0.8	361.6
2021	331.4	0.4	331.0

주: 1) 형사사건에는 국선번호 법률구조자 수가 포함되지 않음.  
2) 형사 외 사건에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 및 헌법 소원사건 등이 포함됨.

통계번호 JUS-21306

통계명 인구 10만 명당 변호사 수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법적 구제 권리

산출방법 인구 10만 명당 변호사 수 = (변호사 수 ÷ 총인구) × 100,000. 총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명/10만 명

자료 법무부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3](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3)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국민의 법률서비스 보급 수준은 변호사의 규모로 확인할 수 있다. 휴업 중인 변호사를 제외한 활동 변호사의 수는 2000년 400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 1만 명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2만여 명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였다. 변호사 수는 이후에도 늘어나 2021년 현재 2만 6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보면 2000년 9명에서 2021년 50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통계표** 인구 10만 명당 변호사 수, 2000-2021

연도	변호사 수	인구 10만 명당 변호사 수	연도	변호사 수	인구 10만 명당 변호사 수
2000	4,228	9.0	2011	10,976	22.0
2001	4,618	9.7	2012	12,532	25.0
2002	5,073	10.6	2013	14,242	28.2
2003	5,586	11.7	2014	15,954	31.4
2004	6,300	13.1	2015	17,424	34.2
2005	6,997	14.5	2016	18,849	36.8
2006	7,603	15.7	2017	20,182	39.3
2007	8,143	16.7	2018	21,573	41.8
2008	8,895	18.1	2019	21,835	42.2
2009	9,612	19.5	2020	23,417	45.2
2010	10,263	20.7	2021	26,006	50.3

주: 1) 휴업 중인 변호사를 제외한 활동 변호사 수임.

통계번호 JUS-21307

통계명 형사보상금 지급건수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법적 구제 권리

산출방법 미결구금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 건수임.

단위 건

자료 검찰청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0)

수록기간 2001-2021

통계해설 형사보상금은 구속 재판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하는데, 형사보상금 지급건수는 2010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2-2014년 기간에는 연간 3만 건 이상에 달하였다. 하지만 2015년부터 감소 추세로 바뀌며 2021년에는 3400여 건으로 줄었다. 형사보상금 지급건수가 줄어든 것과 달리 건당 평균 지급액은 늘어나고 있다. 형사보상금 평균 지급액은 2012년 134만 원에서 2021년 1301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통계표** 형사보상금 지급건수와 지급액, 2001-2021

연도	지급건수 (건)	총지급액 (억 원)	건당 지급액 (만 원)	연도	지급건수 (건)	총지급액 (억 원)	건당 지급액 (만 원)
2001	268	24	896	2012	39,519	531	134
2002	226	19	841	2013	33,760	576	171
2003	270	22	815	2014	34,366	881	256
2004	320	30	938	2015	14,547	529	364
2005	239	24	1,004	2016	8,713	317	364
2006	219	21	959	2017	7,374	360	488
2007	239	22	921	2018	5,073	367	723
2008	266	61	2,293	2019	4,257	401	942
2009	275	104	3,782	2020	4,380	419	957
2010	6,568	170	259	2021	3,414	444	1,301
2011	14,252	221	155				

주: 1) 형사보상금에는 피고인 보상금, 피의자 보상금, 무죄비용 보상금 등이 포함됨.

통계번호 JUS-21401

통계명 교정시설 수용정원 대비 수용자 비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임의 체포와 구금

산출방법  $\text{수용정원 대비 수용자 비율} = (\text{일평균 수용자 수} \div \text{수용정원}) \times 100.$

단위 %

자료 법무부, 「법무연감」.

자료출처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교정시설 일평균 수용자 수는 2000년 6만 2959명에서 2012년 4만 5488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 5만 7298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 후 수용자 수는 점차 감소하여 2021년에 5만 2368명으로 줄었다.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2006년과 2012년을 제외하면 매년 수용정원을 초과한다.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 비율은 2016년 121.2%로 높아진 후 매년 감소하여 2021년에는 106.9%로 떨어졌다.

통계표 교정시설 수용정원 대비 수용자 비율, 2000-2021

연도	수용정원(명)	일평균 수용자 수(명)	수용정원 대비 수용자 비율(%)	연도	수용정원(명)	일평균 수용자 수(명)	수용정원 대비 수용자 비율(%)
2000	58,000	62,959	108.6	2011	45,690	45,845	100.3
2001	59,130	62,235	105.3	2012	45,690	45,488	99.6
2002	58,440	61,084	104.5	2013	45,690	47,924	104.9
2003	44,350	58,945	132.9	2014	46,430	50,128	108.0
2004	46,150	57,184	123.9	2015	46,600	53,892	115.6
2005	46,090	52,403	113.7	2016	46,600	56,495	121.2
2006	47,390	46,721	98.6	2017	47,820	57,298	119.8
2007	43,100	46,313	107.5	2018	47,820	54,744	114.5
2008	43,100	46,684	108.3	2019	47,990	54,624	113.8
2009	44,430	49,467	111.3	2020	48,600	53,873	110.8
2010	45,930	47,471	103.4	2021	48,980	52,368	106.9

통계번호 JUS-21402

통계명 구속영장 발부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임의 체포와 구금

산출방법  $\text{구속영장 발부율} = (\text{구속영장 발부건수} \div \text{구속영장 청구건수}) \times 100.$

단위 %

자료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5-2020

통계해설 구속영장 발부율, 즉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의 비율은 매년 큰 변화 없이 80% 수준으로 나타난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해마다 비슷하지만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016년 3만 9624건에서 2020년 2만 5777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구속영장 발부건수도 같은 기간 3만 2395건에서 2만 1141건으로 줄어들었다.

통계표 구속영장 발부율, 2015-2020

연도	청구건수(건)	발부건수(건)	발부율(%)
2015	38,061	31,158	81.9
2016	39,624	32,395	81.8
2017	35,126	28,400	80.9
2018	30,065	24,457	81.3
2019	29,646	24,044	81.1
2020	25,777	21,141	82.0



통계번호 JUS-21403

통계명 수용자 1000명당 의료인력 수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임의 체포와 구금

산출방법 수용자 1000명당 의료인력 수 = (의료인력 수 ÷ 일평균 수용자 수) × 1,000.

단위 명/1000명

자료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교정시설 의료인력 수는 2016년 수용자 1000명당 4.9명까지 감소하였다가 점차 늘어나 2020년에는 6.4명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의사는 0.9명에서 1.7명, 의사 외 인력은 4.1명에서 4.7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통계표 수용자 1000명당 의료인력 수, 2011-2020

연도	전체	의사	의사 외
2011	5.7	1.4	4.3
2012	6.4	1.5	4.9
2013	6.1	1.3	4.7
2014	5.8	1.2	4.6
2015	5.2	1.0	4.2
2016	4.9	0.9	4.1
2017	5.1	0.9	4.3
2018	5.5	1.0	4.5
2019	5.7	1.3	4.4
2020	6.4	1.7	4.7

주: 1) 의료인력에는 의사, 간호인력, 의무인력, 약무인력, 의료기사 등이 포함됨.

통계번호 JUS-21404

통계명 수용자 1인당 예산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임의 체포와 구금

산출방법 수용자 1인당 예산 = 수용자 총예산 ÷ 일평균 수용인원.

단위 100만 원

자료 법무부, 「법무연감」.

자료출처

수록기간 2003-2021

통계해설 교정시설 예산은 국가의 수용자 처우 수준을 나타낸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관리 예산은 2003년 730억 원에서 2021년 239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수용자 1인당 예산도 같은 기간 124만 원에서 456만 원으로 3.7배가량 증가하였다.

통계표 수용자 1인당 예산, 2003-2021

연도	수용자 총예산	수용자 1인당 예산	연도	수용자 총예산	수용자 1인당 예산
2003	73,026	1.24	2013	103,194	2.15
2004	77,244	1.35	2014	108,065	2.16
2005	78,404	1.50	2015	113,835	2.11
2006	80,736	1.73	2016	177,394	3.14
2007	79,430	1.72	2017	196,752	3.43
2008	80,304	1.72	2018	204,396	3.73
2009	87,110	1.76	2019	213,415	3.91
2010	94,268	1.99	2020	227,288	4.22
2011	95,800	2.09	2021	239,030	4.56
2012	98,372	2.16			

주: 1) 수용자 예산에는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예산과 교정교화 예산이 포함됨.

통계번호 JUS-21405

통계명 수용자 1인당 의료비 지출액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임의 체포와 구금

산출방법 수용자 1인당 의료비 지출액 = 의료비 총지출액 ÷ 수용자 수.

단위 원

자료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위해 집행하는 의료비 지출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수용자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2011년 27만 원에서 2020년 5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20년 의료비 지출 항목을 보면 건강보험 예탁금이 59.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의약품 구입비와 외부 진료비가 각각 19.9%와 1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표** 수용자 1인당 의료비 지출액과 항목별 지출액 비율, 2011-2020

연도	1인당 의료비 지출액(원)	항목별 지출액 비율(%)			
		의약품 구매 등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건강보험 예탁금	기타
2011	272,346	17.6	16.7	54.9	10.8
2012	286,980	17.8	17.1	53.5	11.7
2013	303,445	20.3	19.8	48.2	11.7
2014	303,445	26.5	23.0	43.5	7.0
2015	320,706	24.1	20.3	49.5	6.0
2016	344,010	18.6	18.0	53.4	10.0
2017	362,069	17.9	17.0	57.3	7.8
2018	394,343	17.9	18.4	59.4	4.3
2019	454,160	18.2	17.0	60.9	3.8
2020	506,288	19.9	17.3	59.0	3.8

주: 1) 항목별 지출액 비율 = (의료비 항목별 지출액 ÷ 의료비 총지출액) × 100.

통계번호 JUS-21406

통계명 수용자 사망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임의 체포와 구금

산출방법  $\text{수용자 사망률} = (\text{사망 수용자 수} \div \text{일평균 수용자 수}) \times 10,000.$

단위 명/만 명

자료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교정시설에서 사망하는 수용자의 수는 연간 20-40명 수준으로, 2017년에 22명으로 가장 적었고 최근인 2020년에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사망자 중 병사자가 32명이고 자살자가 11명이다. 수용자 사망률은 수용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로 나타내는데, 이 수치는 대체로 5-6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2020년에는 병사자와 자살자가 모두 늘어나면서 사망률이 8.0명으로 높아졌다.

**통계표** 수용자 사망률, 2011-2020

연도	사망자 수(명)			사망률(명/만 명)
	전체	병사자	자살자	
2011	27	16	11	5.9
2012	30	26	4	6.6
2013	26	19	7	5.4
2014	28	24	4	5.6
2015	28	24	4	5.2
2016	29	22	7	5.1
2017	22	20	2	3.8
2018	40	33	7	7.3
2019	36	28	8	6.6
2020	43	32	11	8.0

통계번호 JUS-21407

통계명 수용자 자살률과 자살미수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임의 체포와 구금

산출방법 수용자 자살률 = (자살 수용자 수 ÷ 일평균 수용자 수) × 10,000.

수용자 자살미수율 = (자살미수 수용자 수 ÷ 일평균 수용자 수) × 10,000.

단위 명/만 명

자료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살률과 자살미수율은 수용자 1만 명당 자살자 수와 자살미수자 수로 각각 나타낸다. 수용자 자살률은 1만 명당 1명 안팎 수준인데 2011년과 2020년에는 2.4명과 2.0명으로 비교적 높았다. 수용자 자살 미수율은 1만 명당 10-15명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21.3명으로 특히 높았다.

**통계표** 수용자 자살률과 자살미수율, 2011-2020

연도	자살률	자살미수율
2011	2.4	15.7
2012	0.9	19.6
2013	1.5	15.2
2014	0.8	10.2
2015	0.7	9.5
2016	1.2	9.2
2017	0.3	7.7
2018	1.3	11.3
2019	1.5	12.8
2020	2.0	21.3

통계번호 JUS-21408

통계명 수용자 징벌률과 입건송치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임의 체포와 구금

산출방법 수용자 징벌률 = (징벌부과 건수 ÷ 일평균 수용자 수) × 100.

수용자 입건송치율 = (입건송치 건수 ÷ 일평균 수용자 수) × 100.

단위 %

자료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수용자 징벌률은 교정시설 수용자 수 대비 징벌부과 건수로 나타내는데, 이 비율은 매년 3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2020년에 37.0%까지 높아졌다. 수용자 입건송치율은 교정시설 수용자 수 대비 입건송치 건수로 산출되며, 1%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1.9%까지 상승하였다.

통계표 수용자 징벌률과 입건송치율, 2011-2020

연도	징벌률	입건송치율
2011	32.0	1.2
2012	30.1	1.1
2013	30.6	1.2
2014	31.0	1.3
2015	31.6	1.4
2016	29.5	1.3
2017	31.9	1.3
2018	33.5	1.6
2019	34.8	1.5
2020	37.0	1.9

통계번호 JUS-21409

통계명 수용자 청원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임의 체포와 구금

산출방법 수용자 청원율 = (수용자 청원건수 ÷ 일평균 수용자 수) × 100.

단위 %

자료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수용자 청원율은 교정시설 수용자 수 대비 수용자 청원건수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1년 2.9%에서 2020년 1.1%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원 사유를 보면 직원(19.7%), 의료처우(13.0%), 조사·징벌(11.5%), 부당처우(7.1%), 이송(6.2%), 독거·거실(5.9%)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2020년 기준).

통계표 수용자 청원율과 청원 사유, 2011-2020

연도	청원율	청원 사유										
		직원 관련	의료 처우	조사 징벌	부당 처우	이송	독거· 거실	부식· 구매	영치 금품	작업	가석방· 분류	기타
2011	2.9	16.1	10.7	7.3	12.0	12.7	9.1	3.4	3.0	2.0	2.9	20.6
2012	2.4	17.1	11.6	6.8	13.7	12.5	6.9	1.4	3.2	2.0	3.1	21.8
2013	2.2	16.8	12.9	5.9	15.1	12.7	6.7	0.8	3.1	3.3	2.3	20.4
2014	1.8	13.1	15.5	8.7	17.2	10.9	6.8	1.9	4.9	3.7	3.2	14.3
2015	1.8	13.9	12.0	9.6	11.9	11.2	7.3	2.9	1.8	4.8	3.7	20.9
2016	1.4	16.2	12.7	10.2	5.3	12.3	6.5	1.4	2.1	3.0	4.9	25.5
2017	1.3	24.3	11.3	9.0	2.8	10.8	5.2	1.3	3.8	3.0	3.5	25.0
2018	1.4	22.9	11.4	14.1	1.7	7.8	5.8	1.9	3.5	1.7	2.6	26.6
2019	1.0	22.4	18.1	17.7	5.0	8.1	7.2	1.8	0.9	2.7	1.8	14.3
2020	1.1	19.7	13.0	11.5	7.1	6.2	5.9	3.9	3.5	2.7	1.9	24.6

통계번호 JUS-21410

통계명 신체의 자유 존중도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임의 체포와 구금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신체의 자유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신체의 자유가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0년 90.1%, 2021년 87.7%, 2022년 90.9%로 90% 안팎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남녀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신체의 자유 존중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83.1	83.4	82.7	82.6	84.9	82.9	80.2	84.8	83.9	80.6	84.6	89.1
2020	90.1	90.2	90.0	92.2	91.8	91.5	87.6	88.6	87.6	90.0	91.5	90.8
2021	87.7	87.6	87.8	87.7	88.1	87.3	86.5	88.5	88.7	86.8	88.0	89.8
2022	90.9	90.7	91.1	91.0	90.5	90.6	90.5	91.5	92.0	90.3	90.8	94.0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JUS-21411

통계명 피의자 구속영장청구율과 구속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임의 체포와 구금

산출방법 피의자 구속영장청구율 = (구속영장청구자 수 ÷ 사건접수 인원) × 100.  
피의자 구속률 = (구속영장발부자 수 ÷ 사건접수 인원) × 100.

단위 %

자료 검찰청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7](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7)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구속영장청구율은 검찰의 사건접수 인원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2000년 5.2%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 1.1%까지 떨어졌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1.6%로 약간 올랐다. 구속률은 검찰의 사건접수 인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 비율도 2000년 4.5%에서 2020년 0.9%로 크게 낮아졌다. 2021년에는 1.3%로 조금 높아졌다.

**통계표** 피의자 구속영장청구율과 구속률, 2000-2021

연도	사건접수 인원(명)	구속영장 청구자 수(명)	구속영장 발부자 수(명)	구속영장청구율(%)	구속률(%)
2000	2,329,415	121,629	105,470	5.2	4.5
2001	2,426,050	120,616	105,296	5.0	4.3
2002	2,416,711	114,581	99,717	4.7	4.1
2003	2,441,267	108,941	93,594	4.5	3.8
2004	2,606,718	101,064	85,583	3.9	3.3
2005	2,384,613	73,729	64,006	3.1	2.7
2006	2,401,537	61,811	51,481	2.6	2.1
2007	2,548,010	58,866	45,875	2.3	1.8
2008	2,733,185	56,843	42,972	2.1	1.6
2009	2,829,557	57,259	42,727	2.0	1.5
2010	2,393,713	43,574	32,516	1.8	1.4
2011	2,268,148	38,770	28,814	1.7	1.3
2012	2,326,560	35,060	27,327	1.5	1.2
2013	2,389,837	33,105	26,716	1.4	1.1
2014	2,379,580	36,176	28,466	1.5	1.2
2015	2,492,324	38,370	31,153	1.5	1.2
2016	2,589,311	40,083	32,369	1.5	1.3
2017	2,415,869	35,102	28,340	1.5	1.2
2018	2,302,601	30,060	24,438	1.3	1.1
2019	2,391,529	29,647	24,018	1.2	1.0
2020	2,255,553	25,770	21,098	1.1	0.9
2021	1,362,685	21,983	18,064	1.6	1.3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번호	통계명	취약집단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안전망 권리	LIV-31501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LIV-31502	개인경제상황 불안정자 비율	저소득층
			LIV-31503	고령자 국민연금 수급률	노인
			LIV-3150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LIV-31505	기준 중위소득	
			LIV-31506	목돈 빌릴 사람이 없는 비율	
			LIV-31507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존중도	
			LIV-31508	복지혜택 공정성에 대한 인식	
			LIV-31509	비자발적 실업 경험률	
			LIV-31510	사회보장제도 향상에 대한 인식	
			LIV-31511	아동인구 1000명당 시설수용 보호아동 수	아동청소년
			LIV-31512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	
			LIV-31513	장애보호대상아동 비율	장애인
			LIV-31514	중병 대처 경제력 부족자 비율	
			인권과 빈곤	LIV-31601	경제·사회적 분배구조 공정성에 대한 인식
		LIV-31602		노인 상대적 빈곤율	노인
		LIV-31603		사회보장권 존중도	
		LIV-31604		상대적 빈곤율	
LIV-31605	소득5분위배율				
LIV-31606	소득분위별 소득성장률				
LIV-31607	재정정책 재분배효과 지수				
LIV-31608	지니계수				

통계번호 LIV-31501

통계명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안전망 권리

산출방법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 (공공사회복지지출액 ÷ 명목 GDP) × 100.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의사회복지지출」.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7\\_N110&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7_N110&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19

통계해설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지난 2000년 GDP의 4.4% 수준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12.1%까지 늘어났다. 지출항목별 비중을 보면 보건과 노인 관련 지출이 전체 지출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가족 관련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과 지출항목별 비율, 2000-2019

연도	GDP 대비 지출 비율	지출항목별 비율								
		보건	노령	가족	근로무능력 관련급여	실업	유족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	주거	기타
2000	4.4	44.5	26.3	2.3	7.3	1.6	4.3	8.0	0.0	5.6
2001	4.8	51.7	19.8	2.8	7.4	2.5	4.0	4.2	0.0	7.5
2002	4.7	50.6	20.1	2.8	8.2	2.3	4.3	3.7	0.0	8.1
2003	4.9	50.1	21.2	3.1	8.7	2.5	4.5	2.3	0.0	7.7
2004	5.5	45.0	21.3	3.3	8.9	2.9	4.1	1.9	0.0	12.7
2005	5.9	44.8	21.6	3.8	8.8	3.1	4.0	1.8	0.0	12.1
2006	6.7	43.5	20.1	7.1	8.2	3.1	3.7	1.6	0.0	12.7
2007	6.8	44.5	21.0	6.1	8.1	3.3	3.8	1.7	0.0	11.5
2008	7.3	42.5	23.2	7.4	8.0	3.4	3.6	3.1	0.0	8.7
2009	8.1	42.4	21.9	8.0	7.3	4.2	3.4	5.1	0.0	7.6
2010	7.9	44.7	22.8	8.5	6.4	3.5	3.5	3.7	0.0	7.0
2011	7.8	45.0	23.4	8.6	6.7	3.3	3.6	3.0	0.0	6.3
2012	8.3	42.5	24.3	10.0	6.6	3.1	3.5	3.7	0.0	6.3
2013	8.8	40.9	23.8	13.0	6.1	2.9	3.0	4.0	0.0	6.3
2014	9.2	40.4	25.5	12.2	5.8	2.9	3.0	3.7	0.0	6.4
2015	9.6	39.6	26.5	11.7	5.8	2.8	3.0	3.5	0.3	6.8
2016	9.9	40.3	26.2	11.2	5.7	2.8	3.0	3.5	0.7	6.7
2017	10.1	40.7	26.4	10.9	5.9	2.8	3.2	2.9	0.6	6.4
2018	10.8	40.8	26.1	11.1	5.6	3.3	3.1	2.8	0.7	6.5
2019	12.1	-	-	-	-	-	-	-	-	-

주: 1) 지출항목별 비율 = (항목별 지출액 ÷ 전체 공공사회복지지출액) × 100.

2) 2018년은 잠정치이고 2019년은 추정치임.

통계번호 LIV-31502

통계명 개인경제상황 불안정자 비율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안전망 권리

산출방법 0점(전혀 안정적이지 않다)부터 10점(매우 안정적이다)까지 중 0-4점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5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56&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본인의 현재 경제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44.6%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년 30.9%로 낮아졌다. 이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35.0%로 일시 상승하였다가 2021년에 20.8%로 다시 낮아졌다. 경제상황 불안정자 비율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개인경제상황 불안정자 비율,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13	44.6	48.8	43.2	40.9	44.6	47.3	-	69.5	61.5	48.7	37.7	31.4	24.5	21.7
2014	41.4	45.3	42.0	37.1	39.7	45.7	-	64.4	61.5	49.4	36.0	29.7	24.5	24.3
2015	39.2	42.7	38.3	38.5	36.3	41.1	-	63.4	56.1	46.2	36.3	31.1	26.9	28.8
2016	33.4	39.6	31.1	30.0	34.3	32.3	-	56.6	48.6	41.7	33.9	27.5	21.6	24.0
2017	30.1	37.7	28.2	27.7	25.6	33.0	-	57.1	47.3	37.2	31.8	25.9	18.2	20.9
2018	30.4	40.4	30.6	25.9	26.5	29.6	-	55.4	51.6	35.1	29.9	27.3	25.2	20.8
2019	30.9	34.4	33.4	28.7	27.5	31.1	-	57.4	47.4	40.1	29.1	26.2	29.3	22.1
2020	35.0	42.3	29.8	28.0	28.5	-	42.7	73.3	47.5	40.6	32.5	33.9	32.5	17.9
2021	20.8	23.4	19.7	17.5	16.0	-	25.4	49.3	35.6	25.9	20.8	24.9	15.3	11.0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IV-31503

통계명 고령자 국민연금 수급률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안전망 권리

산출방법 고령자 국민연금 수급률 =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수 ÷ 65세 이상 인구) × 100.  
65세 이상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임.

단위 %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22&tblId=DT\\_32202\\_B00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22&tblId=DT_32202_B006&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20

통계해설 국민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2012년 180만 명에서 2020년 38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의 비율도 같은 기간 30.7%에서 45.2%로 늘어났다. 국민연금 수급률은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남성의 수급률은 60.1%에 달하지만 여성의 수급률은 33.8%에 그친다.

**통계표** 고령자 국민연금 수급률, 2012-2020

연도	국민연금 수급자 수(명)			국민연금 수급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2	1,835,622	1,121,314	714,308	30.7	45.5	20.3
2013	2,067,085	1,255,469	811,616	33.1	48.3	22.2
2014	2,273,816	1,376,395	897,421	34.9	50.5	23.7
2015	2,473,690	1,491,335	982,355	36.5	52.3	25.0
2016	2,664,358	1,595,471	1,068,887	38.1	54.0	26.5
2017	2,936,683	1,746,652	1,190,031	39.9	55.8	28.2
2018	3,180,045	1,872,665	1,307,380	41.6	57.2	29.9
2019	3,478,558	2,027,985	1,450,573	43.3	58.7	31.7
2020	3,842,189	2,212,516	1,629,673	45.2	60.1	33.8

주: 1) 국민연금 수급자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가 포함됨.

통계번호 LIV-31504

통계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안전망 권리

산출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총인구) × 100.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1&conn_path=I3)

수록기간 2001-2020

통계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4년까지 130-150만 명대를 등락하다가 2015년에 160만 명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21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전체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인구의 비율로 나타내는데, 이 비율은 3% 안팎을 등락하다가 2018년부터 증가 추세에 들며 2020년에는 4.12%로 높아졌다.

**통계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2001-2020

연도	수급자 수(명)	수급률(%)	연도	수급자 수(명)	수급률(%)
2001	1,419,995	2.96	2011	1,469,254	2.90
2002	1,351,185	2.80	2012	1,394,042	2.74
2003	1,374,405	2.84	2013	1,350,891	2.64
2004	1,424,088	2.93	2014	1,328,713	2.59
2005	1,513,352	3.10	2015	1,646,363	3.20
2006	1,534,950	3.13	2016	1,630,614	3.15
2007	1,549,848	3.15	2017	1,581,646	3.05
2008	1,529,939	3.09	2018	1,743,690	3.36
2009	1,568,533	3.15	2019	1,881,357	3.63
2010	1,549,820	3.07	2020	2,134,186	4.12

통계번호 LIV-31505

통계명 기준 중위소득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안전망 권리

산출방법

단위 원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수록기간 2015-2022

통계해설 기준 중위소득은 공공복지서비스 수급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을 말한다. 국민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2015년 422만 원에서 2019년 461만 원으로 올랐고 2022년에는 512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통계표** 가구유형별 기준 중위소득, 2015-2022

연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5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2016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20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20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0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주: 1) 월소득임.



통계번호 LIV-31506

통계명 목돈 빌릴 사람이 없는 비율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안전망 권리

산출방법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4&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주변에 목돈을 빌릴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8년과 2019년을 제외하면 25% 안팎 수준에 있다. 이 비율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그리고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목돈 빌릴 사람이 없는 비율,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13	22.5	16.0	14.9	20.6	28.3	40.3	-	48.2	34.9	23.2	14.1	12.6	12.3	13.6
2014	23.3	22.3	18.6	20.1	24.8	36.1	-	39.6	31.9	26.6	21.7	20.6	12.1	14.0
2015	25.4	24.3	18.6	21.9	29.8	36.5	-	43.9	37.0	29.6	24.0	21.4	19.9	13.6
2016	26.4	28.8	21.3	23.7	27.6	32.7	-	43.8	30.3	28.2	26.4	23.0	26.3	20.5
2017	25.8	28.1	22.9	21.8	26.7	31.1	-	40.2	32.6	29.3	25.1	25.3	22.6	19.1
2018	18.3	21.3	15.3	13.8	18.0	25.0	-	39.0	32.6	22.5	17.3	17.5	11.8	11.8
2019	17.0	17.2	12.5	16.0	16.5	23.7	-	36.1	29.3	20.1	15.9	15.3	15.4	11.7
2020	27.4	31.3	22.3	19.9	23.6	-	35.7	54.9	36.4	31.2	23.9	22.9	20.2	24.3
2021	21.8	24.8	18.5	18.4	18.9	-	26.0	41.7	25.6	27.2	21.1	17.4	19.8	18.8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IV-31507

통계명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존중도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안전망 권리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0년 80.5%, 2021년 82.0%, 2022년 82.7%로 80%를 약간 넘는 수준에 있다. 이 비율은 성별로 거의 차이가 없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 일관되게 더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존중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71.8	71.2	72.4	70.3	65.5	68.8	73.1	78.4	76.0	70.3	71.0	75.4
2020	80.5	80.6	80.6	81.5	75.1	80.3	80.0	83.8	82.9	80.2	79.9	79.2
2021	82.0	81.8	82.1	80.0	78.8	80.7	83.8	84.6	85.9	80.9	81.5	79.7
2022	82.7	82.3	83.1	81.9	79.5	80.4	83.4	85.8	86.0	82.2	81.8	85.1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IV-31508

통계명 복지혜택 공정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안전망 권리

산출방법 우리 사회의 복지혜택 기회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우리 사회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까지 40%대를 등락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 56.4%와 65.0%로 크게 올랐다. 이 비율은 대체로 3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소득수준별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복지혜택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13	45.8	44.6	40.9	45.1	48.6	52.9	-	40.2	44.5	45.7	49.5	47.6	42.6	44.2
2014	41.4	39.8	38.2	42.4	44.6	41.9	-	34.7	38.4	37.5	43.6	48.0	42.9	43.3
2015	44.1	45.4	40.3	40.9	46.0	50.1	-	43.7	45.7	43.9	42.5	42.9	46.0	45.1
2016	43.9	40.7	39.4	42.0	48.6	50.3	-	39.9	42.6	43.7	45.5	41.9	47.3	42.7
2017	45.4	43.2	41.3	47.3	45.7	50.3	-	45.5	51.6	46.7	44.0	44.0	47.1	43.1
2018	45.0	46.6	42.6	41.4	47.4	48.1	-	46.1	41.6	44.3	40.6	44.0	48.0	49.9
2019	48.2	50.6	47.5	46.6	48.4	48.1	-	51.0	49.9	51.9	47.8	48.9	46.3	46.5
2020	56.4	54.9	52.8	58.5	56.8	-	57.3	55.0	52.5	51.5	52.6	57.9	59.1	61.3
2021	65.0	64.4	62.6	68.4	63.7	-	65.5	64.8	62.3	63.1	63.4	64.7	67.2	66.2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IV-31509

통계명 비자발적 실업 경험률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안전망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타의에 의한 실업(권고사직, 강제퇴직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5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57&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타의에 의한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8.4%에서 2020년 2.0%까지 줄어들었다가 2021년에 2.5%로 약간 늘어났다. 비자발적 실업 경험률은 연령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비자발적 실업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13	8.4	6.6	10.9	9.4	8.6	4.2	-	14.3	12.2	8.9	5.1	8.0	5.0	4.0
2014	8.0	5.5	10.1	9.4	6.7	7.4	-	9.8	10.6	9.4	7.6	6.2	7.2	5.2
2015	5.9	4.4	6.6	7.1	5.5	5.1	-	8.7	6.3	7.8	4.1	5.2	2.0	8.0
2016	3.4	3.1	4.6	3.0	3.5	2.1	-	3.9	7.6	3.9	2.7	2.1	2.1	3.5
2017	2.8	2.1	2.9	3.2	3.2	2.7	-	6.5	4.9	2.6	3.3	2.2	1.5	2.4
2018	2.0	1.7	3.7	1.7	1.8	1.1	-	1.4	3.2	3.1	1.9	1.4	2.2	1.5
2019	3.0	2.6	3.7	2.9	2.8	3.1	-	9.1	5.1	3.9	2.9	2.8	2.1	1.8
2020	2.0	1.8	2.4	2.9	1.5	-	1.4	3.1	3.6	2.3	2.6	1.6	1.1	1.1
2021	2.5	2.0	2.4	2.7	2.3	-	2.9	1.1	3.4	3.7	3.6	2.3	1.8	2.1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IV-31510

통계명 사회보장제도 향상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안전망 권리

산출방법 2년 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 '약간 좋아졌다' 또는 '매우 좋아졌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WE013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WE013R&conn_path=I3)

수록기간 2009-2021

통계해설 사회보장제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9년 30.1%에서 2015년 48.5%로 늘어났고 이후 2019년에는 60.8%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2021년에는 48.1%로 감소하였다. 이 비율은 30대 이하보다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사회보장제도 향상에 대한 인식, 2009-2021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09	30.1	24.1	24.9	30.0	35.0	40.0	31.6	31.9	-	28.5	29.2	30.3	31.6	31.6	31.6
2011	31.7	23.7	26.0	31.3	36.0	40.7	-	-	33.6	29.8	30.3	31.2	31.7	31.9	38.6
2013	32.6	25.7	26.7	32.0	36.3	40.8	-	-	32.7	32.5	30.3	30.9	33.3	38.1	37.3
2015	48.5	34.6	37.2	47.7	54.7	63.7	-	-	54.9	48.9	45.3	48.0	47.3	47.8	49.1
2017	45.9	34.6	34.7	46.6	52.9	55.8	-	-	50.0	46.0	43.3	44.8	44.4	45.8	49.0
2019	60.8	51.9	61.3	62.8	62.2	63.7	-	-	58.6	59.4	59.4	62.0	60.8	63.0	63.2
2021	48.1	40.9	43.2	51.1	52.3	50.2	-	-	48.6	45.7	44.7	49.3	48.3	49.2	52.0

주: 1) 2009년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IV-31511

통계명 아동인구 1000명당 시설수용 보호아동 수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안전망 권리

산출방법 아동인구 1000명당 시설수용 보호아동 수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 ÷ 0-17세 아동인구) × 1,000. 0-17세 아동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명/1000명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보고」.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40112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401121&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19

통계해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보호아동의 수는 2000년 1만 7720명에서 2005년 1만 9151명으로 늘어난 후 매년 감소하여 2019년에는 1만 1665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17세 이하 아동인구 대비 보호아동의 수는 아동 1000명당 1.47명에서 1.73명으로 올랐다가 1.48명으로 떨어졌다.

통계표 아동인구 1000명당 시설수용 보호아동 수, 2000-2019

연도	시설수용 보호아동 수 (명)	아동인구 1000명당 시설수용 보호아동 수 (명/1000명)	연도	시설수용 보호아동 수 (명)	아동인구 1000명당 시설수용 보호아동 수 (명/1000명)
2000	17,720	1.47	2011	16,523	1.68
2002	18,676	1.61	2012	15,916	1.66
2003	18,818	1.65	2013	15,239	1.63
2004	19,014	1.69	2014	14,630	1.60
2005	19,151	1.73	2015	14,001	1.57
2006	18,817	1.73	2016	13,689	1.58
2007	18,426	1.73	2017	12,789	1.52
2008	17,992	1.71	2018	12,193	1.49
2009	17,586	1.70	2019	11,665	1.48
2010	17,119	1.70			

주: 1) 시설수용 보호아동 수는 연말 기준임.

통계번호 LIV-31512

통계명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안전망 권리

산출방법 몸이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4&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몸이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0년까지 10% 안팎에서 등락하다가 2021년에 5.1%로 낮아졌다. 이 비율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수준별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훨씬 높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13	11.1	5.9	7.4	10.1	16.5	18.1	-	28.3	17.1	12.1	7.7	3.2	2.9	4.9
2014	10.3	9.0	7.9	9.8	10.5	16.8	-	23.8	15.6	11.2	9.0	9.7	4.7	3.8
2015	12.0	10.8	9.0	11.1	13.5	17.8	-	25.6	16.6	12.5	12.0	9.6	9.4	6.7
2016	10.7	9.7	9.1	10.9	11.9	12.4	-	24.0	12.0	13.3	9.6	10.7	7.9	7.1
2017	11.5	11.3	10.5	10.5	10.6	15.8	-	21.5	13.0	12.0	11.8	11.3	9.8	8.4
2018	9.3	7.9	9.1	7.8	10.9	11.0	-	17.5	16.8	10.4	9.1	7.7	6.4	7.6
2019	8.2	8.0	6.0	7.5	8.1	12.1	-	19.8	13.9	13.0	6.5	6.2	6.6	6.0
2020	10.5	9.1	7.8	10.1	9.9	-	13.4	22.3	13.0	12.7	11.1	9.8	8.6	5.4
2021	5.1	4.1	4.1	3.6	5.5	-	6.8	15.4	8.1	6.8	4.3	3.9	4.6	3.0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IV-31513

통계명 장애보호대상아동 비율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안전망 권리

산출방법 장애보호대상아동 비율 = (장애보호대상아동 수 ÷ 보호대상아동 수) × 100.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1

통계해설 유기, 학대, 미아, 가출, 부모사망, 부모빈곤 등의 이유로 시설입소나 가정보호와 같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장애아동은 2019년까지 매년 130명 안팎으로 발생하다가 2020년에 17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140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보호대상아동 중 장애아동의 비율은 2016년 2.9%에서 매년 늘어나 2020년에는 4.2%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3.8%로 다소 떨어졌다.

**통계표** 장애보호대상아동 비율, 2016-2021

연도	보호대상아동 수(명)	장애보호대상아동 수(명)	장애보호대상아동 비율(%)
2016	4,583	132	2.9
2017	4,125	127	3.1
2018	3,918	129	3.3
2019	4,047	142	3.5
2020	4,120	172	4.2
2021	3,657	140	3.8

주: 1)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아동은 보호대상아동 수에 포함되지 않음.



통계번호 LIV-31514

통계명 중병 대처 경제력 부족자 비율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안전망 권리

산출방법 중병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경제력이 '다소 부족하다' 또는 '매우 부족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5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55&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중병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비율은 80% 안팎에서 등락하다가 2020년에 86.1%로 오른 후 이듬해인 2021년에 77.8%로 떨어졌다. 이 비율은 20대 이하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아울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중병 대처 경제력 부족자 비율,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13	83.6	86.1	83.6	84.7	79.2	85.3	-	93.6	91.3	86.8	84.4	77.2	75.4	55.8
2014	83.3	87.3	83.0	82.9	81.2	82.1	-	91.3	89.7	89.0	82.3	83.3	73.0	70.1
2015	81.2	86.4	79.7	81.1	78.6	80.7	-	90.3	89.7	88.0	82.1	79.4	74.3	67.5
2016	84.6	92.5	84.7	82.9	82.2	80.1	-	93.9	86.5	88.3	87.7	86.0	82.0	72.4
2017	83.9	90.2	85.6	82.1	79.5	82.1	-	91.5	89.3	88.5	86.4	85.6	81.4	71.7
2018	81.6	87.8	85.5	81.1	76.5	76.8	-	92.2	85.9	88.7	84.8	84.0	77.5	70.1
2019	78.8	88.2	80.2	79.2	73.7	72.9	-	85.5	81.6	83.9	77.8	80.6	79.9	72.8
2020	86.1	92.3	89.6	85.6	81.9	-	83.5	94.8	88.2	86.9	87.0	87.7	87.6	78.2
2021	77.8	84.0	78.0	75.9	73.2	-	78.4	88.8	84.0	79.0	82.7	79.6	74.2	72.4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IV-31601

통계명 경제·사회적 분배구조 공정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권과 빈곤

산출방법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분배구조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

수록기간 2014-2021

통계해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분배구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 후반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8년에 30%대로 들어섰고 이후 매년 올라 2021년에는 52.7%에 달하였다. 연령별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소득 계층별로도 일관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경제·사회적 분배구조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14-2021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14	29.0	30.1	25.7	29.0	30.7	29.6	-	23.1	23.8	27.3	29.5	35.6	31.9	32.1
2015	27.7	28.6	24.7	24.4	30.2	33.0	-	29.4	32.9	29.9	27.8	24.3	27.3	23.9
2016	27.5	26.6	25.0	24.8	30.9	31.4	-	23.6	25.1	27.4	29.1	26.8	27.8	28.8
2017	26.9	25.5	25.0	28.0	26.6	30.5	-	28.3	25.6	26.1	26.5	27.1	29.9	25.6
2018	30.8	32.3	30.4	29.5	31.0	30.6	-	33.2	22.7	31.3	29.6	32.4	33.6	30.3
2019	33.2	33.3	33.9	31.9	34.6	32.2	-	31.6	30.3	32.6	32.2	33.5	33.4	35.1
2020	43.9	43.4	42.8	44.4	42.4	-	45.4	46.4	39.5	41.3	42.2	44.8	47.9	44.3
2021	52.7	50.6	50.6	53.9	53.0	-	54.1	58.6	48.7	53.1	52.5	46.6	54.4	54.8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은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IV-31602

통계명 노인 상대적 빈곤율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권과 빈곤

산출방법 노인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인구 ÷ 65세 이상 노인인구)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I3)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인구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55-57%대에서 등락 하였으나 2018년과 2019년에 58.5%와 59.0%로 높아졌다. 이 후 2020년에는 58.6%로 약간 낮아졌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등)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38.9%로 낮아졌다. 시장소득 빈곤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반면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재분배 정책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통계표** 노인 상대적 빈곤율, 2011-2020

연도	시장소득 기준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1	56.9	46.5
2012	55.4	45.4
2013	55.7	46.3
2014	55.9	44.5
2015	56.6	43.2
2016	57.5	43.6
2017	56.7	42.3
2018	58.5	42.0
2019	59.0	41.4
2020	58.6	38.9

주: 1) 가구균등화 소득임.

통계번호 LIV-31603

통계명 사회보장권 존중도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권과 빈곤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54.2%에서 2020년 63.6%, 2021년 70.0%로 매년 크게 늘어났다. 이후 2022년에는 71.5%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 연령별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는데, 30대에서 가장 낮고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 가장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사회보장권 존중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54.2	54.3	54.1	53.0	49.1	51.4	52.0	62.2	60.8	51.5	53.3	58.9
2020	63.6	63.1	64.3	63.7	57.8	65.6	60.7	68.1	67.9	61.6	63.8	63.3
2021	70.0	70.1	70.0	68.2	64.8	68.5	71.3	74.2	76.4	67.9	69.5	65.5
2022	71.5	71.0	72.1	71.0	66.1	69.6	73.0	74.8	75.0	72.7	69.5	64.2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IV-31604

통계명 상대적 빈곤율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권과 빈곤

산출방법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 전체 인구)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의 비율로 나타낸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12년 19.0%에서 점차 높아져 2019년에 20%를 넘었고 이듬해인 2020년에는 21.3%로 더 올랐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등)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8.6%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15.3%로 낮아졌다. 시장소득 빈곤율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재분배정책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통계표 상대적 빈곤율, 2011-2020

연도	시장소득 기준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1	19.6	18.6
2012	19.0	18.3
2013	19.1	18.4
2014	19.6	18.2
2015	19.5	17.5
2016	19.8	17.6
2017	19.7	17.3
2018	19.9	16.7
2019	20.8	16.3
2020	21.3	15.3

주: 1) 가구균등화 소득임.

통계번호 LIV-31605

통계명 소득5분위배율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권과 빈곤

산출방법 소득5분위배율 = 5분위 소득계층 평균소득 ÷ 1분위 소득계층 평균소득.

단위 배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소득5분위배율은 최상위(5분위) 소득계층 평균소득이 최하위(1분위) 소득계층 평균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시장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배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2017년부터 11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등)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소득5분위배율은 시장소득 기준과 달리 지난 10년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소득5분위배율은 2011년 8.32배에서 2020년 5.85배로 떨어졌다. 처분가능소득에서의 불평등 완화는 정부의 재분배정책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통계표 소득5분위배율, 2011-2020

연도	시장소득 기준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1	11.21	8.32
2012	10.65	8.10
2013	10.29	7.68
2014	10.32	7.37
2015	10.41	6.91
2016	10.88	6.98
2017	11.27	6.96
2018	11.15	6.54
2019	11.56	6.25
2020	11.37	5.85

주: 1) 가구균등화 소득임.

통계번호 LIV-31606

통계명 소득분위별 소득성장률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권과 빈곤

산출방법 최근 10년간 가구소득 연평균 성장률임.

단위 %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전체 가구의 소득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1-2020년 기간에 연평균 3.1% 성장하였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 계층의 소득성장률이 2.5%로 가장 낮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지난 10년간 전체 가구의 소득이 연평균 3.4% 성장하였는데, 1분위 계층의 소득은 연평균 6.3% 성장하였고 5분위 계층의 소득은 연평균 2.2%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저소득 계층의 처분가능소득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통계표** 소득분위별 가구소득과 소득성장률, 2011-2020

연도	시장소득(만 원)						처분가능소득(만 원)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1	2,741	563	1,440	2,202	3,188	6,309	2,558	681	1,420	2,086	2,939	5,664
2012	2,873	614	1,543	2,332	3,329	6,542	2,675	726	1,503	2,199	3,065	5,883
2013	2,974	644	1,643	2,473	3,487	6,625	2,786	776	1,616	2,346	3,231	5,962
2014	2,977	636	1,650	2,492	3,540	6,565	2,794	798	1,639	2,376	3,279	5,878
2015	3,059	644	1,699	2,573	3,675	6,704	2,860	851	1,709	2,458	3,405	5,880
2016	3,195	653	1,762	2,664	3,786	7,107	2,981	886	1,776	2,555	3,506	6,180
2017	3,353	667	1,840	2,773	3,968	7,514	3,114	927	1,863	2,653	3,671	6,453
2018	3,455	689	1,907	2,881	4,110	7,685	3,210	999	1,952	2,764	3,800	6,534
2019	3,539	681	1,946	2,973	4,225	7,869	3,320	1,072	2,049	2,877	3,897	6,703
2020	3,601	706	1,980	3,022	4,270	8,025	3,450	1,179	2,157	2,999	4,021	6,892
연평균 성장률(%)	3.1%	2.5%	3.6%	3.6%	3.3%	2.7%	3.4%	6.3%	4.8%	4.1%	3.5%	2.2%

주: 1) 2011-2020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임.  
2) 가구균등화 소득임.

통계번호 LIV-31607

통계명 재정정책 재분배효과 지수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권과 빈곤

산출방법 재정정책 재분배효과 지수 = 시장소득 지니계수 -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단위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418에서 2015년 0.396까지 낮아졌다가 2016년에 0.402로 높아졌고 최근까지 이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0년 0.331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 집행에 따른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재분배효과 지수, 즉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둘의 차이가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재분배효과 지수는 2012년 0.026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0.074로 커졌다.

**통계표** 지니계수와 재정정책 재분배효과 지수, 2011-2020

연도	지니계수		재분배효과 지수
	시장소득 기준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1	0.418	0.388	0.030
2012	0.411	0.385	0.026
2013	0.401	0.372	0.029
2014	0.397	0.363	0.034
2015	0.396	0.352	0.044
2016	0.402	0.355	0.047
2017	0.406	0.354	0.052
2018	0.402	0.345	0.057
2019	0.404	0.339	0.065
2020	0.405	0.331	0.074



통계번호 LIV-31608

통계명 지니계수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권과 빈곤

산출방법

단위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지니계수는 완전 평등 상태를 나타내는 0에서부터 완전 불평등 상태를 나타내는 1까지의 값을 가지는 소득불평등 지수이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418에서 2015년 0.396까지 낮아졌다가 2016년에 0.402로 높아졌고 최근까지 이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0년 0.331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통계표** 지니계수, 2011-2020

연도	시장소득 기준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1	0.418	0.388
2012	0.411	0.385
2013	0.401	0.372
2014	0.397	0.363
2015	0.396	0.352
2016	0.402	0.355
2017	0.406	0.354
2018	0.402	0.345
2019	0.404	0.339
2020	0.405	0.331

주: 1)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



## 4 주거와 교통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체	통계번호	통계명	취약집단	
주거와 교통	시민·정치적 권리	거주 및 이동의 자유	HOU-21701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노인	
			HOU-21702	노인 도로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		
			HOU-21703	도로교통사고 발생률		
			HOU-21704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HOU-21705	아동·청소년 거주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
			HOU-21706	어린이 도로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		아동청소년
			HOU-21707	어린이 스쿨존 도로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		아동청소년
			HOU-21708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		아동청소년
			HOU-21709	장시간 통근·통학인구 비율		
			HOU-21710	저상버스 보급률		
			HOU-21711	특별교통수단 보급대수	장애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HOU-31801	거주 안전에 대한 인식		
			HOU-31802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HOU-31803	공과금 납부 어려움 경험률		
			HOU-31804	노인주거복지시설 수용률		노인
			HOU-31805	단칸방 및 지하·옥탑방 거주율		저소득층
			HOU-31806	도시가스 보급률		
			HOU-31807	무주택가구율		
			HOU-31808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HOU-31809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HOU-31810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HOU-31811	자가 거주율		
			HOU-31812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단칸방 거주율		저소득층
			HOU-31813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주거시설별 사용률		저소득층
			HOU-31814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주거안전성		저소득층
HOU-31815	주거권 존중도					
HOU-31816	주거면적					
HOU-31817	주거비 부담도					
HOU-31818	주거환경 만족도					
HOU-31819	주택 만족도					
HOU-31820	주택 양호도					
HOU-31821	주택보급률					
HOU-31822	집세 상승으로 인한 이사 경험률					
HOU-31823	최저주거기준 미달률	저소득층				
HOU-31824	관갓집 및 비닐하우스 거주율	저소득층				

통계번호 HOU-21701

통계명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시민·정치적 권리

거주 및 이동의 자유

산출방법 교통안전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 또는 '매우 안전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A014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A014R&conn_path=I3)

수록기간 2008-2022

통계해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4년까지 10%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부터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 2020년과 2022년에는 21.8%와 24.2%로 높아졌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의 청소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거주지역별로는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연령·거주지역별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남자	여자	15-19세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도시	농어촌
2008	5.7	6.3	5.1	6.3	-	5.9	4.5	5.6	5.7	6.8	5.8	5.1
2010	8.0	8.8	7.2	9.6	-	7.8	6.2	8.5	8.1	8.7	8.2	7.0
2012	9.3	10.3	8.5	-	11.7	8.1	7.8	8.7	10.0	10.7	9.3	10.0
2014	7.3	8.3	6.3	-	10.4	8.2	4.9	6.6	6.8	8.4	7.3	7.5
2016	10.3	11.3	9.3	-	14.8	9.3	7.6	9.3	10.0	12.1	10.4	9.9
2018	13.1	14.8	11.5	-	17.2	13.1	12.5	12.3	12.6	13.2	12.8	14.7
2020	21.8	23.6	19.9	-	24.5	19.8	20.6	23.3	22.2	21.1	22.2	19.9
2022	24.2	25.7	22.5	-	27.3	23.8	22.3	24.8	24.7	23.7	23.9	25.3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도시는 동 지역, 농어촌은 읍면 지역임.

통계번호 HOU-21702

통계명 노인 도로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시민·정치적 권리

거주 및 이동의 자유

산출방법 노인 도로교통사고 발생률 = (65세 이상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000.

노인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65세 이상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000.

단위 건/10만 명, 명/10만 명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자료출처 [http://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S\\_PDS](http://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S_PDS)

수록기간 2005-2021

통계해설 65세 이상 인구의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5년 1만 9066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 4만 건을 넘어섰다가 2020년과 2021년에 3만 5312건과 3만 4907건으로 감소하였다.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으로 계산한 사고건수는 2019년까지 500건 이상이었으나 2020년과 2021년에 433.2건과 407.3건으로 급감하였다. 65세 이상 인구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까지 1700-1800명대를 등락하다가 2018년부터 매년 감소하여 2021년에는 1295명에 그쳤다.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으로는 2005년 39.3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에는 15.1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통계표

노인 도로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 2005-2021

연도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명)	도로교통사고 발생률 (건/10만 명)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명/10만 명)
2005	19,066	1,700	441.3	39.3
2006	19,557	1,731	432.1	38.2
2007	21,134	1,786	443.9	37.5
2008	23,012	1,735	461.3	34.8
2009	25,983	1,826	501.9	35.3
2010	25,810	1,752	481.0	32.6
2011	26,483	1,724	480.2	31.3
2012	28,185	1,864	488.8	32.3
2013	30,283	1,833	502.8	30.4
2014	33,170	1,815	528.4	28.9
2015	36,053	1,814	551.2	27.7
2016	35,761	1,732	529.2	25.6
2017	37,555	1,767	531.5	25.0
2018	38,647	1,682	524.7	22.8
2019	40,645	1,523	528.6	19.8
2020	35,312	1,342	433.2	16.5
2021	34,907	1,295	407.3	15.1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OU-21703

통계명 도로교통사고 발생률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시민·정치적 권리

거주 및 이동의 자유

산출방법 도로교통사고 발생률 =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 추계인구) × 100,000.

단위 건/10만 명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V\\_MOTA\\_01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V_MOTA_016&conn_path=I3)

수록기간 2005-2021

통계해설 도로교통사고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로 나타낸다. 전국의 도로 교통사고 발생률은 2009년에 470.5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420-450건 수준으로 낮아졌다. 최근 도로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게 낮아졌는데, 2020년과 2021년에 404.5건과 392.6건으로 급감하였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제주(649.6건), 광주(513.5건), 대구(508.2건) 등의 지역에서 도로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세종(215.2건), 인천(269.0건) 등은 도로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통계표 시도별 도로교통사고 발생률, 2005-2021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5	444.5	385.0	330.7	488.3	453.6	539.4	367.3	406.9	-	410.3	583.1	516.8	450.7	540.7	565.7	632.5	429.0	584.3
2006	441.3	380.8	360.7	526.0	418.5	554.2	368.9	422.5	-	387.3	579.9	532.9	433.4	525.8	581.6	632.7	429.2	602.5
2007	434.8	391.4	286.5	546.0	396.6	543.3	362.5	433.0	-	375.6	600.1	534.8	436.8	545.0	583.0	612.9	428.7	577.4
2008	440.0	412.4	344.3	553.2	395.1	563.7	368.1	475.9	-	356.7	592.1	551.3	425.7	538.6	582.1	585.5	446.4	585.0
2009	470.5	437.1	402.7	580.7	407.8	623.5	398.1	478.5	-	380.3	639.9	565.7	430.9	592.7	630.3	637.2	473.6	665.3
2010	457.8	413.0	398.3	588.8	378.4	595.5	387.5	461.0	-	378.4	606.3	562.3	446.8	582.1	616.1	627.2	443.7	660.1
2011	444.0	401.6	399.6	591.2	366.5	554.4	396.6	441.8	-	369.2	614.6	562.8	418.9	563.6	566.2	579.0	427.2	624.5
2012	445.5	406.8	425.6	581.4	349.2	571.9	365.6	440.1	213.4	373.8	595.5	555.9	405.8	547.4	571.7	587.3	436.9	689.9
2013	427.0	394.8	364.8	552.6	317.7	534.4	353.5	441.5	375.6	362.0	566.5	543.3	383.0	518.8	564.9	573.8	419.4	754.7
2014	440.5	408.9	367.7	586.6	309.1	544.6	379.9	450.0	363.9	391.7	569.8	566.2	400.5	523.1	563.7	574.6	406.2	768.7
2015	454.8	419.1	369.5	576.3	302.7	522.2	447.4	461.3	286.3	426.3	587.6	587.4	448.0	483.5	580.0	588.3	410.7	775.1
2016	431.3	406.8	353.7	532.2	293.6	489.6	490.5	385.5	222.3	404.9	581.4	586.7	421.5	427.7	528.5	545.2	375.2	717.3
2017	421.2	395.5	343.2	527.7	264.0	501.5	508.4	368.1	281.0	396.0	546.8	576.3	429.1	423.7	544.3	519.5	351.6	689.5
2018	421.0	400.1	350.8	539.0	260.0	501.1	499.2	346.3	263.0	410.3	492.8	594.4	404.5	380.2	544.8	522.1	342.9	647.6
2019	443.5	406.5	384.2	596.5	294.6	548.6	554.6	379.4	279.9	418.9	496.9	585.4	429.6	420.3	606.6	548.4	383.0	664.7
2020	404.5	366.3	355.0	536.0	288.2	521.6	483.6	336.6	233.4	389.5	463.3	514.9	411.3	357.3	547.4	477.9	351.4	602.7
2021	392.6	356.9	340.8	508.2	269.0	513.5	475.2	338.3	215.2	391.8	434.4	489.2	387.0	340.7	487.1	458.2	333.3	649.6

통계번호 HOU-21704

통계명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시민·정치적 권리

거주 및 이동의 자유

산출방법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 추계인구) × 100,000.

단위 명/10만 명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V\\_MOTA\\_01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V_MOTA_016&conn_path=I3)

수록기간 2005-2021

통계해설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로 나타낸다. 전국의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2005년 13.2명에서 2013년 10.1명으로 낮아졌고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1년에는 5.6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 지역이 광역시 지역보다 훨씬 높다. 2021년 자료로 보면 전남(14.3명), 경북(12.6명), 충남(12.2명), 전북(10.8명) 등의 광역도는 10명을 넘지만 서울(2.6명), 부산(3.4명), 대구(3.5명), 인천(3.5명), 광주(3.3명) 등의 광역시는 3명 안팎에 그친다.

통계표 시도별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2005-2021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5	13.2	4.8	7.3	9.4	8.0	7.1	7.9	10.7	-	11.3	21.7	21.9	30.4	24.7	29.9	27.7	18.6	19.9
2006	13.1	4.5	7.1	9.1	6.9	9.3	8.4	11.6	-	11.4	20.8	21.9	29.1	24.8	28.6	28.3	18.0	19.9
2007	12.7	4.5	7.5	8.3	6.5	10.8	9.6	10.0	-	11.0	23.0	19.1	27.4	21.8	29.6	27.9	16.5	18.4
2008	12.0	4.8	6.4	8.9	6.5	9.6	7.5	9.4	-	9.8	20.2	20.7	26.2	21.6	26.9	24.5	17.4	17.7
2009	11.8	4.9	7.2	8.7	6.9	8.2	8.8	10.6	-	9.4	19.3	17.9	24.7	22.4	27.2	26.2	16.9	11.5
2010	11.1	4.3	7.0	7.5	7.8	8.4	7.2	9.3	-	8.6	17.9	17.2	24.1	23.2	24.5	23.7	15.1	18.4
2011	10.5	4.3	6.5	6.5	5.9	7.5	7.5	9.5	-	8.4	17.6	17.1	21.1	19.4	23.2	22.6	14.8	19.1
2012	10.7	4.2	6.6	8.4	7.2	7.6	8.0	9.9	13.7	8.7	18.5	18.0	20.7	19.4	25.6	21.4	14.6	16.4
2013	10.1	3.8	6.2	6.7	5.5	7.4	6.0	11.3	17.7	7.8	15.9	18.3	20.3	19.8	25.8	20.1	14.5	18.8
2014	9.4	4.0	4.9	7.5	5.2	6.7	6.4	9.4	15.1	7.4	14.8	16.0	19.4	18.3	23.3	18.0	12.6	15.8
2015	9.1	3.8	5.2	6.5	4.7	6.4	6.3	8.1	10.1	7.1	15.8	15.0	18.2	16.8	22.8	18.9	12.2	15.5
2016	8.4	3.5	4.6	6.7	5.0	5.7	6.4	6.9	10.7	6.2	14.4	14.4	18.2	15.5	18.7	18.4	11.2	12.9
2017	8.1	3.5	4.8	6.0	3.6	8.0	5.6	5.5	6.8	6.1	15.5	14.3	16.3	16.8	21.6	15.9	10.1	12.6
2018	7.3	3.1	3.6	4.9	3.8	5.1	6.1	6.9	6.6	5.2	12.9	13.8	16.3	13.5	18.4	15.3	9.9	12.5
2019	6.5	2.6	3.4	4.6	4.0	3.3	5.1	4.8	4.6	4.8	12.2	11.5	14.1	13.1	16.4	13.3	8.7	9.9
2020	5.9	2.3	3.0	4.6	3.1	4.3	4.4	4.5	2.0	4.5	8.8	10.5	12.0	12.2	15.2	13.3	8.4	10.2
2021	5.6	2.6	3.4	3.5	3.5	3.3	4.0	4.4	4.4	3.9	9.5	9.8	12.2	10.8	14.3	12.6	7.7	7.7

통계번호 HOU-21705

통계명 아동·청소년 거주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시민·정치적 권리  
 거주 및 이동의 자유

산출방법 살고 있는 동네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7\\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7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초·중·고 학생 중 살고 있는 동네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2013년 52.9%에서 꾸준히 늘어나 2020년에 79.7%까지 올라갔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78.7%로 약간 떨어졌다. 이 비율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낮다. 학교급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저소득층 자녀일수록 낮다.

**통계표 성·학교급·소득수준별 아동·청소년 거주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소득수준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2013	52.9	57.7	47.6	63.5	48.6	-	49.2	44.0	59.5	50.5	41.0
2014	56.4	61.1	51.4	66.1	53.6	-	51.5	52.5	61.8	55.4	43.7
2015	59.9	64.4	55.0	67.9	58.6	-	54.5	57.3	65.2	56.9	46.9
2016	61.5	66.1	56.5	70.0	59.5	56.9	57.1	55.9	65.5	59.8	49.6
2017	71.0	73.5	68.4	76.4	68.7	68.9	69.3	67.7	74.7	69.2	57.7
2018	71.5	75.6	67.1	77.3	69.1	69.0	67.9	73.7	75.4	69.7	55.9
2019	71.9	75.3	68.3	73.6	69.4	72.6	71.5	77.1	74.1	71.6	59.3
2020	79.7	80.4	79.0	79.9	79.2	79.9	78.9	84.3	81.7	79.4	66.2
2021	78.7	80.4	76.9	78.5	77.5	80.1	79.5	82.4	81.2	77.4	66.0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OU-21706

통계명 어린이 도로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시민·정치적 권리  
 거주 및 이동의 자유

산출방법 어린이 도로교통사고 발생률 = (12세 이하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 12세 이하 추계인구) × 100,000.  
 어린이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12세 이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 12세 이하 추계인구) × 100,000.

단위 건/10만 명, 명/10만 명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자료출처 [http://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S\\_PDS](http://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S_PDS)

수록기간 2005-2021

통계해설 12세 이하 어린이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5년 1만 8000건에서 2018년 1만여 건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8400건으로 줄었다. 2021년에는 500건가량 늘어난 8889건으로 집계된다. 12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5년 228.8건에서 2020년 154.9건으로 떨어졌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170.6건으로 다소 올라갔다. 어린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5년 250명에 달했다가 2011년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고 2019년부터는 20명대에 그치고 있다. 12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으로 보면 2005년 3.2명에 달했다가 2021년 0.4명에 그쳐 1/8 수준으로 낮아졌다.

통계표

어린이 도로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 2005-2021

연도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명)	도로교통사고 발생률 (건/10만 명)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명/10만 명)
2005	18,000	250	228.8	3.2
2006	16,542	243	218.3	3.2
2007	15,642	179	214.0	2.4
2008	14,930	138	210.5	1.9
2009	14,980	136	218.5	2.0
2010	14,095	126	212.5	1.9
2011	13,323	80	206.0	1.2
2012	12,497	83	197.6	1.3
2013	11,728	82	190.2	1.3
2014	12,110	52	201.7	0.9
2015	12,191	65	205.7	1.1
2016	11,264	71	191.6	1.2
2017	10,960	54	189.7	0.9
2018	10,009	34	176.1	0.6
2019	11,054	28	198.1	0.5
2020	8,400	24	154.9	0.4
2021	8,889	23	170.6	0.4

주: 1) 12세 이하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OU-21707

통계명 어린이 스쿨존 도로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시민·정치적 권리  
거주 및 이동의 자유

산출방법 어린이 스쿨존 도로교통사고 발생률 = (12세 이하 스쿨존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 12세 이하 추계인구) × 100,000.

어린이 스쿨존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12세 이하 스쿨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 12세 이하 추계인구) × 1,000,000.

단위 건/10만 명, 명/100만 명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자료출처 [http://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S\\_PDS](http://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S_PDS)

수록기간 2005-2021

통계해설 스쿨존 내 어린이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6년 323건에서 2011년 751건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매년 400-500건 수준을 등락하고 있다. 12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는 2006년 4.3건에서 2011년 11.6건으로 올랐다가 이후 2018년까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 10명 수준으로 올라갔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는 연간 10명 이내로 발생한다. 2021년에는 2명 발생하였다. 이는 12세 이하 인구 100만 명당 0.38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통계표** 어린이 스쿨존 도로교통사고 발생률, 2005-2021

연도	사고 발생건수(건)	사고 사망자 수(명)	사고 발생률(건/10만 명)	사고 사망률(명/100만 명)
2005	349	7	4.4	0.89
2006	323	9	4.3	1.19
2007	345	9	4.7	1.23
2008	517	5	7.3	0.71
2009	535	7	7.8	1.02
2010	733	9	11.0	1.36
2011	751	10	11.6	1.55
2012	511	6	8.1	0.95
2013	427	6	6.9	0.97
2014	523	4	8.7	0.67
2015	541	8	9.1	1.35
2016	480	8	8.2	1.36
2017	479	8	8.3	1.38
2018	435	3	7.7	0.53
2019	567	6	10.2	1.08
2020	483	3	8.9	0.55
2021	523	2	10.0	0.38

주: 1) 12세 이하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OU-21708

통계명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시민·정치적 권리

거주 및 이동의 자유

산출방법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구역 수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구역 수) × 100.

단위 %

자료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정기보고」.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6](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6)

수록기간 2009-2021

통계해설 어린이보호구역은 2010년 1만 3207개소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1만 6912개소에 달했다. 2021년에는 1만 6759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지정대상 1만 9858개소 대비 84.4%가 설치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지역은 대부분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변이다.

**통계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 2009-2021

연도	지정대상구역 수(개소)	지정구역 수(개소)						지정률(%)
		전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2009	14,882	9,584	5,654	2,781	107	1,042	-	64.4
2010	15,915	13,207	5,850	5,476	126	1,755	-	83.0
2011	17,339	14,921	5,917	6,766	131	2,102	5	86.1
2012	18,706	15,136	5,946	6,735	131	2,313	11	80.9
2013	18,885	15,444	5,975	6,838	135	2,481	15	81.8
2014	21,274	15,799	6,009	6,979	145	2,650	16	74.3
2015	21,422	16,085	6,052	7,056	146	2,775	56	75.1
2016	20,579	16,355	6,083	7,171	148	2,917	36	79.5
2017	21,264	16,555	6,127	7,259	150	2,981	38	77.9
2018	19,512	16,765	6,146	7,315	160	3,108	36	85.9
2019	20,683	16,912	6,191	7,330	163	3,181	47	81.8
2020	20,061	16,896	6,229	7,184	183	3,220	80	84.2
2021	19,858	16,759	6,261	6,988	190	3,233	87	84.4

통계번호 HOU-21709

통계명 장시간 통근·통학인구 비율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시민·정치적 권리

거주 및 이동의 자유

산출방법 장시간 통근·통학인구 비율 = (통근·통학 60분 이상 소요 인구 ÷ 통근·통학인구)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A200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A2004&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통근·통학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인구의 비율은 지난 2005년 13.6%에서 2015년 17.8%까지 늘어났다가 2020년 14.5%로 줄어들었다. 2015년과 2020년 사이 장시간 통학인구가 17.1%에서 10.7%로 크게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 장시간 통근인구는 18.0%에서 15.3%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 장시간 통근·통학인구의 비율은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등 비수도권 대도시에서 높다.

**통계표** 시도별 장시간 통근·통학인구 비율, 2000-2020

연도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0	통근	14.5	24.1	16.5	11.5	21.4	10.6	10.3	6.1	-	21.8	3.7	5.2	3.7	4.7	3.1	3.6	5.6	4.1
	통학	15.2	21.6	17.7	17.0	17.9	9.9	10.6	12.7	-	19.2	3.8	6.8	8.3	9.1	6.6	7.7	9.3	9.0
	통근·통학	14.7	23.4	16.9	13.3	20.5	10.4	10.4	7.8	-	21.2	3.7	5.7	4.7	5.9	3.8	4.5	6.5	5.3
2005	통근	13.7	23.0	14.9	8.3	20.4	7.5	8.7	4.0	-	21.0	3.6	4.9	3.5	4.0	2.4	2.7	5.1	3.2
	통학	13.2	19.1	14.2	13.2	17.6	6.8	8.1	8.8	-	17.9	3.0	5.1	6.6	5.5	4.6	5.1	7.8	7.1
	통근·통학	13.6	21.9	14.7	9.8	19.6	7.3	8.5	5.2	-	20.3	3.4	4.9	4.1	4.4	2.9	3.2	5.7	4.1
2010	통근	15.6	25.9	15.7	10.4	22.8	8.0	9.3	5.9	-	23.8	4.3	6.2	4.3	4.2	3.0	3.4	5.6	3.5
	통학	13.8	19.1	13.3	12.8	19.8	6.9	7.7	8.9	-	19.9	3.8	6.2	6.7	4.8	3.9	6.0	7.5	5.8
	통근·통학	15.2	24.2	15.1	11.1	22.1	7.7	8.9	6.7	-	22.8	4.2	6.2	4.8	4.4	3.2	3.9	6.0	4.0
2015	통근	18.0	30.2	18.5	12.5	27.3	8.8	11.5	7.2	10.2	26.1	5.1	7.3	5.2	4.8	3.4	4.4	6.5	5.3
	통학	17.1	22.9	17.9	17.7	25.4	10.8	11.2	13.2	10.7	23.1	5.5	8.1	8.7	6.9	5.6	7.9	10.6	8.7
	통근·통학	17.8	28.8	18.4	13.7	26.9	9.3	11.4	8.4	10.3	25.5	5.2	7.4	5.8	5.3	3.7	5.0	7.2	5.9
2020	통근	15.3	24.5	13.1	8.8	20.4	5.8	8.7	4.6	11.5	23.8	3.9	5.8	5.0	3.7	3.0	3.5	5.4	4.5
	통학	10.7	13.3	11.6	11.0	13.4	5.7	5.9	7.8	7.6	15.3	3.4	4.7	3.6	4.6	5.0	5.7	8.4	4.0
	통근·통학	14.5	22.7	12.8	9.2	19.3	5.8	8.1	5.1	10.8	22.4	3.9	5.7	4.7	3.8	3.3	3.8	5.9	4.4

주: 1) 12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OU-21710

통계명 저상버스 보급률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시민·정치적 권리  
거주 및 이동의 자유

산출방법 저상버스 보급률 = (저상버스 대수 ÷ 시내버스 대수) × 100.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저상버스도입현황」.

자료출처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354&hFormId=5250&hDivEng=&month\\_yn=N](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354&hFormId=5250&hDivEng=&month_yn=N)

수록기간 2012-2020

통계해설 저상버스 보급률, 즉 시내버스 총운행대수 중 저상버스 운행대수의 비율은 2012년 12.8%에서 점차 늘어나 2015년에 20%대로 올랐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27.8%로 높아졌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서울이 57.8%로 가장 높다. 강원(36.1%), 대구(34.9%), 제주(32.9%), 대전(31.3%) 등도 저상버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통계표** 시도별 저상버스 보급률, 2012-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12.8	25.2	9.1	10.1	5.8	8.8	13.7	9.9	-	8.8	21.1	16.1	2.1	5.1	5.4	2.1	18.7	0.0
2013	16.4	28.5	13.1	12.2	10.4	12.5	17.4	11.9	-	12.0	27.9	18.7	6.9	8.5	7.9	4.1	25.1	6.0
2014	18.5	32.5	15.9	17.1	12.5	13.5	21.0	13.4	-	12.6	30.0	20.2	7.7	12.5	8.7	5.5	25.1	6.0
2015	20.7	35.2	18.5	21.8	14.1	17.8	25.0	14.9	-	13.8	32.5	22.4	9.4	17.5	10.9	8.9	25.2	6.0
2016	22.3	40.4	20.5	29.7	15.3	21.2	27.4	14.7	29.0	13.3	34.3	22.7	9.0	21.2	12.5	11.7	23.7	5.2
2017	22.4	43.6	21.0	31.1	16.1	19.2	24.1	12.6	24.5	13.3	28.7	22.2	7.2	17.5	10.9	10.3	20.3	17.4
2018	23.4	45.0	22.2	34.6	17.1	20.5	27.5	11.6	23.0	12.7	34.8	20.8	7.0	22.0	11.8	13.9	18.7	22.6
2019	26.5	53.9	25.6	34.1	20.1	20.8	28.8	12.2	23.5	13.6	34.7	20.9	9.3	22.7	13.6	15.2	21.8	26.8
2020	27.8	57.8	27.3	34.9	22.7	25.0	31.3	12.3	27.9	14.1	36.1	20.1	10.0	23.5	11.5	16.2	23.6	32.9

통계번호 HOU-21711

통계명 특별교통수단 보급대수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시민·정치적 권리

거주 및 이동의 자유

산출방법

단위 대

자료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자료출처 [https://tmacs.kotsa.or.kr/web/TraffickingWeak/psd/weak\\_report\\_list.do?mid=S3106](https://tmacs.kotsa.or.kr/web/TraffickingWeak/psd/weak_report_list.do?mid=S3106)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 불편이 심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특별교통수단은 2011년 1476대에서 매년 늘어나 2020년에는 3914대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0년 법정기준대수(4694대) 대비 보급률은 83.4%이다. 17개 시도 중 법정기준대수를 달성한 지역은 경기(1015대 대비 1145대, 112.8%)와 경남(337대 대비 357대, 105.9%) 두 곳뿐이다.

통계표 시도별 특별교통수단 보급대수, 2011-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1	1,476	300	100	60	112	40	60	24	-	212	110	61	31	77	20	55	209	5
2012	1,607	355	100	70	122	45	30	24	-	263	34	67	34	86	20	54	296	7
2013	1,757	410	100	92	122	35	68	29	4	277	15	57	51	61	50	58	301	27
2014	2,298	446	198	103	140	80	44	32	6	475	65	100	59	86	64	44	316	40
2015	2,601	424	198	123	140	92	57	41	8	566	93	107	84	110	79	124	315	40
2016	2,820	437	201	128	140	97	82	51	10	651	98	112	100	139	100	115	319	40
2017	2,932	439	128	128	140	106	82	51	12	797	98	88	107	146	114	132	324	40
2018	3,187	437	128	140	145	116	82	55	13	949	110	90	120	149	125	159	328	41
2019	3,457	437	158	145	145	116	82	58	17	1,071	119	100	131	166	148	177	331	56
2020	3,914	622	181	150	145	116	86	62	17	1,145	138	110	164	184	170	201	357	66

통계번호 HOU-31801

통계명 거주 안전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0점(전혀 안전하지 않다)부터 10점(매우 안전하다)까지 중 6-10점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4&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21

통계해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0년까지 60-70%대를 등락하다가 2021년에 80.1%로 크게 높아졌다. 살고 있는 도시(시군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50-60%대였다가 2021년에 77.1%로 급등하였고,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40%대에서 68.2%로 크게 올랐다. 거주지 안전에 대한 인식은 남녀 사이에 그리고 도시와 농촌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통계표 성 및 거주지역별 거주 안전에 대한 인식, 2015-2021**

연도	살고 있는 동네(읍면동)					살고 있는 지역(시군구)					우리 사회				
	전체	성별		거주지역별		전체	성별		거주지역별		전체	성별		거주지역별	
		남자	여자	도시	농어촌		남자	여자	도시	농어촌		남자	여자	도시	농어촌
2015	61.0	62.8	59.2	60.2	64.6	-	-	-	-	-	-	-	-	-	-
2016	62.7	64.9	60.5	62.1	66.0	55.5	58.2	52.7	55.0	58.5	24.9	27.6	22.2	25.1	24.3
2017	71.5	72.8	70.1	70.4	76.7	65.3	67.8	62.7	64.4	69.6	38.6	42.9	33.9	38.0	40.9
2018	77.2	77.7	76.7	77.2	77.4	71.4	72.4	70.4	71.7	69.6	43.2	44.7	41.6	43.3	43.2
2019	59.9	62.8	56.9	59.2	63.2	56.4	59.6	53.4	55.9	59.1	44.1	48.8	39.2	44.2	43.9
2020	60.9	61.1	60.6	60.1	64.4	56.1	56.9	55.1	55.0	60.9	45.9	46.7	44.9	46.8	41.1
2021	80.1	80.5	79.7	80.1	79.8	77.1	77.2	77.1	77.7	74.5	68.2	69.0	67.4	68.5	66.4

주: 1) 도시는 동 지역, 농어촌은 읍면 지역임.  
2)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OU-31802

통계명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 (공공임대주택 수 ÷ 총 주택 수) × 100.  
총 주택 수는 등록센서스 자료임.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552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5525&conn_path=I3)

수록기간 2010-2019

통계해설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10년 92만 호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166만 호로 늘어났다. 이 기간 약 74만 호가 증가하였다.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같은 기간 5.2%에서 7.8%로 높아졌다.

**통계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2010-2019

연도	공공임대주택 수(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2010	924,455	5.2
2011	1,019,195	5.6
2012	1,038,135	5.6
2013	1,124,620	6.0
2014	1,176,840	6.1
2015	1,257,461	6.4
2016	1,357,701	6.8
2017	1,441,460	7.1
2018	1,570,242	7.5
2019	1,660,128	7.8



통계번호 HOU-31803

통계명 공과금 납부 어려움 경험률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공과금(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5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57&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까지 10%를 웃돌다가 2016년에 7.0%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5% 미만으로 낮아졌다. 연령별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공과금 미납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공과금 납부 어려움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13	14.8	17.5	13.9	15.0	16.7	8.7	-	26.8	22.7	16.8	9.8	8.7	9.1	7.2
2014	14.0	12.5	16.1	14.8	13.3	12.5	-	24.9	22.8	15.8	10.7	8.8	9.6	8.4
2015	11.5	11.2	12.6	12.9	10.4	9.4	-	23.1	15.6	17.0	9.6	7.4	6.0	7.3
2016	7.0	5.7	8.1	8.5	7.0	4.5	-	12.4	13.1	8.9	7.1	3.8	3.1	6.1
2017	5.0	3.3	5.6	5.9	4.8	5.3	-	13.0	8.8	6.5	5.3	3.3	2.0	3.7
2018	3.3	3.3	4.3	3.4	2.9	2.3	-	9.0	6.3	5.0	3.6	1.4	1.7	2.2
2019	3.4	3.1	3.3	3.6	3.2	3.7	-	8.3	9.4	4.6	3.9	2.0	2.2	1.5
2020	3.2	2.6	2.4	3.0	3.2	-	4.1	9.3	7.2	4.4	2.6	2.8	1.3	0.9
2021	4.2	3.5	1.9	4.0	5.1	-	5.3	6.4	6.4	4.8	4.8	3.2	4.8	2.8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OU-31804

통계명 노인주거복지시설 수용률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노인주거복지시설 수용률 =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정원 ÷ 65세 이상 인구) × 100,000.  
65세 이상 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명/10만 명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N\\_B000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N_B00003&conn_path=I3)

수록기간 2008-2020

통계해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정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1만 7000명,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1만 8000명,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1만 9000명,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2만 명 수준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양상이 달라진다. 노인 인구 10만 명당 입소정원은 2008년 347.6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300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251.4으로 더 낮아졌다. 시설별로는 양로원의 수용인원이 가장 많고 이어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순으로 많다.

통계표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정원과 수용률, 2008-2020

연도	입소정원(명)				수용률(명/10만 명)			
	전체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전체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2008	17,342	11,520	5,645	177	347.6	230.9	113.2	3.5
2009	14,353	11,561	2,354	438	277.3	223.3	45.5	8.5
2010	17,270	11,906	4,746	618	321.8	221.9	88.4	11.5
2011	17,450	12,509	4,231	710	316.4	226.8	76.7	12.9
2012	18,179	13,164	4,128	887	315.2	228.3	71.6	15.4
2013	18,592	12,782	4,761	1,049	308.7	212.2	79.1	17.4
2014	20,110	13,903	5,034	1,173	320.4	221.5	80.2	18.7
2015	19,909	13,446	5,376	1,087	304.4	205.6	82.2	16.6
2016	19,993	13,283	5,648	1,062	295.9	196.6	83.6	15.7
2017	19,652	12,562	5,998	1,092	278.1	177.8	84.9	15.5
2018	19,897	12,510	6,389	998	270.1	169.8	86.7	13.5
2019	21,674	13,036	7,684	954	281.9	169.5	99.9	12.4
2020	20,497	11,619	7,925	953	251.4	142.5	97.2	11.7

통계번호 HOU-31805

통계명 단칸방 및 지하·옥탑방 거주율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3인 이상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와 지하방이나 옥탑방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자료출처

수록기간 2006-2020

통계해설 3인 이상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4년까지 0.3%를 웃돌다가 2016년부터 0.2%로 떨어졌고 2019년과 2020년에는 0.1%로 더 낮아졌다. 지하방이나 옥탑방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도 2006년 4.0%에서 2019년 1.3%로 낮아졌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1.6%로 약간 올랐다. 지하·옥탑방 거주율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하·옥탑방 거주 가구가 거의 없지만 수도권에서는 3%가량의 가구가 여전히 지하방이나 옥탑방에 거주한다.

**통계표** 거주지역별 단칸방 및 지하·옥탑방 거주율, 2006-2020

연도	단칸방 거주율				지하·옥탑방 거주율			
	전체	거주지역별			전체	거주지역별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2006	0.7	0.7	0.5	0.9	4.0	7.5	1.0	0.8
2008	0.3	0.2	0.3	0.4	3.3	6.5	0.4	0.5
2010	0.3	0.3	0.3	0.3	4.0	7.3	1.1	0.8
2012	0.6	0.6	0.5	0.6	1.7	3.3	0.3	0.3
2014	0.3	0.3	0.3	0.2	2.8	5.6	0.3	0.1
2016	0.2	0.3	0.1	0.3	3.1	6.3	0.1	0.2
2017	0.2	0.2	0.0	0.1	2.3	4.6	0.3	0.2
2018	0.2	0.3	0.2	0.1	1.9	3.9	0.1	0.1
2019	0.1	0.1	0.2	0.2	1.3	2.7	0.0	0.0
2020	0.1	0.1	0.1	0.2	1.6	3.1	0.2	0.1

주: 1) 단칸방 거주율은 3인 이상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임.  
 2) 지하방에는 반지하방이 포함됨.  
 3) 수도권에는 서울·인천·경기, 광역시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도지역에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포함됨.

통계번호 HOU-31806

통계명 도시가스 보급률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도시가스 보급률 = (도시가스 수용가구 수 ÷ 총가구 수) × 100.

단위 %

자료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자료출처

수록기간 2009-2020

통계해설 도시가스 보급률, 즉 전체 가구 중 도시가스가 보급된 가구의 비율은 2009년 74.0%에서 2014년 80%대로 올랐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2020년에는 85.0%로 높아졌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역 간 격차가 크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7대 광역시의 보급률은 90%를 넘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 지역은 이보다 훨씬 낮다. 강원·충북·전남·경북은 70%에도 못 미치며, 특히 제주는 15.2%에 불과하다.

**통계표**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2009-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74.0	96.0	68.6	73.1	88.1	84.8	85.9	79.0	-	78.9	52.2	47.7	43.3	54.0	47.6	53.9	54.8	3.4
2010	77.3	89.6	69.4	74.9	88.9	87.6	87.3	80.9	-	79.1	39.5	51.1	41.7	54.1	48.7	46.8	56.3	4.3
2011	75.0	92.3	72.6	77.8	91.5	91.2	90.7	83.8	-	81.2	48.0	53.4	45.3	58.1	50.2	48.9	58.4	5.6
2012	76.5	93.0	76.2	81.7	89.5	94.2	92.1	86.3	-	84.0	47.4	56.2	59.0	67.9	44.0	51.5	60.2	6.9
2013	78.8	95.4	79.8	84.6	89.6	96.6	92.8	87.8	52.5	85.6	47.7	59.1	54.1	61.9	50.5	52.9	61.8	9.3
2014	80.7	95.7	82.9	87.5	90.4	99.7	93.4	89.2	74.4	86.0	46.4	61.6	58.2	65.2	66.8	56.1	63.7	10.2
2015	80.8	96.6	85.4	90.7	91.2	95.8	94.1	90.7	81.5	86.0	47.1	63.5	57.7	68.4	48.4	59.1	66.4	11.6
2016	82.0	98.0	87.6	94.0	92.0	97.6	94.4	91.8	80.8	86.9	48.0	62.9	61.2	68.0	49.8	61.6	67.4	12.6
2017	83.3	98.6	89.9	95.7	93.0	99.3	94.6	93.2	81.7	87.6	45.1	65.6	64.5	72.3	51.4	63.6	73.1	13.3
2018	85.0	98.2	92.3	96.4	92.9	99.9	94.8	93.9	81.0	88.0	53.4	66.2	70.8	71.6	49.2	65.9	75.3	15.2
2019	83.3	98.6	89.9	95.7	93.0	99.3	94.6	93.2	81.7	87.6	45.1	65.6	64.5	72.3	51.4	63.6	73.1	13.3
2020	85.0	98.2	92.3	96.4	92.9	99.9	94.8	93.9	81.0	88.0	53.4	66.2	70.8	71.6	49.2	65.9	75.3	15.2

통계번호 HOU-31807

통계명 무주택가구율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무주택가구율 = (무주택가구 수 ÷ 총가구 수)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0H04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0H0402&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20

통계해설 무주택가구율, 즉 전체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44% 안팎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51.6%로 가장 높고 대전(47.6%), 세종(47.5%), 제주(45.1%), 경기(44.2%) 등의 순으로 높다.

**통계표** 시도별 무주택가구율, 2015-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	44.0	50.4	41.1	42.6	41.5	43.1	45.0	37.5	45.9	44.5	44.9	42.2	43.9	41.2	40.2	40.2	38.8	44.0
2016	44.5	50.7	41.7	42.5	41.9	43.0	45.7	37.4	47.8	45.0	45.0	43.1	43.9	42.7	42.1	41.2	39.3	45.0
2017	44.1	50.8	41.6	41.9	41.7	43.0	46.4	36.8	46.4	44.8	44.3	42.3	42.8	41.3	40.7	40.0	38.1	44.9
2018	43.8	50.9	41.6	41.7	41.3	42.3	46.0	36.3	45.8	44.4	43.8	42.1	42.1	40.8	40.1	39.2	37.5	44.9
2019	43.7	51.4	41.9	41.8	42.0	42.3	46.4	36.0	46.5	44.1	42.7	41.5	41.6	40.5	39.3	38.8	37.0	44.6
2020	43.9	51.6	42.4	42.2	42.5	42.6	47.6	35.6	47.5	44.2	42.7	41.9	42.0	40.6	39.0	39.1	37.0	45.1

주: 1)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OU-31808  
통계명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 주택가격 ÷ 연소득.  
단위 배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자료출처  
수록기간 2006-2020

통계해설 주택 보유자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주택가격이 연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이 배율은 2006년 4.2배에서 2016년 5.6배까지 오른 후 최근에는 5.4-5.5배 수준에 있다. 주택가격 배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경우 5.4배에 그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8.3배에 이른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큰데, 도지역은 3.9배에 불과하지만 광역시와 수도권은 각각 6.0배와 8.0배에 달한다.

**통계표**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2006-2020

연도	전체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2006	4.2	6.3	3.4	3.6	5.7	4.1	3.3
2008	4.3	6.4	4.3	4.2	6.9	3.3	3.0
2010	4.3	6.1	4.2	4.0	6.9	3.5	2.9
2012	5.1	7.5	4.3	4.4	6.7	5.0	3.6
2014	4.7	8.3	5.0	4.7	6.9	4.7	4.2
2016	5.6	9.8	5.6	5.0	6.7	5.3	4.0
2017	5.6	8.3	5.2	4.8	6.7	5.5	4.0
2018	5.5	9.0	5.2	4.8	6.9	5.6	3.6
2019	5.4	8.9	5.2	4.8	6.8	5.5	3.6
2020	5.5	8.3	5.7	5.4	8.0	6.0	3.9

주: 1) 주택가격 배율 중위수임.  
2) 하위층은 1-4분위, 중위층은 5-8분위, 상위층은 9-10분위 소득계층임.  
3) 수도권에는 서울·인천·경기, 광역시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도지역에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가 포함됨.

통계번호 HOU-31809

통계명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 (월임대료 ÷ 월소득) × 100.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자료출처

수록기간 2006-2020

통계해설 주택 임차인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주택임대료가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08년 17.5%에서 2014년 20.3%까지 올랐다가 2018년에 15.5%까지 떨어졌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 16.1%와 16.6%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임대료 비율은 과거에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의 순으로 높다.

**통계표**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별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2006-2020

연도	전체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2006	18.7	27.6	18.9	16.1	19.9	18.5	17.8
2008	17.5	25.0	17.6	17.4	22.3	19.3	15.9
2010	19.2	28.2	16.6	21.1	20.9	16.4	14.4
2012	19.8	21.8	17.3	22.6	23.3	16.8	14.5
2014	20.3	29.0	17.0	21.6	21.6	16.6	15.8
2016	18.1	23.1	14.9	19.0	17.9	15.4	14.2
2017	17.0	22.2	15.7	20.3	18.4	15.3	15.0
2018	15.5	20.3	16.7	18.3	18.6	16.3	15.0
2019	16.1	20.3	16.7	18.3	20.0	16.3	12.7
2020	16.6	18.8	15.8	18.7	18.6	15.1	12.7

주: 1) 주택임대료 비율 중위수임.  
 2) 하위층은 1-4분위, 중위층은 5-8분위, 상위층은 9-10분위 소득계층임.  
 3) 수도권에는 서울·인천·경기, 광역시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도지역에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가 포함됨.

통계번호 HOU-31810

통계명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 (주택 수 ÷ 총인구) × 1,000.

단위 호/1000명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59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594&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다가구 구분거처가 주택 수에 반영되기 시작한 2005년 330호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400호를 넘었고 2020년에는 418호로 늘어났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경북(494호), 강원(481호), 전남(480호) 등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들 지역과 달리 서울(394호), 인천(385호), 경기(379호) 등 수도권 지역은 400호에도 못 미친다.

**통계표**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2000-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0	249	199	227	220	255	250	244	236	-	237	308	288	317	301	324	303	276	249
2005	330	316	330	316	322	309	322	322	-	312	370	356	363	358	380	370	348	323
2010	357	342	359	356	344	355	355	360	-	330	404	389	381	391	410	409	374	330
2015	383	367	397	383	365	390	387	388	454	347	426	421	409	420	442	446	401	366
2016	388	372	400	393	368	396	391	392	404	351	431	427	417	424	448	454	407	379
2017	395	377	409	403	371	405	397	405	421	356	440	435	427	430	456	466	420	394
2018	403	381	416	408	377	414	405	414	419	366	453	450	440	441	463	476	430	405
2019	412	388	427	412	381	422	412	426	427	374	470	460	447	452	471	485	442	417
2020	418	394	436	417	385	433	417	431	422	379	481	469	457	463	480	494	453	420

주: 1) 2005년부터 주택 수에 다가구주택 구분거처가 포함됨.  
2) 2010년부터는 등록센서스 자료임.



통계번호 HOU-31811

통계명 자가 거주율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자가 거주율 = (자가 거주 가구 ÷ 전체 가구) × 100.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자료출처

수록기간 2006-2020

통계해설 자가 거주율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08년 56.4%에서 2014년 53.6%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증가 추세로 바뀌며 2019년과 2020년에 58.0%와 57.9%로 높아졌다. 자가 거주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고소득층의 경우 70%를 넘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50%에도 못 미친다. 거주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도지역, 광역시, 수도권의 순으로 자가 거주율이 높다.

**통계표**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별 자가 거주율, 2006-2020

연도	전체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2006	55.6	49.7	55.3	67.0	50.2	54.8	63.8
2008	56.4	51.9	54.7	69.4	50.7	57.4	64.0
2010	54.3	46.9	54.0	69.5	46.6	56.6	64.2
2012	53.8	50.4	51.8	64.6	45.7	56.3	64.3
2014	53.6	47.5	52.2	69.5	45.9	56.5	63.8
2016	56.8	46.2	59.4	73.6	48.9	59.9	66.7
2017	57.7	47.5	60.2	73.5	49.7	60.3	68.1
2018	57.7	47.2	60.1	75.2	49.9	60.2	68.3
2019	58.0	46.4	59.6	76.1	50.0	60.4	68.8
2020	57.9	45.4	61.7	75.3	49.8	60.1	69.2

주: 1) 하위층은 1-4분위, 중위층은 5-8분위, 상위층은 9-10분위 소득계층임.  
2) 수도권에는 서울·인천·경기, 광역시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도지역에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가 포함됨.

통계번호 HOU-31812

통계명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단칸방 거주율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방이 한 칸인 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A15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A154&conn_path=I3)

수록기간 2005-2020

통계해설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지난 15년간 큰 변화 없이 8% 안팎 수준으로 나타난다. 가장 최근인 2020년에도 8.3%로 집계된다. 단칸방 거주율은 일반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에서 다소 더 높다. 저소득 가구의 단칸방 거주율은 10.0%인데 일반 가구는 이보다 낮은 7.7%에 그친다.

통계표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단칸방 거주율, 2005-2020

연도	전체	저소득 가구	일반 가구
2005	8.3	11.4	7.2
2006	8.0	12.2	6.5
2007	7.5	12.4	5.7
2008	8.2	12.8	6.6
2009	8.6	12.3	7.4
2010	8.2	12.5	6.7
2011	7.9	11.8	6.6
2012	8.6	12.9	6.9
2013	7.8	12.2	6.0
2014	8.3	12.3	6.8
2015	8.0	12.8	6.2
2016	9.3	12.4	8.1
2017	8.8	11.7	7.8
2018	9.0	11.2	8.2
2019	8.5	10.4	7.8
2020	8.3	10.0	7.7

통계번호 HOU-31813

통계명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주거시설별 사용률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상하수도, 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온수목욕시설이 단독으로 구비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A15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A158&conn_path=I3)

수록기간 2005-2020

통계해설 주거시설 중 상하수도, 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온수목욕시설을 단독으로 갖춘 가구의 비율은 최근 들어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차이 없이 97% 이상에 달하는 개선을 보이고 있다. 주거시설 개선은 저소득 가구에서 두드러진다. 단독 입식부엌 구비 가구는 2005년 93.4%에서 2020년 98.8%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단독 수세식화장실 구비 가구는 82.9%에서 97.4%로, 단독 온수목욕시설 구비 가구는 80.6%에서 97.2%로 각각 증가하였다.

**통계표**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주거시설별 사용률, 2005-2020

연도	단독 상하수도			단독 입식부엌			단독 수세식화장실			단독 온수목욕시설		
	전체	저소득 가구	일반 가구	전체	저소득 가구	일반 가구	전체	저소득 가구	일반 가구	전체	저소득 가구	일반 가구
2005	98.2	97.0	98.6	97.9	93.4	99.4	93.9	82.9	97.7	92.4	80.6	96.5
2006	98.1	96.8	98.6	97.6	92.8	99.3	93.5	82.8	97.4	92.1	79.8	96.6
2007	99.3	98.9	99.4	98.6	96.7	99.3	94.8	86.2	97.9	95.1	86.2	98.3
2008	99.4	99.0	99.5	98.4	95.9	99.3	94.8	86.2	97.9	95.6	87.5	98.5
2009	99.1	98.8	99.2	98.5	96.8	99.1	96.0	88.9	98.4	96.5	89.9	98.7
2010	98.7	98.5	98.8	98.6	97.0	99.1	95.4	88.5	97.8	96.3	90.1	98.4
2011	99.3	98.8	99.5	98.8	97.3	99.2	96.4	89.8	98.6	96.9	90.5	99.1
2012	99.5	98.9	99.7	98.8	97.2	99.4	96.7	91.4	98.8	96.8	91.3	98.9
2013	99.4	98.9	99.6	98.9	97.5	99.5	96.9	92.2	98.8	96.9	92.5	98.7
2014	99.1	98.6	99.3	98.7	97.2	99.2	97.3	93.1	98.9	97.0	92.5	98.8
2015	99.2	99.1	99.2	98.6	97.9	98.9	97.2	93.8	98.4	97.3	93.8	98.7
2016	99.1	99.0	99.2	98.7	97.2	99.2	97.6	94.0	99.0	97.3	93.4	98.8
2017	99.1	99.1	99.1	99.0	98.3	99.2	98.1	95.6	99.0	97.9	95.3	98.8
2018	99.0	98.8	99.0	98.7	98.1	98.9	97.9	95.8	98.6	97.8	95.4	98.7
2019	99.3	99.4	99.2	99.1	98.4	99.3	98.6	97.0	99.2	98.5	96.9	99.0
2020	99.0	99.1	99.0	98.9	98.8	98.9	98.4	97.4	98.8	98.4	97.2	98.8

통계번호 HOU-31814

통계명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주거안전성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주택 견고성, 자연재해 안전성, 주택 구조 안전성 등의 주거안전 여건을 갖춘 가구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A17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A171&conn_path=I3)

수록기간 2005-2020

통계해설 주택의 안전 여건을 갖춘 가구의 비율은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에 차이를 보인다. 2020년 자료로 보면 주택 견고성을 갖춘 일반 가구는 92.0%에 이르지만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81.8%에 그친다. 주택 구조 안전성도 일반 가구는 91.1%가 구비한 반면 저소득 가구는 78.4%만이 구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연재해 안전성에서는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가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표**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의 주거안전성, 2005-2020

연도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 양호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주택 구조 및 설비 안전성		
	전체	저소득 가구	일반 가구	전체	저소득 가구	일반 가구	전체	저소득 가구	일반 가구
2005	74.7	61.7	79.2	92.1	86.7	93.9	-	-	-
2006	77.2	67.1	80.8	95.6	92.6	96.7	-	-	-
2007	77.8	67.9	81.4	96.1	93.2	97.1	-	-	-
2008	80.4	71.2	83.6	98.1	96.6	98.7	-	-	-
2009	87.7	79.4	90.4	97.8	95.9	98.5	-	-	-
2010	85.1	75.1	88.6	97.0	95.3	97.6	-	-	-
2011	88.0	79.6	90.7	98.2	96.2	98.8	-	-	-
2012	87.2	80.4	89.9	98.5	97.1	99.1	-	-	-
2013	85.2	77.5	88.3	97.8	96.1	98.5	-	-	-
2014	89.5	82.1	92.4	97.9	96.5	98.5	-	-	-
2015	90.3	83.4	93.0	97.9	96.6	98.5	-	-	-
2016	91.2	85.5	93.3	98.0	97.4	98.3	-	-	-
2017	92.1	87.3	93.8	98.4	97.7	98.7	-	-	-
2018	93.3	88.6	94.9	96.3	95.1	96.7	-	-	-
2019	89.3	82.8	91.6	97.7	96.3	98.1	84.5	78.6	86.6
2020	89.2	81.8	92.0	96.9	95.6	97.5	87.6	78.4	91.1

통계번호 HOU-31815

통계명 주거권 존중도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주거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주거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77.2%, 2020년 79.4%, 2021년 84.8%, 2022년 86.3%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높다.

**통계표** 성·연령·거주지역별 주거권 존중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도시 (동부)	농어촌 (읍면부)
2019	77.2	77.1	77.2	74.3	72.2	75.4	77.3	83.7	76.1	81.8
2020	79.4	78.4	80.3	77.1	71.3	80.1	78.8	85.3	77.8	86.3
2021	84.8	84.1	85.4	80.2	79.4	84.2	87.1	89.3	84.2	87.3
2022	86.3	85.8	86.7	84.4	84.9	85.3	85.3	89.3	85.7	89.0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OU-31816

통계명 주거면적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살고 있는 주택의 전체 주거면적과 가구원 1인당 주거면적임.

단위 m<sup>2</sup>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자료출처

수록기간 2006-2020

통계해설 가구의 주거면적은 2006년 67.3m<sup>2</sup>에서 2020년 68.9m<sup>2</sup>로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가구원 수의 감소로 1인당 주거면적은 같은 기간 26.2m<sup>2</sup>에서 33.9m<sup>2</sup>로 늘었다. 가구당 주거면적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크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지역, 광역시, 수도권의 순으로 주거면적이 크다.

통계표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별 주거면적, 2006-2020

연도	전체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2006	67.3	26.2	57.7	30.6	68.4	22.2	85.3	24.3	67.0	24.4	64.5	24.0	69.5	30.0
2008	69.3	27.8	59.6	33.5	69.8	23.6	88.4	25.4	68.9	25.7	68.9	27.3	70.1	31.2
2010	68.7	28.5	56.4	33.9	69.8	24.7	90.4	27.0	66.6	25.9	70.4	28.3	70.8	32.4
2012	78.1	31.7	67.9	39.0	79.7	26.3	95.8	27.6	79.0	29.4	80.8	32.6	75.1	34.6
2014	71.4	33.5	57.7	40.0	72.7	29.8	94.9	30.1	70.9	31.3	74.5	34.5	70.2	36.2
2016	70.1	33.2	58.3	39.8	72.0	28.4	91.1	28.8	68.4	30.7	70.3	33.2	72.7	37.1
2017	65.4	31.2	53.8	37.1	67.1	27.0	85.7	27.6	62.4	28.3	67.8	32.0	68.4	35.1
2018	66.2	31.7	54.3	37.6	68.0	27.8	86.7	27.8	62.5	28.5	68.1	32.5	70.5	36.1
2019	68.1	32.9	55.0	38.8	69.4	29.6	89.2	28.9	65.0	29.9	69.8	33.3	71.6	37.3
2020	68.9	33.9	55.6	39.5	71.7	30.3	89.3	29.7	66.3	31.2	70.4	34.7	72.0	37.7

주: 1) 2017년부터 공동주택 면적은 행정자료로 집계함.  
 2) 하위층은 1-4분위, 중위층은 5-8분위, 상위층은 9-10분위 소득계층임.  
 3) 수도권에는 서울·인천·경기, 광역시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도지역에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포함됨.

통계번호 HOU-31817

통계명 주거비 부담도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나 대출금 상환에 대해 '조금 부담된다' 또는 '매우 부담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4-2020

통계해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나 대출금 상환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2014년 71.7%에서 2017년 66.0%로 낮아졌다가 2018년에 70.7%로 다시 높아졌다. 이후 감소 추세로 바뀌며 2020년에 63.9%로 떨어졌다. 주거비 부담도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다. 거주지역별로는 광역시와 도지역에 비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별 주거비 부담도, 2014-2020

연도	전체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2014	71.7	77.0	72.2	60.3	72.8	70.2	70.8
2016	66.5	73.4	65.6	55.6	71.0	62.1	61.4
2017	66.0	72.0	65.2	56.1	68.2	65.1	62.0
2018	70.7	75.6	70.5	61.7	72.4	69.7	68.1
2019	65.0	67.5	66.3	58.3	66.5	62.2	64.2
2020	63.9	67.4	64.2	59.1	66.5	61.2	60.7

주: 1) 하위층은 1-4분위, 중위층은 5-8분위, 상위층은 9-10분위 소득계층임.

2) 수도권에는 서울·인천·경기, 광역시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도지역에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포함됨.

통계번호 HOU-31818

통계명 주거환경 만족도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임. 4점 만점이며, 1점에 가까울수록 불만족함을 나타내고 4점에 가까울수록 만족함을 나타냄.

단위 점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자료출처

수록기간 2006-2020

통계해설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 2.86점에서 2016년 2.93점으로 오른 후 최근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2020년 자료로 보면 고소득층의 만족도는 3.10점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2.90점에 그친다. 거주지역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별 주거환경 만족도, 2006-2020

연도	전체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2006	2.86	2.83	2.86	2.93	2.84	2.87	2.88
2008	2.75	2.70	2.76	2.86	2.75	2.79	2.74
2010	2.84	2.78	2.84	2.98	2.82	2.84	2.88
2012	2.83	2.74	2.84	2.99	2.83	2.90	2.78
2014	2.86	2.78	2.87	3.00	2.85	2.89	2.85
2016	2.93	2.86	2.94	3.05	2.96	2.91	2.90
2017	2.97	2.88	2.99	3.09	2.98	2.99	2.94
2018	2.94	2.86	2.96	3.06	2.94	2.98	2.92
2019	2.94	2.86	2.86	3.07	2.96	3.00	2.88
2020	2.97	2.90	2.97	3.10	2.98	3.00	2.93

주: 1) 하위층은 1-4분위, 중위층은 5-8분위, 상위층은 9-10분위 소득계층임.

2) 수도권에는 서울·인천·경기, 광역시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도지역에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가 포함됨.



통계번호 HOU-31819

통계명 주택 만족도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전반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임. 4점 만점이며, 1점에 가까울수록 불만족함을 나타내고 4점에 가까울수록 만족함을 나타냄.

단위 점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2-2020

통계해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2.83점에서 2020년 3.00점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택 만족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3.16점, 중소득층은 3.02점, 저소득층은 2.89점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다. 거주지역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통계표**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별 주택 만족도, 2012-2020

연도	전체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2012	2.83	2.75	2.85	2.95	2.80	2.87	2.84
2014	2.92	2.80	2.95	3.08	2.88	2.96	2.96
2016	2.99	2.86	3.04	3.18	3.01	2.98	2.98
2017	2.98	2.86	3.02	3.16	2.97	3.00	2.99
2018	2.98	2.85	3.02	3.14	2.96	3.02	2.97
2019	3.00	2.88	3.03	3.16	2.98	3.06	2.99
2020	3.00	2.89	3.02	3.16	2.99	3.02	3.00

주: 1) 하위층은 1-4분위, 중위층은 5-8분위, 상위층은 9-10분위 소득계층임.

2) 수도권에는 서울·인천·경기, 광역시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도지역에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포함됨.

통계번호 HOU-31820

통계명 주택 양호도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구조물, 방수상태, 난방상태, 환기상태, 채광상태, 방음상태, 재난안전성, 화재안전성, 방법상태, 위생상태 양호도 평균점수 합계를 항목 수로 나눈 값임. 4점 만점이며, 1점에 가까울수록 불량함을 나타내고 4점에 가까울수록 양호함을 나타냄.

단위 점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4-2020

통계해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양호도는 2014년 3.07점에서 2018년 3.12점, 2020년 3.16점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주택양호도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다. 2020년 자료로 보면 고소득층은 3.35점이지만 중소득층은 이보다 낮은 3.18점이고 저소득층은 3.02점에 그친다. 거주지역별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별 주택 양호도, 2014-2020

연도	전체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2014	3.07	2.91	3.10	3.29	3.06	3.08	3.07
2016	3.12	2.98	3.17	3.33	3.13	3.11	3.12
2017	3.12	2.95	3.18	3.34	3.12	3.12	3.12
2018	3.12	2.95	3.18	3.32	3.09	3.22	3.08
2019	3.15	3.00	3.19	3.35	3.14	3.20	3.15
2020	3.16	3.02	3.18	3.35	3.13	3.16	3.19

주: 1) 2014년에는 방음상태와 위생상태, 2016년에는 위생상태가 조사되지 않음. 2019년에는 방음상태를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 조사함.  
 2) 하위층은 1-4분위, 중위층은 5-8분위, 상위층은 9-10분위 소득계층임.  
 3) 수도권에는 서울·인천·경기, 광역시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도지역에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포함됨.

통계번호 HOU-31821

통계명 주택보급률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주택보급률 = (주택 수 ÷ 일반가구 수) × 100. 주택 수에는 다가구주택 구분거처가 포함됨.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2100&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2100&conn_path=I3)

수록기간 2005-2020

통계해설 주택보급률은 전체 일반가구 수 대비 주택 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05년 98.3%였다가 2008년 100%를 넘어섰고 이후 조금씩 늘어나 2019년에 104.8%까지 높아졌다. 2020년에는 이보다 조금 낮은 103.6%로 집계된다. 전국으로 보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한다.

**통계표**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보급률, 2005-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5	98.3	93.7	97.9	95.7	99.1	95.2	97.0	99.5	-	97.5	104.0	102.9	103.8	103.0	103.9	102.8	100.6	96.0
2006	99.2	94.1	99.8	97.1	98.3	97.6	98.3	100.9	-	96.7	107.3	105.2	107.1	105.8	106.0	104.4	101.5	97.7
2007	99.6	93.2	99.9	99.2	99.3	99.2	98.8	102.9	-	95.6	108.9	107.5	108.7	108.0	107.8	106.9	102.5	96.9
2008	100.7	93.6	100.0	103.0	99.7	101.5	98.5	104.9	-	96.0	110.5	109.3	110.5	110.7	109.9	109.9	104.4	96.7
2009	101.2	93.1	99.7	104.4	100.2	103.7	97.6	104.7	-	96.5	111.0	110.3	113.0	113.4	111.1	112.0	105.6	96.0
2010	100.5	94.4	99.7	101.5	99.8	101.8	101.0	105.1	0.0	97.3	108.1	107.5	104.6	106.7	107.6	108.9	104.4	96.2
2011	100.9	94.7	100.1	101.3	101.8	102.4	102.6	105.3	0.0	97.6	107.4	108.0	105.1	107.2	107.7	109.5	104.4	95.6
2012	101.1	94.8	100.8	101.0	102.7	101.9	102.6	105.0	0.0	98.3	106.8	107.9	105.6	107.1	107.8	109.6	104.3	96.4
2013	101.3	95.1	101.7	101.2	101.7	102.6	102.0	105.4	0.0	98.1	106.3	108.8	105.8	106.9	108.5	110.2	105.0	98.4
2014	101.9	96.0	102.6	100.5	101.3	103.9	102.6	106.3	0.0	98.3	106.0	109.5	107.9	107.5	109.6	111.2	105.8	98.7
2015	102.3	96.0	102.6	101.6	101.0	103.5	102.2	106.9	123.1	98.7	106.7	111.2	108.3	107.5	110.4	112.5	106.4	100.7
2016	102.6	96.3	102.3	103.3	100.9	104.5	101.7	107.3	108.4	99.1	106.4	110.7	109.2	107.3	110.7	113.0	106.7	103.1
2017	103.3	96.3	103.1	104.3	100.4	105.3	101.2	109.3	111.5	99.5	107.7	111.4	110.5	107.7	111.3	114.7	108.6	105.2
2018	104.2	95.9	103.6	104.0	101.2	106.6	101.6	110.3	110.0	101.0	109.6	113.8	112.7	109.4	112.5	116.1	110.1	107.0
2019	104.8	96.0	104.5	103.3	100.2	107.0	101.4	111.5	111.4	101.5	112.8	114.5	113.3	110.5	113.6	117.3	112.1	109.2
2020	103.6	94.9	103.9	102.0	98.9	106.8	98.3	110.2	107.3	100.3	110.6	112.8	111.5	110.4	112.6	115.4	111.8	107.0

주: 1) 2010년부터는 등록센서스 자료임.

통계번호 HOU-31822

통계명 집세 상승으로 인한 이사 경험률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집세 상승으로 이사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5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57&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집세 상승으로 인해 이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4년 11.3%에서 점차 감소해 2020년에 4.2%로 낮아졌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이보다 약간 오른 6.8%로 나타난다. 집세 상승으로 인한 이사 경험률은 2017년까지는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로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일관되게 더 높다.

**통계표**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별 집세 상승으로 인한 이사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도시 (동부)	농어촌 (읍면부)
2013	10.7	15.8	16.0	12.3	7.1	6.2	10.5	5.2	11.2	7.7
2014	11.3	14.3	16.6	13.4	11.2	8.2	8.2	9.4	12.1	7.1
2015	10.9	17.1	13.8	14.0	9.9	9.2	5.7	9.2	12.0	5.4
2016	6.9	8.3	10.0	8.2	6.7	6.7	4.4	5.6	7.2	5.2
2017	5.7	12.0	8.6	6.2	6.3	4.9	3.5	3.9	6.1	3.3
2018	4.8	4.8	3.7	5.6	6.0	5.3	3.8	3.9	5.1	3.4
2019	4.7	6.3	8.7	4.9	4.7	4.7	3.9	3.5	5.0	3.0
2020	4.2	5.4	4.0	6.4	4.6	4.0	3.4	3.1	4.6	2.3
2021	6.8	5.6	4.6	9.0	8.1	5.3	6.8	6.6	7.0	5.4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OU-31823

통계명 최저주거기준 미달률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text{최저주거기준 미달률} = (\text{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div \text{전체 가구 수}) \times 10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면적, 시설, 방 개수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임.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4-2020

통계해설 최저주거기준 미달률은 면적, 시설, 방 개수 등의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2017년에 5.9%로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세로 바뀌며 2020년에 5% 아래로 떨어졌다. 최저주거기준 미달률은 저소득층에서 훨씬 높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최저주거기준 미달률은 7.6%에 이르지만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1.2%에 그친다. 거주지역별로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다소 더 높다.

**통계표**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률, 2014-2020

연도	전체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2014	5.4	8.7	4.0	1.3	4.7	4.9	6.7
2016	5.4	8.8	3.8	1.7	5.8	4.9	5.0
2017	5.9	10.1	3.8	1.5	6.7	4.5	5.6
2018	5.7	9.1	4.2	1.6	6.8	4.4	4.7
2019	5.3	9.2	3.8	1.3	6.7	4.3	3.9
2020	4.6	7.6	3.1	1.2	5.6	3.0	3.9

주: 1) 하위층은 1-4분위, 중위층은 5-8분위, 상위층은 9-10분위 소득계층임.  
2) 수도권에는 서울·인천·경기, 광역시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도지역에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포함됨.

통계번호 HOU-31824  
 통계명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 거주율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 거주율 =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수 ÷ 전체 가구 수) × 10,000.  
     전체 가구에는 일반가구, 집단가구(집단시설가구 포함), 외국인가가 포함됨.  
 단위 가구/1만 가구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02&conn_path=I3)  
 수록기간 2005-2020  
 통계해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의 수는 2005년에 1만 가구당 13.6가구였으나 이후 5년 마다 계속 감소하여 2020년에는 1/3 수준인 4.0가구에 그친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1만 가구당 8.4가구로 압도적으로 높고 서울이 3.8가구로 비교적 높다. 강원, 충남, 경남도 1만 가구당 3가구 이상인 지역이다.

**통계표** 시도별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 거주율, 2005-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5	13.6	14.9	7.8	3.1	7.5	5.0	2.7	8.8	-	31.4	9.2	5.5	6.7	4.3	5.2	6.7	11.1	10.3
2010	9.6	10.4	7.2	2.4	6.1	2.2	2.9	5.4	-	18.9	7.9	5.5	7.5	4.6	4.6	6.4	7.9	6.8
2015	6.3	5.9	4.1	1.4	2.9	1.4	1.4	2.2	1.4	12.8	6.5	5.1	5.1	2.2	2.5	5.3	6.2	4.6
2020	4.0	3.8	2.5	0.6	1.2	0.8	0.7	1.2	1.3	8.4	3.0	2.8	3.3	1.8	2.1	2.1	3.5	2.2

## 5 가족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체	통계번호	통계명	취약집단
가족	시민·정치적 권리	가정폭력	FAM-21901	노인 학대피해 경험률	노인
			FAM-21902	노인학대 발생률	노인
			FAM-21903	노인학대 발생유형별 비율	노인
			FAM-21904	배우자폭력 피해율	
			FAM-21905	부모로부터의 욕설 경험률	아동청소년
			FAM-21906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률	아동청소년
			FAM-21907	아동 10만 명당 아동학대 검거건수	아동청소년
			FAM-21908	아동학대 발생률	아동청소년
			FAM-21909	아동학대 사망자 수	아동청소년
			FAM-21910	인구 10만 명당 가정폭력 검거건수	

통계번호 FAM-21901

통계명 노인 학대피해 경험률

통계분류 가족

시민·정치적 권리

가정폭력

산출방법 지난 1년간 해당 학대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1\\_05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1_051&conn_path=I3)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65세 이상 노인이 경험하는 학대피해로는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상처가 가장 흔하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이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비율은 6.6%이다. 이어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고통(1.3%), 성폭력 또는 성폭행(1.1%),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적 피해(0.4%),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봐 주지 않음(0.3%),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0.2%) 등의 순으로 피해 경험이 많다.

**통계표** 노인 학대피해 경험률, 2011-2020

연도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고통	성폭력 또는 성폭행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상처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적 피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봐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
2011	0.5	-	9.4	1.5	1.4	2.5
2014	0.2	-	7.3	0.3	1.5	2.8
2017	0.3	0.1	7.4	0.4	1.7	2.3
2020	1.3	1.1	6.6	0.4	0.3	0.2

주: 1) '성폭력 또는 성폭행' 피해는 2017년부터 조사됨.  
2)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FAM-21902

통계명 노인학대 발생률

통계분류 가족

시민·정치적 권리

가정폭력

산출방법 노인학대 발생률 = (65세 이상 학대피해자 수 ÷ 65세 이상 인구) × 100,000.  
65세 이상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임.

단위 명/10만 명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9\\_H503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9_H5037&conn_path=I3)

수록기간 2007-2020

통계해설 노인학대 발생률은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학대피해 노인 수로 나타낸다. 학대피해 노인 수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인구 10만 명당 48.1명에서 73.7명으로 1.5배가량 늘어났다. 노인학대 발생률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높고 남녀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 2020년 남자노인의 학대 발생률은 10만 명당 42.1명에 그치지만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97.8명에 이른다. 여자노인 학대 발생률이 남자노인의 2.3배인데, 이는 2007년의 남녀 간 격차 1.4배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통계표

성별 노인학대 발생률, 2007-2020

연도	전체	남자	여자
2007	48.1	38.0	54.8
2008	47.2	36.8	54.3
2009	51.5	38.3	60.5
2010	55.7	43.7	63.9
2011	60.4	46.0	70.3
2012	57.3	42.9	67.3
2013	56.3	38.4	69.0
2014	54.2	38.6	65.3
2015	56.4	38.3	69.5
2016	61.2	40.1	76.6
2017	62.8	37.1	81.9
2018	67.8	41.3	87.6
2019	65.3	36.7	87.0
2020	73.7	42.1	97.8

통계번호 FAM-21903

통계명 노인학대 발생유형별 비율

통계분류 가족

시민·정치적 권리

가정폭력

산출방법 노인학대 발생유형별 비율 = (학대유형별 발생건수 ÷ 노인학대 총발생건수) × 100.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9\\_H502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9_H5024&conn_path=I3)

수록기간 2005-2020

통계해설 노인학대는 주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형태로 발생한다. 가장 최근 자료로 보면 노인학대 발생건수 중 정서적 학대가 42.7%, 신체적 학대가 40.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성적 학대(2.4%), 자기방임(2.3%), 유기(0.5%) 등의 발생 비율은 한 자릿수로 낮다. 2005년과 2020년 사이 신체적 학대는 19.1%에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방임과 경제적 학대는 23.4%와 12.2%에서 1/3 수준으로 줄었다.

통계표 노인학대 발생유형별 비율, 2005-2020

연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2005	19.1	43.1	0.5	12.2	23.4	1.0	0.6
2006	20.9	42.4	0.4	11.3	22.2	1.7	1.2
2007	19.4	41.4	0.3	11.1	24.7	2.1	0.9
2008	22.4	40.1	0.5	11.4	21.5	3.0	1.0
2009	24.6	40.4	0.8	12.1	17.6	2.8	1.8
2010	25.7	39.0	0.8	11.3	17.6	3.9	1.8
2011	24.6	40.0	1.2	10.5	18.0	4.1	1.5
2012	23.8	38.3	1.1	9.7	18.7	7.1	1.3
2013	24.5	38.3	1.5	9.0	18.6	6.4	1.5
2014	24.7	37.6	2.3	9.0	17.0	8.0	1.4
2015	25.9	37.9	1.7	8.8	14.9	10.1	0.8
2016	31.3	40.1	1.3	7.2	11.4	7.7	1.0
2017	36.4	42.0	2.1	5.6	8.9	4.0	1.0
2018	37.3	42.9	2.8	4.7	8.8	2.9	0.7
2019	38.1	42.1	2.6	5.2	9.0	2.4	0.5
2020	40.0	42.7	2.4	4.4	7.8	2.3	0.5

주: 1) 중복학대가 포함됨.

2) 2017년까지는 65세 미만 노인학대도 포함됨.

통계번호 FAM-21904

통계명 배우자폭력 피해율

통계분류 가족

시민·정치적 권리

가정폭력

산출방법 지난 1년간 통제,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11\\_011&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11_011&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19

통계해설 여성의 배우자폭력 피해율은 2016년 34.4%에서 2019년 27.2%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남성의 배우자폭력 피해율도 33.3%에서 24.9%로 낮아졌다. 남녀의 피해율이 동시에 감소했지만 여성의 피해율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남녀 모두 배우자로부터 통제(감시) 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통제 피해율은 여성 23.9%, 남성 23.4%로 남녀가 비슷하다. 정서적 폭력 피해도 받는데, 여성의 8.1%와 남성의 5.8%가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성적 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성의 3.4%가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

통계표

성별 배우자폭력 피해율, 2016-2019

폭력유형	2016		2019	
	여성 피해율	남성 피해율	여성 피해율	남성 피해율
전체	34.4	33.3	27.2	24.9
통제	29.7	30.4	23.9	23.4
성적 폭력	2.3	0.3	3.4	0.1
신체적 폭력	3.3	1.6	2.1	0.9
정서적 폭력	10.5	7.7	8.1	5.8
경제적 폭력	2.4	0.8	1.2	0.8

주: 1) 폭력유형별 피해율은 해당 문항(통제 7개, 성적 폭력 2개, 신체적 폭력 7개, 정서적 폭력 3개, 경제적 폭력 3개) 중 하나라도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임.

2) 19세 이상 기혼자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FAM-21905

통계명 부모로부터의 욕설 경험률

통계분류 가족

시민·정치적 권리

가정폭력

산출방법 부모(보호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1\\_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1_2&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부모(보호자)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욕설을 들은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2013년 34.1%에서 이듬해인 2014년에 30.3%로 감소한 후 최근까지 30% 안팎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비율은 남녀 학생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다.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욕설을 더 듣는다.

**통계표 성·학교급·학업성적별 부모로부터의 욕설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업성적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2013	34.1	34.6	33.6	27.0	39.0	-	35.9	33.1	32.0	31.9	39.5
2014	30.3	31.2	29.7	21.4	35.4	-	32.9	32.1	28.7	28.7	34.9
2015	29.8	30.2	29.2	21.6	33.6	-	32.3	31.8	26.5	28.8	35.7
2016	30.4	29.9	30.9	21.2	35.5	32.9	34.2	27.7	28.1	28.4	36.7
2017	31.9	30.4	33.1	26.6	37.4	30.9	30.7	31.8	30.5	29.6	37.3
2018	31.3	28.9	33.9	26.4	36.5	30.8	32.0	26.2	30.5	30.0	34.7
2019	30.2	28.7	31.7	27.5	34.0	29.2	30.0	25.5	28.9	28.9	34.3
2020	28.7	28.7	29.0	27.9	33.9	25.1	25.1	24.7	30.5	26.4	31.4
2021	30.6	29.9	31.1	31.6	34.1	25.9	26.6	23.2	29.8	29.1	34.1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FAM-21906

통계명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률

통계분류 가족

시민·정치적 권리

가정폭력

산출방법 부모(보호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1\\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1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부모(보호자)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2013년 30.6%에서 2014년 25.7%로 낮아진 후 20% 초중반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2020년에 22.9%로 낮아지기도 했지만 2021년에 24.0%로 다시 높아졌다. 성별로는 남녀 학생 간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체벌 경험률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높다. 즉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높고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이 높다.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학교급·학업성적별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업성적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2013	30.6	31.3	29.9	36.4	35.6	-	21.0	21.1	31.0	30.6	30.1
2014	25.7	27.4	23.8	29.8	30.7	-	17.7	17.1	27.2	25.2	25.0
2015	24.7	25.5	23.9	30.5	28.4	-	17.0	17.8	25.4	24.2	25.0
2016	24.1	24.1	24.1	29.6	29.1	15.5	15.7	14.8	25.5	23.7	22.8
2017	26.2	26.5	26.3	35.6	30.3	16.1	16.0	16.6	28.7	25.4	24.7
2018	26.0	25.0	27.3	32.8	29.7	17.7	17.7	17.8	26.4	26.6	24.3
2019	25.0	24.3	25.5	32.9	26.6	16.4	16.7	15.3	26.2	24.2	24.1
2020	22.9	24.6	21.1	32.3	23.4	13.3	13.5	13.1	25.2	22.0	21.4
2021	24.0	25.1	22.9	34.9	24.1	13.0	12.9	13.8	26.1	23.2	21.9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FAM-21907

통계명 아동 10만 명당 아동학대 검거건수

통계분류 가족

시민·정치적 권리

가정폭력

산출방법 아동 10만 명당 아동학대 검거건수 = (아동학대 검거건수 ÷ 17세 이하 인구) × 100,000.  
17세 이하 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건/10만 명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5-2020

통계해설 경찰의 아동학대사건 검거건수는 2015년 1719건에서 2020년 5551건으로 지난 5년 사이 3.2배 늘어났다. 인구 대비로 보면 같은 기간 17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19.3명에서 72.1명으로 3.7배 증가하였다. 아동인구에 대비해서 보면 검거건수가 더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통계표** 아동 10만 명당 아동학대 검거건수, 2015-2020

연도	총검거건수	아동 10만 명당 검거건수
2015	1,719	19.3
2016	2,992	34.5
2017	3,320	39.3
2018	3,696	45.2
2019	4,645	58.8
2020	5,551	72.1

통계번호 FAM-21908

통계명 아동학대 발생률

통계분류 가족

시민·정치적 권리

가정폭력

산출방법 아동학대 발생률 = (아동학대 발생건수 ÷ 0-17세 인구) × 100,000.  
0-17세 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건/10만 명

자료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9&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9&conn_path=I3)

수록기간 2003-2020

통계해설 아동학대 발생률은 0-17세 아동인구 10만 명당 아동학대 발생건수로 나타낸다. 아동학대 발생은 2003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25.6건에서 2020년 402.5건으로 16배가량 늘어났다.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도 약 7배 증가하였다. 아동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당하는 중복학대의 형태로 대부분 이루어진다. 중복학대는 전체 아동학대 발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중복학대를 제외하면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의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통계표**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률, 2003-2020

연도	전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2003	25.6	3.0	1.8	1.2	8.4	1.0	10.1
2004	34.6	3.2	3.1	1.6	12.1	1.1	13.4
2005	41.9	3.8	4.6	1.9	14.8	1.3	15.5
2006	47.9	4.0	5.6	2.3	18.7	0.7	16.6
2007	52.3	4.4	5.5	2.5	19.7	0.6	19.5
2008	53.0	4.0	6.5	2.7	21.3	0.5	18.0
2009	55.1	3.3	7.5	2.7	19.6	0.3	21.7
2010	56.2	3.5	7.7	2.6	18.6	0.1	23.8
2011	61.6	4.7	9.2	2.3	18.1	0.5	26.7
2012	66.7	4.8	9.7	2.9	17.8	-	31.4
2013	72.5	8.0	11.7	2.6	19.0	-	31.2
2014	109.9	15.9	17.3	3.4	20.5	-	52.8
2015	131.7	21.2	23.0	4.8	22.6	-	60.1
2016	215.4	31.3	41.3	5.7	33.7	-	103.4
2017	265.0	38.9	56.0	8.2	33.0	-	128.9
2018	301.4	42.1	71.8	11.1	31.9	-	144.5
2019	380.9	53.0	96.6	11.2	36.6	-	183.5
2020	402.5	49.6	113.7	9.1	35.6	-	194.5

주: 1) 2012년부터 유기를 방임에 포함시킴.

2) 중복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 2가지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당한 경우임.

통계번호 FAM-21909

통계명 아동학대 사망자 수

통계분류 가족

시민·정치적 권리

가정폭력

산출방법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에서 사망한 아동의 수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3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32&conn_path=I3)

수록기간 2014-2020

통계해설 17세 이하 아동 중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2014년 14명에서 2020년 43명으로 늘어났다. 사망 아동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많다. 사망 아동의 60%가량은 2세 미만의 영아다. 특히 1세 미만 사망아가 40% 안팎에 이른다.

**통계표** 아동학대 사망자 수와 사망자의 성 및 연령별 비율, 2014-2020

연도	사망자 수 (명)	사망자 비율(%)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세 미만	1세	2-6세	7세 이상
2014	14	-	-	-	-	-	-
2015	16	-	-	-	-	-	-
2016	36	-	-	-	-	-	-
2017	38	-	-	-	-	-	-
2018	28	53.6	46.4	35.7	28.6	17.9	17.9
2019	42	59.5	40.5	45.2	11.9	31.0	11.9
2020	43	72.1	27.9	46.5	16.3	14.0	23.3

주: 1) 학대로 인해 사망한 17세 이하 아동의 수임.



통계번호 FAM-21910

통계명 인구 10만 명당 가정폭력 검거건수

통계분류 가족

시민·정치적 권리

가정폭력

산출방법 인구 10만 명당 가정폭력 검거건수 = (가정폭력 검거건수 ÷ 총인구) × 100,000.  
총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건/10만 명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4-2020

통계해설 가정폭력범죄 검거건수는 2019년에 5만 건을 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4만 건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보면 2019년에 97.1건까지 오른 것을 제외하면 90건을 넘지는 않는다. 가정폭력범으로 검거된 사람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여자 비율이 2015년 18.6%에서 2020년 22.8%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통계표

인구 10만 명당 가정폭력 검거건수와 성별 검거인원 비율, 2014-2020

연도	총검거건수(건)	인구 10만 명당 검거건수(건)	성별 검거인원 비율(%)	
			남자	여자
2014	17,557	34.6	-	-
2015	40,828	80.0	81.4	18.6
2016	45,619	89.1	79.8	20.2
2017	38,583	75.1	79.5	20.5
2018	41,905	81.2	79.5	20.5
2019	50,277	97.1	78.1	21.9
2020	44,459	85.8	77.2	22.8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체	통계번호	통계명	취약집단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LAB-12001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노인			
			LAB-12002	고령자 고용률	노인			
			LAB-12003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률	노인			
			LAB-12004	고령자 기준고용률 적용대상 사업장 고령근로자 비율	노인			
			LAB-12005	고령자 실업률	노인			
			LAB-12006	사회적 약자 우대조치 찬성률	중복			
			LAB-12007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LAB-12008	여성 고용률	여성			
			LAB-12009	여성 관리·전문직 비율	여성			
			LAB-12010	여성 실업률	여성			
			LAB-12011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LAB-12012	이민자·귀화자·외국인 경제활동참가율	외국인			
			LAB-12013	이민자·귀화자·외국인 고용률	외국인			
			LAB-12014	이민자·귀화자·외국인 실업률	외국인			
			LAB-12015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장애인			
			LAB-12016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LAB-12017	장애인 실업률	장애인			
			LAB-12018	장애인 취업률	장애인			
			LAB-12019	직장 내 여성 채용 차별에 대한 인식	여성			
			LAB-12020	취업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노동조건	노동조건	노동조건	LAB-12101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임금격차	여성
						LAB-12102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LAB-12103	임금5분위배율	
						LAB-12104	장애인근로자 임금 비율	장애인
						LAB-12105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임금격차	
						LAB-12106	직장 내 여성 교육기회 차별에 대한 인식	여성
						LAB-12107	직장 내 여성 구조조정 차별에 대한 인식	여성
						LAB-12108	직장 내 여성 급여 차별에 대한 인식	여성
						LAB-12109	직장 내 여성 승진 차별에 대한 인식	여성
						LAB-12110	직장 내 여성 업무배치 차별에 대한 인식	여성
						LAB-12111	직장 내 여성차별에 대한 인식	여성
						LAB-12112	직장 내 차별 경험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일할 권리	일할 권리	LAB-32201	경제활동참가율	
	LAB-32202	고용률						
	LAB-32203	노동권 존중도						
	LAB-32204	모성 고용률				여성		
	LAB-32205	모성 취업시간				여성		
	LAB-32206	실업률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체	통계번호	통계명	취약집단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일할 권리	LAB-32207	직장어린이집 수		
			LAB-32208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LAB-32209	청년실업률		
			LAB-32210	취업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정도	여성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LAB-32301	고용 불안감	
				LAB-32302	고용보험 가입률	
				LAB-32303	귀화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외국인
				LAB-32304	귀화 및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	외국인
				LAB-32305	근로계약서 서면작성률	
				LAB-32306	근로여건 만족도	
				LAB-32307	근로환경 만족도	
				LAB-32308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와 출연액	
				LAB-32309	산업재해 사망률	
				LAB-32310	산업재해율	
				LAB-32311	아플 때 일한 경험률	
				LAB-32312	업무수행 중 폭력피해 경험률	
				LAB-32313	월간 근로시간	
				LAB-32314	월평균 임금	
				LAB-32315	육아휴직자 수	
				LAB-32316	일·가정 균형에 대한 인식	
	LAB-32317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LAB-32318	임금근로자 상여금 및 시간외수당 수혜율				
	LAB-32319	임금근로자 유급휴가 수혜율				
	LAB-32320	임금근로자 퇴직급여 수혜율				
	LAB-32321	작업위험요인 노출도				
	LAB-32322	장시간근로자 비율				
	LAB-32323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사업장 취업 비율	장애인			
	LAB-32324	저임금근로자 비율				
	LAB-32325	주관적 업무위험도				
	LAB-32326	청소년 부당노동 피해율	아동청소년			
	LAB-32327	청소년 부당노동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LAB-32328	최저임금 비율				
	LAB-32329	최저임금 수준 및 인상률				
	LAB-32330	출산전후휴가자 수				
	노사관계 권리	LAB-32401	공무원노동조합 조직률			
		LAB-32402	교원노동조합 조직률			
		LAB-32403	노동조합 조직률			
		LAB-32404	임금결정률			

통계번호 LAB-12001

통계명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인구와 실업인구를 합한 인구임.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은 6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인구+실업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큰 변화 없이 30%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2021년에는 36.3%로 높아졌다. 성별로 보면 남성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기준 46.2%인데 같은 해 여성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8.6%에 그친다.

통계표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2000-2021

연도	전체	남자	여자	연도	전체	남자	여자
2000	29.6	40.6	22.7	2011	29.7	40.9	22.0
2001	29.9	41.2	22.8	2012	30.7	41.7	23.0
2002	30.6	42.7	22.9	2013	31.2	42.4	23.2
2003	28.6	39.9	21.3	2014	31.8	42.9	23.8
2004	30.0	41.8	22.2	2015	31.1	42.0	23.2
2005	30.0	41.5	22.4	2016	31.3	42.0	23.5
2006	30.5	42.2	22.7	2017	31.5	41.5	24.1
2007	31.3	43.1	23.4	2018	32.2	42.3	24.7
2008	30.8	42.2	23.0	2019	34.0	43.7	26.7
2009	30.3	41.9	22.4	2020	35.3	44.9	28.0
2010	29.7	40.9	21.9	2021	36.3	46.2	28.6

통계번호 LAB-12002

통계명 고령자 고용률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text{고령자 고용률} = (\text{65세 이상 취업인구} \div \text{65세 이상 인구}) \times 100.$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고령자 고용률은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30% 내외에서 거의 변화하지 않다가 2018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34.9%로 올랐다. 고령자 고용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2021년 기준 남성 고령자의 고용률은 44.6%이지만 같은 해 여성 고령자의 고용률은 27.4%로 남성보다 훨씬 낮다.

통계표 고령자 고용률, 2000-2021

연도	전체	남자	여자	연도	전체	남자	여자
2000	29.4	40.2	22.6	2011	29.1	39.9	21.5
2001	29.8	40.9	22.7	2012	30.1	40.7	22.5
2002	30.4	42.4	22.8	2013	30.7	41.7	22.9
2003	28.5	39.7	21.3	2014	31.1	41.9	23.4
2004	29.8	41.4	22.1	2015	30.4	40.9	22.7
2005	29.7	41.0	22.3	2016	30.6	40.9	23.0
2006	30.3	41.7	22.6	2017	30.6	40.2	23.5
2007	31.1	42.7	23.4	2018	31.3	41.0	24.0
2008	30.6	41.7	23.0	2019	32.9	42.4	25.8
2009	30.0	41.2	22.3	2020	34.1	43.4	26.9
2010	29.0	39.9	21.4	2021	34.9	44.6	27.4

통계번호 LAB-12003

통계명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률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text{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률} = (\text{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장 수} \div \text{고령자 기준고용률 적용대상 사업장 수}) \times 100.$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제조업 사업장 2%, 운수업 사업장과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장 6%, 그 외 사업장 3%임.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31\\_N0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31_N003&conn_path=I3)

수록기간 2006-2020

통계해설 고령자 기준고용률 적용대상 사업장 중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2006년에 50.7%에 달하였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에 30%대로 낮아졌고 2016년에는 20%대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서 2020년에는 19.8%로 낮아졌다. 이는 기준고용률을 달성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통계표**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률, 2006-2020

연도	기준고용률 적용대상 사업장수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수	기준고용률 미달률
2006	1,950	988	50.7
2007	1,956	952	48.7
2008	2,318	1,057	45.6
2009	2,469	1,080	43.7
2010	2,584	1,063	41.1
2011	2,599	1,085	41.7
2012	2,846	1,045	36.7
2013	2,278	827	36.3
2014	2,876	980	34.1
2015	2,805	915	32.6
2016	3,133	841	26.8
2017	3,242	869	26.8
2018	3,468	866	25.0
2019	3,578	794	22.2
2020	3,556	704	19.8

주: 1) 고령자는 55세 이상 인구임.  
2) 고용보험 DB에 수록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12004

통계명 고령자 기준고용률 적용대상 사업장 고령근로자 비율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text{고령근로자 비율} = (\text{55세 이상 상시근로자 수} \div \text{전체 상시근로자 수}) \times 100.$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31\\_N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31_N001&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20

통계해설 고령자 기준고용률 적용대상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10.0%에서 매년 늘어나 2020년에는 17.5%로 높아졌다. 이 기간 동안 300-499인 사업장에서는 15.9%에서 19.7%로, 500-999인 사업장에서는 15.0%에서 21.6%로,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7.4%에서 15.6%로 각각 증가하였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고령자 고용이 더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통계표** 고령자 기준고용률 적용대상 사업장 고령근로자 비율, 2012-2020

연도	전체	사업장규모별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2012	10.0	15.9	15.0	7.4
2013	10.1	15.8	16.5	7.6
2014	10.7	16.1	16.3	8.1
2015	11.5	16.7	17.0	9.1
2016	12.9	18.5	18.2	9.8
2017	13.2	17.8	19.1	10.1
2018	14.9	19.1	20.9	11.7
2019	15.4	18.4	21.6	12.6
2020	17.5	19.7	21.6	15.6

주: 1) 고용보험 DB에 수록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12005

통계명 고령자 실업률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고령자 실업률 = (65세 이상 실업인구 ÷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인구와 실업인구를 합한 인구임.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고령자 실업률은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취업인구+실업인구) 중 실업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65세 이상 인구의 실업률은 2010년에 2%대에 들었고 2019년에는 3%대로 올랐다. 실업률 증가 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져 2021년에는 3.8%로 높아졌다. 고령자 실업률의 남녀 간 차이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2018년까지는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보다 높았지만 2019년부터는 여성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아졌다.

통계표

고령자 실업률, 2000-2021

연도	전체	남자	여자	연도	전체	남자	여자
2000	0.6	0.9	0.3	2011	2.2	2.4	1.9
2001	0.4	0.7	0.2	2012	2.1	2.3	1.8
2002	0.5	0.7	0.3	2013	1.5	1.6	1.3
2003	0.4	0.7	0.2	2014	2.1	2.3	1.8
2004	0.7	1.0	0.3	2015	2.4	2.6	2.1
2005	0.7	1.0	0.4	2016	2.3	2.5	2.0
2006	0.7	1.0	0.3	2017	2.8	3.1	2.4
2007	0.7	0.9	0.3	2018	2.9	3.1	2.7
2008	0.8	1.1	0.3	2019	3.2	3.0	3.5
2009	1.2	1.5	0.7	2020	3.6	3.4	3.9
2010	2.4	2.6	2.1	2021	3.8	3.5	4.3

통계번호 LAB-12006

통계명 사회적 약자 우대조치 찬성률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대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조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0년 64.3%로 낮아진 후 2021년과 2022년에 70.4%와 81.3%로 크게 높아졌다. 이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다소 더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졸 이상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사회적 약자 우대조치 찬성률,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74.2	71.2	76.9	68.2	70.4	76.4	77.1	76.7	74.8	74.6	72.7	80.0
2020	64.3	60.3	68.3	58.5	58.7	66.8	68.0	67.0	64.5	63.7	64.6	67.2
2021	70.4	69.2	71.6	70.8	66.1	71.2	70.9	71.7	72.9	71.3	68.3	73.2
2022	81.3	80.5	82.1	79.7	80.9	81.5	81.6	82.1	82.8	80.6	81.0	86.1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12007

통계명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경제활동참가율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인구와 실업인구를 합한 인구임.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인구+실업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까지 50% 안팎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14년부터 조금씩 늘어나 2021년에는 53.3%로 높아졌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 간 격차가 크다. 최근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보다 20%p가량 높다.

통계표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000-2021

연도	전체	여자	남자	연도	전체	여자	남자
2000	61.2	48.8	74.4	2011	61.3	49.8	73.4
2001	61.5	49.4	74.4	2012	61.6	50.1	73.5
2002	62.1	49.9	75.1	2013	61.7	50.3	73.5
2003	61.6	49.1	74.9	2014	62.7	51.5	74.4
2004	62.3	50.1	75.2	2015	62.8	51.9	74.1
2005	62.2	50.3	74.8	2016	62.9	52.2	74.0
2006	62.2	50.5	74.5	2017	63.2	52.7	74.1
2007	62.2	50.5	74.4	2018	63.1	52.9	73.7
2008	61.7	50.2	73.8	2019	63.3	53.5	73.5
2009	61.0	49.3	73.2	2020	62.5	52.8	72.6
2010	61.1	49.6	73.2	2021	62.8	53.3	72.6

통계번호 LAB-12008

통계명 여성 고용률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고용률 = (15세 이상 취업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여성 고용률은 2000년 47.0%에서 2015년 50.1%로 올랐고 이후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51.2%로 높아졌다. 고용률은 남녀 간 격차가 크다. 남성의 고용률은 지난 20여 년간 7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 고용률보다 20%p가량 높은 것이다.

통계표 **성별 고용률, 2000-2021**

연도	전체	여자	남자	연도	전체	여자	남자
2000	58.5	47.0	70.8	2011	59.3	48.3	70.7
2001	59.0	47.7	71.1	2012	59.6	48.6	71.1
2002	60.1	48.5	72.3	2013	59.8	48.9	71.1
2003	59.4	47.4	72.1	2014	60.5	49.7	71.7
2004	60.0	48.5	72.3	2015	60.5	50.1	71.4
2005	59.9	48.6	71.9	2016	60.6	50.3	71.2
2006	60.0	49.0	71.6	2017	60.8	50.8	71.2
2007	60.1	49.1	71.7	2018	60.7	50.9	70.8
2008	59.8	48.9	71.2	2019	60.9	51.6	70.7
2009	58.8	47.8	70.2	2020	60.1	50.7	69.8
2010	58.9	47.9	70.3	2021	60.5	51.2	70.0

통계번호 LAB-12009

통계명 여성 관리·전문직 비율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text{여성 관리·전문직 비율} = (\text{여성 관리·전문직 취업자 수} \div \text{전체 관리·전문직 취업자 수}) \times 100.$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E27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E27S&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관리·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2013년 43.2%에서 2021년 46.8%로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전문직 종사자의 여성 비율은 45.9%에서 49.0%로 증가하였다. 관리직 종사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1.5%에서 16.3%로 높아졌다. 관리직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직 10명 중 8명 이상은 여전히 남성이다.

**통계표** 여성 관리·전문직 비율, 2013-2021

연도	관리자전문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013	43.2	11.5	45.9
2014	43.9	11.1	46.5
2015	45.3	10.3	47.7
2016	45.4	9.9	47.6
2017	46.4	12.5	48.4
2018	46.2	14.6	48.3
2019	46.6	15.4	48.9
2020	45.7	15.7	47.9
2021	46.8	16.3	49.0

통계번호 LAB-12010

통계명 여성 실업률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실업률 = (15세 이상 실업인구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인구와 실업인구를 합한 인구임.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1S&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실업률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취업인구+실업인구) 중 실업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여성 실업률은 2000년 이후 3% 안팎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2020년에 처음으로 4.0%까지 올랐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다시 3%대로 떨어졌다. 여성 실업률은 2019년까지 남성 실업률보다 다소간 낮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성 실업률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통계표** 성별 실업률, 2000-2021

연도	전체	여자	남자	연도	전체	여자	남자
2000	4.4	3.6	5.0	2011	3.4	3.1	3.6
2001	4.0	3.3	4.5	2012	3.2	3.0	3.4
2002	3.3	2.7	3.6	2013	3.1	2.8	3.3
2003	3.6	3.3	3.8	2014	3.5	3.5	3.5
2004	3.7	3.4	3.9	2015	3.6	3.5	3.6
2005	3.7	3.4	4.0	2016	3.7	3.6	3.8
2006	3.5	3.0	3.9	2017	3.7	3.5	3.8
2007	3.2	2.7	3.7	2018	3.8	3.7	3.9
2008	3.2	2.6	3.6	2019	3.8	3.6	3.9
2009	3.6	3.0	4.1	2020	4.0	4.0	3.9
2010	3.7	3.3	4.0	2021	3.7	3.8	3.6

통계번호 LAB-12011

통계명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근로자 수 ÷ 의무고용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 100.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30\\_N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30_N001&conn_path=I3)

수록기간 2008-2021

통계해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근로자의 비율은 2008년 1.73%에서 2021년 3.10%로 매년 늘어났다. 이 비율은 정부부문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모두 늘어났는데, 특히 정부부문의 비공무원(근로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통계표**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2008-2021

연도	전체	정부부문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무원	근로자		
2008	1.73	-	-	2.05	1.70
2009	1.87	-	-	2.11	1.84
2010	2.24	2.40	2.36	2.56	2.19
2011	2.28	2.52	2.35	2.72	2.22
2012	2.35	2.57	2.75	2.80	2.27
2013	2.48	2.63	3.51	2.81	2.39
2014	2.54	2.65	3.75	2.91	2.45
2015	2.62	2.80	4.05	2.93	2.51
2016	2.66	2.81	4.19	2.96	2.56
2017	2.76	2.88	4.61	3.02	2.64
2018	2.78	2.78	4.32	3.16	2.67
2019	2.92	2.86	5.06	3.33	2.79
2020	3.08	3.00	5.54	3.52	2.91
2021	3.10	2.97	5.83	3.78	2.89

주: 1) 2010년부터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함.

통계번호 LAB-12012

통계명 이민자·귀화자·외국인 경제활동참가율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경제활동참가율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인구와 실업인구를 합한 인구임.

단위 %

자료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FA001F&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FA001F&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21

통계해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인구+실업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70.8%에서 2021년 68.3%로 감소 추세에 있다. 같은 기간 남성은 82.7%에서 81.3%로 낮아졌고 여성은 56.0%에서 52.8%로 떨어졌다. 여성의 감소 폭이 남성보다 약간 더 크다. 귀화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69.4%에서 2020년 64.0%로 내렸다가 2021년에 67.4%로 다시 올랐다. 2018년과 2021년 사이 남성은 81.5%에서 80.9%로, 여성은 66.8%에서 64.5%로 낮아졌다. 남성보다 여성의 감소 폭이 조금 더 크다.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75.3%에서 2021년 68.3%로 낮아졌다. 이 기간에 남성은 86.6%에서 81.3%로, 여성은 60.2%에서 52.1%로 떨어졌다. 여성의 하락 폭이 남성보다 더 크다.

통계표

이민자·귀화자·외국인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012-2021

연도	이민자			귀화자			외국인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2	-	-	-	-	-	-	75.3	86.6	60.2
2013	-	-	-	-	-	-	72.1	84.8	55.5
2014	-	-	-	-	-	-	73.0	85.4	56.3
2015	-	-	-	-	-	-	73.6	86.3	56.4
2016	-	-	-	-	-	-	72.5	85.2	55.6
2017	70.8	82.7	56.0	67.6	78.0	65.4	70.9	82.8	55.2
2018	71.4	83.1	56.7	69.4	81.5	66.8	71.4	83.1	55.9
2019	69.1	81.2	53.9	68.9	81.7	65.8	69.1	81.1	53.1
2020	68.7	81.4	53.2	64.0	79.3	60.7	68.9	81.4	52.7
2021	68.3	81.3	52.8	67.4	80.9	64.5	68.3	81.3	52.1



통계번호 LAB-12013

통계명 이민자·귀화자·외국인 고용률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고용률 = (15세 이상 취업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FA001F&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FA001F&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21

통계해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민자의 고용률은 2017년 67.9%에서 2021년 64.2%로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 같은 기간 남성은 80.5%에서 77.4%로 낮아졌고 여성은 52.5%에서 48.5%로 떨어졌다. 귀화자의 고용률은 2018년 66.2%에서 2020년 59.1%로 내렸다가 2021년에 63.6%로 다시 올랐다. 2018년과 2021년 사이 남성은 77.2%에서 76.6%로, 여성은 63.6%에서 60.3%로 낮아졌다. 여성의 감소 폭이 남성보다 더 크다. 외국인의 고용률은 2012년 72.4%에서 2021년 64.2%로 낮아졌다. 이 기간에 남성은 84.0%에서 77.4%로, 여성은 56.9%에서 47.7%로 떨어졌다. 남성보다 여성의 하락 폭이 더 크다.

통계표

이민자·귀화자·외국인 성별 고용률, 2012-2021

연도	이민자			귀화자			외국인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2	-	-	-	-	-	-	72.4	84.0	56.9
2013	-	-	-	-	-	-	69.2	82.1	52.3
2014	-	-	-	-	-	-	69.6	82.2	52.9
2015	-	-	-	-	-	-	70.3	83.1	52.9
2016	-	-	-	-	-	-	69.6	82.7	52.2
2017	67.9	80.5	52.5	64.1	75.8	61.7	68.1	80.6	51.7
2018	67.9	79.5	53.5	66.2	77.2	63.6	68.0	79.5	52.7
2019	65.2	77.1	50.4	64.8	77.4	61.8	65.3	77.1	49.6
2020	63.5	76.5	47.7	59.1	72.4	56.1	63.7	76.5	47.1
2021	64.2	77.4	48.5	63.6	76.6	60.3	64.2	77.4	47.7

통계번호 LAB-12014

통계명 이민자·귀화자·외국인 실업률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실업률 = (15세 이상 실업인구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인구와 실업인구를 합한 인구임.

단위 %

자료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FA001F&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FA001F&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21

통계해설 실업률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취업인구+실업인구) 중 실업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민자의 실업률은 2017년 4.0%에서 2020년 7.6%까지 올랐다가 이듬해인 2021년에 6.0%로 내렸다. 2017년과 2021년 사이 남녀 실업률이 모두 높아졌다. 하지만 남성 실업률 4.7%에 비해 여성 실업률은 8.3%에 이른다. 귀화자의 실업률은 2018년 4.7%에서 2020년 7.7%로 올랐다가 2021년에 6.0%로 떨어졌다. 2021년 기준 남성 실업률은 5.3%, 여성 실업률은 6.2%로 여성이 약간 더 높다. 외국인의 실업률은 2012년 3.8%에서 2021년 6.0%로 높아졌다. 이 기간에 남성은 2.9%에서 4.7%로, 여성은 5.4%에서 8.4%로 높아졌다. 여성 실업률이 남성보다 여전히 높다.

통계표 이민자·귀화자·외국인 성별 실업률, 2012-2021

연도	이민자			귀화자			외국인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2	-	-	-	-	-	-	3.8	2.9	5.4
2013	-	-	-	-	-	-	4.0	3.2	5.7
2014	-	-	-	-	-	-	4.6	3.8	6.1
2015	-	-	-	-	-	-	4.5	3.7	6.2
2016	-	-	-	-	-	-	3.9	2.9	6.0
2017	4.0	2.7	6.4	5.1	2.8	5.6	4.0	2.7	6.4
2018	4.8	4.3	5.7	4.7	5.3	4.5	4.8	4.3	5.8
2019	5.5	5.0	6.5	6.0	5.3	6.2	5.5	5.0	6.6
2020	7.6	6.1	10.4	7.7	8.7	7.4	7.6	6.1	10.6
2021	6.0	4.7	8.3	6.0	5.3	6.2	6.0	4.7	8.4

통계번호 LAB-12015

통계명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경제활동참가율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인구와 실업인구를 합한 인구임.

단위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1&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2&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인구+실업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38.7%에서 2018년 37.0%로 떨어진 후 최근 까지 큰 변화가 없다. 생산가능연령, 즉 15-64세 인구로 한정하면 50% 초반대로 높아진다. 성별로는 남녀 간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크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남성이 47.0%인 데 비해 여성은 24.1%에 불과하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보다 두 배 안팎으로 높다.

통계표

장애인 성 및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5-64세
2013	38.3	49.9	22.1	33.1	60.1	63.2	49.4	24.1	50.5
2014	39.6	52.5	21.9	34.1	67.6	56.9	57.1	24.8	54.4
2015	37.7	48.7	22.6	31.7	63.5	58.9	54.4	23.2	52.6
2016	38.5	50.3	22.4	36.6	60.9	62.0	55.2	24.5	53.8
2017	38.7	49.5	23.9	31.8	56.4	59.3	55.1	23.9	52.2
2018	37.0	47.1	23.1	33.9	57.7	60.1	56.1	24.5	52.5
2019	37.3	48.5	21.9	36.0	58.6	61.3	57.0	25.2	53.6
2020	37.0	46.5	24.1	32.6	60.1	60.5	52.4	27.1	51.2
2021	37.3	47.0	24.1	39.6	62.7	59.2	53.5	27.4	52.9

통계번호 LAB-12016

통계명 장애인 고용률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고용률 = (15세 이상 취업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단위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1&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2&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36.5%에서 2018년 34.5%로 떨어졌고 이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15-64세의 생산가능연령으로 한정하여 계산한 고용률은 50% 안팎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녀의 고용률 차이가 크다. 2021년 자료로 보면 남성이 43.8%이고 여성은 남성의 절반 수준인 22.2%에 그친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50% 이상인 데 비해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각각 36.2%와 25.5%에 불과하다.

**통계표** 장애인 성 및 연령별 고용률,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5-64세
2013	36.0	46.9	20.9	28.6	56.6	59.2	46.7	23.0	47.4
2014	37.0	49.4	19.8	30.5	61.4	53.4	54.6	22.9	50.6
2015	34.8	44.7	21.0	26.1	56.4	54.9	50.1	21.8	48.2
2016	36.1	47.1	20.8	30.5	55.9	58.8	52.9	22.7	50.2
2017	36.5	46.8	22.4	28.7	52.7	56.5	52.6	25.2	49.2
2018	34.5	44.1	21.4	29.7	53.0	56.3	52.9	22.9	49.0
2019	34.9	45.6	20.3	30.6	53.4	58.4	53.2	23.9	50.0
2020	34.9	43.8	22.7	27.8	56.8	57.0	49.0	25.8	48.0
2021	34.6	43.8	22.2	36.2	56.4	55.0	50.3	25.5	49.0

통계번호 LAB-12017

통계명 장애인 실업률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실업률 = (15세 이상 실업인구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인구와 실업인구를 합한 인구임.

단위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1&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4_2013_N002&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실업률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취업인구+실업인구) 중 실업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장애인 실업률은 6% 내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2021년에 7.1%로 약간 올랐다. 같은 해 여성 실업률은 7.6%로 남성 실업률의 6.9%보다 약간 높다. 장애인 실업률은 대체로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2021년에는 30대에서 10.1%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통계표 장애인 성 및 연령별 실업률,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5-64세
2013	5.9	6.0	5.6	13.5	5.9	6.4	5.5	4.8	6.2
2014	6.6	5.8	9.3	10.6	9.2	6.2	4.3	7.6	7.0
2015	7.9	8.1	7.1	17.5	11.2	6.7	8.0	6.0	8.4
2016	6.5	6.4	6.8	16.8	8.2	5.2	4.0	7.4	6.7
2017	5.7	5.5	6.3	9.8	6.5	4.7	4.6	6.5	5.8
2018	6.6	6.3	7.4	12.3	8.2	6.4	5.7	6.5	6.8
2019	6.3	6.0	7.2	15.1	8.9	4.8	6.5	5.2	6.8
2020	5.9	5.8	6.1	14.7	5.4	5.7	6.6	4.7	6.2
2021	7.1	6.9	7.6	8.6	10.1	7.1	5.9	7.1	7.5

통계번호 LAB-12018

통계명 장애인 취업률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장애인 취업률 = (장애인 취업자 수 ÷ 장애인 구직자 수) × 100.

단위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구인구직및취업동향」.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1\\_2013\\_N100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1_2013_N1004&conn_path=I3)

수록기간 2009-2021

통계해설 장애인 취업률은 장애인 구직자 수 대비 장애인 취업자 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09년 27.4%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 70.9%로 높아졌고 2021년에는 76.7%로 더 올랐다. 최근 연도로 보면 장애인 취업률은 20대에서 가장 높고 50대에서 가장 낮다.

통계표 연령별 장애인 취업률, 2009-2021

연도	전체	연령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9	27.4	21.8	34.6	29.9	25.9	24.0	22.8
2010	29.4	26.7	37.0	32.3	28.2	25.5	23.7
2011	32.8	33.4	40.9	35.8	31.6	27.6	25.4
2012	42.0	40.2	48.0	43.5	41.3	36.2	37.2
2013	49.2	-	-	-	-	-	-
2014	60.0	57.0	62.6	60.8	56.8	56.0	67.1
2015	51.2	60.4	56.2	50.9	47.8	45.8	50.4
2016	46.2	52.9	53.0	45.6	43.3	39.6	45.1
2017	44.9	53.5	50.4	43.9	40.6	38.8	46.9
2018	52.3	53.8	56.4	50.3	46.9	45.9	61.6
2019	57.3	61.3	63.8	57.3	53.1	51.4	58.1
2020	70.9	76.4	81.5	73.4	65.5	61.2	69.7
2021	76.7	74.7	86.8	77.5	70.3	67.7	78.8

주: 1) 2013년에는 연령별 취업자 수가 집계되지 않음.

통계번호 LAB-12019

통계명 직장 내 여성 채용 차별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사람을 뽑을 때 비슷한 조건이면 여자보다 남자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라는 데에 대해 ‘정말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004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0041&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18

통계해설 직장에서 채용 시 여자보다 남자를 더 선호한다고 생각하는 취업여성의 비율은 2014년 13.2%에서 2018년 18.8%로 늘어났다. 2018년에 한정하여 보면 이 비율은 나이가 젊을수록 높다. 20대 이하에서는 26.0%에 이르지만 50대 이상에서는 16.1%에 그친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이상 20.5%, 고졸 18.1%, 중졸 이하 14.6%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통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직장 내 여성 채용 차별에 대한 인식, 2012-2018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12	14.8	13.9	13.4	14.2	17.9	20.1	14.9	13.1
2014	13.2	13.8	14.8	11.8	12.8	13.2	12.6	13.8
2016	16.3	15.0	18.4	16.1	15.7	12.1	19.1	15.3
2018	18.8	26.0	19.9	17.1	16.1	14.6	18.1	20.5

주: 1) 19-64세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12020

통계명 취업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고용에서의 평등

산출방법 우리 사회의 취업기회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우리 사회의 취업기회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4년 39.0%에서 2017년 29.3%까지 내렸다가 이후 증가 추세로 바뀌며 2021년에는 54.1%까지 올랐다. 이 비율은 남녀 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연령별 그리고 교육수준별로도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취업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38.4	38.0	38.8	33.4	35.9	38.0	40.7	47.6	-	43.9	41.8	39.1	35.7
2014	39.0	38.6	39.4	37.9	34.2	40.4	41.3	41.9	-	42.2	37.1	38.8	39.0
2015	35.4	35.4	35.5	35.6	31.9	31.7	39.2	41.3	-	40.3	40.5	36.4	32.9
2016	32.1	32.0	32.1	28.9	28.7	32.9	35.7	34.0	-	36.4	32.2	30.8	33.0
2017	29.3	29.8	28.9	25.6	28.3	31.5	30.8	29.9	-	32.2	32.1	29.1	29.0
2018	34.4	35.0	33.9	32.1	34.4	33.3	36.6	36.0	-	34.6	35.4	34.5	34.3
2019	39.4	39.6	39.1	39.4	39.7	38.7	40.7	38.2	-	39.7	32.7	39.4	40.0
2020	47.6	47.0	48.1	48.2	45.8	47.2	44.2	-	50.8	50.9	51.7	45.7	48.0
2021	54.1	53.5	54.8	50.8	52.4	56.7	52.6	-	56.4	51.4	49.4	53.1	56.0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12101

통계명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임금격차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노동조건의 평등

산출방법  $\text{임금격차} = (\text{여성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 \div \text{남성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 \times 100.$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2&conn_path=I3)

수록기간 2006-2021

통계해설 남성근로자 임금 대비 여성근로자 임금 비율은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수준을 보여 준다. 남성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006년 1만 3064원에서 2021년 2만 2632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여성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7915원에서 1만 5802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남성근로자 임금 대비 여성근로자 임금 비율은 60.6%에서 69.8%로 높아졌다.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줄고 있는 동시에 남녀 간 임금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표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 임금격차, 2006-2021

연도	시간당 임금(원)		임금격차(%)
	남성근로자	여성근로자	
2006	13,064	7,915	60.6
2007	14,232	8,664	60.9
2008	15,152	9,217	60.8
2009	14,503	8,856	61.1
2010	15,095	9,300	61.6
2011	16,050	10,082	62.8
2012	17,317	11,228	64.8
2013	18,658	12,035	64.5
2014	19,505	12,500	64.1
2015	18,681	11,915	63.8
2016	19,476	12,573	64.6
2017	20,183	13,292	65.9
2018	22,515	15,265	67.8
2019	23,566	16,358	69.4
2020	22,086	15,372	69.6
2021	22,632	15,802	69.8

주: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함.

통계번호 LAB-12102

통계명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노동조건의 평등

산출방법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 (비정규직근로자 수 ÷ 전체 임금근로자 수)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06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06S&conn_path=I3)

수록기간 2003-2021

통계해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은 2004년 37.0%에서 감소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3% 수준이 이어졌다. 하지만 2019년부터 증가해 2021년에는 38.4%까지 높아졌다.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47.4%인 데 비해 남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31.0%에 그친다. 비정규직 비율은 20대 이하에서 높다가 30대에서 가장 낮고 이후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아진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2003-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3	32.6	27.6	39.6	62.5	29.6	26.3	31.2	40.0	65.8
2004	37.0	32.2	43.7	62.1	33.4	32.2	35.9	43.4	67.9
2005	36.6	31.5	43.6	70.3	33.0	30.3	36.3	43.0	66.7
2006	35.4	30.3	42.6	71.1	31.1	29.7	34.0	42.1	69.0
2007	35.8	31.4	42.0	71.0	31.4	29.8	34.0	42.8	66.0
2008	33.8	28.8	40.7	64.9	31.0	26.8	31.6	39.8	65.7
2009	34.8	28.1	44.0	75.0	31.6	25.2	32.3	40.6	72.6
2010	33.2	26.9	41.7	69.6	31.1	23.4	29.7	39.3	69.7
2011	34.2	27.7	42.9	69.6	31.6	24.4	30.5	39.7	70.6
2012	33.2	27.0	41.4	76.1	30.5	23.1	29.1	37.5	70.4
2013	32.5	26.4	40.6	74.8	31.1	22.2	27.2	37.1	67.3
2014	32.2	26.4	39.9	70.0	32.0	21.8	26.6	34.6	68.5
2015	32.4	26.4	40.2	74.3	32.1	21.2	26.0	34.6	67.2
2016	32.8	26.3	41.1	75.2	32.2	21.1	26.1	34.2	67.9
2017	32.9	26.3	41.2	73.4	33.1	20.6	26.0	33.9	67.3
2018	33.0	26.3	41.4	74.0	32.3	21.0	25.3	34.0	67.9
2019	36.4	29.4	45.0	77.8	38.3	23.7	27.0	35.5	71.6
2020	36.3	29.4	45.0	84.1	37.7	22.8	26.7	34.3	71.0
2021	38.4	31.0	47.4	85.1	40.0	23.0	28.6	35.9	73.7

주: 1) 각년 8월 자료임.

통계번호 LAB-12103

통계명 임금5분위배율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노동조건의 평등

산출방법 임금5분위배율 = 임금 상위 20% 평균임금 ÷ 임금 하위 20% 평균임금.

단위 배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6&clasCd=7>

수록기간 2009-2021

통계해설 임금5분위배율은 1분위 평균임금 대비 5분위 평균임금으로 나타낸다. 상위 20% 평균 임금이 하위 20% 평균임금의 몇 배인지를 보여 주며, 임금근로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임금5분위배율은 2014년 5.47배에서 점차 낮아져 2021년에는 4.35배로 떨어졌다.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표

임금5분위배율, 2009-2021

연도	임금5분위배율
2009	5.40
2010	5.37
2011	5.45
2012	5.33
2013	5.43
2014	5.47
2015	5.41
2016	5.24
2017	5.06
2018	4.67
2019	4.50
2020	4.35
2021	4.35

주: 1) 1인 이상 사업체 전일제 상용근로자의 월임금총액(월정액급여 + 월초과급여 + 전년도 특별급여 월환산액) 기준임.

통계번호 LAB-12104

통계명 장애인근로자 임금 비율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노동조건외의 평등

산출방법 장애인근로자 임금 비율 = (장애인근로자 월평균 임금 ÷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 100.

단위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2\\_2016\\_N03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2_2016_N034&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20

통계해설 장애인 고용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임금 대비 장애인근로자 임금 비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임금격차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비율은 2012년 88.2%에서 2018년 94.9%로 오른 후 2020년에는 96.6%로 더 높아졌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해 둘 사이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었다.

**통계표**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근로자 임금 비율, 2012-2020

연도	월평균 임금(만 원)		장애인근로자 임금 비율(%)
	전체 근로자	장애인근로자	
2012	220.0	194.0	88.2
2013	213.1	209.3	98.2
2015	248.9	232.2	93.3
2017	257.7	238.5	92.5
2018	280.9	266.5	94.9
2019	294.0	274.5	93.4
2020	292.1	282.1	96.6

주: 1) 월임금 총액 기준임.  
2) 장애인 고용 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12105

통계명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임금격차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노동조건외 평등

산출방법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임금격차 = (비정규직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 ÷ 정규직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 × 100.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1&conn_path=I3)

수록기간 2006-2021

통계해설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임금격차는 정규직근로자 임금 대비 비정규직근로자 임금 비율로 나타낸다. 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06년 1만 2328원에서 2021년 2만 1230원으로 72.2%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6816원에서 1만 5482원으로 127.1% 상승하였다. 그 결과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근로자 임금의 55.3%에서 72.9%로 높아졌다. 둘 사이의 임금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계표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임금격차, 2006-2021

연도	시간당 임금총액(원)		임금격차(%)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2006	12,328	6,816	55.3
2007	13,336	7,537	56.5
2008	14,283	7,932	55.5
2009	13,828	7,785	56.3
2010	14,388	8,236	57.2
2011	15,289	9,372	61.3
2012	16,403	10,437	63.6
2013	17,525	11,259	64.2
2014	18,426	11,463	62.2
2015	17,480	11,452	65.5
2016	18,212	12,076	66.3
2017	18,835	13,053	69.3
2018	21,203	14,492	68.3
2019	22,193	15,472	69.7
2020	20,731	15,015	72.4
2021	21,230	15,482	72.9

주: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함.

통계번호 LAB-12106

통계명 직장 내 여성 교육기회 차별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노동조건의 평등

산출방법 “비슷한 업무를 해도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보다 교육이나 연수받을 기회가 더 많다”라는 데에 대해 ‘정말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004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0041&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18

통계해설 직장에서 남자 직원에게 교육·연수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취업여성의 비율은 2014년 11.1%에서 2018년 16.8%로 높아졌다. 2018년 자료로 보면 이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 20대 이하에서는 21.8%이지만 50대 이상에서는 13.1%에 그친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이상 18.2%, 고졸 16.8%, 중졸 이하 11.2%로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기회 차별에 대한 인식도 높다.

통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직장 내 여성 교육기회 차별에 대한 인식, 2012-2018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12	12.0	12.5	10.4	10.6	14.7	17.2	13.5	9.4
2014	11.1	10.4	12.5	9.4	12.1	13.4	13.2	9.0
2016	13.7	14.6	13.8	14.1	12.7	10.5	16.2	12.8
2018	16.8	21.8	18.8	16.6	13.1	11.2	16.8	18.2

주: 1) 19-64세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12107

통계명 직장 내 여성 구조조정 차별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노동조건의 평등

산출방법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데에 대해 ‘정말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004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0041&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18

통계해설 직장에서 구조조정 시 여자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취업여성의 비율은 2014년 11.8%에서 2018년 17.2%로 높아졌다.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이 비율은 50대 이상보다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보다 전문대졸 이상 학력층에서 더 높다.

통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직장 내 여성 구조조정 차별에 대한 인식, 2012-2018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12	14.3	16.6	12.9	11.0	17.1	18.1	15.4	12.2
2014	11.8	11.4	13.9	9.6	12.6	12.8	13.9	10.1
2016	14.6	14.9	14.2	15.4	13.9	10.7	16.4	14.3
2018	17.2	17.3	20.3	17.6	14.5	13.0	16.7	18.6

주: 1) 19-64세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12108

통계명 직장 내 여성 급여 차별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노동조건의 평등

산출방법 “직급이 같거나 비슷해도 남자 직원의 월급이나 수당이 여자 직원보다 많은 편이다”라는 데에 대해 ‘정말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004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0041&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18

통계해설 직장에서 남자 직원의 월급이 여자 직원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취업여성의 비율은 2014년 15.1%에서 2016년 17.9%, 2018년 19.0%로 높아졌다.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이 비율은 40대 이상보다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보다 고졸 이상 학력층에서 더 높다.

**통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직장 내 여성 급여 차별에 대한 인식, 2012-2018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12	19.1	23.5	17.0	16.0	20.2	20.7	21.5	16.9
2014	15.1	15.8	15.2	14.7	15.0	16.4	17.2	13.3
2016	17.9	17.3	18.6	20.3	15.6	14.2	20.8	16.8
2018	19.0	21.6	23.9	16.7	15.8	13.8	19.8	19.9

주: 1) 19-64세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12109

통계명 직장 내 여성 승진 차별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노동조건의 평등

산출방법 “경력이 같거나 비슷해도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보다 승진이 빠른 편이다”라는 데에 대해 ‘정말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004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0041&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18

통계해설 직장에서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보다 승진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취업여성의 비율은 2014년 15.1%에서 2018년 19.4%로 높아졌다. 이 비율은 대체로 40대 이상보다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보다 고졸 이상 학력층에서 더 높다.

**통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직장 내 여성 승진 차별에 대한 인식, 2012-2018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12	17.4	20.0	16.5	14.6	18.9	20.2	18.8	15.6
2014	15.1	17.9	18.1	12.8	12.6	13.6	15.1	15.7
2016	16.4	19.6	18.0	15.3	13.8	11.5	18.1	16.4
2018	19.4	22.1	23.5	17.7	16.3	13.9	20.2	20.4

주: 1) 19-64세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12110

통계명 직장 내 여성 업무배치 차별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노동조건의 평등

산출방법 “남자 직원이 하는 일과 여자 직원이 하는 업무가 고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데에 대해 ‘정말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004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0041&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18

통계해설 직장에서 남녀 직원의 업무가 관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취업여성의 비율은 2014년 18.5%에서 2018년 20.4%로 조금 올랐다.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이 비율은 3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보다 고졸 이상 학력층에서 약간 더 높다.

**통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직장 내 여성 업무배치 차별에 대한 인식, 2012-2018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2012	20.8	21.9	19.5	18.3	23.8	25.1	25.3	16.2
2014	18.5	15.7	19.1	17.1	21.6	24.1	22.7	13.9
2016	20.2	19.0	21.2	21.1	19.5	17.9	24.3	17.7
2018	20.4	20.2	23.9	19.5	18.6	17.9	20.8	20.8

주: 1) 19-64세 취업여성들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12111

통계명 직장 내 여성차별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노동조건의 평등

산출방법 직장 내에 해당 차별이 있는지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 또는 ‘정말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004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0041&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18

통계해설 직장에서 업무배치, 승진, 급여, 구조조정(해고), 교육·연수기회와 관련하여 차별을 느낀다는 취업여성의 비율은 각각 20.4%, 19.4%, 19.0%, 17.2%, 16.8%로 나타난다. 해고나 퇴사, 교육·연수기회에서 여성차별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

**통계표** 직장 내 여성차별에 대한 인식, 2012-2018

연도	업무배치 차별	승진 차별	급여 차별	구조조정 차별	교육·연수기회 차별
2012	20.8	17.4	19.1	14.3	12.0
2014	18.5	15.1	15.1	11.8	11.1
2016	20.2	16.4	17.9	14.6	13.7
2018	20.4	19.4	19.0	17.2	16.8

주: 1) 19-64세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12112

통계명 직장 내 차별 경험률

통계분류 노동

평등권

노동조건의 평등

산출방법 해당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0&tblId=DT\\_380002\\_J001\\_6TH&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0&tblId=DT_380002_J001_6TH&conn_path=I3)

수록기간 2006-2020

통계해설 취업자가 직장에서 주로 겪는 차별은 연령, 고용형태, 학벌에 의한 차별이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연령차별을 경험한 취업자는 3.3%,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취업자는 3.2%, 학벌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취업자는 2.5%이다. 성차별을 경험한 취업자와 출신지역 및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취업자도 각각 1.1%, 1.0%, 0.5%로 나타난다. 이 외에 국적, 종교, 성적 지향, 출신민족, 인종·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취업자는 0.1-0.2%에 그친다.

**통계표** 직장 내 차별 경험률, 2006-2020

연도	연령	출신민족	국적	인종·피부색	성차별	종교	장애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학벌	출신지역	고용형태
2006	3.4	-	-	-	1.4	-	0.4	-	-	-	-
2010	2.8	-	0.3	-	1.2	0.2	0.9	0.3	-	-	-
2011	3.7	-	-	-	1.9	-	-	-	-	-	-
2014	5.0	-	0.8	-	1.6	0.3	0.5	0.4	4.3	1.7	3.3
2017	4.2	-	1.2	-	2.0	0.4	2.4	1.5	5.0	1.3	5.5
2020	3.3	0.1	0.2	0.1	1.1	0.2	0.5	0.2	2.5	1.0	3.2

주: 1) 15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32201

통계명 경제활동참가율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일할 권리

산출방법  $\text{경제활동참가율} = (15\text{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div 15\text{세 이상 인구}) \times 100.$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인구와 실업인구를 합한 인구임.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인구와 실업인구를 합한 인구를 말한다.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여 년간 61-63%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2009년 61.0%에서 2019년 63.3%로 증가 추세를 보인 후 2020년과 2021년에 62.5%와 62.8%로 약간 떨어졌다. 생산가능연령인 1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4.5%에서 2021년 69.0%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74.4%에서 2021년 72.6%로 큰 변화가 없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48.8%에서 53.3%로 높아졌다. 경제활동참가율은 30-50대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50대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대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2000-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15-64세	15-29세
2000	61.2	74.4	48.8	12.0	65.0	75.2	79.2	68.8	54.3	29.6	64.5	47.3
2001	61.5	74.4	49.4	11.7	65.1	75.1	79.0	68.8	54.9	29.9	64.9	47.8
2002	62.1	75.1	49.9	10.6	65.8	75.2	79.0	69.6	55.9	30.6	65.6	48.5
2003	61.6	74.9	49.1	9.8	65.3	74.9	78.7	69.1	52.7	28.6	65.5	48.5
2004	62.3	75.2	50.1	9.8	66.5	75.0	79.2	69.6	54.3	30.0	66.3	49.4
2005	62.2	74.8	50.3	9.1	66.3	74.9	79.2	69.9	54.5	30.0	66.3	48.9
2006	62.2	74.5	50.5	7.5	65.3	75.5	79.6	70.1	55.6	30.5	66.4	47.5
2007	62.2	74.4	50.5	7.2	64.7	75.4	80.0	71.1	56.1	31.3	66.4	46.5
2008	61.7	73.8	50.2	6.5	63.8	75.3	80.1	71.9	55.0	30.8	66.2	45.2
2009	61.0	73.2	49.3	6.2	63.3	74.0	79.6	72.0	55.0	30.3	65.5	44.2
2010	61.1	73.2	49.6	7.0	63.3	74.7	79.8	72.7	55.5	29.7	65.9	43.9
2011	61.3	73.4	49.8	7.6	63.1	74.7	80.1	73.1	57.0	29.7	66.2	43.8
2012	61.6	73.5	50.1	7.7	62.8	75.1	80.0	73.8	58.0	30.7	66.5	43.5
2013	61.7	73.5	50.3	7.7	61.7	75.5	80.0	74.6	58.8	31.2	66.8	42.9
2014	62.7	74.4	51.5	8.5	63.1	76.4	80.9	75.9	60.0	31.8	68.0	44.5
2015	62.8	74.1	51.9	8.8	63.6	76.7	81.0	76.2	61.2	31.1	68.4	45.3
2016	62.9	74.0	52.2	8.8	64.5	77.1	81.0	76.1	61.6	31.3	68.7	46.3
2017	63.2	74.1	52.7	9.2	63.9	77.8	81.1	77.0	62.5	31.5	69.2	46.7
2018	63.1	73.7	52.9	8.2	64.0	78.3	81.0	77.1	61.4	32.2	69.3	47.1
2019	63.3	73.5	53.5	8.3	63.9	78.6	80.2	77.4	62.1	34.0	69.5	47.8
2020	62.5	72.6	52.8	7.2	61.2	78.0	79.1	76.6	62.5	35.3	68.6	46.4
2021	62.8	72.6	53.3	8.1	62.2	77.8	79.2	77.1	62.2	36.3	69.0	47.9

통계번호 LAB-32202

통계명 고용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일할 권리

산출방법  $\text{고용률} = (15\text{세 이상 취업인구} \div 15\text{세 이상 인구}) \times 100.$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6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4년부터는 60%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생산가능연령인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00년 61.5%에서 2021년 66.5%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남성의 고용률은 2000년에서 2021년 사이 70% 안팎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 여성의 고용률은 같은 기간 47.0%에서 51.2%로 높아졌다. 고용률은 30-50대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 인구의 고용률은 70% 중반대에 이른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15-29세 청년인구의 고용률은 30%대와 40%대에 그친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고용률, 2000-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15-64세	15-29세
2000	58.5	70.8	47.0	10.3	60.2	72.5	76.5	66.5	53.0	29.4	61.5	43.4
2001	59.0	71.1	47.7	10.0	60.3	72.7	76.6	66.9	53.8	29.8	62.2	44.0
2002	60.1	72.3	48.5	9.3	61.4	73.0	77.5	68.2	55.0	30.4	63.4	45.2
2003	59.4	72.1	47.4	8.6	60.3	72.7	76.9	67.6	51.9	28.5	63.0	44.6
2004	60.0	72.3	48.5	8.4	61.2	72.7	77.4	68.0	53.3	29.8	63.8	45.4
2005	59.9	71.9	48.6	8.0	61.2	72.4	77.2	68.2	53.4	29.7	63.7	45.0
2006	60.0	71.6	49.0	6.7	60.2	73.3	77.8	68.6	54.3	30.3	64.0	43.8
2007	60.1	71.7	49.1	6.6	60.1	73.0	78.4	69.6	54.8	31.1	64.1	43.2
2008	59.8	71.2	48.9	5.9	59.4	73.0	78.4	70.5	54.0	30.6	64.0	41.9
2009	58.8	70.2	47.8	5.4	58.4	71.4	77.6	70.2	53.8	30.0	63.0	40.6
2010	58.9	70.3	47.9	6.1	58.4	72.0	77.9	70.9	53.7	29.0	63.4	40.4
2011	59.3	70.7	48.3	6.8	58.4	72.2	78.4	71.6	55.3	29.1	63.9	40.4
2012	59.6	71.1	48.6	7.0	58.2	72.8	78.3	72.3	56.3	30.1	64.3	40.3
2013	59.8	71.1	48.9	6.9	56.8	73.3	78.4	73.2	57.4	30.7	64.6	39.5
2014	60.5	71.7	49.7	7.7	57.4	74.1	79.1	74.2	58.5	31.1	65.6	40.5
2015	60.5	71.4	50.1	7.8	57.9	74.4	79.1	74.4	59.6	30.4	65.9	41.2
2016	60.6	71.2	50.3	8.0	58.2	74.7	79.3	74.3	59.7	30.6	66.1	41.7
2017	60.8	71.2	50.8	8.4	57.6	75.3	79.4	75.3	60.6	30.6	66.6	42.1
2018	60.7	70.8	50.9	7.4	57.9	75.7	79.0	75.2	59.4	31.3	66.6	42.7
2019	60.9	70.7	51.6	7.6	58.2	76.0	78.4	75.4	59.8	32.9	66.8	43.5
2020	60.1	69.8	50.7	6.6	55.7	75.3	77.1	74.3	60.4	34.1	65.9	42.2
2021	60.5	70.0	51.2	7.4	57.4	75.3	77.3	75.1	59.9	34.9	66.5	44.2

통계번호 LAB-32203

통계명 노동권 존중도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일할 권리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노동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노동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57.4%에서 2020년 62.4%, 2021년 68.6%로 매년 늘어났다. 이후 2022년에도 전년보다 늘어난 70.4%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다. 연령별로는 은퇴연령인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노동권 존중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57.4	57.7	57.2	56.6	54.9	53.8	57.2	62.8	62.0	55.6	56.8	61.7
2020	62.4	62.5	62.2	63.5	60.4	63.9	59.4	63.8	62.0	61.5	62.9	66.7
2021	68.6	68.4	68.9	66.8	65.4	67.1	68.2	72.8	74.7	67.4	67.2	67.9
2022	70.4	69.5	71.2	69.1	67.5	69.0	68.9	74.4	76.5	69.3	69.0	68.5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32204

통계명 모성 고용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일할 권리

산출방법 18세 미만 자녀를 둔 15-6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J003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J003S&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1

통계해설 모성 고용률, 즉 유자녀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최근 까지 55-57%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모성 고용률은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47.5%이지만 7-12세 자녀를 둔 경우에는 59.0%, 13-17세 자녀를 둔 경우에는 66.1%로 점차 높아진다.

**통계표** 자녀연령별 모성 고용률, 2016-2021

연도	전체	자녀연령별		
		6세 이하	7-12세	13-17세
2016	55.2	44.8	59.8	67.3
2017	56.1	46.4	60.1	67.8
2018	56.7	48.1	59.8	68.1
2019	57.0	49.1	61.2	66.1
2020	55.5	47.5	58.5	65.3
2021	56.2	47.5	59.0	66.1

주: 1) 15-54세 기혼여성(유배우, 이혼, 사별 포함)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함.  
2) 자녀연령은 막내자녀 기준임.



통계번호 LAB-32205

통계명 모성 취업시간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일할 권리

산출방법 18세 미만 자녀를 둔 15-64세 기혼여성의 주당 취업시간임.

단위 시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J008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J008S&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1

통계해설 모성 취업시간, 즉 유자녀 기혼여성의 주당 취업시간은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최근까지 36-38시간가량으로 나타난다. 2020년에는 32.4시간으로 예외적으로 적었다. 모성 취업시간은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시간은 33.5시간이지만 7-12세 자녀를 둔 경우에는 36.8시간, 13-17세 자녀를 둔 경우에는 37.9시간으로 점차 많아진다.

**통계표** 자녀연령별 모성 취업시간, 2016-2021

연도	전체	자녀연령별		
		6세 이하	7-12세	13-17세
2016	37.6	33.8	38.6	40.7
2017	38.2	34.8	39.2	41.1
2018	37.2	33.9	38.4	40.2
2019	36.6	33.6	37.5	39.5
2020	32.4	29.9	33.3	34.6
2021	36.0	33.5	36.8	37.9

주: 1) 주당 취업시간임.

2) 15-54세 기혼여성(유배우, 이혼, 사별 포함)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함.

3) 자녀연령은 막내자녀 기준임.

통계번호 LAB-32206

통계명 실업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일할 권리

산출방법  $\text{실업률} = (\text{15세 이상 실업인구} \div \text{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인구와 실업인구를 합한 인구임.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실업률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취업인구+실업인구) 중 실업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15세 이상 인구의 실업률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3%대에서 오르내리다가 2020년에 4.0%로 올랐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3%대로 떨어졌다. 생산가능연령인 15-64세 인구의 실업률도 그 수준과 변화 추세에서 15세 이상 인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성별로는 2019년까지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간 높았으나 이후 2020년과 2021에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난다. 실업률은 15-29세의 청년층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이들 인구의 실업률은 8% 내외에 이른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실업률, 2000-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15-64세	15-29세
2000	4.4	5.0	3.6	14.5	7.5	3.6	3.5	3.2	2.4	0.6	4.6	8.1
2001	4.0	4.5	3.3	14.4	7.3	3.2	3.0	2.8	2.0	0.4	4.2	7.9
2002	3.3	3.6	2.7	12.0	6.6	2.9	2.0	1.9	1.6	0.5	3.4	7.0
2003	3.6	3.8	3.3	13.0	7.7	3.0	2.2	2.2	1.6	0.4	3.7	8.0
2004	3.7	3.9	3.4	14.0	7.8	3.1	2.3	2.3	1.7	0.7	3.8	8.2
2005	3.7	4.0	3.4	12.3	7.7	3.3	2.5	2.5	2.1	0.7	3.9	8.0
2006	3.5	3.9	3.0	10.5	7.8	3.0	2.3	2.1	2.3	0.7	3.6	7.9
2007	3.2	3.7	2.7	9.3	7.1	3.2	2.0	2.1	2.3	0.7	3.4	7.2
2008	3.2	3.6	2.6	10.2	7.0	3.1	2.1	2.0	1.8	0.8	3.3	7.1
2009	3.6	4.1	3.0	12.3	7.8	3.6	2.4	2.5	2.2	1.2	3.8	8.0
2010	3.7	4.0	3.3	11.9	7.7	3.5	2.5	2.5	3.4	2.4	3.8	7.9
2011	3.4	3.6	3.1	10.8	7.4	3.4	2.1	2.1	3.0	2.2	3.5	7.6
2012	3.2	3.4	3.0	8.9	7.4	3.0	2.0	2.1	2.8	2.1	3.3	7.5
2013	3.1	3.3	2.8	10.3	7.8	3.0	2.0	1.9	2.3	1.5	3.2	8.0
2014	3.5	3.5	3.5	9.3	9.0	3.1	2.2	2.2	2.6	2.1	3.6	9.0
2015	3.6	3.6	3.5	10.6	9.0	3.1	2.3	2.4	2.8	2.4	3.7	9.1
2016	3.7	3.8	3.6	10.0	9.8	3.1	2.1	2.3	3.1	2.3	3.8	9.8
2017	3.7	3.8	3.5	8.7	9.9	3.3	2.1	2.2	2.9	2.8	3.8	9.8
2018	3.8	3.9	3.7	9.3	9.5	3.4	2.5	2.5	3.3	2.9	3.9	9.5
2019	3.8	3.9	3.6	8.6	8.9	3.3	2.3	2.5	3.7	3.2	3.8	8.9
2020	4.0	3.9	4.0	8.7	9.0	3.5	2.5	2.9	3.5	3.6	4.0	9.0
2021	3.7	3.6	3.8	8.7	7.7	3.3	2.4	2.6	3.7	3.8	3.6	7.8

통계번호 LAB-32207

통계명 직장어린이집 수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일할 권리

산출방법 직장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입.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8&conn_path=I3)

수록기간 2001-2021

통계해설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수는 2001년 213개소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 1000개소를 넘었고 2021년에는 1248개소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년간 6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2021년 자료로 보면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 각각 296개소와 291개소로 압도적으로 많다. 인천, 대전, 경남, 부산, 충남, 경북, 강원 등도 직장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다.

통계표 시도별 직장어린이집 수, 2001-2021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213	65	14	9	12	6	12	5	-	29	7	8	9	6	7	9	11	4
2002	210	66	17	9	9	6	10	5	-	32	10	7	9	5	7	9	5	4
2003	236	62	17	8	9	7	12	6	-	50	5	8	12	4	7	12	12	5
2004	243	63	11	9	13	8	10	7	-	51	5	10	14	4	8	14	10	6
2005	263	68	12	12	15	10	12	8	-	56	4	9	16	4	9	13	10	5
2006	298	78	13	12	23	11	14	11	-	69	4	9	14	4	8	14	10	4
2007	320	83	13	12	22	11	15	10	-	77	6	10	16	4	9	16	12	4
2008	350	91	20	13	25	14	17	10	-	84	6	9	15	4	9	15	14	4
2009	370	96	17	13	26	15	20	12	-	88	7	12	15	4	9	16	15	5
2010	401	109	19	14	26	15	22	12	-	95	8	14	15	5	8	16	17	6
2011	449	126	20	13	30	16	25	12	-	105	9	16	17	5	9	19	20	7
2012	523	149	22	14	35	18	26	14	2	124	14	20	20	5	9	22	22	7
2013	619	165	28	17	44	20	31	20	4	136	20	21	28	11	14	26	26	8
2014	692	176	29	18	47	21	33	23	8	151	25	26	30	15	20	32	29	9
2015	785	194	32	19	51	22	38	25	12	170	31	28	33	19	23	38	38	12
2016	948	226	42	24	56	26	49	30	12	224	40	29	40	23	27	43	43	14
2017	1,053	244	48	31	65	30	52	34	13	242	42	32	45	26	30	49	54	16
2018	1,111	258	53	36	63	29	55	36	13	259	42	34	50	25	31	54	57	16
2019	1,153	265	55	36	71	32	58	35	15	268	41	35	52	28	31	55	58	18
2020	1,216	288	57	38	76	29	59	36	15	284	45	36	53	31	34	56	60	19
2021	1,248	296	59	37	76	27	61	37	16	291	52	39	55	32	36	55	60	19

통계번호 LAB-32208

통계명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일할 권리

산출방법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사업장 수 ÷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대상 사업장 수) × 100.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41](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41)

수록기간 2006-2021

통계해설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 사업장 중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  
하거나 위탁보육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을 말한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은 2006년 775개소에서 2021년 1486개소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중 어  
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시행하는 의무이행 사업장의 비율은  
2016년 81.5%에서 2018년 90.1%로 높아졌다. 이후 2021년까지 90% 수준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의무이행률은 사내설치나 위탁보육 대신 보육수당 지급으로 의무  
이행을 할 수 있게 한 2014년 이전보다 최근에 더 높다. 어린이집을 사내에 직접 설치한  
사업장의 비율은 2006년 25.7%에서 2021년 68.4%로 크게 높아졌다.

통계표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2006-2021

연도	의무설치대상 사업장 수(개소)	의무이행 사업장 수(개소)			의무이행률(%)
		설치운영	위탁보육	보육수당	
2006	775	199	34	132	47.1
2007	791	253	40	147	55.6
2008	791	269	47	160	60.2
2009	790	284	44	195	66.2
2010	833	312	58	208	69.4
2011	832	326	47	231	72.6
2012	919	359	71	253	74.3
2013	1,074	534	101	242	81.7
2014	1,204	635	93	175	75.0
2015	1,143	578	27	-	52.9
2016	1,153	729	211	-	81.5
2017	1,253	839	247	-	86.7
2018	1,389	957	295	-	90.1
2019	1,445	987	316	-	90.2
2020	1,432	980	321	-	90.9
2021	1,486	1,016	335	-	90.9

주: 1) 2015년부터 의무이행 수단에서 보육수당이 폐지됨.

통계번호 LAB-32209

통계명 청년실업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일할 권리

산출방법 청년실업률 = (15-29세 실업인구 ÷ 15-29세 경제활동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인구와 실업인구를 합한 인구임.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청년실업률은 15-29세 경제활동인구(취업인구+실업인구) 중 실업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15-29세 인구의 실업률은 2013년까지 7-8%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 9%대로 오른 후 2016년과 2017년에 9.8%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7.8%로 떨어졌다. 청년실업률은 남녀 간에 차이가 나는데, 남성 실업률이 여성 실업률보다 일관되게 높다. 연령별로 보면 15-19세 인구의 실업률 감소가 두드러진다. 청소년 인구의 실업률은 과거 두 자릿수에서 최근 한 자릿수로 낮아졌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청년실업률, 2000-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5-19세	20-24세	25-29세	20-29세
2000	8.1	9.3	6.7	14.5	9.9	6.0	7.5
2001	7.9	9.0	6.7	14.4	9.3	6.0	7.3
2002	7.0	8.3	5.6	12.0	7.9	5.7	6.6
2003	8.0	9.2	6.8	13.0	9.6	6.3	7.7
2004	8.2	9.6	6.9	14.0	9.8	6.5	7.8
2005	8.0	9.2	6.8	12.3	9.8	6.4	7.7
2006	7.9	9.2	6.7	10.5	10.0	6.5	7.8
2007	7.2	9.1	5.5	9.3	8.6	6.3	7.1
2008	7.1	8.6	5.8	10.2	9.1	6.0	7.0
2009	8.0	9.8	6.4	12.3	9.5	7.1	7.8
2010	7.9	9.3	6.7	11.9	9.4	6.9	7.7
2011	7.6	9.0	6.3	10.8	9.4	6.4	7.4
2012	7.5	8.5	6.6	8.9	9.0	6.6	7.4
2013	8.0	9.1	7.0	10.3	9.2	7.1	7.8
2014	9.0	10.5	7.7	9.3	10.2	8.3	9.0
2015	9.1	10.5	7.8	10.6	10.5	8.1	9.0
2016	9.8	10.9	8.8	10.0	10.8	9.2	9.8
2017	9.8	11.4	8.3	8.7	10.6	9.5	9.9
2018	9.5	10.4	8.6	9.3	10.7	8.8	9.5
2019	8.9	9.7	8.1	8.6	10.7	8.0	8.9
2020	9.0	9.9	8.1	8.7	10.7	8.1	9.0
2021	7.8	8.8	6.8	8.7	8.5	7.3	7.7

통계번호 LAB-32210

통계명 취업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정도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일할 권리

산출방법 일·가정 양립에 대해 ‘대체로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출산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1N612&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1N612&conn_path=I2)

수록기간 2015-2018

통계해설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고 여기는 취업 기혼여성의 비율은 2015년 53.8%, 2018년 55.1%로 과반에 달한다. 이 비율은 연령대에 따라 역U자 형태를 나타내는데, 30대 초반에 상승하기 시작해서 30대 후반에 가장 높았다가 40대 초반에 하락해 40대 후반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일·가정 양립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업 여성의 비율은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 특히 높다.

통계표

취업 기혼여성의 연령 및 자녀수별 일·가정 양립 어려움 정도, 2015-2018

연도	전체	연령별					자녀수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2015	53.8	60.5	65.3	66.5	54.2	41.1	27.3	55.2	54.5	64.1
2018	55.1	55.9	65.1	68.0	58.7	41.8	28.0	57.7	55.1	65.4

주: 1) 15-49세 취업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32301

통계명 고용 불안감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가까운 미래에 직장(직업)을 잃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끼는지에 대해 ‘느끼는 편이다’ 또는 ‘매우 많이 느낀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LA060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LA060R&conn_path=I3)

수록기간 2011-2021

통계해설 취업인구 중 자신의 직장(직업)에 고용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2019년 까지 60% 안팎 수준이었다가 2021년에 53.9%로 낮아졌다. 하지만 60대 초반대의 고용 불안감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학력층의 고용 불안감이 가장 높다.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기능노무직의 고용 불안감은 확연히 낮아졌지만 서비스판매직의 고용 불안감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통계표

연령·교육수준·직업별 고용 불안감, 2011-2021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어업직	기능노무직
2011	59.8	62.3	65.0	62.7	56.3	51.0	41.2	46.3	55.3	64.4	60.0	57.9	60.6	63.8	25.8	67.3
2013	59.8	61.9	65.1	62.6	57.3	51.8	42.1	46.9	56.8	62.9	60.8	57.5	63.5	62.8	29.1	66.7
2015	61.0	62.5	65.4	63.5	59.4	56.4	44.8	51.0	57.6	64.3	60.7	58.7	59.9	63.7	30.4	67.2
2017	60.4	61.8	63.8	63.8	59.8	52.7	46.3	51.9	55.1	63.8	59.9	57.9	60.0	62.7	26.7	67.4
2019	59.1	60.1	60.3	63.1	58.6	56.3	47.4	52.1	57.0	63.2	57.1	54.7	57.8	62.5	27.7	66.1
2021	53.9	54.2	53.9	56.8	54.7	54.4	44.9	44.4	55.5	58.4	51.8	51.2	50.1	60.6	23.7	59.1

주: 1) 19세 이상 취업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32302

통계명 고용보험 가입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고용보험 가입률 =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 수 ÷ 전체 임금근로자 수)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1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1S&conn_path=I3)

수록기간 2004-2021

통계해설 고용보험 가입률, 즉 전체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은 2004년 52.2%에서 2021년 75.2%로 꾸준히 높아졌다. 하지만 근로형태별로는 큰 격차를 보인다. 2021년 기준으로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0.9%에 달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52.6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고용보험 가입률에 차이가 난다. 한시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현격하게 떨어진다.

통계표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2004-2021

연도	전체	고용형태별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비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2004	52.2	61.5	36.2	45.7	46.0	45.1	3.6	25.2
2005	53.2	63.8	34.7	45.3	50.2	30.4	2.2	22.2
2006	54.8	64.7	36.6	49.4	50.0	47.4	3.2	20.9
2007	55.5	64.4	39.5	55.8	58.0	50.4	3.7	24.0
2008	56.9	65.9	39.3	56.2	62.5	39.9	6.3	25.8
2009	59.0	67.6	42.8	62.1	68.8	34.8	9.2	27.4
2010	63.4	75.7	41.0	62.0	68.1	43.1	10.7	28.5
2011	64.7	77.5	42.4	62.9	67.3	48.2	13.5	28.1
2012	66.4	79.0	43.5	63.8	67.8	48.1	15.1	30.0
2013	67.8	80.7	43.7	63.3	67.1	47.9	17.4	29.7
2014	68.9	82.0	43.9	63.0	66.3	51.4	19.8	29.2
2015	68.7	82.4	42.6	60.6	64.8	45.4	19.0	29.0
2016	69.7	84.2	42.9	61.1	64.0	49.6	21.1	29.2
2017	71.2	85.9	44.1	61.5	62.5	57.9	23.1	30.1
2018	71.6	87.0	43.6	57.9	58.8	54.6	24.8	29.9
2019	70.9	87.2	44.9	57.1	57.6	55.0	26.1	29.0
2020	72.6	89.2	46.1	60.0	63.6	39.4	27.8	27.0
2021	75.2	90.9	52.6	62.0	64.4	44.5	31.3	43.8

주: 1) 각년 8월 자료임.



통계번호 LAB-32303

통계명 귀화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고용보험 가입률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 전체 근로자 수)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FC019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FC019R&conn_path=I3)

수록기간 2017-2021

통계해설 귀화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비율은 2017년 58.4%에서 2021년 69.3%로 늘어났다. 2020년까지는 남녀 근로자의 가입률이 비슷했으나 이듬해인 2021년에는 남성 근로자의 가입률이 여성보다 높아졌다. 외국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비율은 2017년 32.5%에서 2021년 55.8%로 크게 늘어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통계표** 귀화 및 외국인 근로자 성별 고용보험 가입률, 2017-2021

연도	귀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7	58.4	57.4	58.7	32.5	34.3	28.8
2018	57.5	57.6	57.5	35.6	37.0	32.9
2019	64.4	63.9	65.1	33.8	33.0	35.4
2020	65.9	67.3	65.8	54.3	56.7	49.0
2021	69.3	73.3	68.1	55.8	59.4	48.3

주: 1)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32304

통계명 귀화 및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산재보험 가입률 =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 ÷ 전체 근로자 수)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법무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FC020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FC020R&conn_path=I3)

수록기간 2017-2021

통계해설 귀화 근로자 중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비율은 2017년 59.8%에서 2021년 67.8%로 늘어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도 같은 기간 60.6%에서 2021년 67.9%로 증가하였다. 귀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통계표 귀화 및 외국인 근로자 성별 산재보험 가입률, 2017-2021

연도	귀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7	59.8	62.3	58.7	60.6	68.8	42.8
2018	57.5	61.0	56.7	62.4	69.7	47.3
2019	65.2	70.5	63.6	65.0	72.4	49.2
2020	65.4	73.1	64.2	68.1	74.9	53.2
2021	67.8	75.0	65.7	67.9	74.9	53.2

주: 1)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32305

통계명 근로계약서 서면작성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근로계약서 서면작성률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근로자 수 ÷ 전체 임금근로자 수)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5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5S&conn_path=I3)

수록기간 2004-2021

통계해설 근로계약서 서면작성률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2004년 37.2%에서 2006년 41.4%, 2011년 50.5%, 2016년 61.3%, 2019년 71.4%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후 2021년에도 77.9%로 올랐다. 근로계약서 서면작성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비기간제근로자와 비전형근로자의 서면작성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통계표** 고용형태별 근로계약서 서면작성률, 2004-2021

연도	전체	고용형태별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비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2004	37.2	35.8	39.6	49.3	53.5	39.9	14.2	31.4
2005	38.5	38.2	39.0	49.5	57.3	25.3	14.6	28.2
2006	41.4	40.6	42.9	54.2	57.3	44.8	16.4	32.8
2007	42.9	41.5	45.3	60.7	66.1	47.2	17.2	34.5
2008	46.5	46.7	46.1	61.8	71.1	38.0	19.2	37.7
2009	48.6	47.7	50.4	69.6	79.5	30.0	23.8	37.9
2010	48.2	47.1	50.3	72.7	83.1	40.0	26.8	39.6
2011	50.5	49.7	51.9	73.8	82.2	45.3	31.7	39.6
2012	53.6	53.5	53.7	75.9	83.2	47.3	33.0	42.9
2013	55.4	55.2	55.9	76.0	83.6	44.7	38.5	44.7
2014	56.6	55.9	58.0	77.0	84.6	49.5	42.2	47.4
2015	59.2	59.9	57.7	76.3	84.0	47.8	44.1	46.5
2016	61.3	62.1	59.6	79.1	85.3	54.3	46.2	50.3
2018	68.5	70.8	63.7	79.6	84.6	61.4	57.1	49.8
2019	71.4	74.3	66.3	79.9	83.6	65.6	58.5	52.2
2020	74.0	76.2	70.2	86.6	93.2	48.1	64.0	51.1
2021	77.9	79.7	74.9	89.6	94.3	56.4	71.3	53.6

주: 1) 각년 8월 자료임.

통계번호 LAB-32306

통계명 근로여건 만족도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자신의 전반적인 근로여건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LA0812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LA0812R&conn_path=I3)

수록기간 2009-2021

통계해설 임금근로자 중 자신의 전반적인 근로여건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은 2017년까지 20%대에 그쳤으나 2019년과 2021년에 32.3%와 35.0%로 높아졌다. 이 비율은 대졸 이상 학력층에서 가장 높고 이어 고졸 학력층에서 높다.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과 기능노무직에 비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통계표 교육수준·직업·고용형태별 근로여건 만족도, 2009-2021

연도	전체	교육수준별				직업별				고용형태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전문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기능 노무직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2009	26.6	13.7	12.0	17.8	37.8	41.8	35.1	17.5	14.6	-	-	-
2011	24.6	10.3	14.3	17.9	33.1	37.8	31.8	19.5	13.3	-	-	-
2013	26.3	16.6	12.8	19.1	34.8	40.6	32.8	19.5	15.3	31.0	19.1	9.0
2015	25.2	14.4	12.6	18.8	33.3	39.9	31.5	18.6	14.9	30.1	17.0	9.6
2017	27.7	12.8	16.1	18.7	36.6	42.1	34.0	20.5	14.9	32.3	19.7	9.1
2019	32.3	20.3	21.4	24.3	40.4	47.2	38.0	27.3	20.7	36.8	24.9	13.5
2021	35.0	24.9	20.9	27.6	42.1	46.6	44.0	30.5	21.9	39.2	27.8	13.4

주: 1)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32307

통계명 근로환경 만족도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자신의 근로환경에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0&tblId=DT\\_380002\\_L001\\_6TH&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0&tblId=DT_380002_L001_6TH&conn_path=I3)

수록기간 2006-2020

통계해설 자신의 근로환경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은 2006년 66.8%에서 2011년 72.2%, 2017년 76.9%로 꾸준히 늘어났고 2020년에는 82.3%로 더 올랐다. 직업별로 보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농림어업숙련직,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조립직, 단순노무직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통계표 직업별 근로환경 만족도, 2006-2020

연도	전체	직업별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숙련직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조립직	단순 노무직	군인
2006	66.8	76.8	81.5	84.5	63.2	67.6	47.7	56.8	53.8	55.4	83.1
2010	69.1	82.5	84.6	84.7	63.0	71.0	56.8	56.8	59.7	53.5	69.4
2011	72.2	80.2	85.8	85.4	71.5	72.8	60.4	62.4	61.1	56.9	92.5
2014	74.0	92.4	86.9	89.1	70.2	73.3	63.0	61.3	61.1	57.4	89.0
2017	76.9	90.6	84.9	86.8	75.5	77.8	66.8	68.5	67.8	63.7	88.3
2020	82.3	92.3	90.1	90.6	81.6	85.2	75.5	72.4	73.8	73.7	-

주: 1) 2010년까지는 15-59세 취업인구, 2011년부터는 15세 이상 취업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32308

통계명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와 출연액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단위 개, 억 원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3](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3)

수록기간 2000-2019

통계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등 복지증진을 위해 경영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에 설치한 기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는 2000년 862개에서 2019년 1722개로 늘어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은 같은 기간 3조 4284억 원에서 9조 5982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에 기금 수는 2배로, 기금 출연액은 2.8배로 증가한 것이다.

통계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와 출연액, 2000-2019

연도	기금 수(개)	출연액(억 원)
2000	862	34,284
2001	897	38,794
2002	916	41,724
2003	972	46,501
2004	992	50,017
2005	1,047	57,177
2006	1,106	63,581
2007	1,135	67,517
2008	1,177	70,810
2009	1,220	62,609
2010	1,235	60,759
2011	1,292	62,812
2012	1,368	67,713
2013	1,434	68,361
2014	1,506	71,034
2015	1,543	74,371
2016	1,586	77,619
2017	1,672	82,852
2018	1,672	107,845
2019	1,722	95,982

통계번호 LAB-32309

통계명 산업재해 사망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산업재해 사망률 = (산업재해 사망자 수 ÷ 산업재해 적용대상 근로자 수) × 10,000.

단위 명/1만 명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6\\_N01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6_N013&conn_path=I3)

수록기간 2001-2020

통계해설 산업재해 사망률은 산업재해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로 나타낸다.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01년 2.60명에서 2007년 2명 아래로 줄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에는 1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7년부터는 1명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매년 집계되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률은 광업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광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만 명당 무려 400명 안팎에 이른다. 다른 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감소한 것과 달리 광업 근로자의 사망률은 오히려 1.7배 가량 증가하였다. 사업장규모별로는 2017년부터 500-999인 사업장에서 가장 높다. 2016년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통계표 산업 및 사업장규모별 산업재해 사망률, 2001-2020

연도	전체	산업별										사업장규모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	기타업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2001	2.60	240.46	2.44	2.43	2.79	3.98	2.08	37.70	4.51	0.96	1.41	4.26	3.11	2.74	2.75	2.50	2.67	2.63	2.77	1.08
2002	2.46	241.41	2.25	3.45	2.49	3.09	2.01	68.46	3.21	1.46	1.47	3.56	2.52	2.63	3.23	2.48	2.13	2.38	2.60	1.19
2003	2.76	289.37	2.61	2.84	2.94	3.24	1.98	51.72	4.23	1.20	1.60	3.98	3.04	2.81	2.87	2.65	2.43	2.84	2.90	1.59
2004	2.70	281.85	2.30	1.58	3.97	3.24	2.33	38.33	7.05	0.85	1.42	3.74	2.71	2.88	2.81	2.29	2.53	2.48	2.69	1.92
2005	2.25	272.26	2.14	1.32	2.95	2.75	1.95	15.12	3.95	0.61	1.18	3.32	2.75	2.34	2.53	2.07	2.15	1.81	2.14	1.21
2006	2.10	321.09	2.02	2.04	2.56	2.29	2.45	3.65	2.51	0.60	1.01	2.92	2.50	2.10	2.04	2.02	1.85	1.76	2.40	1.23
2007	1.92	282.83	1.96	1.11	2.25	2.38	3.04	7.23	2.31	0.69	0.92	3.02	2.11	1.82	1.94	1.72	1.71	1.57	1.92	1.18
2008	1.80	285.87	1.96	1.28	2.12	2.60	2.57	5.56	3.17	0.40	0.82	3.12	1.76	1.59	1.40	2.00	1.57	1.38	1.92	1.01
2009	1.57	293.86	1.76	1.70	1.89	1.86	3.10	10.20	2.59	0.21	0.71	3.04	1.52	1.36	1.20	1.31	1.41	1.37	1.76	0.89
2010	1.55	311.54	1.93	1.29	1.91	1.72	4.40	12.45	2.36	0.30	0.62	2.38	1.51	1.40	1.50	1.65	1.42	1.51	1.41	0.96
2011	1.47	310.23	1.64	0.73	2.01	1.86	2.13	11.84	2.25	0.29	0.60	2.60	1.39	1.31	1.36	1.37	1.26	1.48	1.54	0.81
2012	1.20	243.87	1.44	0.35	1.78	1.73	2.85	2.43	3.44	0.15	0.43	2.01	1.41	1.06	1.08	1.00	1.18	1.03	1.12	0.67
2013	1.25	326.26	1.22	0.49	2.21	1.74	2.69	2.30	1.38	0.32	0.45	2.01	1.03	1.01	1.06	1.18	1.19	1.51	1.54	0.95
2014	1.08	342.30	1.14	1.26	1.50	1.53	4.39	5.05	2.43	0.15	0.39	1.71	0.95	0.87	0.92	0.94	0.99	1.61	1.48	0.73
2015	1.01	359.02	1.03	0.93	1.47	1.63	1.85	1.87	1.31	0.13	0.34	1.61	0.90	0.77	0.89	0.92	0.97	1.52	1.47	0.50
2016	0.96	326.37	0.96	0.41	1.76	1.54	1.39	0.00	0.49	0.12	0.32	1.51	0.83	0.83	0.86	0.90	0.86	1.31	1.34	0.52
2017	1.05	408.07	1.04	0.53	1.90	1.44	1.93	5.67	0.79	0.26	0.33	1.48	0.94	0.91	0.85	0.99	0.98	1.21	2.15	0.59
2018	1.12	408.65	1.14	0.65	1.94	1.80	1.45	1.85	1.68	0.21	0.41	1.58	0.92	0.98	1.02	0.86	1.18	1.58	1.82	0.66
2019	1.08	365.50	1.22	0.65	2.08	1.68	1.85	5.86	1.13	0.15	0.40	1.65	0.94	0.93	0.86	0.93	0.98	1.34	1.90	0.57
2020	1.09	397.60	1.17	1.14	2.48	1.60	1.68	2.01	1.27	0.20	0.37	1.66	0.97	0.95	1.02	0.81	1.03	1.07	1.93	0.57

주: 1) 2012년부터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로 인한 사망자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망자를 제외함.

통계번호 LAB-32310

통계명 산업재해율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산업재해율 = (산업재해자 수 ÷ 산업재해 적용대상 근로자 수) × 100.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6\\_N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6_N001&conn_path=I3)

수록기간 2001-2020

통계해설 산업재해율은 산업재해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 중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01년 0.77%에서 점차 줄어 2017년 0.48%까지 떨어졌다. 2020년에는 이보다 조금 늘어난 0.57%로 집계된다. 산업재해율은 광업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광업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2001년 7.69%에서 2020년 25.82%로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같은 해 건설업 근로자의 산업재해율 1.17%보다 무려 22배나 높은 수치이다. 산업재해율은 사업장규모가 작을수록 높다. 2020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1.13%이지만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0.29%에 불과하다.

**통계표** 산업 및 사업장규모별 산업재해율, 2001-2020

연도	전체	산업별										사업장규모별								
		광업	제조업	전가 가스 증기 수도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보험업	기타업	5인 미만	5- 9인	10- 29인	30- 49인	5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2001	0.77	7.69	1.22	0.26	0.70	0.88	1.19	4.00	1.26	0.17	0.49	1.44	1.22	1.06	0.87	0.69	0.53	0.46	0.42	0.25
2002	0.77	7.59	1.22	0.29	0.73	0.74	0.75	6.48	1.03	0.18	0.50	1.43	1.17	1.00	0.80	0.64	0.48	0.37	0.36	0.33
2003	0.90	10.79	1.42	0.28	0.87	0.87	0.96	6.05	1.25	0.18	0.56	1.58	1.29	1.14	0.89	0.72	0.53	0.47	0.44	0.54
2004	0.85	14.71	1.28	0.25	0.95	0.78	1.26	3.14	1.20	0.16	0.52	1.45	1.25	1.10	0.88	0.64	0.49	0.41	0.38	0.63
2005	0.77	14.56	1.18	0.24	0.76	0.70	1.28	1.78	1.22	0.15	0.52	1.52	1.23	1.04	0.79	0.61	0.44	0.31	0.32	0.40
2006	0.77	12.28	1.19	0.23	0.72	0.75	1.57	2.15	1.52	0.15	0.54	1.51	1.17	0.98	0.76	0.58	0.42	0.30	0.29	0.36
2007	0.72	10.13	1.10	0.22	0.67	0.68	1.85	2.38	1.28	0.13	0.53	1.51	1.09	0.89	0.69	0.51	0.37	0.23	0.23	0.30
2008	0.71	8.91	1.15	0.18	0.64	0.67	2.52	1.30	1.39	0.10	0.53	1.59	1.08	0.85	0.61	0.49	0.34	0.23	0.18	0.27
2009	0.70	8.20	1.04	0.22	0.65	0.62	4.17	2.24	1.46	0.08	0.56	1.75	1.02	0.81	0.60	0.46	0.32	0.21	0.20	0.23
2010	0.69	8.73	1.07	0.16	0.70	0.61	2.80	2.18	1.38	0.08	0.53	1.64	1.07	0.82	0.59	0.46	0.30	0.21	0.13	0.22
2011	0.65	9.12	0.97	0.16	0.74	0.59	2.11	2.28	1.44	0.07	0.47	1.55	1.00	0.75	0.54	0.40	0.26	0.18	0.13	0.19
2012	0.59	6.94	0.84	0.17	0.84	0.52	2.46	1.51	1.30	0.06	0.40	1.42	0.93	0.69	0.51	0.38	0.25	0.18	0.12	0.18
2013	0.59	7.91	0.78	0.13	0.92	0.55	2.64	1.43	1.26	0.06	0.41	1.41	0.85	0.65	0.48	0.38	0.25	0.17	0.13	0.21
2014	0.53	10.54	0.72	0.18	0.73	0.54	2.19	1.36	1.01	0.05	0.37	1.19	0.78	0.58	0.46	0.35	0.23	0.18	0.14	0.19
2015	0.50	12.65	0.65	0.15	0.75	0.50	1.88	1.06	0.94	0.04	0.34	1.14	0.71	0.55	0.43	0.32	0.21	0.17	0.14	0.16
2016	0.49	13.75	0.62	0.14	0.84	0.49	1.54	0.77	0.90	0.04	0.32	1.08	0.67	0.55	0.44	0.33	0.21	0.16	0.14	0.15
2017	0.48	16.94	0.61	0.12	0.84	0.51	1.36	1.12	0.73	0.04	0.32	1.05	0.64	0.52	0.41	0.32	0.22	0.19	0.18	0.17
2018	0.54	19.02	0.66	0.14	0.94	0.61	1.16	1.22	0.78	0.05	0.37	1.07	0.66	0.57	0.46	0.36	0.29	0.27	0.26	0.22
2019	0.58	22.89	0.72	0.14	1.09	0.68	1.11	1.17	0.81	0.05	0.41	1.15	0.68	0.60	0.49	0.40	0.34	0.31	0.33	0.28
2020	0.57	25.82	0.72	0.13	1.17	0.77	1.02	0.97	0.81	0.04	0.38	1.13	0.66	0.56	0.47	0.41	0.35	0.35	0.37	0.29



통계번호 LAB-32311

통계명 아플 때 일한 경험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중 몸이 아픈데도 일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0&tblId=DT\\_380002\\_K011\\_6TH&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0&tblId=DT_380002_K011_6TH&conn_path=I3)

수록기간 2010-2020

통계해설 취업인구 중 아플 때 일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은 2014년 24.8%에서 2017년 17.2%, 2020년 11.9%로 차츰 낮아지고 있다. 이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일관되게 더 높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직에서 가장 높고 관리직에서 가장 낮다.

**통계표 성 및 직업별 아플 때 일한 경험률, 2010-2020**

연도	전체	성별		직업별									
		남성	여성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숙련직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조립직	단순 노무직	군인
2010	21.3	19.4	23.9	18.8	22.5	17.6	25.1	21.1	26.2	20.6	19.6	20.9	14.3
2011	23.1	21.2	25.7	22.4	21.9	19.4	25.7	22.9	31.9	23.3	24.0	22.0	14.4
2014	24.8	23.0	27.3	16.6	23.4	20.0	28.6	24.5	28.7	27.7	26.6	26.4	17.6
2017	17.2	15.6	19.3	8.9	15.5	15.3	19.2	18.1	24.3	18.1	16.2	17.9	9.3
2020	11.9	10.6	13.7	6.0	12.6	9.7	13.2	10.8	18.3	12.0	12.9	10.7	-

주: 1) 2010년까지는 15-59세 취업인구, 2011년부터는 15세 이상 취업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32312

통계명 업무수행 중 폭력피해 경험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해당 유형의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0&tblId=DT\\_380002\\_K007\\_6TH&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0&tblId=DT_380002_K007_6TH&conn_path=I3)

수록기간 2006-2020

통계해설 취업자가 업무 중에 경험하는 폭력피해로는 언어폭력이 가장 많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의 5.2%가 언어폭력을 경험한다. 취업자의 2.4%는 모욕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다. 위협과 성적 관심도 0.9%와 0.7%가 경험한다. 성희롱, 신체적 폭력, 왕따·괴롭힘은 0.5% 미만이 겪는다.

**통계표** 업무수행 중 폭력피해 경험률, 2006-2020

연도	언어 폭력	모욕적 행동	위협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성희롱	신체적 폭력	왕따 괴롭힘
2006	-	-	-	-	0.6	-	0.7
2010	3.7	0.9	-	0.4	0.3	0.3	0.2
2011	4.4	1.3	-	0.9	0.4	0.6	0.3
2014	6.8	1.9	-	0.9	0.3	0.5	0.1
2017	4.8	3.3	0.7	0.9	0.2	0.2	0.5
2020	5.2	2.4	0.9	0.7	0.4	0.3	0.3

주: 1) 2010년까지는 15-59세 취업인구, 2011년부터는 15세 이상 취업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32313

통계명 월간 근로시간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근로시간 = 소정실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단위 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2&conn_path=I3)

수록기간 2006-2021

통계해설 임금근로자의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월간 총근로시간은 2006년 193.4시간에서 2019년 152.4시간으로 41시간 줄어들었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 163.6시간과 164.2시간으로 10시간 이상 늘어났다. 남성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021년 170.4시간으로 같은 해 여성근로자의 155.4시간보다 15시간 많다. 정규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021년 180.2시간으로 같은 해 비정규직근로자의 115.4시간보다 64.8시간이나 길다. 이는 2006년 대비 정규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98.7시간에서 18.5시간 줄어든 데 그친 반면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73.2시간에서 57.8시간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통계표 성 및 고용형태별 월간 근로시간, 2006-2021

연도	전체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6	193.4	198.0	185.3	198.7	200.5	195.0	173.2	185.0	162.3
2007	188.8	192.3	182.9	193.2	194.3	191.0	171.4	181.0	162.8
2008	184.5	188.2	178.3	189.6	191.2	186.4	165.7	172.8	159.4
2009	189.0	192.6	182.9	195.7	196.8	193.7	167.4	174.4	160.7
2010	187.0	190.6	181.2	194.4	195.6	192.1	164.2	170.1	158.5
2011	180.8	185.0	174.0	190.7	192.2	187.8	152.2	157.4	147.1
2012	173.7	178.3	166.4	184.4	185.6	182.1	140.1	147.8	132.6
2013	167.9	173.0	159.9	178.0	179.4	175.4	134.4	144.4	125.2
2014	165.5	171.0	157.1	177.7	179.4	174.7	128.3	137.1	120.1
2015	173.5	179.2	165.0	187.4	188.9	184.7	131.6	140.2	123.6
2016	171.1	176.5	163.2	184.7	186.2	182.2	129.3	138.3	120.5
2017	168.5	174.4	160.1	183.1	185.0	180.0	125.1	134.1	116.4
2018	156.4	161.8	148.6	169.7	171.6	166.7	116.3	124.8	108.0
2019	152.4	157.9	144.6	165.2	167.6	161.4	112.1	120.5	103.7
2020	163.6	169.5	155.0	179.8	182.1	176.2	114.0	122.2	105.9
2021	164.2	170.4	155.4	180.2	182.8	176.1	115.4	124.2	106.7

주: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함.

통계번호 LAB-32314

통계명 월평균 임금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임금근로자의 월임금 총액임. 월임금 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전년도연간특별급여 ÷ 12.

단위 1000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2&conn_path=I3)

수록기간 2006-2021

통계해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6년 207만 원에서 2021년 327만 원으로 120만 원가량 올랐다. 이 기간 남녀 근로자의 임금이 모두 올랐지만 남성근로자의 임금이 138만 원 오른 반면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106만 오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104만 원에서 136만 원으로 커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도 각각 146만 원과 59만 원으로 차별적으로 늘어나 둘 간의 임금격차는 2006년 124만 원에서 2021년 211만 원으로 커졌다.

**통계표** 성 및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2006-2021

연도	전체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6	2,069	2,451	1,413	2,330	2,669	1,632	1,089	1,299	893
2007	2,178	2,570	1,524	2,435	2,781	1,748	1,180	1,412	974
2008	2,279	2,700	1,583	2,569	2,939	1,833	1,220	1,465	1,001
2009	2,277	2,691	1,588	2,606	2,969	1,876	1,232	1,481	994
2010	2,326	2,754	1,633	2,677	3,063	1,934	1,244	1,486	1,010
2011	2,428	2,869	1,714	2,814	3,203	2,059	1,309	1,584	1,038
2012	2,527	2,974	1,815	2,903	3,303	2,149	1,342	1,596	1,096
2013	2,617	3,095	1,873	2,985	3,410	2,205	1,404	1,703	1,125
2014	2,700	3,218	1,925	3,151	3,613	2,331	1,333	1,620	1,067
2015	2,740	3,269	1,944	3,194	3,669	2,351	1,372	1,674	1,091
2016	2,833	3,364	2,040	3,283	3,768	2,448	1,445	1,770	1,128
2017	2,896	3,433	2,112	3,363	3,855	2,535	1,506	1,834	1,187
2018	3,028	3,569	2,259	3,510	4,007	2,702	1,588	1,919	1,266
2019	3,138	3,682	2,371	3,612	4,126	2,801	1,643	1,964	1,325
2020	3,180	3,722	2,408	3,693	4,194	2,887	1,620	1,949	1,294
2021	3,271	3,833	2,476	3,795	4,315	2,968	1,681	2,039	1,321

주: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함.

통계번호 LAB-32315

통계명 육아휴직자 수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수입.

단위 명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수록기간 2002-2020

통계해설 육아휴직자의 수는 2002년 3700여 명에서 2020년 11만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2020년 육아휴직 사용자의 75.5%가 여성이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비율은 2010년 2.0%에서 꾸준히 늘어나 2020년에는 24.5%로 높아졌다.

통계표 육아휴직자 수와 성별 비율, 2002-2020

연도	육아휴직자 수(명)	육아휴직자 성별 비율(%)	
		여성	남성
2002	3,763	97.9	2.1
2003	6,816	98.5	1.5
2004	9,304	98.1	1.9
2005	10,700	98.1	1.9
2006	13,670	98.3	1.7
2007	21,185	98.5	1.5
2008	29,145	98.8	1.2
2009	35,400	98.6	1.4
2010	41,733	98.0	2.0
2011	58,137	97.6	2.4
2012	64,071	97.2	2.8
2013	69,618	96.7	3.3
2014	76,831	95.5	4.5
2015	87,339	94.4	5.6
2016	89,795	91.5	8.5
2017	90,122	86.6	13.4
2018	99,199	82.2	17.8
2019	105,165	78.8	21.2
2020	112,040	75.5	24.5

주: 1) 육아휴직자 성별 비율 = (성별 육아휴직자 수 ÷ 전체 육아휴직자 수) × 100. 육아휴직자 수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입.

통계번호 LAB-32316

통계명 일·가정 균형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LA050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LA050R&conn_path=I3)

수록기간 2011-2021

통계해설 일과 가정생활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지를 보면, 과거에는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높다. 일을 우선시하는 비율은 2011년 54.4%에서 2021년 33.5%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비율은 34.0%에서 48.2%로 높아졌다.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최근 50%를 넘는다. 남성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일을 우선시하였으나 최근에는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난다.

**통계표** **성별 일·가정균형에 대한 인식, 2011-2021**

연도	계			남자			여자		
	일을 우선시한다	둘 다 비슷하게 생각한다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	일을 우선시한다	둘 다 비슷하게 생각한다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	일을 우선시한다	둘 다 비슷하게 생각한다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
2011	54.4	34.0	11.5	62.5	29.3	8.1	42.4	41.2	16.5
2013	54.9	33.4	11.6	64.1	27.8	8.0	41.7	41.5	16.9
2015	53.7	34.4	12.0	61.7	29.0	9.3	42.3	42.1	15.6
2017	43.2	42.9	14.0	49.9	39.0	11.0	33.7	48.4	17.9
2019	42.1	44.2	13.7	48.1	40.3	11.6	33.9	49.5	16.6
2021	33.5	48.2	18.3	38.8	45.0	16.1	26.3	52.5	21.1

주: 1) '일을 우선시한다'에는 '일을 우선시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포함되고,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에는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포함됨.  
 2) 19세 이상 취업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32317

통계명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사회보험 가입률 = (사회보험 가입 임금근로자 수 ÷ 전체 임금근로자 수)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1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1S&conn_path=I3)

수록기간 2004-2021

통계해설 지난 2004년에서 2021년 사이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9.6%에서 69.4%, 건강보험 가입률은 61.4%에서 77.0%, 고용보험 가입률은 52.2%에서 75.2%로 늘어났다.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률은 88.8%와 38.4%, 건강보험 가입률은 93.6%와 50.3%, 고용보험 가입률은 90.9%와 52.6%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통계표**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2004-2021

연도	국민연금 가입률			건강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가입률		
	전체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2004	59.6	72.5	37.7	61.4	73.8	40.2	52.2	61.5	36.2
2005	61.5	75.8	36.8	62.0	75.9	37.9	53.2	63.8	34.7
2006	62.8	76.2	38.5	63.4	76.1	40.2	54.8	64.7	36.6
2007	63.5	76.4	40.3	64.6	76.8	42.8	55.5	64.4	39.5
2008	64.4	77.3	39.1	65.7	78.0	41.6	56.9	65.9	39.3
2009	64.8	79.0	38.3	67.1	79.8	43.4	59.0	67.6	42.8
2010	65.1	78.5	38.1	67.1	79.5	42.1	63.4	75.7	41.0
2011	65.2	79.2	38.3	68.4	80.9	44.1	64.7	77.5	42.4
2012	66.8	80.4	39.2	70.1	82.3	45.5	66.4	79.0	43.5
2013	67.7	81.3	39.4	71.4	83.6	46.3	67.8	80.7	43.7
2014	68.1	82.2	38.5	71.5	84.2	44.8	68.9	82.0	43.9
2015	67.5	82.1	37.0	71.6	84.8	43.9	68.7	82.4	42.6
2016	67.7	83.0	36.4	72.6	86.2	44.9	69.7	84.2	42.9
2017	69.1	85.0	36.6	74.2	88.4	45.3	71.2	85.9	44.1
2018	69.8	86.2	36.6	75.5	90.1	45.9	71.6	87.0	43.6
2019	69.5	87.5	37.9	75.7	91.5	48.0	70.9	87.2	44.9
2020	69.8	88.0	37.8	76.7	92.6	49.0	72.6	89.2	46.1
2021	69.4	88.8	38.4	77.0	93.6	50.3	75.2	90.9	52.6

주: 1) 각년 8월 자료임.

통계번호 LAB-32318

통계명 임금근로자 상여금 및 시간외수당 수혜율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상여금 수혜율 = (상여금을 받는 임금근로자 수 ÷ 전체 임금근로자 수) × 100.

시간외수당 수혜율 = (시간외수당을 받는 임금근로자 수 ÷ 전체 임금근로자 수)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108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108S&conn_path=I3)

수록기간 2004-2021

통계해설 임금근로자 중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04년 51.7%에서 2021년 67.1%로 늘어났다. 상여금 수혜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정규직의 상여금 수혜율은 2021년 86.7%에 이르지만 같은 해 비정규직의 상여금 수혜율은 35.7%에 불과하다. 시간외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도 2004년 43.4%에서 2021년 50.6%로 증가하였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의 64.9%가 시간외수당을 받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27.6%만이 받는다.

통계표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 상여금 및 시간외수당 수혜율, 2004-2021

연도	상여금 수혜율			시간외수당 수혜율		
	전체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전체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2004	51.7	65.8	27.6	43.4	55.8	22.3
2005	52.1	67.3	25.7	43.6	56.5	21.2
2006	53.5	67.5	27.9	42.5	53.9	21.7
2007	56.1	69.9	31.4	43.4	54.3	24.0
2008	56.7	71.2	28.1	42.6	53.6	20.8
2009	61.1	77.8	29.8	43.4	55.6	20.5
2010	64.7	79.3	35.5	44.6	55.5	22.5
2011	65.0	80.4	35.4	43.8	55.1	22.1
2012	66.8	81.8	36.5	45.3	56.3	23.3
2013	69.6	83.7	40.3	47.6	58.5	25.0
2014	69.5	83.6	39.8	47.8	58.9	24.4
2015	70.1	85.0	39.0	47.2	58.4	23.8
2016	70.0	85.5	38.2	47.3	58.5	24.4
2017	70.7	86.2	39.1	47.8	59.3	24.2
2018	70.4	86.4	37.8	48.1	59.7	24.6
2019	68.8	86.4	38.2	48.2	60.9	25.9
2020	68.8	86.6	37.6	50.0	62.8	27.5
2021	67.1	86.7	35.7	50.6	64.9	27.6

주: 1)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각년 8월 자료임.



통계번호 LAB-32319

통계명 임금근로자 유급휴가 수혜율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임금근로자 유급휴가 수혜율 = (유급휴가를 받는 임금근로자 수 ÷ 전체 임금근로자 수)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0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0S&conn_path=I3)

수록기간 2004-2021

통계해설 유급휴가 수혜율은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2004년 45.7%에서 2021년 64.7%로 꾸준히 늘어났다. 정규직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2021년 83.3%에 이르지만 같은 해 비정규직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35.1%에 그친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비전형, 비기간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 20.5%, 18.7%, 15.9%에 불과하다.

**통계표**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 유급휴가 수혜율, 2004-2021

연도	전체	고용형태별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한시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비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2004	45.7	58.2	24.6	31.8	31.4	32.7	1.6	14.3
2005	45.0	57.9	22.8	30.8	34.7	18.7	1.4	11.1
2006	43.8	55.0	23.3	32.0	33.0	29.0	2.1	10.8
2007	49.9	61.6	29.0	42.2	45.0	35.2	2.3	14.2
2008	52.9	65.4	28.2	41.7	46.4	29.7	2.3	15.6
2009	57.1	70.6	31.8	47.9	54.7	20.1	4.3	17.5
2010	58.7	71.3	33.5	52.6	58.8	33.3	6.0	21.5
2011	56.0	69.2	30.5	47.7	52.3	31.9	5.3	17.8
2012	58.2	71.0	32.2	49.5	53.4	34.1	6.9	19.8
2013	60.1	73.1	33.1	49.9	54.0	32.8	9.1	21.3
2014	60.3	73.8	32.0	47.8	51.3	35.2	8.3	20.8
2015	60.3	73.9	31.9	47.6	52.1	31.0	9.4	20.2
2016	60.2	74.3	31.4	47.6	51.4	32.4	9.3	20.8
2017	61.2	75.7	31.7	47.0	49.4	37.9	11.1	21.4
2018	62.8	77.9	32.1	46.1	47.8	39.8	12.7	20.8
2019	62.9	80.1	33.0	44.4	45.7	39.3	13.3	20.2
2020	64.6	82.1	34.1	46.4	50.7	21.8	14.5	20.7
2021	64.7	83.3	35.1	46.9	50.8	18.7	15.9	20.5

주: 1)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각년 8월 자료임.

통계번호 LAB-32320

통계명 임금근로자 퇴직급여 수혜율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임금근로자 퇴직급여 수혜율 = (퇴직급여를 받는 임금근로자 수 ÷ 전체 임금근로자 수)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0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80S&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21

통계해설 임금근로자 중 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5년 69.9%에서 2021년 74.0%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근로자의 퇴직급여 수혜율은 2021년 93.5%에 이르지만 같은 해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에는 42.7%에 그친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비전형, 비기간제, 시간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혜율은 20%대에 불과하다.

**통계표**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 퇴직급여 수혜율, 2015-2021

연도	전체	고용형태별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한시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비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2015	69.9	84.0	40.6	59.6	63.9	43.5	14.4	30.6
2016	70.9	85.5	41.0	59.9	63.0	47.4	16.7	30.5
2017	72.6	87.8	41.5	59.5	61.4	52.2	19.3	31.3
2018	73.9	89.9	41.5	56.9	57.8	53.5	21.4	29.9
2019	74.0	91.7	42.9	54.5	54.4	54.9	23.7	29.5
2020	73.2	91.9	40.4	53.3	57.7	27.8	21.2	25.8
2021	74.0	93.5	42.7	54.6	58.4	27.4	23.8	27.5

주: 1)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각년 8월 자료임.

통계번호 LAB-32321

통계명 작업위험요인 노출도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해당 위험요인에 근무시간의 1/4 이상 동안 노출되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0&tblId=DT\\_380002\\_D001\\_6TH&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0&tblId=DT_380002_D001_6TH&conn_path=I3)

수록기간 2006-2020

통계해설 작업 시 노출되는 위험요인으로는 진동이 가장 많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취업인구의 22.8%가 작업 시 진동을 경험한다. 소음과 높은 온도에도 자주 노출되는데, 취업인구의 15.3%와 15.2%가 소음과 높은 온도를 경험한다. 가루나 먼지 등에 노출되거나 낮은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도 14.7%와 13.4%가량 된다. 타인의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경우는 과거보다 크게 줄어 5.2%에 그친다.

통계표

작업위험요인 노출도, 2006-2020

연도	진동	소음	높은 온도	가루나 먼지 등	낮은 온도	화학 제품이나 물질	유기용제 증기	타인의 담배연기	감염물질
2006	15.4	21.9	23.4	16.8	10.0	6.7	4.6	18.1	1.6
2010	24.5	23.8	21.6	17.8	11.0	8.1	6.1	9.7	4.1
2011	27.4	22.0	20.5	20.8	13.1	8.1	5.8	11.0	3.6
2014	25.5	21.1	24.8	16.6	15.0	8.2	6.4	12.0	3.5
2017	24.3	20.7	23.6	17.4	19.2	8.1	8.1	13.1	5.7
2020	22.8	15.3	15.2	14.7	13.4	6.0	5.3	5.2	3.1

주: 1) 15세 이상 취업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32322

통계명 장시간근로자 비율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주당 실근로시간(부업 포함)이 48시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출처 <https://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key=44&bbsNo=10&nttNo=135913&searchY=&searchCtgr=&searchDplcCtgr=&searchCnd=all&searchKrwrd=&pageIndex=2&integrDeptCode=>

수록기간 2004-2020

통계해설 장시간근로자는 주당 4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04년 53.7%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20.0%로 낮아졌다. 장시간근로자 비율은 고졸 학력층에서 가장 높고 대졸 이상 학력층에서 가장 낮다. 최근에는 장시간근로자의 비율이 임시직에 비해 상용직에서 더 높지만 과거에는 상용직보다 임시직에서 더 높았다.

**통계표** 교육수준 및 종사상지위별 장시간근로자 비율, 2004-2020

연도	전 체	교육수준별				종사상지위별		
		중졸 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이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004	53.7	56.1	58.6	54.4	43.0	54.4	59.2	38.8
2005	51.4	54.1	55.8	52.9	41.4	51.6	57.2	37.4
2006	50.7	54.4	55.8	51.5	39.9	50.4	56.5	38.1
2007	47.2	51.6	52.4	46.8	36.9	46.3	53.5	35.8
2008	43.5	48.3	49.0	43.8	32.9	42.2	50.1	33.2
2009	43.0	44.5	47.9	43.4	35.5	43.6	46.7	30.9
2010	41.5	43.0	46.7	41.9	33.7	42.3	44.2	29.8
2011	38.4	40.5	43.1	38.5	31.4	39.6	39.4	27.8
2012	38.3	41.0	43.3	38.4	30.6	39.2	39.6	27.8
2013	32.9	35.8	38.2	33.3	25.1	33.1	35.3	24.0
2014	35.2	36.6	40.7	35.5	27.9	36.0	36.3	25.4
2015	34.4	35.3	39.7	34.4	27.9	35.7	34.7	22.2
2016	31.8	33.7	36.4	31.3	26.3	33.2	31.5	21.2
2017	30.8	32.6	35.4	30.7	25.2	32.3	29.7	20.8
2018	26.1	28.4	31.0	25.6	20.4	27.0	25.8	17.7
2019	23.8	24.4	28.7	23.9	18.6	25.1	22.1	16.2
2020	20.0	20.2	24.4	21.1	15.4	21.5	17.2	14.1

통계번호 LAB-32323

통계명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편의시설 설치 사업장 취업 비율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장애편의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취업한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03\\_P06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3&tblId=DT_383003_P068&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1

통계해설 장애인이 취업한 사업장에 가장 많이 설치된 장애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63.2%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사업장에 취업해 있다.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는 각각 58.1%와 50.1%로 절반을 넘는다. 반면 장애인용 승강기와 점자블록이 설치된 사업장에 취업한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각각 38.3%와 37.4%에 불과하다.

**통계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편의시설 설치 사업장 취업 비율, 2016-2021

연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 (보도)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양측 손잡이 설치 등)	높이 차이 (단차)가 없는 출입문	경사로 설치, 바닥 높이차이 제거	복도와 통로의 손잡이	계단 양측 손잡이 (2층 이상 건물)	비상벨, 경광등	장애인용 승강기 (2층 이상 건물)	점자블록
2016	45.1	33.9	33.0	33.1	34.1	-	-	-	-	-
2017	46.6	36.7	37.2	36.9	38.5	-	-	-	-	-
2018	49.8	40.2	38.8	38.3	38.4	-	-	-	-	-
2019	54.1	46.7	41.5	40.8	41.9	34.9	33.8	33.5	29.3	26.6
2020	59.6	51.8	45.3	44.4	44.5	43.5	41.7	41.9	35.8	33.1
2021	63.2	58.1	50.1	48.7	48.3	47.4	44.8	42.6	38.3	37.4

통계번호 LAB-32324

통계명 저임금근로자 비율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저임금근로자 비율 = (중위임금 2/3 미만 근로자 수 ÷ 전체 근로자 수) × 100.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EC\\_I](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EC_I)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저임금근로자는 중위임금의 2/3 미만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전일제 상용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17년까지 20%를 웃돌다가 2018년에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고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21년에는 15.6%로 낮아졌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남성근로자보다 여성근로자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2000년에 여성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무려 45.8%에 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24.3%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근로자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남성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0.2%에 그친다.

통계표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2000-2021**

연도	전체	남성	여성	연도	전체	남성	여성
2000	24.6	15.1	45.8	2011	23.8	16.0	38.2
2001	24.2	15.3	44.4	2012	23.9	16.5	37.3
2002	24.5	15.4	45.1	2013	24.7	16.6	38.9
2003	24.3	15.7	43.3	2014	23.7	15.4	37.8
2004	24.2	16.0	42.3	2015	23.5	15.2	37.6
2005	25.4	17.9	41.9	2016	23.5	15.3	37.2
2006	24.9	16.8	41.1	2017	22.3	14.3	35.3
2007	26.0	18.1	41.0	2018	19.0	12.1	30.0
2008	25.5	17.1	41.1	2019	17.0	11.1	26.1
2009	25.0	16.5	41.0	2020	16.0	10.5	24.7
2010	24.7	16.1	40.4	2021	15.6	10.2	24.3

주: 1) 1인 이상 사업체 전일제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 기준임.

통계번호 LAB-32325

통계명 주관적 업무위험도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자신의 일이 건강을 해치거나 안전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0&tblId=DT\\_380002\\_K001\\_6TH&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0&tblId=DT_380002_K001_6TH&conn_path=I3)

수록기간 2006-2020

통계해설 자신의 일이 건강을 해치거나 안전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은 2010년 이후부터 10% 초중반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 비율은 직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장치·기계 조작·조립직, 기능직, 농림어업숙련직 등에서는 20%가 넘지만 사무직, 판매직, 전문직 등에서는 5% 안팎에 그친다.

**통계표** 직업별 주관적 업무위험도, 2006-2020

연도	전체	직업별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숙련직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조립직	단순 노무직	군인
2006	40.3	29.5	25.1	17.3	37.9	24.9	62.4	66.8	69.5	47.3	32.9
2010	16.5	10.5	8.5	5.6	15.0	5.1	18.3	37.7	37.9	20.7	40.3
2011	11.4	16.5	4.2	3.0	9.5	3.3	12.8	25.4	30.3	15.3	20.1
2014	15.2	9.4	8.3	5.9	13.1	6.9	14.8	35.0	36.2	19.8	12.7
2017	11.1	7.1	5.6	2.6	10.4	4.2	14.2	26.1	26.5	16.6	6.8
2020	13.8	11.8	7.4	4.9	12.7	5.0	21.1	27.4	29.5	18.7	-

주: 1) 2010년까지는 15-59세 취업인구, 2011년부터는 15세 이상 취업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32326

통계명 청소년 부당노동 피해율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해당 부당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8&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학생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59.5%에 달한다. 이 비율은 2013년의 78.4%에 비하면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다. 이 외에도 초과근무를 하거나 약속과 다른 일을 하는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는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 등도 적지 않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표** 청소년 부당노동 피해율, 2013-2021

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함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음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함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함	부당하게 해고를 당함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함	성적 피해를 경험함	구타나 폭행을 당함
2013	78.4	14.8	15.1	27.2	14.5	9.3	13.6	6.3	5.4
2014	77.0	18.5	17.5	27.1	11.5	7.3	13.0	6.0	4.7
2015	71.4	13.8	17.1	25.0	11.8	6.9	10.3	3.2	2.5
2016	69.7	15.6	15.0	20.2	10.6	6.0	9.5	3.3	3.1
2017	65.5	17.1	17.5	20.5	12.3	7.9	15.0	4.4	3.0
2018	57.5	14.4	13.1	18.6	12.2	10.2	11.3	2.9	3.3
2019	58.9	12.4	14.5	16.7	10.2	6.5	10.4	3.0	2.2
2020	61.4	14.2	10.5	14.3	7.4	6.8	4.7	2.8	1.9
2021	59.5	10.8	9.7	8.7	6.3	5.2	5.0	1.6	1.1

주: 1)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32327

통계명 청소년 부당노동피해 경험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해당 부당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79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795&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0

통계해설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이 많이 겪는 피해는 임금체불, 초과근무, 휴게시간 미제공 등이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학생의 15.7%가 임금을 약속된 날짜보다 늦게 받고, 14.7%가 약속되지 않은 초과근무를 요구받으며, 13.2%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한다. 이 외에도 아르바이트 학생의 5% 이상이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고,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며, 손님으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표** 청소년 부당노동피해 경험률, 2016-2020

구분	2016	2018	2020
임금 또는 급여(시급, 일당, 수당)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음	13.4	16.3	15.7
약속되지 않은 초과근무를 요구받음	16.9	17.7	14.7
일을 하면서 휴게시간을 받지 못함(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	14.9	13.2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음	8.8	8.4	6.4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하고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함	-	7.1	5.8
손님으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음	5.4	8.5	5.4
약속보다 일을 더 많이 했지만 초과로 일한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함	6.6	7.3	5.1
일을 하다가 실수로 손실이 발행하여 내 돈으로 물어낸 적이 있음	-	-	4.3
고용주나 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음	4.0	4.5	3.4
일을 하다가 다쳤으나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함	3.5	4.0	3.2
고용주나 관리자,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음	-	-	2.2
최저임금 인상 후 내가 원하지 않은 휴게시간을 강제로 요구받음	-	3.8	2.0

주: 1)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LAB-32328

통계명 최저임금 비율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 (최저임금 ÷ 평균임금) × 100.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 (최저임금 ÷ 중위임금) × 100.

단위 %

자료 OECD

자료출처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N2AVE>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에 대한 비율로 알 수 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0년 23.8%에서 2020년 49.6%로 두 배가량 높아진 후 2021년에 48.9%로 약간 낮아졌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2000년 28.8%에서 2019년 62.7%로 두 배 이상 올랐다가 이후 하락 추세로 바뀌며 2020년과 2021년에 62.5%와 61.4%로 떨어졌다.

통계표

평균임금 및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2000-2021

연도	평균임금 대비	중위임금 대비	연도	평균임금 대비	중위임금 대비
2000	23.8	28.8	2011	35.8	45.5
2001	26.1	31.8	2012	34.1	42.9
2002	27.3	33.4	2013	35.1	44.2
2003	27.3	34.0	2014	35.7	45.8
2004	28.2	35.3	2015	37.8	48.6
2005	29.8	37.3	2016	39.7	50.4
2006	30.6	38.9	2017	41.4	52.8
2007	33.4	42.9	2018	46.1	58.6
2008	34.1	43.6	2019	49.4	62.7
2009	35.9	45.2	2020	49.6	62.5
2010	35.9	45.1	2021	48.9	61.4

주: 1) 평균임금과 중위임금은 전일제 근로자 정액급여 기준임.

통계번호 LAB-32329

통계명 최저임금 수준 및 인상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당해 연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임.

단위 원,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2](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2)

수록기간 2000-2022

통계해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여 시행하는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22년 9160으로 지난 20여 년간 5.7배가량 상승하였다. 최저임금은 2001년과 2018년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 전년 대비 각각 16.6%와 16.4% 인상되었다.

통계표 **최저임금 수준 및 인상률, 2000-2022**

연도	최저임금(원)	인상률(%)	연도	최저임금(원)	인상률(%)
2000	1,600	4.9	2012	4,580	6.0
2001	1,865	16.6	2013	4,860	6.1
2002	2,100	12.6	2014	5,210	7.2
2003	2,275	8.3	2015	5,580	7.1
2004	2,510	10.3	2016	6,030	8.1
2005	2,840	13.1	2017	6,470	7.3
2006	3,100	9.2	2018	7,530	16.4
2007	3,480	12.3	2019	8,350	10.9
2008	3,770	8.3	2020	8,590	2.9
2009	4,000	6.1	2021	8,720	1.5
2010	4,110	2.8	2022	9,160	5.0
2011	4,320	5.1			

주: 1) 최저임금은 시간급임.

통계번호 LAB-32330

통계명 출산전후휴가자 수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입.

단위 명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수록기간 2002-2020

통계해설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수는 2002년 2만 2711명에서 2015년 9만 4590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바뀌며 2020년에는 7만 949명으로 줄었다. 정부의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액은 꾸준히 늘어났는데, 2002년 대비 2020년에 약 13배 증가하였다.

통계표

출산전후휴가자 수, 2002-2020

연도	출산전후휴가자 수(명)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액(100만 원)
2002	22,711	22,602
2003	32,133	33,522
2004	38,541	41,610
2005	41,104	46,041
2006	48,972	90,886
2007	58,368	132,412
2008	68,526	166,631
2009	70,560	178,477
2010	75,742	192,564
2011	90,290	232,915
2012	93,394	241,900
2013	90,507	235,105
2014	88,756	236,845
2015	94,590	258,139
2016	89,834	247,331
2017	81,093	242,598
2018	76,414	248,438
2019	73,306	260,394
2020	70,949	285,771

통계번호 LAB-32401

통계명 공무원노동조합 조직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노사관계 권리

산출방법 공무원노동조합 조직률 = (조합원 수 ÷ 가입대상 공무원 수) × 100.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36](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36)

수록기간 2006-2020

통계해설 공무원노동조합은 2006년 78개소에서 2020년 142개소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조합 수에 비해 조합원 수는 더 크게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6만여 명에서 31만여 명으로 다섯 배가량 증가하였다. 공무원노동조합 조직률은 노동조합 가입대상 공무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7년까지 50-60%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8년에 81.6%로 크게 오른 후 2020년에는 87.8%에 이르고 있다.

**통계표** 공무원노동조합 수와 조직률, 2006-2020

연도	노동조합 수(개소)	조합원 수(명)	조직률(%)
2006	78	63,275	21.8
2007	98	173,125	59.7
2008	95	215,537	72.1
2009	95	158,910	53.1
2010	96	164,147	55.6
2011	99	165,566	56.1
2012	110	164,683	55.8
2013	122	179,615	60.9
2014	125	184,260	61.6
2015	144	192,831	64.1
2016	150	198,505	65.5
2017	155	203,558	66.5
2018	147	261,997	81.6
2019	142	297,221	85.2
2020	142	317,694	87.8

통계번호 LAB-32402

통계명 교원노동조합 조직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노사관계 권리

산출방법 교원노동조합 조직률 = (조합원 수 ÷ 가입대상자 수) × 100.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교원노조 가입률」.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3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35)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교원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003년에 12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6만여 명으로 줄었다. 2016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체됨에 따라 조합원 수는 7000여 명까지 줄었다가 이후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출범하면서 2020년에는 9만 3000여 명까지 늘어났다. 교원노동조합 조직률은 노동조합 가입대상 교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01년 33.1%로 최고 수준을 보인 후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이 해체되기 직전인 2015년 14.5%까지 떨어졌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출범한 후 2020년에는 16.8%의 조직률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표** 교원노동조합 수와 조직률, 2000-2020

연도	노동조합 수 (개소)	조합원 수 (명)	조직률 (%)	연도	노동조합 수 (개소)	조합원 수 (명)	조직률 (%)
2000	2	106,060	31.6	2011	11	74,465	18.0
2001	2	113,056	33.1	2012	11	69,656	17.3
2002	2	118,435	32.8	2013	10	68,748	16.8
2003	2	120,060	32.0	2014	10	60,120	14.5
2004	2	105,000	27.3	2015	10	60,284	14.5
2005	2	106,209	27.0	2016	10	7,291	1.8
2006	9	104,280	25.8	2017	12	7,096	1.5
2007	9	98,649	24.0	2018	15	9,261	2.0
2008	10	92,877	22.2	2019	23	14,716	3.1
2009	11	82,324	20.7	2020	95	93,865	16.8
2010	11	75,425	19.0				

주: 1) 201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적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2017년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출범함.

통계번호 LAB-32403

통계명 노동조합 조직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노사관계 권리

산출방법 노동조합 조직률 = (조합원 수 ÷ 조직대상 근로자 수) × 100.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1](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1)

수록기간 1980-2019

통계해설 노동조합 조직률은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1980년 21.0%에서 점차 낮아져 2000년에는 12.0%로 떨어졌고 이후 최근까지 10% 초반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으로만 보면 2015년 10.2%에서 2017년 10.7%, 2019년 12.5%로 완만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표** 노동조합 수와 조직률, 1980-2019

연도	노동조합 수(개소)	조직대상 근로자 수(1000명)	조합원 수(1000명)	조직률(%)
1980	2,618	4,516	948	21.0
1990	7,698	10,264	1,887	18.4
2000	5,698	12,701	1,527	12.0
2001	6,150	13,103	1,569	12.0
2002	6,506	13,839	1,606	11.6
2003	6,257	14,144	1,550	11.0
2004	6,017	14,538	1,537	10.6
2005	5,971	14,692	1,506	10.3
2006	5,889	15,072	1,559	10.3
2007	5,099	15,651	1,688	10.8
2008	4,886	15,847	1,666	10.5
2009	4,689	16,196	1,640	10.1
2010	4,420	16,804	1,643	9.8
2011	5,120	17,090	1,720	10.1
2012	5,177	17,338	1,781	10.3
2013	5,305	17,981	1,848	10.3
2014	5,445	18,429	1,905	10.3
2015	5,794	19,027	1,939	10.2
2016	6,164	19,172	1,966	10.3
2017	6,239	19,565	2,088	10.7
2018	5,868	19,732	2,331	11.8
2019	6,156	20,314	2,539	12.5

통계번호 LAB-32404

통계명 임금결정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노사관계 권리

산출방법  $\text{임금결정률} = (\text{임금인상률 결정 사업장 수} \div \text{조사대상 사업장 수}) \times 100.$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0)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임금결정률은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비율로, 임금교섭 타결 수준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00년 93.7%에서 2010년 69.2%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90% 안팎 수준으로 높아졌다. 임금결정률은 과거에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더 높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부문별 임금결정률, 2000-2021

연도	전체	민간부문	공공부문	연도	전체	민간부문	공공부문
2000	93.7	93.8	90.8	2011	82.2	83.1	60.5
2001	93.0	93.5	77.0	2012	77.1	78.2	49.9
2002	92.3	92.3	90.9	2013	80.6	81.4	58.5
2003	92.2	92.6	79.5	2014	82.5	83.7	49.9
2004	93.3	93.6	84.6	2015	90.6	90.9	80.1
2005	90.7	91.1	79.4	2016	86.7	87.3	69.3
2006	85.7	86.3	66.5	2017	84.1	84.3	79.8
2007	76.5	77.2	58.7	2018	84.2	84.0	89.9
2008	84.0	84.4	73.3	2019	90.1	90.4	83.1
2009	76.2	77.4	48.4	2020	89.4	89.4	91.3
2010	69.2	70.3	43.8	2021	94.7	94.8	93.7

주: 1)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2) 2019년부터 조사거부, 미제출 사업장은 제외함.



## 7 건강과 보건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체	통계번호	통계명	취약집단
건강과 보건	평등권	보건서비스의 평등	HEA-12501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비율	
			HEA-12502	시도별 공공의료기관병상 비율	
			HEA-12503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	
			HEA-12504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HEA-12505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공공보건기관 인력 수	
			HEA-12506	시도별 필요의료 미충족률	
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생명권	HEA-22601	군 사고사망자 수	
			HEA-22602	노인 자살생각 이유	노인
			HEA-22603	노인 자살생각률	노인
			HEA-22604	사고사망률	
			HEA-22605	사형제도 폐지 찬성률	
			HEA-22606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아동청소년
			HEA-22607	자살률	
			HEA-22608	자살충동률	
			HEA-22609	장애인 자살생각률	장애인
			HEA-22610	정신질환자 자살률	
			HEA-22611	정신질환자 초과사망비	
			HEA-22612	청소년 자살생각률	아동청소년
			HEA-22613	청소년 자살시도율	아동청소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HEA-32702	건강검진 수검률				
HEA-32703	건강권 존중도				
HEA-32704	결핵환자 발생률				
HEA-32705	급성심정지 뇌기능회복률				
HEA-32706	급성심정지 생존율				
HEA-32707	기대수명				
HEA-32708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노인			
HEA-32709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HEA-32710	스트레스 인지율				
HEA-32711	아동·청소년 수면 부족률	아동청소년			
HEA-32712	아동·청소년 주관적 건강수준	아동청소년			
HEA-32713	암 5년 상대생존율				
HEA-32714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				
HEA-3271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체	통계번호	통계명	취약집단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HEA-32716	주관적 건강수준		
			HEA-32717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이동청소년	
			HEA-32718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	이동청소년	
		적절한 식생활 권리	HEA-32801	식비 부족으로 인한 결식 경험률		
			HEA-32802	식생활안정성 확보가구 비율		
			HEA-32803	아침식사 결식률		
			HEA-32804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HEA-32805	유통식품 안전검사 부적합률		
			HEA-32806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	이동청소년	
			HEA-32807	학교 식중독 발생률	이동청소년	
			의료 접근권	HEA-32901	건강보험 보장률	
				HEA-32902	공공의료기관 비율	
				HEA-32903	공공의료기관병상 비율	
				HEA-32904	공공의료비 지출률	
				HEA-32905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용률	노인
				HEA-32906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미진료 경험률	
				HEA-32907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만족도	
				HEA-32908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한 인식	
				HEA-32909	본인부담 의료비	
				HEA-32910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	외국인
		모성 및 아동 보호	HEA-32911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담당인구		
			HEA-32912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		
			HEA-32913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		
			HEA-32914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HEA-32915	인구 10만 명당 공공보건기관 인력 수		
			HEA-32916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HEA-32917	장애인 본인부담 의료비	장애인	
			HEA-32918	장애인 필요의료 미충족률	장애인	
			HEA-32919	중증외상환자 1시간 이내 응급실도착률		
			HEA-33001	모성사망비	여성	
			HEA-33002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이동청소년	
			HEA-33003	영아사망률	이동청소년	
			HEA-33004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이동청소년	
HEA-33005	저체중아 비율	이동청소년				
HEA-33006	조산아 비율	이동청소년				
HEA-33007	청소년 출산율	이동청소년				

통계번호 HEA-12501

통계명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비율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평등권

보건서비스의 평등

산출방법 공공의료기관 비율 = (공공의료기관 수 ÷ 전체 의료기관 수) × 100.

단위 %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1&tblId=DT\\_411002\\_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1&tblId=DT_411002_03&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20

통계해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2018년까지 5.7-5.8% 수준이었으나 2019년과 2020년에 5.5%와 5.4%로 약간 낮아졌다.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대체로 광역시보다 광역도 지역에서 더 높다. 2020년 자료로 보면 제주와 강원은 20% 안팎에 이르는 반면 울산, 부산, 광주 3% 미만에 그친다.

통계표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비율, 2015-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	5.7	4.3	2.7	3.9	4.5	3.3	6.4	1.0	0.0	4.3	17.6	9.1	8.5	5.3	10.4	9.0	7.1	18.2
2016	5.8	4.2	2.5	4.3	4.2	3.1	6.2	1.0	0.0	4.2	19.8	9.6	8.9	5.7	10.0	10.0	7.0	20.0
2017	5.7	4.2	2.5	4.4	3.9	3.0	5.8	1.0	0.0	4.1	19.6	9.3	8.4	5.7	10.4	9.6	6.8	20.8
2018	5.7	4.1	2.6	4.4	4.3	3.0	5.7	1.0	12.5	4.0	19.8	8.7	8.4	5.7	10.2	10.2	6.5	21.7
2019	5.5	4.0	2.5	4.2	4.1	3.0	5.6	1.0	11.1	3.5	19.2	9.1	8.3	5.8	9.7	10.3	6.4	20.8
2020	5.4	4.1	2.3	4.1	4.0	2.9	5.4	1.0	6.7	3.6	18.8	8.8	7.9	5.8	9.7	10.3	6.3	20.0

주: 1)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의료원이 포함됨.

통계번호 HEA-12502

통계명 시도별 공공의료기관병상 비율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평등권

보건서비스의 평등

산출방법 공공의료기관병상 비율 = (공공의료기관병상 수 ÷ 전체 의료기관병상 수) × 100.

단위 %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1&tblId=DT\\_411002\\_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1&tblId=DT_411002_03&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20

통계해설 전체 의료기관병상 중 공공의료기관병상의 비율은 2018년까지 10% 이상 수준이었으나 2019년과 2020년에 9.7%로 약간 낮아졌다. 공공의료기간 비율은 대체로 광역시보다 광역도 지역에서 더 높다. 2020년 자료로 보면 제주와 강원은 각각 32.5%와 23.1%에 이르는 반면 울산, 인천, 부산은 각각 1.1%, 4.6%, 5.4%에 그친다.

**통계표** 시도별 공공의료기관병상 비율, 2015-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	10.5	12.1	6.5	10.7	5.0	7.9	16.1	0.8	0.0	9.1	25.0	14.9	10.2	10.0	13.6	10.9	11.2	29.0
2016	10.5	11.7	6.2	11.0	4.5	7.5	16.0	0.7	0.0	8.6	25.7	15.6	15.0	10.1	13.6	11.4	11.3	29.1
2017	10.2	11.3	6.3	10.9	4.3	7.1	15.1	0.9	0.0	7.8	25.8	15.5	13.5	9.6	13.6	10.9	11.6	27.9
2018	10.0	11.1	6.1	10.7	4.7	7.2	14.9	0.9	0.0	7.7	24.4	14.6	14.0	9.5	13.4	10.8	10.5	32.1
2019	9.7	10.7	6.0	10.1	4.5	7.3	14.3	0.9	0.0	7.2	23.3	14.9	13.6	9.5	13.1	10.9	10.6	32.1
2020	9.7	10.9	5.4	10.5	4.6	7.5	14.2	1.1	16.2	7.3	23.1	14.7	13.7	9.9	12.1	10.9	10.4	32.5

주: 1)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의료원이 포함됨.

통계번호 HEA-12503

통계명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평등권

보건서비스의 평등

산출방법  $\text{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 = (\text{의료기관 수} \div \text{추계인구}) \times 1,000.$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포함됨.

단위 개소/1000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MIRE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MIRE01&conn_path=I3)

수록기간 2003-2021

통계해설 각종 병의원과 보건소 등을 포함하는 의료기관의 수는 2003년에서 2021년 사이 인구 1000명당 1.02개소에서 1.44개소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인구 대비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가장 많다. 2021년 자료로 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는 1.93개소에 이른다. 대구(1.64개소), 전북(1.61개소), 부산(1.61개소), 대전(1.57개소), 광주(1.50개소), 전남(1.47개소), 제주(1.45개소) 등은 전국 평균 이상 지역이다.

**통계표**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 2003-2021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3	1.02	1.23	1.06	1.05	0.84	0.99	1.11	0.88	-	0.87	0.94	1.00	1.02	1.15	1.02	0.94	0.92	1.01
2004	1.05	1.27	1.08	1.08	0.88	1.02	1.16	0.92	-	0.91	0.97	1.02	1.06	1.19	1.07	0.98	0.95	1.03
2005	1.09	1.32	1.13	1.12	0.91	1.05	1.19	0.97	-	0.94	1.00	1.06	1.10	1.25	1.13	1.02	0.99	1.09
2006	1.12	1.37	1.16	1.16	0.93	1.09	1.22	0.99	-	0.97	1.01	1.09	1.12	1.28	1.16	1.05	1.01	1.13
2007	1.15	1.42	1.20	1.19	0.95	1.11	1.24	1.03	-	0.98	1.04	1.10	1.12	1.31	1.19	1.07	1.04	1.16
2008	1.17	1.46	1.22	1.22	0.97	1.13	1.26	1.04	-	1.00	1.06	1.13	1.14	1.33	1.22	1.10	1.06	1.16
2009	1.20	1.51	1.24	1.25	0.99	1.17	1.28	1.08	-	1.02	1.08	1.13	1.16	1.36	1.26	1.12	1.07	1.17
2010	1.22	1.55	1.27	1.28	0.99	1.19	1.29	1.11	-	1.04	1.09	1.15	1.17	1.38	1.28	1.13	1.08	1.20
2011	1.24	1.57	1.30	1.31	1.01	1.22	1.30	1.13	-	1.05	1.10	1.17	1.18	1.40	1.31	1.14	1.09	1.22
2012	1.25	1.59	1.33	1.33	1.02	1.24	1.34	1.12	1.14	1.05	1.11	1.17	1.18	1.42	1.33	1.16	1.11	1.25
2013	1.27	1.61	1.36	1.37	1.04	1.28	1.36	1.13	1.10	1.07	1.13	1.18	1.19	1.45	1.34	1.17	1.12	1.29
2014	1.29	1.64	1.40	1.40	1.05	1.33	1.38	1.14	1.28	1.09	1.15	1.20	1.20	1.46	1.36	1.19	1.13	1.31
2015	1.31	1.67	1.42	1.42	1.08	1.35	1.41	1.16	1.16	1.10	1.17	1.22	1.22	1.49	1.37	1.22	1.15	1.32
2016	1.34	1.71	1.45	1.47	1.10	1.38	1.44	1.18	1.09	1.13	1.18	1.24	1.23	1.52	1.39	1.22	1.18	1.35
2017	1.36	1.75	1.48	1.50	1.11	1.42	1.45	1.19	1.17	1.14	1.20	1.25	1.24	1.54	1.41	1.24	1.20	1.40
2018	1.38	1.79	1.52	1.53	1.13	1.44	1.48	1.20	1.16	1.16	1.21	1.27	1.24	1.56	1.43	1.26	1.21	1.41
2019	1.40	1.83	1.54	1.56	1.15	1.46	1.50	1.21	1.12	1.17	1.22	1.29	1.24	1.58	1.44	1.27	1.22	1.43
2020	1.42	1.87	1.58	1.59	1.17	1.48	1.53	1.23	1.14	1.19	1.24	1.30	1.26	1.59	1.45	1.28	1.24	1.44
2021	1.44	1.93	1.61	1.64	1.20	1.50	1.57	1.25	1.11	1.21	1.26	1.33	1.26	1.61	1.47	1.28	1.26	1.45

주: 1) 의료기관 수는 연말 기준임.

통계번호 HEA-12504

통계명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평등권

보건서비스의 평등

산출방법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 (의사 수 ÷ 추계인구) × 1000.

의사에는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포함됨.

단위 명/1000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T&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T&conn_path=I3)

수록기간 2007-2021

통계해설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사의 수는 2007년에서 2021년 사이 인구 1000명당 2.13명에서 3.0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인구 대비 의사 수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4.71명으로 충북(2.36명), 충남(2.32명), 경북(2.13명), 세종(1.97명) 등의 지역보다 두 배 또는 그 이상으로 많다.

**통계표**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07-2021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7	2.13	2.95	2.34	2.45	1.70	2.56	2.42	1.73	-	1.69	2.04	1.75	1.80	2.24	1.86	1.58	1.69	1.75
2008	2.25	3.18	2.43	2.59	1.76	2.61	2.59	1.79	-	1.80	2.12	1.83	1.88	2.38	1.99	1.65	1.79	1.90
2009	2.33	3.32	2.49	2.66	1.83	2.62	2.70	1.87	-	1.86	2.18	1.90	1.93	2.49	2.10	1.71	1.89	2.00
2010	2.41	3.48	2.62	2.72	1.84	2.77	2.76	1.89	-	1.91	2.24	1.94	1.94	2.53	2.16	1.76	1.94	2.08
2011	2.46	3.54	2.73	2.76	1.91	2.90	2.81	1.99	-	1.97	2.22	1.97	1.97	2.54	2.21	1.80	1.99	2.14
2012	2.51	3.62	2.83	2.85	1.96	2.94	2.93	2.00	1.37	2.01	2.25	1.98	2.02	2.57	2.26	1.83	2.03	2.18
2013	2.61	3.82	2.94	2.92	2.03	3.05	3.00	2.04	1.35	2.07	2.30	2.05	2.06	2.69	2.35	1.89	2.09	2.33
2014	2.65	3.87	3.03	2.97	2.12	3.15	3.07	2.06	1.57	2.10	2.35	2.09	2.11	2.75	2.38	1.95	2.15	2.34
2015	2.70	3.93	3.11	3.06	2.18	3.24	3.16	2.15	1.46	2.15	2.40	2.15	2.13	2.84	2.41	1.95	2.19	2.40
2016	2.76	4.03	3.17	3.17	2.22	3.40	3.23	2.22	1.38	2.20	2.43	2.20	2.16	2.88	2.49	1.98	2.30	2.42
2017	2.84	4.16	3.24	3.23	2.33	3.48	3.33	2.28	1.62	2.27	2.48	2.24	2.21	2.96	2.56	2.04	2.36	2.51
2018	2.89	4.27	3.30	3.32	2.41	3.51	3.44	2.28	1.59	2.31	2.51	2.29	2.21	2.99	2.58	2.06	2.37	2.49
2019	2.97	4.42	3.39	3.44	2.50	3.62	3.54	2.33	1.60	2.38	2.58	2.33	2.26	3.06	2.64	2.11	2.44	2.55
2020	3.03	4.53	3.46	3.53	2.54	3.67	3.55	2.36	1.97	2.44	2.65	2.35	2.30	3.07	2.64	2.14	2.49	2.56
2021	3.09	4.71	3.54	3.63	2.59	3.66	3.62	2.42	1.97	2.49	2.68	2.36	2.32	3.10	2.70	2.13	2.52	2.59

주: 1) 의사 수는 연말 기준임.

통계번호 HEA-12505

통계명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공공보건기관 인력 수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평등권

보건서비스의 평등

산출방법 인구 10만 명당 공공보건기관 인력 수 = (공공보건기관 인력 수 ÷ 추계인구) × 100,000.  
공공보건기관 인력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소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보건교육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보건직, 기능직 등이 포함됨.

단위 명/10만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9N\\_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9N_001&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9N\\_0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9N_002&conn_path=I3)

수록기간 2001-2020

통계해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는 2017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40명 안팎 수준에 머물다가 2018년부터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2020년에는 48.3명까지 늘어났다. 인구 대비 공공보건기관 인력 수는 전남, 강원, 경북, 전북 등 광역도 지역에서 많고 대전, 대구, 울산 등 광역시 지역에서 적다.

**통계표**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공공보건기관 인력 수, 2001-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38.8	20.1	16.2	15.5	17.7	19.2	17.7	19.8	-	22.8	87.3	68.3	87.5	81.7	109.8	80.5	57.8	52.4
2002	39.0	20.9	16.6	15.5	17.5	25.5	15.4	19.8	-	21.6	88.6	71.4	85.6	84.3	112.6	82.9	56.6	47.6
2003	40.1	21.1	16.9	15.8	17.9	18.6	18.4	21.0	-	21.6	91.7	73.5	94.4	87.6	123.8	84.6	58.9	53.3
2004	41.0	21.4	17.4	16.6	18.7	19.8	21.0	22.2	-	21.7	94.1	76.8	96.3	90.6	124.9	86.8	62.7	56.0
2005	41.1	22.7	17.6	17.2	21.0	20.3	21.5	24.9	-	21.5	91.0	76.6	92.7	91.2	120.0	89.1	62.8	56.7
2006	41.3	22.6	18.1	17.5	21.0	20.2	21.8	22.5	-	22.9	94.1	74.7	91.1	92.8	121.0	89.8	61.2	57.6
2007	41.1	22.9	17.9	17.9	20.9	19.3	19.9	23.2	-	22.7	92.2	74.2	90.3	90.8	126.6	88.3	61.9	52.7
2008	41.1	23.9	17.7	17.9	21.0	18.6	19.5	23.6	-	22.4	91.1	77.0	89.1	91.3	131.4	87.7	60.2	51.1
2009	41.8	25.5	18.5	18.6	21.4	19.2	18.8	22.9	-	23.1	92.2	75.8	88.0	91.3	125.2	89.7	63.6	51.9
2010	40.4	25.3	18.7	16.8	21.3	20.2	17.8	23.6	-	21.4	89.7	74.3	84.6	92.0	125.9	86.6	57.4	52.9
2011	40.1	25.7	18.6	17.1	21.3	22.7	17.2	23.0	-	20.9	86.9	71.4	81.6	87.2	126.7	85.8	60.5	49.7
2012	39.7	25.2	19.2	17.9	22.2	22.9	17.1	22.7	78.3	19.9	85.6	71.3	81.2	84.1	133.5	83.8	58.5	45.1
2013	38.8	27.6	18.7	18.3	22.4	21.7	17.0	22.0	71.8	19.6	83.0	67.4	77.2	83.0	119.8	81.1	54.6	45.3
2014	38.9	28.1	18.5	19.5	23.2	22.8	16.8	22.2	68.0	20.2	82.4	69.1	77.3	82.5	115.2	80.6	53.8	44.7
2015	39.3	29.0	23.3	19.6	23.3	22.4	16.1	21.6	47.0	20.7	83.6	68.2	75.2	80.6	116.4	81.4	52.4	45.1
2016	39.7	30.0	23.1	19.3	23.1	25.1	16.4	21.4	35.8	21.3	82.9	67.4	74.5	80.8	116.2	82.0	54.1	44.8
2017	40.6	31.9	25.7	19.3	22.9	25.9	16.7	22.9	34.6	21.9	86.1	66.5	74.0	82.4	117.5	82.7	54.7	44.1
2018	43.0	33.5	30.9	22.3	24.1	24.2	18.5	29.0	29.6	25.3	86.1	70.4	78.3	83.3	120.5	86.3	55.6	44.3
2019	46.0	36.9	33.2	24.1	30.5	27.7	21.0	30.2	33.5	26.6	88.4	73.6	82.7	89.1	123.8	90.9	61.3	43.8
2020	48.3	38.2	38.0	24.8	35.7	34.6	22.0	32.6	34.7	27.8	95.8	77.9	85.1	90.2	123.3	93.7	65.9	43.6

통계번호 HEA-12506

통계명 시도별 필요의료 미충족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평등권  
보건서비스의 평등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 진료(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75\\_NECE\\_NTR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75_NECE_NTR02&conn_path=I3)

수록기간 2008-2021

통계해설 필요의료 미충족률은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모든 시도 지역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1년에는 5% 안팎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해 기준으로 필요의료 미충족률은 제주, 대구, 대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인천, 경남, 전남, 전북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시도별 필요의료 미충족률, 2008-2021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8	14.4	11.8	13.0	12.0	14.8	12.9	12.0	-	14.0	14.9	9.2	11.4	13.1	14.3	13.0	13.8	14.8
2009	13.5	12.5	15.2	16.6	15.6	12.0	13.1	-	13.5	14.3	10.2	11.1	10.0	15.5	14.2	14.6	23.6
2011	14.5	14.0	13.3	13.6	15.5	11.5	11.4	-	13.6	11.8	12.2	13.6	11.7	12.3	12.9	16.6	18.3
2012	13.3	11.2	13.0	12.7	13.6	10.7	10.3	11.2	11.5	10.9	11.0	11.8	10.2	12.4	12.1	12.2	14.8
2013	15.0	13.4	12.6	13.3	15.4	12.8	9.6	15.7	13.3	13.2	13.9	15.2	11.6	12.3	12.4	13.3	15.9
2014	11.7	13.5	13.8	13.2	12.9	10.7	11.2	14.5	11.0	11.5	10.6	12.0	11.1	12.1	14.1	12.8	15.1
2015	11.9	12.0	10.9	13.4	12.2	11.9	8.0	17.0	11.5	12.5	11.4	15.1	11.2	13.3	13.4	13.0	11.9
2016	12.0	14.5	9.4	12.0	11.9	11.3	7.4	9.3	11.9	10.4	10.3	12.5	11.0	13.0	11.6	14.7	11.9
2017	10.0	11.3	8.2	12.8	11.6	11.1	6.2	12.4	10.5	11.2	10.6	12.5	12.8	11.1	12.5	14.9	11.8
2018	7.6	9.5	6.4	11.6	8.8	8.4	7.5	10.2	9.0	10.8	9.0	13.0	10.1	10.0	9.9	11.1	8.1
2019	5.3	5.4	6.4	7.9	6.7	4.6	6.3	3.0	5.9	5.2	7.4	10.5	7.7	8.8	5.2	6.6	4.7
2020	4.8	5.5	4.1	7.5	5.8	5.5	5.5	4.3	5.1	6.5	6.1	5.2	6.5	6.9	7.3	8.4	6.5
2021	4.4	6.1	3.5	7.3	5.6	3.6	3.8	4.8	4.9	6.3	5.4	6.5	6.8	6.9	5.0	7.2	3.4

주: 1) 추계인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결과임.  
2) 2019년에 문항 변경됨.



통계번호 HEA-22601

통계명 군 사고사망자 수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산출방법 군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군기사고 사망자 수입.

단위 명

자료 국방부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군대에서 안전사고나 군기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는 2000년 182명에서 2015년 93명으로 줄었고 2020년에는 55명까지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1년에 103명으로 급증하였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군기사고로 인한 사망자인데, 군기사고 사망자 중에서는 자살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2021년 전체 사망자의 약 80%가 자살자이다. 군 사망자의 대부분이 자살자임을 알 수 있다.

통계표 군 사고사망자 수, 2000-2021

연도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								군기사고 사망자				
		차량	항공·함정	익사	폭발	추락·충격	화재	기타	합계	자살	총기	폭행	기타	합계
2000	182	43	3	14	1	12	-	23	96	82	-	2	2	86
2001	164	37	5	19	2	11	1	20	95	66	-	-	3	69
2002	158	34	5	9	2	12	-	10	72	79	2	2	3	86
2003	150	29	12	13	1	10	-	8	73	69	-	1	7	77
2004	135	27	6	13	3	4	1	11	65	67	-	1	2	70
2005	124	21	4	11	1	6	-	7	50	64	8	1	1	74
2006	128	25	3	7	-	2	-	13	50	77	1	-	-	78
2007	121	22	3	5	-	2	-	7	39	80	2	-	-	82
2008	134	25	8	7	1	9	-	8	58	75	-	-	1	76
2009	113	13	-	7	-	8	-	4	32	81	-	-	-	81
2010	129	9	13	4	-	8	-	12	46	82	-	1	-	83
2011	143	18	5	2	1	5	-	11	42	97	4	-	-	101
2012	111	17	1	2	-	5	3	10	38	72	-	1	-	73
2013	117	15	2	6	-	7	-	7	37	79	-	-	1	80
2014	101	12	-	3	1	2	-	7	25	67	5	1	3	76
2015	93	6	-	5	1	5	-	11	28	57	-	-	8	65
2016	81	5	7	-	3	4	-	5	24	54	-	-	3	57
2017	76	10	-	3	3	1	-	6	23	52	-	-	1	53
2018	86	6	7	5	1	4	1	2	26	56	-	-	4	60
2019	86	9	-	3	1	7	-	3	23	62	-	-	1	63
2020	55	1	-	5	-	2	-	3	11	42	-	-	2	44
2021	103	8	-	6	-	2	-	3	19	83	-	-	1	84

주: 1) 안전사고 사망자에는 차량, 항공·함정, 익사, 폭발, 추락·충격, 화재 등에 의한 사망자가 포함되고, 군기사고 사망자에는 자살, 총기, 폭행 등에 의한 사망자가 포함됨.

통계번호 HEA-22602

통계명 노인 자살생각 이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자살 이유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1\\_01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1_013&conn_path=I3)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노인의 자살생각 이유로는 건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변관계 단절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노인의 자살생각 이유는 성별로 다른데, 남성 노인의 경우 건강이 주된 이유이지만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이유이다.

**통계표** 성별 노인 자살생각 이유, 2011-2020

연도	전체					남성					여성				
	건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부부·자녀·친구 갈등 및 단절	기타	건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부부·자녀·친구 갈등 및 단절	기타	건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부부·자녀·친구 갈등 및 단절	기타
2011	32.6	30.8	10.2	15.6	10.9	34.6	34.1	10.2	13.5	7.6	31.5	28.8	10.2	16.9	12.5
2014	24.4	40.4	13.3	11.5	10.4	23.6	42.0	16.7	9.6	8.3	24.9	39.4	11.3	12.7	11.9
2017	27.6	27.7	12.4	18.6	13.8	32.1	28.8	12.5	16.4	10.5	24.7	27.1	12.3	20.0	15.8
2020	23.7	23.0	18.4	13.1	21.8	27.4	17.3	22.1	8.7	24.5	22.0	25.7	16.7	15.2	20.4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22603

통계명 노인 자살생각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1\\_01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1_013&conn_path=I3)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1년 11.2%, 2014년 10.9%, 2017년 6.7%, 2020년 2.1%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노인의 자살생각률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더 낮고,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대체로 낮다.

**통계표** 배우자유무·가구형태·소득수준별 노인 자살생각률, 2011-2020

연도	전체	배우자유무별		가구형태별				소득수준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1	11.2	9.9	13.9	15.1	9.2	11.5	13.5	16.3	11.7	10.8	10.1	7.0
2014	10.9	8.9	14.3	15.3	8.1	11.7	12.9	16.5	10.5	9.5	9.8	8.3
2017	6.7	5.1	9.5	10.6	5.0	5.9	9.0	10.8	7.0	6.0	5.1	4.4
2020	2.1	1.7	3.1	2.9	1.6	2.9	2.6	2.3	2.0	2.1	1.7	2.6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22604

통계명 사고사망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산출방법 사고사망률 = (사고사망자 수 ÷ 총인구) × 100,000. 총인구는 주민등록연앙인구임.

단위 명/10만 명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사고사망률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익사, 화재, 유독성 물질 노출 등에 의한 사망자 발생률을 말하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나타낸다. 인구 10만 명당 사고사망자의 수는 2000년 36.9명에서 2010년 20.2명으로 줄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14.9명까지 떨어졌다. 사고사망은 대부분 운수사고와 추락에 의해 발생한다. 2020년에 운수사고 사망자와 추락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7.7명과 5.2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86.6%를 차지한다.

통계표 사고사망률, 2000-2020

연도	전체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2000	36.9	25.5	5.8	3.5	1.3	0.9
2001	31.7	21.1	5.8	2.7	1.3	0.8
2002	29.5	19.2	6.6	2.0	1.2	0.6
2003	30.4	19.2	7.3	1.9	1.4	0.5
2004	27.5	17.3	6.9	2.0	0.8	0.5
2005	26.2	16.4	6.5	1.8	0.9	0.6
2006	26.0	16.0	7.0	1.6	0.8	0.6
2007	24.2	15.6	6.1	1.5	0.6	0.5
2008	22.3	14.7	5.0	1.4	0.6	0.5
2009	20.7	14.4	4.3	1.2	0.5	0.4
2010	20.2	13.7	4.3	1.3	0.6	0.4
2011	19.1	12.6	4.3	1.3	0.5	0.4
2012	19.7	12.9	4.2	1.4	0.6	0.6
2013	18.9	11.9	4.6	1.2	0.6	0.5
2014	17.9	11.2	4.5	1.1	0.6	0.4
2015	17.5	10.9	4.6	1.2	0.5	0.4
2016	17.6	10.1	5.1	1.3	0.6	0.6
2017	17.4	9.8	5.2	1.1	0.6	0.6
2018	16.6	9.1	5.2	1.1	0.6	0.6
2019	15.2	8.2	5.2	0.9	0.5	0.4
2020	14.9	7.7	5.2	1.0	0.5	0.5

통계번호 HEA-22605

통계명 사형제도 폐지 찬성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산출방법 사형제도를 유지 또는 폐지하는 것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13.9%에서 2020년 19.3%로 늘어났다가 2021년에 17.5%로 줄었다. 하지만 2022년에 20.3%로 다시 늘어났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다. 연령별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사형제도 폐지 찬성률,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13.9	14.1	13.6	11.8	12.3	14.9	15.3	14.6	13.6	13.2	14.1	20.8
2020	19.3	19.3	19.1	17.8	16.8	19.8	22.0	19.3	17.6	18.3	20.4	26.4
2021	17.5	18.2	16.7	17.2	15.9	19.1	20.0	15.6	14.0	16.4	19.4	26.6
2022	20.3	20.9	19.8	23.1	21.6	20.9	19.7	18.2	17.5	19.8	21.5	30.9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22606

통계명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산출방법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0-14세 안전사고 사망자 수 ÷ 0-14세 인구) × 100,000.  
0-14세 인구는 주민등록연앙인구임.

단위 명/10만 명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000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0005&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운수사고, 추락, 익사, 질식, 화상, 중독 등으로 인한 아동사망자 발생률을 말하며,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나타낸다.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00년 14.4명에서 2020년 2.4명으로 떨어져 지난 20년간 1/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자료로 보면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대전(0.5명), 서울(1.2명), 전남(1.4명), 충북(1.5명), 경남(1.6명)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경북(4.6명), 울산(4.5명), 제주(4.2명) 등은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다.

**통계표** 시도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2000-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0	14.4	8.7	9.3	12.5	9.5	14.5	16.1	11.6	-	14.2	23.9	18.9	23.8	18.7	26.6	14.4	20.1	19.3
2001	12.9	7.9	8.9	10.9	11.3	13.8	11.6	11.3	-	12.5	20.5	14.9	18.4	19.0	20.7	15.8	17.5	20.8
2002	12.5	8.6	8.8	9.9	8.8	11.3	12.6	13.3	-	11.2	21.2	13.4	18.2	18.6	21.4	17.7	15.5	16.6
2003	10.6	5.8	6.9	9.8	9.2	10.1	7.8	12.0	-	8.5	15.1	9.0	21.2	18.3	21.8	20.0	10.5	18.2
2004	9.5	5.7	7.5	8.2	9.1	9.6	8.5	6.5	-	8.8	12.7	12.9	13.1	14.7	19.5	12.4	10.2	12.4
2005	8.2	4.9	5.6	5.8	7.2	5.5	7.0	7.1	-	7.8	13.4	10.4	12.0	10.6	14.0	16.1	9.6	14.2
2006	7.1	4.6	6.2	3.9	5.7	3.6	7.1	6.0	-	6.5	13.8	8.9	11.4	9.8	11.6	11.9	8.1	7.7
2007	6.1	3.8	5.0	4.4	5.0	6.4	7.3	7.6	-	5.2	9.2	8.7	6.5	7.2	12.3	9.6	7.7	7.0
2008	5.9	4.3	4.3	6.0	3.9	4.9	3.5	4.6	-	5.3	8.7	8.2	8.0	9.9	10.0	6.3	9.0	5.4
2009	5.3	3.3	4.4	5.5	3.4	6.8	5.5	2.4	-	5.0	9.8	5.7	7.5	7.3	7.1	6.5	6.5	10.2
2010	4.8	3.2	5.0	4.0	3.5	2.9	3.4	9.0	-	4.0	5.5	7.0	7.4	6.9	9.4	6.5	4.9	6.7
2011	4.1	2.6	2.4	4.4	2.9	5.7	3.1	2.6	-	3.8	5.7	4.4	6.6	6.5	6.7	6.7	3.9	7.8
2012	4.2	2.9	3.1	3.0	2.3	3.1	4.8	5.8	-	4.4	4.9	6.6	6.3	4.9	7.2	3.2	6.3	5.0
2013	3.8	1.8	4.8	4.7	2.6	6.4	3.2	4.3	15.5	3.1	6.5	6.3	2.9	3.6	9.0	4.4	5.3	1.0
2014	2.9	2.1	2.6	2.3	0.9	0.4	2.9	7.2	8.2	2.4	3.4	3.0	3.9	2.3	3.9	4.2	6.4	5.1
2015	3.1	2.0	3.4	4.5	1.7	4.7	1.7	3.4	0.0	2.9	2.0	4.0	4.6	3.9	4.4	4.3	3.7	7.1
2016	2.8	2.0	3.0	2.2	3.4	4.5	3.6	2.3	6.5	2.4	3.6	3.7	2.0	2.8	4.1	3.6	4.0	0.0
2017	2.9	2.0	3.0	3.2	3.0	3.7	2.8	2.4	1.9	2.3	4.3	1.4	3.1	2.5	7.6	3.6	3.8	3.0
2018	2.4	1.7	2.8	1.3	2.6	1.4	2.0	3.0	0.0	3.0	1.7	2.9	4.5	2.6	3.5	3.1	0.9	2.0
2019	2.6	1.6	2.7	1.7	6.3	2.5	1.5	3.7	1.5	1.7	5.1	1.5	3.2	2.2	5.0	2.9	3.1	4.1
2020	2.4	1.2	2.5	3.1	3.0	3.5	0.5	4.5	2.8	2.3	2.9	1.5	3.2	2.3	1.4	4.6	1.6	4.2

주: 1) 안전사고에는 운수사고, 추락, 익사, 질식, 화상, 중독 등이 포함됨.

통계번호 HEA-22607

통계명 자살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산출방법 자살률 = (자살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단위 명/10만 명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의 수로 나타낸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000년 13.7명에서 2011년 31.7명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25.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살률은 노인인구에서 특히 높다. 2020년 65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은 41.7명으로 15-64세 인구의 26.5명에 비해 1.6배나 높다.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다. 2020년 남성 자살률은 35.5명으로 여성 자살률 15.9명의 2.2배에 이른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자살률, 2000-2020**

연도	전체				남자				여자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합계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합계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합계
2000	0.3	15.5	36.1	13.7	0.4	22.0	56.3	19.0	0.2	8.8	24.2	8.4
2001	0.4	15.9	42.4	14.6	0.2	22.9	66.8	20.3	0.5	8.6	27.7	8.7
2002	0.3	19.0	56.2	18.0	0.3	27.3	84.2	24.7	0.4	10.5	38.9	11.2
2003	0.4	23.5	72.7	22.7	0.3	33.3	113.8	31.2	0.4	13.3	47.1	14.1
2004	0.5	23.9	79.3	23.9	0.5	33.8	122.9	32.6	0.5	13.6	51.7	15.0
2005	0.4	24.6	80.9	24.8	0.4	33.2	129.3	33.1	0.5	15.8	49.7	16.6
2006	0.4	21.2	72.4	22.0	0.3	29.5	111.5	29.7	0.5	12.6	47.0	14.2
2007	0.6	24.3	75.5	24.9	0.5	30.7	117.9	31.6	0.7	17.7	47.5	18.2
2008	0.6	25.8	71.7	26.0	0.5	32.9	112.0	33.4	0.6	18.5	44.7	18.7
2009	1.0	31.2	78.8	31.0	0.9	40.1	120.1	39.9	1.0	21.9	50.8	22.1
2010	0.8	30.5	81.9	31.2	0.6	40.4	128.5	41.4	0.9	20.2	50.1	21.0
2011	0.7	31.2	79.7	31.7	0.7	42.4	128.6	43.3	0.7	19.5	46.1	20.1
2012	0.6	27.4	69.8	28.1	0.7	37.4	107.7	38.2	0.5	16.8	43.5	18.0
2013	0.5	28.4	64.2	28.5	0.5	39.6	102.3	39.8	0.4	16.7	37.3	17.3
2014	0.4	27.8	55.5	27.3	0.6	39.1	87.9	38.4	0.3	15.9	32.4	16.1
2015	0.4	25.9	58.6	26.5	0.5	36.4	95.2	37.5	0.4	14.9	32.1	15.5
2016	0.3	25.3	53.3	25.6	0.3	35.3	87.5	36.2	0.3	14.9	28.4	15.0
2017	0.5	24.3	47.7	24.3	0.7	34.3	78.9	34.9	0.4	13.8	24.7	13.8
2018	0.7	26.9	48.6	26.6	0.8	38.1	82.2	38.5	0.7	15.3	23.7	14.8
2019	0.7	27.4	46.6	26.9	0.7	37.8	76.7	38.0	0.7	16.5	24.0	15.8
2020	0.8	26.5	41.7	25.7	0.7	35.6	67.4	35.5	0.9	16.9	22.1	15.9

통계번호 HEA-22608

통계명 자살충동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HE130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HE130R&conn_path=I3)

수록기간 2006-2022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은 2012년 9.1%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바뀌며 최근에는 5%대로 떨어졌다. 자살충동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다소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자살충동률, 2006-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5-19세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8	7.2	5.8	8.5	10.4	-	6.4	6.9	7.7	6.3	7.1
2010	7.7	6.3	9.0	10.1	-	7.5	7.7	8.6	8.2	5.3
2012	9.1	7.5	10.6	-	12.1	9.3	9.1	9.0	9.3	7.1
2014	6.8	5.8	7.7	-	8.0	7.7	7.6	6.1	7.0	5.2
2016	6.4	5.3	7.5	-	5.7	7.9	6.5	6.4	6.6	5.3
2018	5.1	4.5	5.7	-	4.4	5.7	5.2	5.4	4.9	4.7
2020	5.2	4.5	6.0	-	3.9	5.5	6.1	5.0	5.2	5.1
2022	5.7	4.9	6.5	-	4.6	6.0	6.2	5.6	5.7	5.5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22609

통계명 장애인 자살생각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C00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C006&conn_path=I3)

수록기간 2018-2020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2019년 6.3%, 2020년 4.4%로 나타난다. 장애인 인구의 5% 안팎이 자살생각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90% 이상은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고립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66.9%가 육체 및 정신 건강 문제를, 15.9%가 경제적 어려움을, 9.2%가 외로움과 고독을 자살생각의 이유로 꼽고 있다.

**통계표** 장애인 자살생각률과 자살생각 이유, 2018-2020

연도	자살생각률	자살생각 이유					
		육체 및 정신 건강 문제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고독	괴롭힘, 학대, 폭력	직장 및 직업 문제	기타
2018	16.3	69.8	15.6	6.0	0.9	0.5	7.3
2019	6.3	65.9	14.7	10.3	0.1	3.0	6.0
2020	4.4	66.9	15.9	9.2	2.3	0.3	5.3

주: 1) 자살생각 이유는 1순위 응답률임.  
2)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22610

통계명 정신질환자 자살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산출방법 15세 이상 퇴원 정신질환자 중 퇴원 후 30일 이내 자살자와 1년 이내 자살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질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00\\_A017\\_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00_A017_3&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00\\_A017\\_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00_A017_2&conn_path=I3)

수록기간 2010-2019

통계해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자살률은 0.2% 안팎 수준이다.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은 더 높은데, 퇴원 후 30일 이내 자살률보다 세 배가량 높은 0.6% 이상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2019년 기준 퇴원 후 30일 이내 자살률은 남성 0.25%, 여성 0.18%로 남성이 더 높다. 같은 해 기준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도 남성이 0.75%로 여성의 0.62%보다 높다. 정신질환자의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통계표** 성별 정신질환자 자살률, 2010-2019

연도	퇴원 후 30일 이내			퇴원 후 1년 이내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2010	0.19	0.21	0.17	0.76	0.85	0.67
2011	0.20	0.22	0.20	0.73	0.78	0.69
2012	0.19	0.22	0.16	0.66	0.69	0.63
2013	0.18	0.21	0.15	0.64	0.73	0.56
2014	0.17	0.21	0.14	0.67	0.78	0.57
2015	0.18	0.23	0.14	0.63	0.71	0.55
2016	0.18	0.20	0.17	0.58	0.67	0.49
2017	0.17	0.21	0.13	0.62	0.67	0.58
2018	0.18	0.20	0.17	0.64	0.71	0.58
2019	0.21	0.25	0.18	0.68	0.75	0.62

통계번호 HEA-22611

통계명 정신질환자 초과사망비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산출방법 비정신질환자 사망률 대비 정신질환자 사망률의 비임.

단위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질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00\\_A01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00_A016&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00\\_A01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00_A017&conn_path=I3)

수록기간 2008-2020

통계해설 정신질환자 초과사망비는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사망률이 비정신질환자 사망률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 조현병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2008년 4.11에서 2020년 4.65로 점차 커지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도 같은 기간 3.22에서 4.39로 커졌다. 정신질환자와 비정신질환자의 사망률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질환자와 비정신질환자의 사망률 격차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조현병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여성 5.38, 남성 4.31로 여성이 높고, 같은 해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경우에도 여성이 4.72로 남성의 4.23보다 높다.

**통계표** 성별 정신질환자 초과사망비, 2008-2020

연도	조현병 환자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2008	4.11	3.72	4.98	3.22	2.96	3.84
2009	4.28	3.86	5.22	3.47	3.12	4.27
2010	4.35	4.03	5.08	3.60	3.37	4.10
2011	4.33	3.92	5.26	3.66	3.39	4.27
2012	4.44	4.09	5.26	3.82	3.63	4.26
2013	4.41	4.01	5.33	4.00	3.85	4.32
2014	4.41	3.96	5.41	4.02	3.93	4.18
2015	4.38	3.98	5.26	4.17	4.03	4.46
2016	4.46	4.10	5.24	4.21	4.14	4.35
2017	4.43	4.12	5.13	4.21	4.12	4.39
2018	4.59	4.21	5.45	4.34	4.20	4.65
2019	4.54	4.16	5.36	4.42	4.31	4.66
2020	4.65	4.31	5.38	4.39	4.23	4.72

통계번호 HEA-22612

통계명 청소년 자살생각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산출방법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또는 ‘자주 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3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33&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평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30% 안팎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29.9%로 조사된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자살생각률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지만 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일반계고 학생의 자살생각률이 특성화계고 학생보다 높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하위권 학생의 자살생각률이 중상위권 학생보다 뚜렷하게 높다.

**통계표** 성·학교급·학업성적별 청소년 자살생각률,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업성적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2013	36.9	28.9	45.8	36.9	-	37.3	34.9	31.8	33.7	44.5
2014	30.0	23.9	36.7	30.0	-	30.9	25.5	26.4	27.7	35.8
2015	27.9	22.6	33.6	26.9	-	29.7	24.5	24.1	24.9	35.2
2016	28.6	22.2	35.7	26.7	30.2	31.8	24.0	25.2	26.2	34.7
2017	33.4	24.6	42.9	32.8	33.9	35.2	28.5	32.6	30.0	38.6
2018	33.8	23.8	44.7	32.0	35.3	36.6	29.9	28.4	32.0	40.9
2019	30.4	22.2	39.4	29.1	31.5	32.8	26.0	25.1	27.7	39.0
2020	27.0	19.6	35.0	26.2	27.8	29.3	21.8	24.9	23.0	34.2
2021	29.9	22.7	37.7	29.7	30.1	31.5	24.7	27.7	26.1	37.7

주: 1)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22613

통계명 청소년 자살시도율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시민·정치적 권리  
생명권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_12\\_Y07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_12_Y071&conn_path=I3)

수록기간 2005-2021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2005년 4.7%에서 2007년 5.8%까지 올랐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1년에는 2.2%로 낮아졌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자살시도율이 남학생보다 일관되게 높다. 이러한 경향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나타난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자살시도율이 고등학생보다 약간 더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자살시도율, 2005-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중학교			고등학교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2005	4.7	3.6	5.9	4.9	3.5	6.5	4.4	3.8	5.0
2006	5.5	4.9	6.3	5.8	5.1	6.7	5.2	4.6	5.9
2007	5.8	4.2	7.6	6.2	4.2	8.6	5.3	4.3	6.5
2008	4.7	3.7	5.9	5.2	3.8	6.8	4.2	3.6	4.9
2009	4.6	3.3	6.0	5.1	3.4	7.0	4.0	3.2	4.9
2010	5.0	3.8	6.3	5.6	4.0	7.4	4.4	3.7	5.1
2011	4.3	3.0	5.6	5.0	3.3	6.9	3.5	2.8	4.3
2012	4.1	2.8	5.4	4.6	3.0	6.4	3.5	2.6	4.5
2013	4.1	2.8	5.5	5.2	3.2	7.3	3.1	2.5	3.8
2014	2.9	2.3	3.6	3.4	2.4	4.5	2.4	2.2	2.7
2015	2.4	2.0	3.0	2.8	2.0	3.7	2.1	1.9	2.3
2016	2.4	2.0	2.7	2.6	1.9	3.4	2.2	2.2	2.2
2017	2.6	2.0	3.2	3.0	2.2	3.9	2.2	1.8	2.7
2018	3.1	2.2	4.1	3.6	2.3	5.0	2.6	2.1	3.2
2019	3.0	1.9	4.0	3.6	2.2	5.1	2.4	1.7	3.0
2020	2.0	1.4	2.7	2.0	1.3	2.8	2.0	1.4	2.7
2021	2.2	1.5	2.9	2.4	1.6	3.1	2.0	1.4	2.7

주: 1)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32701

통계명 1인당 정신보건 예산액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산출방법 1인당 정신보건 예산액 = 정신보건 예산총액 ÷ 추계인구.

단위 원

자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정신건강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10&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10&conn_path=I3)

수록기간 2018-2020

통계해설 정신보건 지출 예산의 인구 1인당 금액은 2018년 4791원, 2019년 5389원, 2020년 5815원으로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다. 1인당 정신보건 예산은 전북, 대전, 광주, 강원, 충북, 충남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고 경남, 세종, 인천, 대구, 울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적다.

**통계표** 시도별 1인당 정신보건 예산액, 2018-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8	4,791	5,326	3,872	3,788	3,151	7,995	6,716	3,836	3,513	4,376	7,147	6,051	5,909	7,554	4,306	4,121	2,758	5,985
2019	5,389	5,309	4,495	3,939	3,371	7,787	7,249	4,193	2,909	5,312	8,050	7,021	7,413	8,865	5,118	5,406	3,135	6,423
2020	5,815	5,587	6,373	4,382	4,291	8,314	8,492	4,669	3,546	5,298	7,769	7,693	7,200	9,609	6,027	6,148	3,504	6,062

통계번호 HEA-32702

통계명 건강검진 수검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산출방법 건강검진 수검률 = (수검인원 ÷ 대상인원) × 100.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002\\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002_1&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010&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010&conn_path=I3)

수록기간 2010-2020

통계해설 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 검진대상 인구 중 검진을 받은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0년 66.2%에서 2018년 76.9%까지 높아졌다가 2019년과 2020년에 74.1%와 67.8%로 낮아졌다. 암검진 수검률은 2010년 47.8%에서 2019년 55.8%까지 올랐다가 2020년에 49.6%로 크게 떨어졌다.

**통계표** 건강검진 수검률, 2010-2020

연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대상인원(명)	수검인원(명)	수검률(%)	대상인원(명)	수검인원(명)	수검률(%)
2010	17,048,822	11,290,616	66.2	12,945,756	6,184,804	47.8
2011	16,361,761	11,465,622	70.1	14,089,502	7,056,776	50.1
2012	16,791,321	11,831,747	70.5	20,049,425	7,892,732	39.4
2013	16,863,350	11,785,765	69.9	19,194,911	8,340,858	43.5
2014	17,614,449	12,743,979	72.3	19,397,675	8,884,321	45.8
2015	18,635,825	13,677,695	73.4	20,179,798	9,749,039	48.3
2016	18,970,994	14,252,362	75.1	21,948,238	10,805,618	49.2
2017	19,208,604	14,483,428	75.4	22,658,023	11,411,036	50.4
2018	19,593,149	15,076,899	76.9	22,503,127	12,131,112	53.9
2019	21,716,582	16,098,417	74.1	23,122,600	12,891,329	55.8
2020	21,446,220	14,544,980	67.8	22,973,173	11,389,378	49.6

주: 1) 2차 검진 대상자와 수검자를 포함함.

통계번호 HEA-32703

통계명 건강권 존중도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건강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건강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82.1%에서 2020년 88.6%, 2021년 89.6%로 늘어났다가 2022년에 84.8%로 줄었다. 이 비율은 성별로 큰 차이가 없다.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건강권 존중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82.1	81.8	82.2	80.8	80.0	80.5	83.1	84.7	83.0	80.9	82.6	83.8
2020	88.6	88.7	88.6	88.7	87.7	89.8	87.3	89.3	88.2	88.4	89.0	89.2
2021	89.6	88.8	90.4	90.4	86.8	89.0	89.4	91.3	91.6	89.7	88.8	87.0
2022	84.8	84.5	85.0	85.1	84.9	83.8	83.5	86.0	86.2	84.0	84.9	84.7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32704

통계명 결핵환자 발생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산출방법 결핵환자 발생률 = (결핵 신환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단위 명/10만 명

자료 질병관리청, 「결핵환자신고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N\\_A001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N_A00102&conn_path=I3)

수록기간 2001-2021

통계해설 결핵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새로 발생하는 결핵환자 수를 나타낸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 수는 2011년 78.9명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1년에는 35.7명으로 떨어졌다. 결핵환자 발생률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높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남자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1.6명으로 여자의 29.9명에 비해 크게 높다. 결핵환자 발생률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데, 특히 70대와 80대 이상 노인인구에서는 97.3명과 216.6명에 달한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결핵환자 발생률, 2001-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2001	71.3	88.6	53.8	22.8	97.7	63.9	65.1	82.8	133.6	211.6	225.1
2002	66.5	82.0	50.9	19.0	88.8	60.3	60.3	76.5	125.8	197.4	234.5
2003	63.5	77.4	49.5	19.0	84.2	57.5	57.6	71.5	111.9	187.4	223.6
2004	65.0	78.8	51.0	18.4	82.2	60.1	58.1	73.2	112.4	198.3	236.2
2005	72.4	86.4	58.5	19.7	88.7	64.7	64.6	80.8	126.0	222.8	292.2
2006	72.3	85.4	59.2	21.8	87.2	63.7	62.6	80.4	122.1	218.7	279.6
2007	70.6	82.3	58.9	22.5	82.2	62.1	62.0	77.7	116.2	201.8	278.2
2008	69.1	80.3	57.9	19.6	78.5	59.2	59.9	76.6	111.9	206.5	282.7
2009	72.2	82.6	61.7	21.3	80.3	61.6	61.9	77.6	114.9	211.5	288.4
2010	72.8	82.3	63.2	20.9	76.1	61.1	61.3	78.8	114.4	216.8	295.8
2011	78.9	89.2	68.7	21.2	83.2	66.5	65.8	84.7	119.6	226.7	330.3
2012	78.5	90.1	66.9	17.2	79.2	62.5	65.3	83.6	117.5	233.9	350.6
2013	71.4	81.7	61.0	13.7	69.4	56.3	60.0	75.3	102.8	202.6	345.0
2014	68.7	78.7	58.7	12.2	63.9	51.3	56.7	73.7	96.9	198.0	327.0
2015	63.2	73.4	52.9	11.3	54.2	45.4	48.8	67.3	88.6	183.2	315.0
2016	60.4	70.0	50.9	8.7	47.5	40.9	46.2	62.6	85.5	172.0	330.1
2017	55.0	63.1	46.8	7.3	38.0	35.5	40.6	56.6	77.5	156.3	307.5
2018	51.5	59.8	43.3	5.3	31.1	31.3	35.2	51.5	71.6	148.4	308.1
2019	46.4	54.1	38.8	4.4	26.6	27.1	30.3	45.6	62.3	128.5	282.8
2020	38.8	45.3	32.3	3.0	20.6	23.0	24.7	36.1	51.4	105.4	234.5
2021	35.7	41.6	29.9	2.2	16.7	19.6	21.4	32.9	46.4	97.3	216.6

주: 1) 연령 미상은 제외함.

통계번호 HEA-32705

통계명 급성심정지 뇌기능회복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산출방법 급성심정지 환자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을 회복한 환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88\\_01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88_018&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20

통계해설 급성심정지 뇌기능회복률은 급성심정지 환자 중 뇌기능을 회복한 환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2년 1.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 5.4%까지 높아졌다. 이후 2020년에는 4.8%로 다소 낮아졌다. 2020년 자료로 보면 급성심정지 뇌기능회복률은 서울(6.5%), 광주(5.8%), 인천(5.6%), 대전(5.6%), 울산(5.5%), 대구(5.3%), 부산(5.2%) 등 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시도별 급성심정지 뇌기능회복률, 2012-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1.8	3.3	2.2	2.3	2.2	-	1.9	2.3	-	2.1	1.0	-	1.2	1.2	-	0.9	1.1	2.7
2013	2.3	3.9	3.0	3.9	3.0	2.2	3.8	-	-	2.4	2.1	1.4	0.8	2.0	-	0.9	1.5	2.0
2014	2.7	4.9	3.1	3.7	3.8	2.2	3.3	2.6	-	2.8	2.5	1.8	0.9	2.2	-	0.8	1.8	2.2
2015	3.6	5.8	4.6	3.7	3.8	3.7	3.9	4.0	-	3.8	2.5	2.5	1.9	2.7	2.3	2.3	2.7	4.6
2016	4.2	6.0	5.3	5.4	4.5	4.8	4.0	6.2	9.3	4.6	2.5	3.1	2.9	3.3	2.0	2.7	3.1	3.7
2017	5.1	7.1	5.6	5.3	5.6	6.4	4.3	8.6	-	5.8	3.2	3.6	4.0	4.8	3.3	2.7	4.4	3.5
2018	5.1	7.5	4.7	4.9	5.3	6.0	6.0	6.3	8.0	5.4	4.1	4.1	3.9	3.6	3.8	2.7	4.5	3.8
2019	5.4	7.1	5.9	5.6	6.0	6.5	7.7	4.8	9.6	5.8	4.9	4.6	3.6	4.3	3.1	3.6	4.0	7.4
2020	4.8	6.5	5.2	5.3	5.6	5.8	5.6	5.5	-	4.9	4.0	4.5	3.5	4.5	3.4	3.4	3.9	4.1

주: 1) 사례가 10건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2) 2015년부터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전원)된 환자의 최종 생존 여부를 확인한 추적조사 결과를 반영함.

통계번호 HEA-32706

통계명 급성심정지 생존율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산출방법 급성심정지 환자 중 생존 환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88\\_01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88_014&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20

통계해설 급성심정지 생존율은 급성심정지 환자 중 생존 환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2년 4.4%에서 2019년 8.7%까지 높아졌다가 2020년에 7.5%로 다소 떨어졌다. 2020년 자료로 보면 서울(10.4%), 광주(9.5%), 대전(9.0%), 인천(8.9%), 부산(8.5%), 울산(8.5%), 세종(8.5%), 대구(8.3%) 등 대도시 지역의 급성심정지 생존율은 전국 평균을 웃돈다.

**통계표** 시도별 급성심정지 생존율, 2012-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4.4	8.8	4.4	4.7	5.3	2.9	6.8	3.8	-	4.8	3.6	2.5	2.6	2.9	1.6	1.4	2.1	4.6
2013	4.8	9.2	5.3	6.1	6.7	4.6	7.9	3.0	-	4.8	3.8	3.8	1.9	4.4	1.2	1.8	2.3	3.6
2014	4.8	8.6	5.7	5.4	5.8	3.9	7.3	4.5	-	5.7	4.5	2.8	1.9	3.2	1.1	1.3	2.6	3.6
2015	6.3	9.8	7.6	5.1	7.2	7.6	7.1	6.4	-	6.8	4.7	3.9	3.5	4.8	4.4	3.4	4.5	7.4
2016	7.6	11.4	9.1	7.0	8.2	9.2	8.4	10.9	11.9	8.2	6.1	5.3	6.1	5.1	4.7	4.3	5.5	6.2
2017	8.7	12.7	9.9	8.0	11.3	10.3	9.8	11.4	9.0	10.1	6.2	6.2	6.7	6.5	5.1	4.1	6.7	5.8
2018	8.6	12.1	9.0	8.2	9.7	11.6	9.8	9.8	10.9	8.9	6.5	7.1	7.0	6.4	7.1	5.0	7.2	6.2
2019	8.7	11.3	9.6	8.7	10.2	11.5	10.7	8.2	13.5	9.6	7.8	7.2	6.6	6.2	5.8	5.8	6.4	8.0
2020	7.5	10.4	8.5	8.3	8.9	9.5	9.0	8.5	8.5	7.4	5.4	6.7	5.3	7.3	6.0	4.5	6.3	5.2

주: 1) 사례가 10건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2) 2015년부터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전원)된 환자의 최종 생존 여부를 확인한 추적조사 결과를 반영함.

통계번호 HEA-32707

통계명 기대수명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산출방법 0세의 기대여명임.

단위 세

자료 통계청, 「생명표」.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1&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0세의 기대여명, 즉 기대수명은 2000년 76.0세에서 2020년 83.5세로 7.5세 늘어났다. 이 기간 남자의 기대수명은 72.3세에서 80.5세로 8.2세 늘어났고, 여자의 기대수명은 79.7세에서 86.5세로 6.8세 늘어났다.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6세 많다.

통계표 **성별 기대수명, 2000-2020**

연도	전체	남자	여자
2000	76.0	72.3	79.7
2001	76.5	72.9	80.1
2002	76.8	73.4	80.3
2003	77.3	73.8	80.8
2004	77.8	74.3	81.2
2005	78.2	74.9	81.6
2006	78.8	75.4	82.1
2007	79.2	75.9	82.5
2008	79.6	76.2	83.0
2009	80.0	76.7	83.4
2010	80.2	76.8	83.6
2011	80.6	77.3	84.0
2012	80.9	77.6	84.2
2013	81.4	78.1	84.6
2014	81.8	78.6	85.0
2015	82.1	79.0	85.2
2016	82.4	79.3	85.4
2017	82.7	79.7	85.7
2018	82.7	79.7	85.7
2019	83.3	80.3	86.3
2020	83.5	80.5	86.5

통계번호 HEA-32708

통계명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다는 65세 이상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8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83&conn_path=I3)

수록기간 2005-2020

통계해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65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07년 70.2%에서 2019년 85.8%까지 올랐다가 이듬해인 2020년에 80.7%로 떨어졌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대체로 높다. 2020년 예방접종률은 여자 82.1%, 남자 78.9%이다.

**통계표** 성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05-2020

연도	전체	남자	여자
2005	77.3	75.0	78.8
2007	70.2	68.3	71.5
2008	73.6	74.2	73.2
2009	74.3	72.0	75.8
2010	77.1	74.8	78.8
2011	79.6	78.5	80.4
2012	77.4	73.2	80.4
2014	79.8	75.7	82.7
2015	81.7	75.6	86.1
2016	84.4	83.5	85.1
2017	82.7	80.5	84.3
2018	85.1	82.7	86.9
2019	85.8	84.9	86.5
2020	80.7	78.9	82.1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32709

통계명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산출방법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 등록정신질환자 수 ÷ 사례관리자 수.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정신건강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1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12&conn_path=I3)

수록기간 2018-2020

통계해설 정신질환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정신질환자 수는 2018년 40.8명, 2019년 34.2명, 2020년 28.0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례관리자가 담당해야 할 환자 수가 적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시도별로는 부산(17.7명), 경북(18.5명), 전북(19.0명) 등에서 상대적으로 적고 제주(57.4명), 충남(40.7명), 충북(37.2명)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다.

**통계표**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2018-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8	40.8	48.0	24.4	36.8	47.9	35.1	27.3	26.4	46.3	43.1	35.5	34.9	92.8	20.0	34.7	24.9	50.6	58.8
2019	34.2	44.3	20.9	28.6	44.5	29.2	22.8	23.6	38.0	35.3	34.7	44.6	40.4	21.1	30.8	23.1	39.5	57.2
2020	28.0	34.0	17.7	24.0	32.0	27.6	24.0	21.1	30.0	27.0	30.1	37.2	40.7	19.0	29.4	18.5	31.6	57.4

통계번호 HEA-32710

통계명 스트레스 인지율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산출방법 생활 전반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다' 또는 '매우 느낀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HE124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HE124R&conn_path=I3)

수록기간 2008-2022

통계해설 평소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0년 70.0%에서 2014년 66.5%, 2018년 54.4%, 2022년 44.9%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연령·소득수준별 스트레스 인지율, 2008-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남자	여자	15-19세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08	60.5	60.9	60.1	60.0	-	57.7	69.3	68.0	58.8	45.3	54.1	63.0	62.4	61.5	59.2	61.7	58.6
2010	70.0	72.1	68.1	70.3	-	71.9	78.8	78.0	68.2	51.7	59.9	70.3	72.8	74.1	71.9	72.4	69.1
2012	69.6	68.8	70.3	-	64.5	71.1	77.4	77.7	70.0	55.2	62.7	69.9	71.6	72.4	70.2	71.4	69.4
2014	66.5	66.4	66.8	-	58.8	68.0	75.5	75.2	68.3	52.0	58.7	64.9	68.6	69.4	70.2	66.6	67.5
2016	54.8	52.1	57.3	-	42.8	52.1	62.4	62.4	57.5	46.6	50.0	54.7	57.9	57.2	54.8	53.1	51.7
2018	54.4	53.1	55.6	-	42.3	50.4	62.2	62.7	58.6	45.7	47.8	53.6	55.9	56.0	56.8	54.0	54.2
2020	50.6	47.7	53.3	-	30.0	44.6	57.5	59.5	55.9	45.4	47.6	51.9	52.3	52.5	52.2	47.2	47.7
2022	44.9	42.3	47.6	-	33.5	39.6	51.5	54.9	49.1	38.1	40.9	42.6	45.7	46.9	48.3	45.6	43.7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32711

통계명 아동·청소년 수면 부족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산출방법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3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32&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2020년을 제외하면 50-55%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절반의 학생들이 수면 부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면 부족을 더 많이 느낀다. 학교급, 학업성적,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수면 부족을 다르게 인식한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면 부족을 더 많이 인식한다.

**통계표** 성·학교급·학업성적·소득수준별 아동청소년 수면 부족률,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업성적별			소득수준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상	중	하
2013	52.8	48.2	57.7	32.0	53.6	-	69.5	69.1	45.7	49.9	64.7	46.9	53.2	67.0
2014	55.8	53.1	58.8	37.3	53.9	-	73.0	67.5	48.0	53.8	68.2	50.3	56.8	69.0
2015	50.1	45.2	55.5	29.4	48.4	-	69.1	59.9	43.5	48.4	62.1	44.2	53.9	63.6
2016	54.1	49.3	59.4	33.6	50.8	72.3	73.5	67.3	47.9	52.8	64.4	49.8	55.4	69.0
2017	52.5	46.4	59.1	33.5	50.9	67.8	70.7	55.7	47.3	50.8	62.9	46.7	56.7	68.1
2018	52.4	47.8	57.3	33.1	51.6	68.3	70.0	61.1	46.7	49.8	65.2	46.4	56.6	70.9
2019	52.2	47.0	57.8	36.1	50.0	68.2	70.0	60.8	47.8	50.4	62.4	47.1	56.4	68.9
2020	47.7	42.8	52.9	34.7	47.0	60.3	62.2	52.7	43.0	45.5	58.4	43.8	50.2	66.7
2021	52.4	48.0	57.2	41.0	50.4	65.9	67.6	59.0	47.4	51.3	62.2	48.1	55.5	68.6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32712

통계명 아동·청소년 주관적 건강수준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산출방법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건강한 편이다’ 또는 ‘매우 건강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8&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주관적 건강수준, 즉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큰 변화 없이 80%대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남녀 학생 간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가 가장 낮다. 한부모가정 자녀일 경우에 주관적 건강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도 낮다.

통계표

성·학교급·가족유형·소득수준별 아동청소년 주관적 건강수준,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가족유형별				소득수준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기타	상	중	하
2013	83.6	84.6	82.4	92.5	83.7	-	76.2	76.3	83.9	79.1	81.1	85.1	87.7	83.4	73.5
2014	84.5	85.1	83.9	91.6	85.7	-	77.8	78.9	85.0	78.5	88.4	72.5	88.4	85.1	72.8
2015	85.7	85.8	85.6	93.0	87.2	-	78.6	80.3	86.0	82.5	89.2	87.2	89.8	84.3	72.8
2016	83.5	84.6	82.4	92.5	85.8	74.7	74.7	74.8	84.2	75.7	80.8	82.0	87.7	82.4	68.7
2017	87.7	88.6	86.7	93.0	88.5	83.0	82.9	83.5	88.3	81.1	85.5	86.6	91.0	87.1	72.6
2018	87.1	87.4	86.8	92.8	87.3	82.3	83.1	78.9	87.7	80.4	84.4	85.1	90.9	85.6	70.5
2019	86.9	87.4	86.3	91.3	87.0	82.8	82.5	84.7	87.5	80.4	80.8	89.9	90.2	84.5	74.0
2020	88.1	87.7	88.7	92.6	87.8	84.2	85.1	80.6	88.9	77.8	93.3	89.8	91.2	86.6	72.1
2021	86.5	86.5	86.6	91.5	84.8	83.5	83.6	82.8	87.1	80.0	86.2	87.1	90.4	83.9	71.3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32713

통계명 암 5년 상대생존율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산출방법 암 환자의 관찰생존율을 같은 연도의 동일한 성과 연령의 일반인구 기대생존율로 나눈 값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N\\_A0002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N_A00021&conn_path=I3)

수록기간 1993-2019

통계해설 암 상대생존율은 암 환자의 생존율이 일반인구에 생존율에 얼마나 근접하는지를 나타낸다.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1990년대까지는 5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 크게 향상하며 최근에는 70%에 달하고 있다. 남자 암 환자의 최근 5년(2015-2019) 상대생존율은 64.5%로 같은 기간 여자 암 환자의 상대생존율 77.3%보다 크게 낮다.

**통계표** 성별 암 5년 상대생존율, 1993-2019

암 발생 연도	전체	남자	여자
1993-1995	42.9	33.2	55.2
1996-2000	45.2	36.3	56.4
2001-2005	54.1	45.6	64.3
2006-2010	65.5	56.9	74.4
2011-2015	70.7	63.1	78.3
2015-2019	70.7	64.5	77.3

주: 1) 모든 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32714

통계명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산출방법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 =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 ÷ 추계인구) × 100,000.

단위 명/10만 명

자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정신건강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1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11&conn_path=I3)

수록기간 2018-2020

통계해설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수는 2018년 16.4명, 2019년 17.6명, 2020년 18.5명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2020년 자료로 보면 광주(27.1명), 전북(23.3명), 서울(21.9명), 부산(21.8명), 대전(21.1명), 전남(20.9명), 충남(20.9명), 대구(19.4명) 등은 전국 평균보다 많은 반면 세종(10.9명), 울산(12.8명), 인천(14.0명), 경기(15.3명), 제주(16.3명), 충북(16.4명), 경북(17.0명), 강원(17.0명), 경남(17.1명) 등은 전국 평균에 미달한다.

통계표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 2018-2019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8	16.4	19.1	18.3	19.3	12.6	27.7	17.3	13.5	8.6	13.7	16.2	14.6	14.4	19.4	17.3	14.9	17.2	12.7
2019	17.6	20.2	21.1	18.8	13.9	25.9	20.0	12.5	10.0	14.2	16.8	15.0	20.3	24.8	20.6	14.9	16.6	14.9
2020	18.5	21.9	21.8	19.4	14.0	27.1	21.1	12.8	10.9	15.3	17.0	16.4	20.9	23.3	20.9	17.0	17.1	16.3

주: 1)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의 전문인력 수입.

통계번호 HEA-32715

통계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8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83&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20

통계해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8년까지 30% 안팎 수준이었으나 2019년과 2020년에 38.2%와 39.3%로 크게 올랐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50대까지 20-30% 수준에 그치다가 60대에 60% 수준으로 오른 후 70대 이후에는 80%를 넘는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05-2020**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05	35.0	30.0	40.1	22.6	24.9	25.6	41.1	68.3	78.0
2007	28.3	25.1	31.5	16.8	22.9	15.0	34.1	55.6	74.0
2008	28.0	25.9	30.1	14.0	20.3	17.7	32.3	60.5	76.1
2009	26.2	24.2	28.2	12.9	18.5	16.2	28.8	55.5	78.4
2010	28.2	25.2	31.2	16.6	25.4	16.9	23.5	55.5	80.6
2011	30.9	27.5	34.4	18.0	26.9	21.2	27.0	61.0	81.1
2012	31.6	28.9	34.3	18.0	29.5	21.7	28.6	58.7	80.9
2014	30.6	26.5	34.4	16.2	29.0	20.1	26.7	57.4	83.6
2015	32.1	27.5	36.5	16.4	33.8	20.7	27.7	58.4	83.4
2016	33.7	30.0	37.4	14.8	34.3	22.0	33.1	63.7	87.0
2017	33.5	29.8	37.4	15.9	33.9	24.1	30.2	59.4	88.0
2018	33.2	28.8	37.7	16.9	33.9	22.4	27.0	60.9	89.1
2019	38.2	34.9	41.7	23.0	37.5	31.1	30.4	64.9	88.9
2020	39.3	35.2	43.6	26.0	38.0	34.3	33.9	59.0	84.7

주: 1)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한 결과임.

통계번호 HEA-32716

통계명 주관적 건강수준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산출방법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은 편이다’ 또는 ‘매우 좋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HE010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HE010R&conn_path=I3)

수록기간 2008-2022

통계해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2년 45.4%에서 2016년 47.2%, 2022년 53.1%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낸다. 성별로는 여성의 주관적 건강 평가가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낮다.

**통계표** 성·연령·가구소득별 주관적 건강수준, 2008-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가구소득별						
		남자	여자	15-19세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08	51.5	56.6	46.7	72.4	-	70.0	60.6	51.4	41.5	23.0	30.0	48.8	55.3	60.4	61.9	62.3	62.7
2010	46.8	51.1	42.6	70.2	-	63.8	52.8	45.8	38.6	23.6	27.5	42.8	49.2	53.0	56.4	57.1	62.2
2012	45.4	49.5	41.2	-	72.9	61.9	50.4	43.6	36.9	21.6	25.4	40.8	46.9	52.9	54.5	54.9	60.9
2014	48.7	52.7	44.7	-	74.7	67.1	56.2	47.2	41.2	23.9	26.3	42.8	50.5	54.9	55.6	56.8	64.1
2016	47.2	51.3	43.1	-	74.8	64.0	54.2	46.2	40.4	25.4	27.2	39.3	47.0	51.1	55.3	57.6	59.9
2018	48.7	52.0	45.6	-	75.7	67.2	58.4	48.2	42.2	27.2	25.8	40.4	48.3	53.9	53.4	56.3	60.4
2020	50.4	54.7	46.1	-	80.3	69.4	60.8	52.2	43.5	28.5	26.2	39.2	50.6	53.4	57.5	59.2	63.6
2022	53.1	56.4	49.8	-	80.1	72.3	65.4	54.7	48.2	31.5	29.3	40.8	51.9	56.3	59.7	60.2	62.9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32717

통계명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산출방법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 또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_12\\_Y06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_12_Y067&conn_path=I3)

수록기간 2005-2021

통계해설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3년까지 40%를 상회하다가 이후부터는 30% 중후반 수준을 보인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0%p 이상 높다. 스트레스 인지율의 남녀 학생 간 차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2005-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2005	45.6	39.7	52.2	43.2	37.5	49.7	49.7	43.6	56.6
2006	46.5	40.6	53.1	42.4	36.7	48.9	51.3	45.2	58.0
2007	46.5	40.9	52.8	43.4	38.1	49.4	49.9	44.0	56.6
2008	43.7	38.1	50.1	40.6	35.9	46.0	47.1	40.6	54.4
2009	43.2	37.3	50.0	40.0	34.6	46.1	46.6	40.0	53.9
2010	43.8	37.7	50.7	40.8	35.4	46.7	46.9	40.0	54.7
2011	42.0	35.8	49.0	39.0	33.6	45.0	45.0	37.9	52.9
2012	41.9	34.8	49.6	38.9	32.7	45.6	44.7	36.8	53.5
2013	41.4	34.3	49.3	39.1	32.5	46.3	43.7	36.0	52.2
2014	37.0	30.8	43.7	33.4	27.7	39.6	40.3	33.7	47.6
2015	35.4	29.6	41.7	31.6	26.7	37.1	38.7	32.2	45.8
2016	37.4	30.5	44.9	33.6	28.1	39.5	40.5	32.4	49.3
2017	37.2	30.4	44.6	34.1	28.0	40.6	39.8	32.3	47.9
2018	40.4	32.0	49.5	37.0	29.6	45.0	43.4	34.1	53.5
2019	39.9	31.7	48.8	37.2	29.1	45.9	42.4	34.1	51.5
2020	34.2	28.1	40.7	30.4	24.9	36.2	37.9	31.1	45.2
2021	38.8	32.3	45.6	36.4	31.5	41.5	41.2	33.2	49.9

주: 1)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32718

통계명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신체 및 정신 건강 권리

산출방법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_12\\_Y06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_12_Y068&conn_path=I3)

수록기간 2005-2021

통계해설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06년 41.4%에서 2015년 23.6%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25% 안팎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울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0%p가량 더 많이 경험한다. 우울감 경험률의 남녀 학생 간 차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중학생보다 다소간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 2005-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2005	29.9	25.6	34.7	28.3	23.9	33.3	32.6	28.6	37.1
2006	41.4	37.1	46.2	37.8	33.7	42.6	45.5	41.2	50.5
2007	41.3	36.5	46.6	38.3	33.4	43.8	44.6	40.1	49.8
2008	38.8	34.0	44.3	35.2	30.7	40.4	42.7	37.5	48.5
2009	37.5	32.1	43.5	34.5	29.3	40.3	40.6	35.0	46.8
2010	37.4	32.7	42.6	34.4	30.0	39.3	40.3	35.4	45.9
2011	32.8	28.0	38.2	30.0	25.1	35.4	35.5	30.8	40.9
2012	30.5	25.5	36.0	28.2	23.1	33.8	32.6	27.7	38.2
2013	30.9	25.2	37.1	29.0	22.9	35.7	32.6	27.4	38.4
2014	26.7	22.2	31.6	24.4	19.4	29.9	28.8	24.9	33.1
2015	23.6	19.7	27.8	21.2	16.9	26.0	25.6	22.1	29.4
2016	25.5	20.9	30.5	22.7	18.2	27.7	27.7	23.1	32.9
2017	25.1	20.3	30.3	23.5	18.5	28.9	26.4	21.7	31.6
2018	27.1	21.1	33.6	25.2	19.0	31.9	28.7	22.9	35.0
2019	28.2	22.2	34.6	26.9	20.1	34.1	29.4	24.1	35.1
2020	25.2	20.1	30.7	22.9	17.8	28.4	27.4	22.2	33.0
2021	26.8	22.4	31.4	25.9	21.7	30.4	27.7	23.1	32.5

주: 1)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32801

통계명 식비 부족으로 인한 결식 경험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식생활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식비를 충당하지 못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5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57&conn_path=I3)

수록기간 2014-2021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식비가 부족해서 끼니를 거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4년 3.8%에서 2016년 1.5%로 낮아진 후 최근까지 1% 안팎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비율은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소득수준별로는 100만 원 미만의 최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식비 부족으로 인한 결식 경험률, 2014-2021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14	3.8	8.2	3.0	3.9	1.5	2.4	-	13.1	5.6	4.1	2.2	1.9	1.5	2.5
2015	3.0	7.4	2.6	1.2	1.8	2.7	-	10.2	4.0	3.9	2.8	2.1	1.5	0.7
2016	1.5	3.6	1.3	0.9	0.8	0.8	-	4.7	3.2	0.8	0.7	0.3	0.6	3.3
2017	1.5	3.9	1.1	0.4	1.1	1.2	-	6.0	3.5	1.5	1.3	0.6	0.7	1.0
2018	1.1	3.3	0.9	0.2	0.6	0.7	-	5.4	2.7	1.4	1.0	0.4	0.5	0.7
2019	1.4	2.8	1.3	0.7	1.3	1.1	-	6.0	2.2	1.6	1.8	0.9	0.8	1.0
2020	0.8	2.0	0.5	0.4	0.6	-	0.6	2.7	0.9	0.6	0.5	1.0	0.7	0.3
2021	1.7	2.8	1.3	1.4	1.4	-	1.8	3.3	1.7	0.9	1.9	1.9	1.3	1.9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32802

통계명 식생활안정성 확보가구 비율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식생활 권리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의 가구 식생활 형편에 대해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4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42&conn_path=I3)

수록기간 2005-2020

통계해설 최근 1년 동안 가족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한 가구의 비율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80%대에 그쳤으나 2009년에 90%를 넘었고 이후 최근까지 95% 안팎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2020년 자료로 보면 상층과 중상층의 경우 99.8%에 이르지만 하층과 중하층의 경우에는 86.6%와 96.1%에 그친다.

**통계표** 소득수준별 식생활안정성 확보가구 비율, 2005-2020

연도	전체	소득수준별				
		하	중하	중	중상	상
2005	87.9	73.4	86.4	92.0	94.3	99.7
2007	89.0	72.8	87.2	96.4	98.1	99.3
2008	88.2	70.7	88.0	92.3	96.6	99.0
2009	92.0	80.6	93.2	94.4	97.8	99.6
2010	95.4	88.1	97.5	98.6	99.6	99.2
2011	95.2	88.2	97.1	98.7	98.6	99.7
2012	92.2	82.1	92.6	98.7	98.7	99.6
2013	93.5	82.1	95.9	98.2	98.5	99.5
2014	93.8	84.9	93.4	97.6	99.6	99.5
2015	93.5	84.4	94.3	95.0	98.8	99.7
2016	95.8	89.2	96.1	97.9	99.7	99.5
2017	96.3	88.2	94.9	98.4	99.8	99.5
2018	96.9	88.5	97.7	98.6	99.5	99.9
2019	96.5	87.0	95.8	99.4	99.6	100.0
2020	96.3	86.6	96.1	98.3	99.8	99.8

통계번호 HEA-32803

통계명 아침식사 결식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식생활 권리

산출방법 조사시점 기준 어제 아침식사를 못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3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33&conn_path=I3)

수록기간 2005-2020

통계해설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은 2005년 19.9%에서 조금씩 늘어나 2019년에 30%를 넘었고 2020년에는 34.6%로 더 올랐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10대와 20대, 30대에 높았다가 40대 이후부터 점차 낮아진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다른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아침식사 결식률, 2005-2020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1-9세	10-18세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하	중하	중	중상	상
2005	19.9	9.5	21.1	41.4	23.1	18.0	11.4	5.7	2.1	22.5	22.8	18.5	18.3	16.8
2007	22.6	10.7	27.6	43.4	27.3	20.7	10.5	6.9	6.1	26.6	21.3	23.6	22.3	18.8
2008	22.6	9.1	24.3	48.7	29.1	16.6	12.0	5.5	4.8	25.2	23.7	22.7	20.7	19.7
2009	21.5	9.3	25.8	42.4	27.8	16.3	12.6	5.7	4.7	25.2	22.2	20.7	20.3	18.2
2010	21.9	7.0	26.1	41.3	31.3	18.4	12.6	4.4	3.7	24.0	20.6	23.2	20.7	19.4
2011	21.4	7.9	27.0	37.2	30.1	19.2	11.5	6.8	4.8	21.3	24.0	21.8	19.1	20.7
2012	23.4	10.9	27.4	43.3	33.4	18.7	13.5	5.5	3.5	27.4	24.0	21.0	22.1	21.2
2013	23.9	8.8	29.7	40.1	31.2	24.4	14.7	7.2	5.9	27.9	25.5	24.0	22.7	18.9
2014	24.1	10.0	27.4	41.0	31.8	24.7	15.2	7.9	4.3	27.8	26.6	23.9	22.4	19.2
2015	26.2	9.1	30.7	49.1	36.3	22.6	14.7	7.3	5.4	30.9	25.7	25.3	25.4	22.8
2016	27.3	7.7	30.9	52.6	33.6	25.3	18.5	9.6	6.4	31.9	26.4	28.1	24.7	24.4
2017	27.6	8.7	31.1	52.0	37.1	26.7	14.7	9.3	4.1	29.8	29.4	25.7	28.7	24.2
2018	28.9	10.0	33.3	50.1	38.2	29.0	19.0	9.8	4.5	28.8	29.9	32.3	28.1	24.7
2019	31.3	9.6	33.9	54.0	43.8	32.6	21.1	7.9	5.4	33.9	33.4	31.9	30.6	26.5
2020	34.6	12.5	41.6	58.2	45.1	34.0	24.9	13.5	4.7	38.2	34.1	35.2	35.5	30.3

주: 1)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한 결과임.

통계번호 HEA-32804

통계명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식생활 권리

산출방법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인구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3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31&conn_path=I3)

수록기간 2001-2020

통계해설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필요량(권장량) 미만의 영양을 섭취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3년과 2014년에 8.4%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조금씩 늘어나 2020년에는 14.8%까지 높아졌다.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은 10대와 20대 그리고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최하위 소득계층에서 영양섭취부족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2001-2020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1-9세	10-18세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하	중하	중	중상	상
2001	18.5	15.2	21.2	20.8	14.7	16.3	17.6	18.6	32.5	23.7	21.7	16.8	16.7	13.6
2005	11.6	7.1	12.6	16.0	9.1	11.4	9.0	11.9	17.9	14.1	13.0	9.8	9.5	11.5
2007	17.0	13.6	18.3	21.8	13.6	14.6	11.0	20.4	32.3	20.8	17.1	15.3	19.5	13.0
2008	13.7	6.9	17.3	20.7	12.6	9.9	8.2	13.1	24.6	17.9	15.0	13.0	11.8	10.4
2009	14.2	8.4	18.9	19.2	13.1	10.7	8.5	13.4	25.9	19.6	15.8	13.3	11.8	10.0
2010	10.0	6.9	13.8	14.8	7.4	8.9	5.9	7.0	17.5	14.1	11.7	8.2	7.6	7.6
2011	10.6	5.8	13.2	15.4	11.3	7.4	5.3	8.8	20.4	12.6	11.3	10.2	8.4	9.4
2012	11.9	7.4	15.6	17.1	11.0	9.7	8.3	8.7	17.7	17.7	10.7	13.0	9.0	8.1
2013	8.4	5.1	13.5	13.3	7.6	7.4	2.9	4.2	10.0	12.0	7.5	8.1	7.6	6.8
2014	8.4	5.7	13.3	12.4	9.1	6.8	3.4	3.5	10.0	11.9	9.0	6.0	8.7	6.3
2015	9.0	5.7	14.5	13.1	8.9	8.1	4.1	3.8	10.2	14.7	10.0	6.4	7.8	5.6
2016	12.6	6.1	16.5	15.4	13.7	12.3	8.7	9.7	16.6	16.0	12.2	13.0	10.0	11.0
2017	13.5	4.3	17.9	19.9	12.3	13.9	9.8	10.6	16.4	18.7	13.3	12.3	13.3	9.6
2018	13.1	5.6	16.2	16.2	13.7	15.0	8.2	10.1	16.5	16.7	12.5	14.0	11.3	10.7
2019	13.5	3.4	16.7	19.9	12.7	14.9	8.9	9.7	18.9	18.9	13.4	14.0	12.0	9.0
2020	14.8	6.5	23.4	17.5	14.8	15.0	9.3	10.1	19.9	18.9	12.6	13.1	15.9	13.4

주: 1)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한 결과임.

통계번호 HEA-32805

통계명 유통식품 안전검사 부적합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식생활 권리

산출방법  $\text{부적합률} = (\text{부적합건수} \div \text{검사건수}) \times 100.$

단위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수거검사실적」.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3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35)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유통식품 안전검사 부적합률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식품의 검사실적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2005년까지 1%를 웃돌다가 2006년에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졌고 2008년부터 감소 추세를 나타내며 최근에는 5~6% 수준으로 낮아졌다.

**통계표** 유통식품 안전검사 부적합률, 2000-2020

연도	검사건수(건)	부적합건수(건)	부적합률(%)
2000	94,400	3,059	3.24
2001	100,490	1,372	1.37
2002	104,417	1,301	1.25
2003	111,285	1,360	1.22
2004	111,607	1,647	1.48
2005	129,343	1,628	1.26
2006	159,313	1,517	0.95
2007	180,092	2,075	1.15
2008	198,699	1,928	0.97
2009	218,805	2,010	0.92
2010	219,910	1,645	0.75
2011	181,391	1,254	0.69
2012	174,080	1,241	0.71
2013	163,436	1,017	0.62
2014	203,739	1,058	0.52
2015	210,143	1,375	0.65
2016	190,932	1,192	0.62
2017	172,688	1,083	0.63
2018	172,606	957	0.55
2019	169,711	1,005	0.59
2020	161,092	1,026	0.64

통계번호 HEA-32806

통계명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식생활 권리

산출방법 최근 7일 중 5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_12\\_Y040&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_12_Y040&conn_path=I3)

수록기간 2005-2021

통계해설 지난 1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5일 이상 하지 못한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2016년까지 30%를 넘지 않았으나 2017년에 31.5%로 오르면서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21년에는 38.0%까지 높아졌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더 높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결식률이 중학생보다 다소간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 2005-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중학교			고등학교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2005	27.1	26.4	28.0	24.8	23.9	25.7	31.2	30.6	32.0
2006	26.7	25.8	27.7	23.2	22.0	24.5	30.8	30.2	31.4
2007	27.2	26.2	28.3	23.9	22.7	25.2	30.9	30.2	31.8
2008	25.8	25.1	26.7	22.8	21.7	24.0	29.0	28.6	29.5
2009	27.1	28.2	25.9	25.4	26.5	24.2	28.8	29.9	27.6
2010	25.6	25.5	25.6	24.3	24.3	24.2	26.9	26.7	27.0
2011	24.4	25.3	23.4	23.2	23.6	22.8	25.5	26.8	24.0
2012	24.8	24.9	24.6	24.2	24.2	24.3	25.3	25.5	24.9
2013	26.4	26.7	26.2	25.9	25.7	26.1	27.0	27.7	26.2
2014	28.5	28.2	28.9	28.1	27.5	28.6	28.9	28.7	29.2
2015	27.9	26.9	28.9	27.4	26.6	28.4	28.3	27.3	29.3
2016	28.2	27.3	29.3	27.8	26.7	29.1	28.6	27.8	29.4
2017	31.5	30.1	33.0	30.9	29.6	32.3	32.0	30.5	33.6
2018	33.6	32.2	35.1	32.6	31.8	33.4	34.4	32.5	36.5
2019	35.7	34.6	36.9	34.7	33.4	36.0	36.7	35.8	37.7
2020	37.3	35.5	39.2	35.5	33.4	37.7	39.0	37.4	40.7
2021	38.0	37.0	39.1	36.1	35.7	36.5	40.1	38.4	41.8

주: 1)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32807

통계명 학교 식중독 발생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식생활 권리

산출방법 학교 식중독 발생률 = (학교 식중독 발생건수 ÷ 전체 식중독 발생건수) × 100.

단위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관리현황」.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1](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1)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학교 식중독 사고는 2006년에 70건까지 발생하였다가 이후로는 매년 20-50건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3건에 그쳤다. 전체 식중독 사고 중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비율은 2015년 이후로 10% 안팎 수준에 그치고 있다.

통계표 학교 식중독 발생률, 2000-2020

연도	전체 식중독 발생건수(건)	학교 식중독 발생건수(건)	학교 식중독 발생률(%)
2000	104	30	28.8
2001	93	35	37.6
2002	78	9	11.5
2003	135	49	36.3
2004	165	56	33.9
2005	109	19	17.4
2006	259	70	27.0
2007	510	57	11.2
2008	354	39	11.0
2009	228	39	17.1
2010	271	38	14.0
2011	249	30	12.0
2012	266	54	20.3
2013	235	44	18.7
2014	349	51	14.6
2015	330	38	11.5
2016	399	36	9.0
2017	336	27	8.0
2018	363	44	12.1
2019	286	24	8.4
2020	164	13	7.9

통계번호 HEA-32901

통계명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건강보험 보장률 = 건강보험 급여비 ÷ (건강보험 급여비 + 법정 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100.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3](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3)

수록기간 2004-2020

통계해설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 급여비,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건강보험의 진료비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06년 이후 62-65%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다만 2017년부터는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20년에 65.3%까지 높아졌다. 진료비 부담이 큰 암 환자의 경우 2010년에 보장률이 크게 오른 후 최근에는 80%에 가까운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표 건강보험 보장률, 2004-2020

연도	전체 환자	암 환자
2004	61.3	48.6
2005	61.8	63.0
2006	64.5	69.7
2007	65.0	70.1
2008	62.6	70.8
2009	65.0	63.9
2010	63.6	76.1
2011	63.0	76.2
2012	62.5	77.7
2013	62.0	77.5
2014	63.2	72.6
2015	63.4	76.0
2016	62.6	76.3
2017	62.7	78.2
2018	63.8	79.1
2019	64.2	78.5
2020	65.3	79.8

통계번호 HEA-32902

통계명 공공의료기관 비율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공공의료기관 비율 = (공공의료기관 수 ÷ 전체 의료기관 수) × 100.

단위 %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1&tblId=DT\\_411002\\_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1&tblId=DT_411002_03&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20

통계해설 공공의료기관은 2015년 210개소에서 2018년 224개소까지 늘었다가 2020년에 222개소로 약간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2018년까지 5.7-5.8% 수준이었으나 2019년과 2020년에 5.5%와 5.4%로 낮아졌다.

통계표 공공의료기관 수와 비율, 2015-2020

연도	전체 의료기관 수(개소)	공공의료기관 수(개소)	공공의료기관 비율(%)
2015	3,693	210	5.7
2016	3,803	220	5.8
2017	3,897	221	5.7
2018	3,937	224	5.7
2019	4,028	221	5.5
2020	4,118	222	5.4

주: 1)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의료원이 포함됨.



통계번호 HEA-32903

통계명 공공의료기관병상 비율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공공의료기관병상 비율 = (공공의료기관병상 수 ÷ 전체 의료기관병상 수) × 100.

단위 %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1&tblId=DT\\_411002\\_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1&tblId=DT_411002_03&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20

통계해설 공공의료기관병상은 2016년 6만 4735병상에서 2019년 6만 2240병상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2020년에 6만 3417병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전체 의료기관병상에서 공공의료기관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까지 10% 이상 수준이었으나 2019년과 2020년에 9.7%로 약간 낮아졌다.

**통계표** 공공의료기관병상 수와 비율, 2015-2020

연도	전체 의료기관병상 수(개)	공공의료기관병상 수(개)	공공의료기관병상 비율(%)
2015	592,628	62,276	10.5
2016	614,123	64,735	10.5
2017	633,219	64,385	10.2
2018	641,044	63,924	10.0
2019	641,891	62,240	9.7
2020	656,068	63,417	9.7

주: 1)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의료원이 포함됨.

통계번호 HEA-32904

통계명 공공의료비 지출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공공의료비 지출률 = (정부·의무가입제도 지출액 ÷ 경상의료비 지출액) × 100.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8\\_2009NN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8_2009NN3&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공공의료비 지출률은 국가 전체 의료비(경상의료비) 지출에서 공공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00년 53.9%에서 이듬해인 2001년 58.6%로 높아졌고 이후 60% 안팎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최근 5년, 즉 2016년과 2020년 사이 59.0%에서 62.2%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표 공공의료비 지출률, 2000-2020

연도	경상의료비 지출액(100만 원)	정부·의무가입제도 지출액(100만 원)	공공의료비 지출률(%)
2000	25,398,063	13,687,100	53.9
2001	31,304,431	18,349,323	58.6
2002	32,683,951	19,285,857	59.0
2003	37,044,135	21,721,190	58.6
2004	39,871,217	23,577,332	59.1
2005	44,204,707	26,246,020	59.4
2006	49,716,681	30,453,596	61.3
2007	55,735,128	33,969,139	60.9
2008	62,315,514	36,787,748	59.0
2009	69,696,729	42,437,615	60.9
2010	78,263,501	47,682,930	60.9
2011	83,453,507	50,097,521	60.0
2012	88,316,619	52,217,345	59.1
2013	93,783,840	55,442,125	59.1
2014	101,258,001	59,551,366	58.8
2015	110,392,775	64,970,988	58.9
2016	120,463,580	71,064,345	59.0
2017	130,070,248	77,513,585	59.6
2018	142,740,583	85,735,563	60.1
2019	156,673,593	95,540,883	61.0
2020	161,753,002	100,551,595	62.2

주: 1) 2020년은 잠정치임.

통계번호 HEA-32905

통계명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용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용률 =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용정원 ÷ 65세 이상 노인인구) × 1,000.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명/1000명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N\\_B000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N_B00003&conn_path=I3)

수록기간 2008-2021

통계해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용률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용정원 수로 나타낸다.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용정원은 2010년 이후 24명 안팎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설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이 22명 안팎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통계표 노인의료복지시설 유형별 수용률, 2008-2021

연도	전체	시설유형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2008	16.3	13.4	0.7	2.2
2009	19.2	15.9	1.6	1.7
2010	24.4	20.0	2.1	2.3
2011	22.7	20.2	2.5	-
2012	23.2	20.6	2.6	-
2013	23.2	20.2	3.0	-
2014	24.1	21.1	3.0	-
2015	24.5	21.6	2.8	-
2016	24.8	22.2	2.6	-
2017	24.2	21.8	2.4	-
2018	24.1	21.8	2.3	-
2019	24.8	22.6	2.2	-
2020	24.9	22.9	2.1	-
2021	25.0	23.2	1.8	-

통계번호 HEA-32906

통계명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미진료 경험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5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57&conn_path=I3)

수록기간 2014-2021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4년 9.8%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2.7%로 낮아졌다. 하지만 2021년에 4.5%로 다소 높아졌다. 이 비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미진료 경험 비율이 높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미진료 경험률, 2014-2021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14	9.8	9.1	8.5	12.1	8.7	11.0	-	26.2	15.5	11.0	6.1	5.4	5.8	5.6
2015	7.6	8.1	7.9	6.4	7.9	8.0	-	19.4	11.6	10.5	5.5	4.5	4.7	4.2
2016	4.8	5.6	5.1	4.0	4.3	5.5	-	12.2	10.3	6.0	3.9	3.2	1.6	3.7
2017	4.2	4.6	3.5	4.3	3.8	5.3	-	13.8	9.2	5.5	3.9	2.2	1.8	2.7
2018	2.4	2.3	3.9	1.5	2.0	2.4	-	9.7	4.9	3.1	2.3	0.7	1.8	1.5
2019	3.3	3.5	3.4	2.5	2.8	4.5	-	14.0	8.8	4.1	2.6	2.7	1.9	1.3
2020	2.7	2.0	1.9	2.1	2.5	-	4.3	11.8	5.6	3.6	1.6	2.4	0.8	0.7
2021	4.5	3.2	1.4	3.7	3.3	-	8.0	16.0	9.8	5.4	4.3	3.5	1.9	2.7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32907

통계명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만족도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HE105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HE105R&conn_path=I3)

수록기간 2003-2022

통계해설 보건소의 의료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60-70%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2018년에 71.6%까지 올랐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 63.5%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이보다 낮은 56.4%로 하락하였다.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일관되게 높다. 특히 도시지역의 보건소 만족도는 2020년 대비 2022년에 크게 낮아졌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오히려 높아졌다.

통계표

거주지역별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만족도, 2003-2022

연도	전국	거주지역별	
		도시	농어촌
2003	59.6	49.0	65.8
2006	61.3	49.2	69.4
2008	65.6	50.9	75.6
2010	62.0	50.6	71.2
2012	64.3	56.7	70.0
2014	68.3	62.2	72.6
2016	61.9	55.1	68.5
2018	71.6	63.2	79.0
2020	63.5	60.4	66.9
2022	56.4	43.7	76.1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도시는 동 지역, 농어촌은 읍면 지역임.

통계번호 HEA-32908

통계명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2년 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 '약간 좋아졌다' 또는 '매우 좋아졌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WE012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WE012R&conn_path=I3)

수록기간 2009-2021

통계해설 보건의료서비스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1년 39.5%에서 2019년 58.7%까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가 유행한 2021년에는 47.2%로 감소하였다. 이 비율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거주지역별로는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연령 및 거주지역별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한 인식, 2009-2021

연도	전체	연령별					거주지역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동 지역	읍면 지역
2009	42.4	33.9	40.9	42.0	47.7	51.4	41.2	47.5
2011	39.5	30.5	36.3	39.1	42.5	48.1	38.5	44.2
2013	39.4	32.1	35.4	38.1	42.7	46.9	38.3	44.0
2015	52.7	40.8	45.1	52.6	57.6	64.1	51.6	58.1
2017	51.8	40.3	42.1	52.2	58.0	61.9	51.1	55.9
2019	58.7	47.0	52.8	61.3	63.1	64.9	58.0	62.1
2021	47.2	38.7	40.2	49.2	51.8	51.6	47.0	48.3

주: 1) 2009년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32909

통계명 본인부담 의료비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본인부담 의료비 = (총진료비 - 건강보험 급여비) ÷ 진료 실인원.  
총진료비에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음.

단위 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4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43&conn_path=I3)

수록기간 2014-2020

통계해설 본인부담 의료비는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한 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 급여비를 뺀 개인 지출 의료비로, 개인의 의료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진료인원 1인당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는 2014년 29만 2493원에서 2020년 45만 3438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액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데, 40대까지는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50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다.

통계표

연령별 본인부담 의료비, 2014-2020

연도	전체	연령별						
		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4	292,493	143,584	131,643	175,130	217,193	350,162	527,878	869,723
2015	313,426	148,623	137,608	183,245	226,648	361,137	544,432	960,889
2016	345,332	163,213	147,365	196,915	243,071	383,954	604,918	1,056,203
2017	371,720	164,415	155,739	206,947	261,662	406,253	650,994	1,108,660
2018	397,720	171,104	167,483	227,852	282,499	430,671	673,358	1,143,967
2019	439,138	189,837	183,016	251,472	310,938	465,179	726,621	1,224,778
2020	453,438	150,246	201,079	269,988	327,632	473,280	732,540	1,222,451

통계번호 HEA-32910

통계명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 =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 장기체류외국인 수) × 100.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1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12&conn_path=I3)

수록기간 2004-2020

통계해설 장기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대비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비율은 2008년까지 40% 안팎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9년부터 증가 추세로 바뀌며 2018년에 56.1%로 높아졌다. 이 비율은 2019년에 급증하여 70.0%까지 높아졌고 2020년에는 73.4%로 더 올랐다.

**통계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 2004-2020

연도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명)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
2004	204,319	41.6
2005	199,082	39.0
2006	251,634	38.1
2007	303,939	38.0
2008	355,523	39.7
2009	400,670	43.5
2010	456,934	45.6
2011	525,058	47.0
2012	554,337	49.5
2013	616,361	50.6
2014	712,823	51.7
2015	784,369	53.4
2016	863,094	56.4
2017	889,891	56.2
2018	946,745	56.1
2019	1,212,475	70.0
2020	1,182,341	73.4



통계번호 HEA-32911

통계명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담당인구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담당인구 = 추계인구 ÷ 응급의료기관 수.

단위 명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현황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1&tblId=DT\\_41104\\_41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1&tblId=DT_41104_411&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20

통계해설 응급의료기관 수 대비 인구 수는 응급의료기관 1개소가 몇 명의 인구를 담당해야 하는지를 나타낸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국민이 더 좋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담당인구는 2012년 8만 9324명에서 매년 늘어나 2020년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3만 5159명), 강원(5만 8434명), 광주(5만 9182명), 경남(6만 6804명), 경북(6만 7995명)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난다 (2020년 기준).

**통계표** 시도별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담당인구, 2012-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89,324	156,817	84,436	95,404	126,989	55,685	140,012	80,333	-	127,388	50,141	73,975	85,112	64,908	34,948	66,394	51,833	93,470
2013	91,027	158,572	86,393	85,367	141,480	60,153	140,476	87,498	-	134,736	53,775	74,515	93,741	72,839	34,306	64,901	48,925	81,433
2014	92,267	142,502	88,521	88,389	136,297	65,417	141,154	88,552	66,219	132,065	52,076	75,162	90,765	83,156	37,331	68,485	54,219	83,334
2015	93,434	146,194	88,519	88,170	137,279	62,746	140,218	89,517	93,601	136,517	54,166	75,679	95,582	79,788	35,932	72,372	54,594	85,607
2016	95,024	146,903	88,384	91,158	153,019	60,085	139,652	83,300	117,205	138,465	56,322	84,258	101,246	79,793	35,966	70,614	55,628	103,020
2017	96,545	145,767	90,116	98,311	139,231	59,816	138,889	82,771	132,759	140,503	58,495	84,687	102,542	79,501	36,633	70,398	59,630	105,820
2018	99,012	144,738	91,976	111,309	146,792	59,538	151,322	82,338	302,249	143,149	58,517	85,163	103,672	79,245	38,220	68,595	63,233	109,091
2019	99,357	144,139	96,606	110,763	147,610	59,566	136,656	88,135	164,711	145,508	58,466	77,583	109,457	82,362	35,861	70,292	64,426	110,634
2020	100,264	145,724	93,212	127,066	147,553	59,182	135,625	87,621	174,151	147,829	58,434	77,659	108,832	85,985	35,159	67,995	66,804	111,450

주: 1) 응급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등이 포함됨.

통계번호 HEA-32912

통계명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 = (의료보장 적용인구 ÷ 총인구) × 100.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1_A001&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전체 인구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비율은 2000년 96.2%에서 꾸준히 높아져 2014년에 98%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99.1%에 달하고 있다. 의료급여 적용인구의 비율은 2007년에 3.8%까지 올랐다가 점차 떨어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9%에 머물고 있다.

**통계표**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 2000-2020

연도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	의료급여 적용인구 비율	연도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	의료급여 적용인구 비율
2000	96.2	3.3	2011	97.2	3.2
2001	96.6	3.1	2012	97.5	3.0
2002	96.7	2.9	2013	97.7	2.9
2003	97.3	3.0	2014	98.0	2.8
2004	97.5	3.1	2015	98.0	3.0
2005	97.2	3.6	2016	98.2	2.9
2006	96.8	3.7	2017	98.4	2.9
2007	97.1	3.8	2018	98.5	2.9
2008	97.2	3.7	2019	99.1	2.9
2009	97.7	3.4	2020	99.1	2.9
2010	96.8	3.3			

통계번호 HEA-32913

통계명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text{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 = (\text{의료기관 수} \div \text{추계인구}) \times 1,000.$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포함됨.

단위 개소/1000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MIRE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MIRE01&conn_path=I3)

수록기간 2003-2021

통계해설 각종 병의원과 보건소 등을 포함하는 의료기관의 수는 2003년에서 2021년 사이 인구 1000명당 1.02개소에서 1.44개소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인구 대비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가장 많다. 2021년 자료로 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는 1.93개소에 이른다. 대구(1.64개소), 전북(1.61개소), 부산(1.61개소), 대전(1.57개소), 광주(1.50개소), 전남(1.47개소), 제주(1.45개소) 등은 전국 평균 이상 지역이다.

**통계표**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 2003-2021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3	1.02	1.23	1.06	1.05	0.84	0.99	1.11	0.88	-	0.87	0.94	1.00	1.02	1.15	1.02	0.94	0.92	1.01
2004	1.05	1.27	1.08	1.08	0.88	1.02	1.16	0.92	-	0.91	0.97	1.02	1.06	1.19	1.07	0.98	0.95	1.03
2005	1.09	1.32	1.13	1.12	0.91	1.05	1.19	0.97	-	0.94	1.00	1.06	1.10	1.25	1.13	1.02	0.99	1.09
2006	1.12	1.37	1.16	1.16	0.93	1.09	1.22	0.99	-	0.97	1.01	1.09	1.12	1.28	1.16	1.05	1.01	1.13
2007	1.15	1.42	1.20	1.19	0.95	1.11	1.24	1.03	-	0.98	1.04	1.10	1.12	1.31	1.19	1.07	1.04	1.16
2008	1.17	1.46	1.22	1.22	0.97	1.13	1.26	1.04	-	1.00	1.06	1.13	1.14	1.33	1.22	1.10	1.06	1.16
2009	1.20	1.51	1.24	1.25	0.99	1.17	1.28	1.08	-	1.02	1.08	1.13	1.16	1.36	1.26	1.12	1.07	1.17
2010	1.22	1.55	1.27	1.28	0.99	1.19	1.29	1.11	-	1.04	1.09	1.15	1.17	1.38	1.28	1.13	1.08	1.20
2011	1.24	1.57	1.30	1.31	1.01	1.22	1.30	1.13	-	1.05	1.10	1.17	1.18	1.40	1.31	1.14	1.09	1.22
2012	1.25	1.59	1.33	1.33	1.02	1.24	1.34	1.12	1.14	1.05	1.11	1.17	1.18	1.42	1.33	1.16	1.11	1.25
2013	1.27	1.61	1.36	1.37	1.04	1.28	1.36	1.13	1.10	1.07	1.13	1.18	1.19	1.45	1.34	1.17	1.12	1.29
2014	1.29	1.64	1.40	1.40	1.05	1.33	1.38	1.14	1.28	1.09	1.15	1.20	1.20	1.46	1.36	1.19	1.13	1.31
2015	1.31	1.67	1.42	1.42	1.08	1.35	1.41	1.16	1.16	1.10	1.17	1.22	1.22	1.49	1.37	1.22	1.15	1.32
2016	1.34	1.71	1.45	1.47	1.10	1.38	1.44	1.18	1.09	1.13	1.18	1.24	1.23	1.52	1.39	1.22	1.18	1.35
2017	1.36	1.75	1.48	1.50	1.11	1.42	1.45	1.19	1.17	1.14	1.20	1.25	1.24	1.54	1.41	1.24	1.20	1.40
2018	1.38	1.79	1.52	1.53	1.13	1.44	1.48	1.20	1.16	1.16	1.21	1.27	1.24	1.56	1.43	1.26	1.21	1.41
2019	1.40	1.83	1.54	1.56	1.15	1.46	1.50	1.21	1.12	1.17	1.22	1.29	1.24	1.58	1.44	1.27	1.22	1.43
2020	1.42	1.87	1.58	1.59	1.17	1.48	1.53	1.23	1.14	1.19	1.24	1.30	1.26	1.59	1.45	1.28	1.24	1.44
2021	1.44	1.93	1.61	1.64	1.20	1.50	1.57	1.25	1.11	1.21	1.26	1.33	1.26	1.61	1.47	1.28	1.26	1.45

주: 1) 의료기관 수는 연말 기준임.

통계번호 HEA-32914

통계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 (의사 수 ÷ 추계인구) × 1000.  
의사에는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포함됨.

단위 명/1000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T&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T&conn_path=I3)

수록기간 2007-2021

통계해설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사의 수는 2007년에서 2021년 사이 인구 1000명당 2.13명에서 3.0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인구 대비 의사 수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4.71명으로 충북(2.36명), 충남(2.32명), 경북(2.13명), 세종(1.97명) 등의 지역보다 두 배 또는 그 이상으로 많다.

**통계표**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07-2021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7	2.13	2.95	2.34	2.45	1.70	2.56	2.42	1.73	-	1.69	2.04	1.75	1.80	2.24	1.86	1.58	1.69	1.75
2008	2.25	3.18	2.43	2.59	1.76	2.61	2.59	1.79	-	1.80	2.12	1.83	1.88	2.38	1.99	1.65	1.79	1.90
2009	2.33	3.32	2.49	2.66	1.83	2.62	2.70	1.87	-	1.86	2.18	1.90	1.93	2.49	2.10	1.71	1.89	2.00
2010	2.41	3.48	2.62	2.72	1.84	2.77	2.76	1.89	-	1.91	2.24	1.94	1.94	2.53	2.16	1.76	1.94	2.08
2011	2.46	3.54	2.73	2.76	1.91	2.90	2.81	1.99	-	1.97	2.22	1.97	1.97	2.54	2.21	1.80	1.99	2.14
2012	2.51	3.62	2.83	2.85	1.96	2.94	2.93	2.00	1.37	2.01	2.25	1.98	2.02	2.57	2.26	1.83	2.03	2.18
2013	2.61	3.82	2.94	2.92	2.03	3.05	3.00	2.04	1.35	2.07	2.30	2.05	2.06	2.69	2.35	1.89	2.09	2.33
2014	2.65	3.87	3.03	2.97	2.12	3.15	3.07	2.06	1.57	2.10	2.35	2.09	2.11	2.75	2.38	1.95	2.15	2.34
2015	2.70	3.93	3.11	3.06	2.18	3.24	3.16	2.15	1.46	2.15	2.40	2.15	2.13	2.84	2.41	1.95	2.19	2.40
2016	2.76	4.03	3.17	3.17	2.22	3.40	3.23	2.22	1.38	2.20	2.43	2.20	2.16	2.88	2.49	1.98	2.30	2.42
2017	2.84	4.16	3.24	3.23	2.33	3.48	3.33	2.28	1.62	2.27	2.48	2.24	2.21	2.96	2.56	2.04	2.36	2.51
2018	2.89	4.27	3.30	3.32	2.41	3.51	3.44	2.28	1.59	2.31	2.51	2.29	2.21	2.99	2.58	2.06	2.37	2.49
2019	2.97	4.42	3.39	3.44	2.50	3.62	3.54	2.33	1.60	2.38	2.58	2.33	2.26	3.06	2.64	2.11	2.44	2.55
2020	3.03	4.53	3.46	3.53	2.54	3.67	3.55	2.36	1.97	2.44	2.65	2.35	2.30	3.07	2.64	2.14	2.49	2.56
2021	3.09	4.71	3.54	3.63	2.59	3.66	3.62	2.42	1.97	2.49	2.68	2.36	2.32	3.10	2.70	2.13	2.52	2.59

주: 1) 의사 수는 연말 기준임.

통계번호 HEA-32915

통계명 인구 10만 명당 공공보건기관 인력 수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인구 10만 명당 공공보건기관 인력 수 = (공공보건기관 인력 수 ÷ 추계인구) × 100,000.  
공공보건기관 인력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소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보건교육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보건직, 기능직 등이 포함됨.

단위 명/10만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9N\\_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9N_001&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9N\\_0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9N_002&conn_path=I3)

수록기간 2001-2020

통계해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는 2017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40명 안팎 수준에 머물다가 2018년부터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2020년에는 48.3명까지 늘어났다. 인구 대비 공공보건기관 인력 수는 전남, 강원, 경북, 전북 등 광역도 지역에서 많고 대전, 대구, 울산 등 광역시 지역에서 적다.

통계표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공공보건기관 인력 수, 2001-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38.8	20.1	16.2	15.5	17.7	19.2	17.7	19.8	-	22.8	87.3	68.3	87.5	81.7	109.8	80.5	57.8	52.4
2002	39.0	20.9	16.6	15.5	17.5	25.5	15.4	19.8	-	21.6	88.6	71.4	85.6	84.3	112.6	82.9	56.6	47.6
2003	40.1	21.1	16.9	15.8	17.9	18.6	18.4	21.0	-	21.6	91.7	73.5	94.4	87.6	123.8	84.6	58.9	53.3
2004	41.0	21.4	17.4	16.6	18.7	19.8	21.0	22.2	-	21.7	94.1	76.8	96.3	90.6	124.9	86.8	62.7	56.0
2005	41.1	22.7	17.6	17.2	21.0	20.3	21.5	24.9	-	21.5	91.0	76.6	92.7	91.2	120.0	89.1	62.8	56.7
2006	41.3	22.6	18.1	17.5	21.0	20.2	21.8	22.5	-	22.9	94.1	74.7	91.1	92.8	121.0	89.8	61.2	57.6
2007	41.1	22.9	17.9	17.9	20.9	19.3	19.9	23.2	-	22.7	92.2	74.2	90.3	90.8	126.6	88.3	61.9	52.7
2008	41.1	23.9	17.7	17.9	21.0	18.6	19.5	23.6	-	22.4	91.1	77.0	89.1	91.3	131.4	87.7	60.2	51.1
2009	41.8	25.5	18.5	18.6	21.4	19.2	18.8	22.9	-	23.1	92.2	75.8	88.0	91.3	125.2	89.7	63.6	51.9
2010	40.4	25.3	18.7	16.8	21.3	20.2	17.8	23.6	-	21.4	89.7	74.3	84.6	92.0	125.9	86.6	57.4	52.9
2011	40.1	25.7	18.6	17.1	21.3	22.7	17.2	23.0	-	20.9	86.9	71.4	81.6	87.2	126.7	85.8	60.5	49.7
2012	39.7	25.2	19.2	17.9	22.2	22.9	17.1	22.7	78.3	19.9	85.6	71.3	81.2	84.1	133.5	83.8	58.5	45.1
2013	38.8	27.6	18.7	18.3	22.4	21.7	17.0	22.0	71.8	19.6	83.0	67.4	77.2	83.0	119.8	81.1	54.6	45.3
2014	38.9	28.1	18.5	19.5	23.2	22.8	16.8	22.2	68.0	20.2	82.4	69.1	77.3	82.5	115.2	80.6	53.8	44.7
2015	39.3	29.0	23.3	19.6	23.3	22.4	16.1	21.6	47.0	20.7	83.6	68.2	75.2	80.6	116.4	81.4	52.4	45.1
2016	39.7	30.0	23.1	19.3	23.1	25.1	16.4	21.4	35.8	21.3	82.9	67.4	74.5	80.8	116.2	82.0	54.1	44.8
2017	40.6	31.9	25.7	19.3	22.9	25.9	16.7	22.9	34.6	21.9	86.1	66.5	74.0	82.4	117.5	82.7	54.7	44.1
2018	43.0	33.5	30.9	22.3	24.1	24.2	18.5	29.0	29.6	25.3	86.1	70.4	78.3	83.3	120.5	86.3	55.6	44.3
2019	46.0	36.9	33.2	24.1	30.5	27.7	21.0	30.2	33.5	26.6	88.4	73.6	82.7	89.1	123.8	90.9	61.3	43.8
2020	48.3	38.2	38.0	24.8	35.7	34.6	22.0	32.6	34.7	27.8	95.8	77.9	85.1	90.2	123.3	93.7	65.9	43.6

통계번호 HEA-32916

통계명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 (응급의학전문의 수 ÷ 추계인구) × 100,000.

단위 명/10만 명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현황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1&tblId=DT\\_41104\\_43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1&tblId=DT_41104_432&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20

통계해설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2012년 2.12명에서 2020년 4.1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서울(9.05명), 강원(8.23명), 광주(6.42명), 대전(5.70명)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고 충북(1.29명), 전남(1.78명), 울산(1.84명), 경남(1.98명) 등에서 상대적으로 적다(2020년 기준).

**통계표**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2012-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2.12	3.80	1.18	2.10	2.04	3.06	2.60	0.80	-	1.55	3.79	0.64	1.76	2.53	1.57	1.20	1.04	1.60
2013	2.32	4.16	1.39	2.59	2.12	3.52	3.04	0.79	-	1.57	4.18	0.70	2.13	2.75	1.57	1.35	1.31	1.75
2014	2.47	4.60	1.51	2.75	2.27	3.72	3.35	0.78	-	1.67	4.30	0.70	2.11	2.79	1.56	1.35	1.30	1.89
2015	2.78	5.41	1.74	3.12	2.53	4.05	3.70	0.95	-	1.82	4.81	0.82	2.33	3.00	1.56	1.34	1.38	2.50
2016	3.03	6.20	1.86	3.29	2.82	4.26	3.84	1.11	-	1.94	5.06	0.87	2.54	3.11	1.67	1.45	1.44	2.59
2017	3.32	7.02	2.07	3.54	3.08	4.88	4.12	1.29	-	2.11	5.59	0.93	2.69	3.17	1.67	1.46	1.44	2.52
2018	3.57	7.76	2.32	3.68	3.41	5.24	4.49	1.47	-	2.21	5.92	1.11	2.80	3.29	1.67	1.53	1.61	2.44
2019	3.86	8.39	2.66	4.23	3.46	5.64	5.12	1.75	-	2.23	6.91	1.23	3.06	4.03	1.67	1.80	1.76	2.56
2020	4.18	9.05	3.01	4.56	3.59	6.42	5.70	1.84	-	2.24	8.23	1.29	3.68	4.49	1.78	2.11	1.98	2.69

통계번호 HEA-32917

통계명 장애인 본인부담 의료비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본인부담 의료비 =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 ÷ 진료 실인원.

단위 원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02\\_A05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02_A051&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19

통계해설 장애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애인의 의료지출 부담 수준을 보여 준다. 장애인 1인당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액은 2016년 79만 5941원에서 매년 늘어나 2019년에는 103만 3978원으로 증가하였다. 장애인의 본인부담 의료비는 20-44세 연령층에서 가장 낮고 이후 중장년과 노년 연령층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장애정도와 장애기간에 따라서도 본인부담 의료비가 다른데, 중증장애일수록 높고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높다.

**통계표** 장애인 연령·장애정도·장애기간별 본인부담 의료비, 2016-2019

연도	전체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기간별		
		0-19세	20-44세	45-64세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2016	795,941	472,868	368,411	581,755	1,145,547	867,488	751,177	1,001,988	714,946	456,033
2017	904,796	508,878	442,690	680,124	1,248,254	1,024,106	836,236	1,219,377	764,648	503,575
2018	958,238	495,548	467,215	721,435	1,305,043	1,085,359	881,771	1,311,779	835,385	560,420
2019	1,033,978	565,663	508,591	776,319	1,382,570	1,152,140	963,942	1,451,716	919,495	651,449

통계번호 HEA-32918

통계명 장애인 필요의료 미충족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지난 6개월 사이 병·의원 및 치과 진료가 필요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D02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D025&conn_path=I3)

수록기간 2018-2020

통계해설 지난 6개월 사이 병원 진료가 필요하였으나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2018년 5.1%에서 2020년 2.9%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치과 진료를 충분히 받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은 8.1%에서 4.6%로 줄어들었다.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것은 대부분 진료비 부담(71.3%) 때문이다. 이동의 어려움(12.8%), 장애인 관련 전문인력 부족(3.9%) 등도 일부 이유로 나타난다(2020년 기준).

**통계표** 장애인 필요의료 미충족률과 미충족 이유, 2018-2020

연도	필요의료 미충족률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			
	병·의원	치과	진료비 부담	이동의 어려움	장애인 관련 전문인력 부족	기타
2018	5.1	8.1	75.0	12.5	2.4	10.2
2019	4.1	5.8	74.7	9.0	3.5	12.8
2020	2.9	4.6	71.3	12.8	3.9	12.3

주: 1)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32919

통계명 중증외상환자 1시간 이내 응급실도착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의료 접근권

산출방법 중증외상환자 1시간 이내 응급실도착률 = (1시간 이내 응급실 도착 중증외상환자 수 ÷ 전체 응급실 도착 중증외상환자 수) × 100.  
시간 미상 및 미입력 사례는 제외함.

단위 %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현황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1&tblId=DT\\_41104\\_327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1&tblId=DT_41104_3273&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0

통계해설 응급실의 중증외상환자 중 발병 후 1시간 이내에 도착한 환자의 비율은 2018년까지 4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9.3%와 36.9%로 낮아졌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이 비율은 충북(45.5%), 울산(45.0%), 충남(43.9%), 경북(43.7%) 등에서 40%를 넘는 반면 광주(28.2%), 인천(28.9%), 대구(29.5%) 등에서는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표** 시도별 중증외상환자 1시간 이내 응급실도착률, 2016-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6	40.7	41.4	34.4	30.9	37.6	34.2	38.7	43.7	-	40.0	36.2	53.0	45.5	41.3	45.2	46.9	38.7	44.5
2017	40.9	41.6	32.6	30.5	36.7	34.3	38.7	42.2	-	41.0	37.4	53.4	47.5	40.3	44.9	46.1	38.3	43.0
2018	40.0	39.5	31.9	30.5	37.5	32.8	38.5	40.2	-	41.0	35.3	52.4	46.2	38.0	44.2	47.6	37.0	40.8
2019	39.3	37.8	31.6	31.7	33.8	31.0	37.5	43.2	-	41.0	33.2	49.0	45.1	39.2	40.3	46.4	40.3	40.8
2020	36.9	35.9	30.4	29.5	28.9	28.2	33.9	45.0	34.8	38.7	32.0	45.5	43.9	37.3	37.7	43.7	37.9	39.1

주: 1) ICISS 2015 기반 중증외상환자임.  
2) NEDIS를 구축하고 진료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전국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 자료로 집계함.

통계번호 HEA-33001

통계명 모성사망비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모성 및 아동 보호

산출방법 모성사망비 = (모성사망자 수 ÷ 출생아 수) × 100,000.

단위 명/10만 명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9](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9)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모성사망비는 출생아 수 대비 임신 및 분만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로, 출생아 10만 명당으로 나타낸다. 모성사망자 수는 2011년까지 50명을 웃돌다가 201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30명 안팎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출생아 10만 명당으로 보면 2011년 17.2명에서 2012년 9.9명으로 급락한 후 최근까지 10명 내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표 모성사망비, 2000-2020

연도	모성사망자 수(명)	모성사망비(명/10만 명)
2000	97	15.0
2002	80	16.0
2003	72	15.0
2005	61	14.0
2006	66	15.0
2007	72	15.0
2008	58	12.0
2009	60	13.5
2010	74	15.7
2011	81	17.2
2012	48	9.9
2013	50	11.5
2014	48	11.0
2015	38	8.7
2016	34	8.4
2017	28	7.8
2018	37	11.3
2019	30	9.9
2020	32	11.8

통계번호 HEA-33002

통계명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모성 및 아동 보호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8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84&conn_path=I3)

수록기간 2007-2020

통계해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인구의 비율은 2007년 36.6%에 불과하였으나 10년 만인 2017년에 50%를 넘어섰고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 2020년에는 70.8%까지 높아졌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1세 이하 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1-5세와 6-11세는 92.8%와 80.2%에 이르지만 12-14세와 15-18세는 62.3%와 41.4%에 그친다.

**통계표**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07-2020

연도	전체	연령별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2007	36.6	63.8	46.2	19.8	12.8
2008	36.6	66.8	43.7	21.0	13.1
2009	39.5	65.8	46.7	30.0	17.0
2010	45.2	73.9	57.4	31.7	16.3
2011	47.3	74.0	56.6	36.0	24.2
2012	49.7	78.6	59.7	38.3	23.5
2014	47.8	79.2	55.2	31.4	20.1
2015	49.3	76.7	56.2	42.1	19.8
2016	45.7	73.3	55.6	33.6	17.1
2017	50.7	77.3	60.4	44.9	18.9
2018	56.3	84.2	66.3	41.5	24.7
2019	64.4	91.6	80.2	52.2	24.6
2020	70.8	92.8	80.2	62.3	41.4

주: 1) 1-18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HEA-33003

통계명 영아사망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모성 및 아동 보호

산출방법 영아사망률 = (당해 연도 0세 사망아 수 ÷ 당해 연도 출생아 수) × 1,000.

단위 명/1000명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8&conn_path=I3)

수록기간 2005-2020

통계해설 영아사망률은 1년 이내에 사망한 출생아의 비율로, 출생아 1000명당 사망아 수로 나타낸다. 출생아 1000명당 사망아 수는 2005년 4.2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2.5명으로 떨어졌다. 영아사망률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 남아 1000명당 1년 이내 사망아 수는 2020년 2.8명인데 같은 해 여아의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2.2명에 그친다.

**통계표** 성 및 생존기간별 영아사망률, 2005-2020

연도	전체				남아				여아			
	0-6일	7-27일	28일 이상	합계	0-6일	7-27일	28일 이상	합계	0-6일	7-27일	28일 이상	합계
2005	1.6	0.8	1.8	4.2	1.7	0.8	1.9	4.3	1.5	0.7	1.8	4.0
2006	1.4	0.8	1.6	3.8	1.6	0.8	1.7	4.1	1.1	0.8	1.5	3.5
2007	1.3	0.7	1.5	3.4	1.3	0.8	1.6	3.7	1.2	0.6	1.4	3.2
2008	1.3	0.5	1.5	3.4	1.4	0.5	1.6	3.5	1.2	0.5	1.5	3.3
2009	1.2	0.6	1.5	3.2	1.2	0.6	1.5	3.3	1.1	0.6	1.4	3.1
2010	1.3	0.5	1.4	3.2	1.4	0.6	1.6	3.7	1.1	0.4	1.2	2.7
2011	1.1	0.6	1.3	3.0	1.3	0.6	1.5	3.4	1.0	0.5	1.2	2.7
2012	1.2	0.6	1.2	2.9	1.3	0.6	1.2	3.1	1.0	0.5	1.1	2.7
2013	1.1	0.6	1.3	3.0	1.2	0.6	1.3	3.1	1.1	0.6	1.2	2.9
2014	1.1	0.6	1.3	3.0	1.1	0.7	1.4	3.2	1.0	0.6	1.2	2.8
2015	1.0	0.5	1.2	2.7	1.1	0.6	1.2	2.9	1.0	0.4	1.1	2.5
2016	1.0	0.6	1.2	2.8	1.1	0.6	1.3	3.1	0.9	0.5	1.1	2.6
2017	1.0	0.6	1.3	2.8	1.1	0.6	1.4	3.1	0.8	0.5	1.1	2.5
2018	1.1	0.6	1.2	2.8	1.2	0.6	1.3	3.2	0.9	0.5	1.1	2.5
2019	1.0	0.5	1.2	2.7	1.1	0.5	1.4	3.0	1.0	0.5	1.0	2.4
2020	0.8	0.5	1.2	2.5	0.9	0.5	1.4	2.8	0.7	0.4	1.0	2.2

통계번호 HEA-33004

통계명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모성 및 아동 보호

산출방법 건강검진 수검률 = (건강검진 수검인구 ÷ 건강검진 대상인구) × 100.  
건강검진 대상인구는 6세 미만(생후 4-71개월) 영유아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12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124&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20

통계해설 6세 미만 영유아 중 건강검진을 받은 영유아의 비율은 2012년 55.4%에서 2016년 71.9%, 2020년 83.0%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48개월까지는 수검률이 80%를 넘지만 54개월이 지나면 80%에 미치지 못한다.

**통계표** 월령별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2012-2020

연도	전체	월령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2012	55.4	63.7	59.9	68.0	63.6	52.6	42.4	37.5
2013	63.7	70.2	67.5	75.0	75.2	64.6	52.3	41.9
2014	69.8	75.9	71.1	77.4	76.6	71.1	63.1	52.8
2015	69.5	78.5	74.2	77.1	75.7	69.9	60.3	50.6
2016	71.9	80.3	77.7	81.4	77.0	71.6	62.7	54.6
2017	72.1	80.6	77.5	81.4	78.6	72.0	63.1	55.0
2018	74.5	82.9	80.7	82.8	80.6	76.1	65.7	57.5
2019	77.6	85.9	83.2	86.7	82.9	78.4	69.8	61.5
2020	83.0	87.2	87.9	89.3	86.5	82.5	76.6	75.2

통계번호 HEA-33005

통계명 저체중아 비율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모성 및 아동 보호

산출방법 저체중아 비율 = (2.5kg 미만 출생아 수 ÷ 전체 출생아 수)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3&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저체중아는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전체 출생아 중 저체중아의 비율은 2000년 3.81%에서 2002년 4.00%, 2010년 5.02%, 2017년 6.17%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6.76%까지 늘어났다. 저체중 출생 비율은 남아보다 여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여아의 저체중 출생 비율은 남아보다 1%p가량 높다.

**통계표** 성별 저체중아 비율, 2000-2020

연도	전체	남아	여아	연도	전체	남아	여아
2000	3.81	3.40	4.27	2011	5.23	4.75	5.74
2001	3.97	3.55	4.43	2012	5.34	4.82	5.89
2002	4.00	3.57	4.47	2013	5.55	5.07	6.04
2003	4.08	3.74	4.45	2014	5.71	5.24	6.20
2004	4.17	3.80	4.58	2015	5.75	5.32	6.20
2005	4.29	3.88	4.73	2016	5.87	5.38	6.39
2006	4.39	3.92	4.90	2017	6.17	5.67	6.71
2007	4.69	4.28	5.13	2018	6.24	5.72	6.78
2008	4.90	4.47	5.35	2019	6.62	5.96	7.32
2009	4.95	4.44	5.50	2020	6.76	6.25	7.30
2010	5.02	4.61	5.47				

주: 1) 체중 미상 출생아는 제외함.

통계번호 HEA-33006

통계명 조산아 비율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모성 및 아동 보호

산출방법 조산아 비율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수 ÷ 전체 출생아 수)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5&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조산아는 임신 37주 미만 기간에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전체 출생아 중 조산아의 비율은 2000년 3.80%에서 2007년 5.19%, 2012년 6.28%, 2016년 7.25%, 2019년 8.12%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8.46%까지 늘어났다. 조산아의 대부분은 임신 32주 이후에 태어난다. 2020년 자료로 보면 전체 출생아의 4.25%와 3.33%가 임신 36주와 32-35주 시기에 출생하였다.

통계표 임신기간별 조산아 비율, 2000-2020

연도	전체	임신기간별			
		27주 이하	28-31주	32-35주	36주
2000	3.80	0.05	0.39	1.67	1.69
2001	4.32	0.07	0.68	1.77	1.80
2002	4.43	0.06	0.62	1.83	1.92
2003	4.55	0.08	0.58	1.90	1.99
2004	4.68	0.09	0.47	2.00	2.11
2005	4.78	0.11	0.47	1.98	2.22
2006	4.90	0.12	0.47	2.08	2.23
2007	5.19	0.13	0.46	2.20	2.41
2008	5.55	0.14	0.47	2.31	2.63
2009	5.72	0.20	0.49	2.35	2.68
2010	5.94	0.24	0.51	2.40	2.79
2011	5.98	0.25	0.49	2.44	2.81
2012	6.28	0.26	0.50	2.56	2.97
2013	6.47	0.26	0.55	2.64	3.03
2014	6.69	0.26	0.52	2.72	3.19
2015	6.95	0.27	0.54	2.83	3.31
2016	7.25	0.25	0.56	2.93	3.50
2017	7.61	0.26	0.56	3.08	3.71
2018	7.79	0.28	0.57	3.16	3.77
2019	8.12	0.30	0.59	3.28	3.96
2020	8.46	0.30	0.58	3.33	4.25

주: 1) 임신기간 미상 출생아는 제외함.

통계번호 HEA-33007

통계명 청소년 출산율

통계분류 건강과 보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모성 및 아동 보호

산출방법  $\text{청소년 출산율} = (\text{15-19세 모의 출생아 수} \div \text{15-19세 여자 인구}) \times 1,000.$   
15-19세 여자 인구는 주민등록연앙인구임.

단위 명/1000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청소년 출산율은 청소년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출산율은 15-19세 여자 인구 1000명당 15-19세 여자가 낳은 출생아의 수를 나타낸다. 청소년이 낳은 출생아의 수는 2000년 4864명에서 2020년 907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지난 20년간 1/5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여자 청소년 1000명당 출생아의 수도 2.62명에서 0.74명으로 1/4 수준에 가깝게 떨어졌다.

통계표

청소년 출산율, 2000-2020

연도	출생아 수(명)	출산율(명/1000명)	연도	출생아 수(명)	출산율(명/1000명)
2000	4,864	2.62	2011	2,979	1.79
2001	4,112	2.35	2012	2,917	1.77
2002	4,487	2.74	2013	2,813	1.73
2003	3,947	2.54	2014	2,527	1.58
2004	3,549	2.35	2015	2,211	1.41
2005	3,206	2.15	2016	1,907	1.25
2006	3,302	2.20	2017	1,520	1.05
2007	3,518	2.29	2018	1,292	0.94
2008	2,728	1.73	2019	1,096	0.84
2009	2,788	1.73	2020	907	0.74
2010	2,900	1.76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체	통계번호	통계명	취약집단
교육	평등권	교육기회의 평등	EDU-13101	교육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EDU-13102	소득수준별 교육비 부담도	저소득층
			EDU-13103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저소득층
			EDU-13104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저소득층
			EDU-13105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시민·정치적 권리	교육선택의 자유	EDU-23201	교사로부터의 욕설 경험률	아동·청소년
			EDU-23202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률	아동·청소년
			EDU-23203	아동·청소년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
			EDU-23204	아동·청소년 자퇴 충동률	아동·청소년
			EDU-23205	아동·청소년 학습시간	아동·청소년
			EDU-23206	장시간 학습 아동·청소년 비율	아동·청소년
			EDU-23207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아동·청소년 비율	아동·청소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EDU-33301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EDU-33302	고등교육 이수율	
			EDU-33303	교사로부터의 존중감	아동·청소년
			EDU-33304	교원 1인당 학생 수	
			EDU-33305	교육권 존중도	
			EDU-33306	교육기회 충족도	
			EDU-33307	교육비 부담도	
			EDU-33308	기초학력 미달률	
			EDU-33309	성인 문해력	
			EDU-33310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수	
			EDU-33311	어린이집 취원율	
			EDU-33312	유치원 취원율	
			EDU-33313	장애 아동·청소년 사교육 참여율	장애인
			EDU-33314	장애 아동·청소년 특수교육 만족도	장애인
			EDU-33315	청소년 학교생활 만족도	아동·청소년
			EDU-33316	취학률	
			EDU-33317	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	장애인
			EDU-33318	평생학습 참여율	
	EDU-33319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EDU-33320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EDU-33321	학급당 학생 수				
EDU-33322	학비 마련 어려움 경험률				

통계번호 EDU-13101

통계명 교육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교육

평등권

교육기회의 평등

산출방법 우리 사회의 교육기회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우리 사회의 교육기회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7년까지 60% 안팎에서 등락하다가 2018년에 65.7%로 올랐고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는 75.2%와 78.8%로 더욱 높아졌다.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공정성 인식 차이에 의미 있는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통계표

연령·소득수준·교육수준별 교육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60.8	57.9	56.1	61.0	63.1	69.5	-	58.3	59.7	60.3	64.3	61.5	56.9	60.3	68.9	58.0	61.2	59.5
2014	63.4	62.6	58.7	63.6	66.5	66.3	-	59.9	56.5	61.6	64.6	67.4	66.9	67.6	65.3	60.0	64.0	63.0
2015	57.8	57.4	55.4	52.1	61.0	66.7	-	58.4	63.2	59.2	56.6	55.5	59.3	54.7	68.8	63.1	57.3	56.2
2016	59.0	55.5	53.9	56.6	62.4	69.6	-	55.5	58.2	57.4	58.5	56.1	63.8	62.3	71.6	67.8	56.9	58.7
2017	59.8	57.6	58.9	59.9	60.9	62.7	-	61.0	58.3	57.5	61.3	61.6	62.3	56.4	64.3	60.4	59.5	59.9
2018	65.7	61.6	64.6	63.7	70.0	68.5	-	62.1	59.5	64.4	61.8	68.5	71.8	66.3	67.0	65.3	64.7	66.5
2019	63.2	62.9	63.1	60.1	66.2	63.6	-	65.8	65.0	64.4	62.8	61.4	63.3	63.2	67.5	60.9	63.2	63.1
2020	75.2	73.2	72.8	75.9	74.4	-	77.6	77.2	71.0	71.2	69.7	76.7	80.6	77.8	77.0	76.6	73.2	76.3
2021	78.8	79.5	76.5	81.1	79.0	-	78.4	70.8	80.7	80.9	77.3	78.8	81.6	78.2	75.9	72.8	78.2	80.6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EDU-13102

통계명 소득수준별 교육비 부담도

통계분류 교육

평등권

교육기회의 평등

산출방법 자녀의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러운지에 대해 ‘약간 부담스럽다’ 또는 ‘매우 부담스럽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100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100R&conn_path=I3)

수록기간 2008-2022

통계해설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러운 가구의 비율은 2008년 79.8%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2년에는 57.7%로 낮아졌다. 가구의 교육비 부담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비 부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 부담을 적게 가진다.

통계표

소득수준별 교육비 부담도, 2008-2022

연도	전체	소득수준별						
		100 만 원 미만	100-200 만 원 미만	200-300 만 원 미만	300-400 만 원 미만	400-500 만 원 미만	500-600 만 원 미만	600 만 원 이상
2008	79.8	82.1	82.9	82.3	79.5	78.8	74.6	67.1
2010	78.4	84.6	82.4	82.9	77.6	75.3	72.8	63.8
2012	73.0	82.0	78.1	77.8	73.4	70.8	63.8	57.8
2014	69.3	71.4	74.7	73.5	69.7	70.8	66.3	57.0
2016	65.3	68.3	76.5	72.2	65.6	64.1	59.4	52.9
2018	64.4	69.4	73.1	70.3	66.5	66.0	63.1	54.0
2020	64.1	66.2	75.0	70.3	65.9	65.6	62.9	54.6
2022	57.7	64.4	64.6	60.6	65.5	58.3	56.1	51.3

주: 1) 학생 자녀를 둔 3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EDU-13103

통계명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통계분류 교육

평등권

교육기회의 평등

산출방법 조사 연도 3-5월 사이에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309&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309&conn_path=I3)

수록기간 2007-2021

통계해설 사교육에 참여하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2007년 77.0%에서 2016년 67.8%로 낮아졌다. 2017년부터 진로·진학 학습상담이 사교육 항목에 포함되면서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졌는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올라 2021년에는 75.5%에 이른다. 사교육 참여율은 가구소득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다. 특히 최상위 소득계층의 사교육 참여율은 최하위 소득계층의 약 두 배에 달한다.

통계표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2007-2021

연도	전체	소득수준별								
		200 만 원 미만	200-300 만 원 미만	300-400 만 원 미만	400-500 만 원 미만	500-600 만 원 미만	600-700 만 원 미만	700 만 원 이상	700-800 만 원 미만	800 만 원 이상
2007	77.0	53.4	77.0	84.4	89.2	90.5	92.7	93.5	-	-
2008	75.1	49.2	73.7	82.2	87.2	89.7	90.5	91.8	-	-
2009	75.0	49.6	72.9	82.6	86.5	88.9	90.1	91.1	-	-
2010	73.6	46.6	69.8	79.8	84.5	87.1	89.6	89.1	-	-
2011	71.7	45.8	68.2	76.8	81.8	83.7	86.5	85.3	-	-
2012	69.4	43.0	64.0	74.5	80.1	83.1	84.2	83.8	-	-
2013	68.8	41.8	60.1	71.5	79.2	82.5	84.8	83.5	-	-
2014	68.6	40.5	60.1	69.8	77.5	79.7	84.3	83.5	-	-
2015	68.8	40.5	59.4	70.2	76.2	78.9	82.7	82.8	-	-
2016	67.8	40.2	56.2	67.1	73.1	76.1	80.1	81.9	-	-
2017	71.2	44.0	58.8	68.5	75.5	79.0	81.5	-	83.8	84.5
2018	72.8	47.3	59.4	70.7	75.6	79.1	81.1	-	83.7	84.0
2019	74.8	47.0	60.4	70.7	78.0	79.8	83.6	-	87.0	85.1
2020	67.1	40.4	51.1	60.9	68.4	72.5	75.2	-	80.2	80.8
2021	75.5	46.6	57.6	70.0	77.2	80.3	83.5	-	84.9	86.0

주: 1) 2017년부터 진로·진학 학습상담이 사교육에 포함됨.

통계번호 EDU-13104

통계명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분류 교육

평등권

교육기회의 평등

산출방법 사교육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모두 포함한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임.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209&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209&conn_path=I3)

수록기간 2007-2021

통계해설 초·중·고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2만 원에서 2016년 25.6만 원으로 늘어났다. 2017년부터 진로·진학 학습상담이 사교육 항목에 포함되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올라 2021년에는 36.7만 원으로 늘어났다. 사교육 지출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많다. 특히 최상위 소득 계층의 사교육비는 최하위 소득계층의 5배를 넘는다.

통계표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2007-2021

연도	전체	소득수준별								
		200 만 원 미만	200-300 만 원 미만	300-400 만 원 미만	400-500 만 원 미만	500-600 만 원 미만	600-700 만 원 미만	700 만 원 이상	700-800 만 원 미만	800 만 원 이상
2007	22.2	9.2	17.7	24.1	30.3	34.4	38.8	46.8	-	-
2008	23.3	9.3	17.7	24.5	30.6	35.6	40.2	47.4	-	-
2009	24.2	9.6	18.0	24.6	31.0	37.2	42.0	51.4	-	-
2010	24.0	9.2	17.0	24.0	29.8	36.2	40.4	48.4	-	-
2011	24.0	9.8	17.4	23.4	29.0	34.0	39.4	44.0	-	-
2012	23.6	9.9	16.8	23.0	28.8	33.2	36.7	42.6	-	-
2013	23.9	10.0	16.0	22.1	28.0	33.0	35.9	41.5	-	-
2014	24.2	9.4	15.9	21.2	27.2	31.9	36.7	42.8	-	-
2015	24.4	9.3	15.9	21.2	26.6	31.1	36.1	42.0	-	-
2016	25.6	8.8	15.4	21.1	26.5	31.0	36.5	44.3	-	-
2017	27.2	9.3	15.3	21.2	27.4	32.2	36.5	-	40.7	48.3
2018	29.1	9.9	15.6	22.2	27.9	32.9	37.3	-	42.2	50.5
2019	32.1	10.4	17.0	23.4	30.0	35.4	40.4	-	46.4	53.9
2020	30.2	10.3	15.8	20.4	26.9	32.5	37.2	-	44.1	52.6
2021	36.7	11.6	18.0	25.3	33.2	38.1	44.4	-	48.6	59.3

주: 1) 2017년부터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이 사교육비에 포함됨.

통계번호 EDU-13105

통계명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통계분류 교육

평등권

교육기회의 평등

산출방법 인구 10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 (평생교육기관 수 ÷ 추계인구) × 100,000.

단위 개소/10만 명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tblId=TX\\_334\\_2009\\_H200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tblId=TX_334_2009_H2004&conn_path=I3)

수록기간 2007-2021

통계해설 인구 10만 명당 준형식 및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는 2007년 6.5개소에서 2014년 10.6개소로 급증하였고 이후 최근까지 10개소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 대비 평생교육기관 수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다. 2021년 기준 서울의 인구 10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는 22.3개소로 다른 광역시도의 두 배를 넘는다.

**통계표**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2007-2021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7	6.5	10.8	5.5	5.6	4.2	6.2	7.6	3.6	-	4.9	6.7	5.2	6.8	7.0	5.3	5.7	4.2	4.8
2008	7.3	12.2	5.8	6.7	5.0	7.3	8.3	3.9	-	5.3	8.0	5.6	7.4	7.8	5.9	6.4	4.9	5.7
2009	7.6	12.9	5.8	6.9	4.7	7.2	9.1	4.4	-	5.8	8.6	5.7	7.7	8.1	6.2	6.5	5.4	6.2
2010	8.5	14.5	6.7	7.6	5.0	8.0	9.8	4.7	-	6.5	9.2	6.9	7.7	8.4	6.9	7.3	6.0	6.9
2011	9.2	15.9	7.8	8.1	5.6	8.7	9.7	5.5	-	7.1	10.1	7.6	8.4	9.0	7.3	7.9	6.7	6.5
2012	9.5	16.5	8.2	8.5	5.7	9.3	11.1	6.4	-	7.2	10.5	8.0	8.4	9.5	7.4	8.2	6.6	6.2
2013	9.9	16.9	8.3	8.8	5.9	11.1	11.5	7.0	7.6	7.8	10.8	8.6	8.3	9.8	7.2	8.5	6.4	6.7
2014	10.6	18.2	8.9	8.6	6.0	12.0	12.4	7.5	9.8	8.6	11.0	9.1	9.1	10.2	7.8	8.9	7.1	7.5
2015	10.2	18.8	8.3	8.4	6.0	11.8	11.2	6.0	7.5	7.7	10.5	8.7	8.2	10.2	6.8	8.3	6.6	6.8
2016	10.1	19.1	8.9	7.6	6.4	12.2	10.7	5.7	5.5	7.4	10.8	8.2	8.0	10.1	7.2	8.2	6.3	7.0
2017	9.9	19.1	9.1	7.6	5.7	11.4	10.5	4.7	6.0	7.0	10.4	7.8	8.1	9.8	7.2	8.5	6.4	6.3
2018	10.1	20.2	9.1	8.0	5.7	11.9	10.2	4.4	5.0	7.5	10.2	7.9	7.9	8.9	7.7	8.1	6.3	6.1
2019	10.3	21.4	9.1	7.7	5.4	10.8	9.9	4.3	4.9	7.8	9.9	7.7	8.0	9.0	7.5	8.2	6.2	6.0
2020	10.8	22.5	9.1	7.8	6.0	10.3	10.2	4.5	6.0	8.4	9.9	7.7	8.6	9.2	7.4	8.3	6.3	6.1
2021	10.7	22.3	8.8	8.0	6.5	10.8	9.9	4.3	6.3	8.4	9.8	7.5	8.5	9.0	7.2	8.3	6.5	5.8

주: 1) 준형식 및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임.

통계번호 EDU-23201

통계명 교사로부터의 욕설 경험률

통계분류 교육

시민·정치적 권리

교육선택의 자유

산출방법 교사에게 1년에 1회 이상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1\\_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1_2&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교사에게 욕설을 들은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2013년 27.3%에 달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 17.8%로 낮아졌고 이듬해인 2020년에는 10.4%로 급락하였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9.0%로 더 낮아졌다.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겪는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학업성적별로는 중상위권 학생에 비해 하위권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한다.

**통계표 성·학교급·학업성적별 교사로부터의 욕설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업성적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2013	27.3	30.5	23.6	12.7	33.0	-	33.8	33.8	24.7	24.0	34.6
2014	22.1	26.2	17.6	7.9	26.6	-	28.5	29.3	19.3	20.5	27.5
2015	18.4	22.2	14.2	8.1	20.0	-	24.4	23.9	15.6	17.1	23.9
2016	18.8	21.2	16.0	6.7	21.0	25.7	24.6	30.5	16.1	16.8	25.8
2017	20.6	21.5	19.6	7.5	25.9	26.0	25.6	27.6	19.6	19.3	24.2
2018	18.9	19.6	18.0	7.3	23.2	24.6	23.5	28.6	16.7	17.7	24.2
2019	17.8	20.1	15.3	10.8	20.9	21.5	20.9	23.2	16.6	16.2	22.5
2020	10.4	12.2	8.2	5.4	11.1	14.3	13.8	16.3	10.4	9.5	11.8
2021	9.0	11.0	6.7	5.1	10.7	10.7	10.6	11.3	8.9	8.2	10.3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EDU-23202

통계명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률

통계분류 교육

시민·정치적 권리

교육선택의 자유

산출방법 교사에게 1년에 1회 이상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1\\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21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교사에게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2013년 29.7%에서 매년 낮아져 2019년에는 9.2%로 크게 떨어졌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4.0%와 3.1%에 그쳤다.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다. 과거에는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중상위권 성적 학생에 비해 하위권 성적 학생이 교사로부터의 체벌을 더 많이 경험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학교급·학업성적별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업성적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2013	29.7	37.7	21.1	18.0	35.7	-	33.5	34.4	27.2	27.9	35.4
2014	23.7	31.9	14.7	13.5	29.0	-	25.7	29.6	21.4	22.6	27.9
2015	18.5	26.0	10.2	11.6	20.5	-	21.1	24.8	17.3	17.1	22.5
2016	16.2	21.1	10.8	8.2	18.6	20.1	20.3	18.7	13.8	15.1	21.2
2017	15.6	19.6	11.3	7.6	19.7	18.0	17.8	19.7	14.8	14.0	19.7
2018	12.2	16.5	7.6	5.2	14.9	15.4	15.0	16.7	10.4	11.9	15.3
2019	9.2	13.2	4.9	6.2	10.6	10.7	10.3	12.4	8.4	8.3	12.0
2020	4.0	5.9	1.8	3.1	4.1	4.7	4.2	6.4	3.8	3.9	4.3
2021	3.1	4.6	1.5	2.8	3.0	3.5	3.8	2.3	3.0	2.9	3.4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EDU-23203

통계명 아동·청소년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교육

시민·정치적 권리

교육선택의 자유

산출방법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다’ 또는 ‘매우 동의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아동·청소년은 부모나 교사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69.0%, 2020년 67.5%, 2021년 73.2%, 2022년 74.3%로 70% 안팎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아동·청소년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인식,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69.0	69.6	68.4	55.5	61.3	66.6	74.6	81.0	80.2	69.5	63.7	62.0
2020	67.5	68.7	66.3	53.5	61.3	64.6	71.3	79.4	77.7	68.7	61.7	60.8
2021	73.2	73.3	73.2	62.3	68.9	70.8	75.4	82.2	83.4	74.7	68.2	60.2
2022	74.3	73.5	75.1	66.7	70.8	71.9	76.9	80.5	81.4	74.8	71.6	63.7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EDU-23204

통계명 아동·청소년 자퇴 충동률

통계분류 교육

시민·정치적 권리

교육선택의 자유

산출방법 최근 1년 중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를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39&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39&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최근 1년 동안 자퇴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2013년 23.2%에서 2019년 31.1%로 높아졌다가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 23.6%와 25.3%로 낮아졌다. 자퇴 충동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고등학생이 중학생과 초등학생보다 높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퇴 충동률이 높다.

**통계표** 성·학교급·학업성적·소득수준별 아동·청소년 자퇴 충동률,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학업성적별			소득수준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 학교	중 학교	고등 학교	일반 계고	특성화 계고	상	중	하	상	중	하
2013	23.2	22.5	24.0	-	16.9	-	29.0	30.3	13.0	19.9	34.8	20.5	21.1	31.4
2014	27.7	26.8	28.7	14.4	25.2	-	41.5	34.9	17.9	24.9	43.5	23.1	27.4	41.1
2015	26.0	24.2	28.0	14.5	22.6	-	39.9	29.3	15.6	23.9	43.4	20.3	28.5	42.1
2016	25.1	22.8	27.6	15.5	20.1	36.7	37.3	34.3	17.7	22.4	39.3	20.9	26.1	40.1
2017	28.2	22.7	34.1	16.5	25.1	39.4	40.0	36.8	19.8	25.7	44.6	23.1	31.3	44.0
2018	28.8	23.5	34.4	17.9	26.0	39.6	40.3	36.9	19.2	26.6	46.1	23.7	31.5	47.3
2019	31.1	26.0	36.6	23.0	27.6	41.2	42.7	35.0	22.4	28.2	50.0	25.5	35.3	50.3
2020	23.6	19.6	27.8	17.1	20.5	32.3	33.2	28.6	16.0	21.6	37.6	19.3	26.5	41.9
2021	25.3	20.9	30.1	19.2	22.0	34.6	35.7	30.0	17.7	23.0	42.0	21.0	27.8	45.7

주: 1) 2013년에는 중·고등학생, 2014년부터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EDU-23205

통계명 아동·청소년 학습시간

통계분류 교육

시민·정치적 권리

교육선택의 자유

산출방법 정규수업 학습시간과 정규수업 외 학습시간을 포함한 1일 평균 학습시간임.

단위 시간: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019\\_010\\_1TM1034X&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019_010_1TM1034X&conn_path=I3)

수록기간 1999-2019

통계해설 초등학생의 평일 학습시간은 1999년 7시간 20분에서 2019년 6시간 9분으로 1시간 11분 줄었다. 같은 기간 중학생은 8시간 52분에서 7시간 20분으로 1시간 32분, 고등학생은 10시간 7분에서 7시간 57분으로 2시간 10분 감소하였다.

통계표

학교급별 아동·청소년 학습시간, 1999-2019

연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요일평균	평일	요일평균	평일	요일평균	평일
1999	6:10	7:20	7:29	8:52	8:50	10:07
2004	6:13	7:32	7:18	8:44	8:51	10:14
2009	6:13	7:48	7:22	9:03	9:10	10:46
2014	5:20	6:47	6:41	8:05	7:34	9:03
2019	4:46	6:09	5:57	7:20	6:44	7:57

주: 1) 요일평균은 토요일과 일요일 학습시간을 포함한 일평균 학습시간임.

통계번호 EDU-23206

통계명 장시간 학습 아동·청소년 비율

통계분류 교육

시민·정치적 권리

교육선택의 자유

산출방법 학교 정규수업 외 평일 하루 6시간 이상 공부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6&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학교 정규수업 외에 하루 6시간 이상 공부하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2014년 7.2%에서 2019년 5.9%로 점차 낮아지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에 3.7%로 급락하였다. 이후 2021년에는 4.6%로 약간 올랐다. 장시간 학습하는 학생의 비율은 일반계고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학교급별 장시간 학습 아동·청소년 비율, 2013-2021

연도	전체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3	2.9	2.7	2.4	-	4.1	0.8
2014	7.2	6.8	4.0	-	11.9	3.6
2015	6.1	6.3	3.6	-	9.5	2.1
2016	6.5	6.7	4.3	8.3	9.9	1.5
2017	6.2	5.9	4.4	7.7	9.0	2.2
2018	5.2	4.8	4.1	6.5	7.3	3.0
2019	5.9	5.0	4.1	8.4	9.8	2.4
2020	3.7	2.7	3.8	4.5	5.2	1.3
2021	4.6	4.2	3.8	5.7	6.9	1.0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EDU-23207

통계명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아동·청소년 비율

통계분류 교육

시민·정치적 권리

교육선택의 자유

산출방법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지에 대해 ‘그렇지 않은 편이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0\\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0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2013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23-24% 수준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학교급에 따라 다른데, 고등학생이 가장 높고 초등학생이 가장 낮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높다.

**통계표** 학교급·학업성적·소득수준별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아동·청소년 비율, 2013-2021

연도	전체	학교급별					학업성적별			소득수준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상	중	하
2013	28.9	18.6	29.8	-	35.7	40.9	20.4	26.0	42.6	21.9	31.4	41.7
2015	23.5	15.4	21.2	-	31.9	31.2	15.0	22.2	36.9	17.6	27.7	35.5
2016	23.0	13.9	19.0	33.5	31.9	39.5	16.0	21.3	35.0	18.1	24.7	39.2
2017	24.0	15.0	22.7	31.8	31.2	34.4	16.3	22.8	37.4	19.2	26.7	40.0
2018	23.4	14.8	22.8	30.7	30.8	30.2	15.0	22.0	37.7	18.1	26.6	42.2
2019	23.5	17.2	23.7	28.9	29.1	28.1	16.2	21.6	38.5	18.5	28.0	38.8
2020	28.3	24.3	29.7	30.8	30.2	33.2	19.9	27.6	40.7	24.1	31.4	43.8
2021	24.4	18.9	25.0	29.4	29.1	30.2	16.2	23.4	39.5	19.8	28.3	40.1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EDU-33301

통계명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정부 교육지출 총액 ÷ GDP) × 100.

단위 %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자료출처 <https://data.oecd.org/eduresource/public-spending-on-education.htm>

수록기간 2015-2018

통계해설 GDP 대비 정부의 교육지출 비율은 2015년 3.66%에서 2016년 3.59%로 낮아졌다가 2017년과 2018년에 3.63%와 3.75%로 높아졌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은 2015년 3.05%에서 2018년 3.13%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은 0.62%에서 변화가 없다.

**통계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2015-2018

연도	전체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2015	3.66	3.05	0.62
2016	3.59	2.97	0.62
2017	3.63	3.03	0.59
2018	3.75	3.13	0.62

통계번호 EDU-33302

통계명 고등교육 이수율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자료출처 <https://data.oecd.org/eduatt/adult-education-level.htm>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25-64세 인구 중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은 2000년 23.8%에서 2004년 30.4%, 2011년 40.4%, 2019년 50.0%로 꾸준히 높아졌고 2020년에는 50.7%에 달하고 있다. 2000년 당시 고등교육 이수율은 남성 29.8%, 여성 17.8%로 남성이 여성보다 10%p 이상 높았으나 2020년에는 남성 52.8%, 여성 48.5%로 남녀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

통계표 성별 고등교육 이수율, 2000-2020

연도	전체	남성	여성	연도	전체	남성	여성
2000	23.8	29.8	17.8	2011	40.4	44.8	35.9
2001	24.8	30.5	19.0	2012	41.7	45.9	37.5
2002	25.9	31.5	20.2	2013	43.1	47.1	39.0
2003	29.4	35.2	23.5	2014	44.5	48.3	40.6
2004	30.4	36.1	24.6	2015	45.4	49.0	41.6
2005	31.6	36.9	26.2	2016	46.6	50.2	43.0
2006	33.1	38.0	28.0	2017	47.7	51.0	44.4
2007	34.8	39.6	29.9	2018	49.0	51.8	46.2
2008	36.7	41.3	31.9	2019	50.0	52.3	47.6
2009	38.5	43.0	33.8	2020	50.7	52.8	48.5
2010	39.0	43.2	34.8				

통계번호 EDU-33303

통계명 교사로부터의 존중감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하는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0\\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40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교사가 학생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2013년 81.0%에서 2017년 90.3%로 높아졌고 이후에도 올라 2021년에는 96.3%에 이른다. 학생이 교사로부터 받는 존중감은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더 낮고 학업성적과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최근 2년, 즉 2020년과 2021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는다.

통계표

학교급·학업성적·소득수준별 교사로부터의 존중감, 2013-2021

연도	전체	학교급별					학업성적별			소득수준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상	중	하
2013	81.0	89.4	79.9	-	76.8	67.0	85.9	83.2	72.3	84.1	81.1	72.4
2015	89.1	93.5	90.1	-	85.3	83.0	92.7	89.6	83.4	90.9	88.2	84.3
2016	88.4	94.0	89.1	83.5	85.7	74.8	91.7	89.2	82.5	90.3	88.0	81.0
2017	90.3	96.3	88.7	87.2	87.7	85.0	92.3	91.0	86.1	91.1	90.7	84.3
2018	91.1	97.0	90.2	87.0	87.7	84.4	93.0	92.1	86.4	92.2	91.0	85.1
2019	92.7	95.9	91.7	90.9	90.8	91.2	95.0	93.8	87.1	93.8	92.6	86.3
2020	96.3	98.0	96.7	94.3	94.7	92.3	97.1	96.8	94.2	97.2	95.8	92.0
2021	96.3	97.7	96.2	95.0	95.4	93.1	97.0	96.8	94.2	96.8	96.1	93.1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EDU-33304

통계명 교원 1인당 학생 수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교원 1인당 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재직교원 수.

단위 명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1](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1)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육자원의 투입 수준을 나타냄과 동시에 교육여건을 보여 주는 대표적 지표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생이 누리는 교육여건이 향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0년에서 2021년 사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이 19.5명에서 10.9명, 초등학교가 28.7명에서 14.0명, 중학교가 20.1명에서 11.9명, 고등학교는 19.9명에서 9.9명으로 줄었다. 유·초·중·고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0년 51.2명과 27.6명에서 2021년 33.3명과 22.8명으로 각각 낮아졌다.

**통계표**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2000-2021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일반대학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일반대학
2000	19.5	28.7	20.1	19.9	51.2	27.6	2011	14.6	17.3	17.3	14.8	39.1	25.7
2001	18.8	28.7	19.6	18.3	51.5	27.7	2012	14.5	16.3	16.7	14.4	37.7	25.7
2002	18.5	28.1	19.3	15.7	49.7	27.5	2013	14.3	15.3	16.0	14.2	37.2	25.4
2003	18.0	27.1	18.6	15.3	47.4	27.7	2014	13.4	14.9	15.2	13.7	37.1	25.2
2004	17.9	26.2	19.0	15.0	46.5	27.0	2015	13.4	14.9	14.3	13.2	36.1	24.6
2005	17.5	25.1	19.4	15.1	44.1	29.5	2016	13.3	14.6	13.3	12.9	35.5	24.2
2006	17.0	24.0	19.4	15.1	44.5	28.6	2017	12.9	14.5	12.7	12.4	34.7	23.6
2007	16.2	22.9	19.1	15.3	44.5	28.3	2018	12.3	14.5	12.1	11.5	35.0	23.6
2008	15.5	21.3	18.8	15.5	41.6	27.7	2019	11.9	14.6	11.7	10.6	35.9	23.7
2009	15.2	19.8	18.4	15.7	39.3	27.3	2020	11.4	14.2	11.8	10.1	35.7	23.4
2010	14.8	18.7	18.2	15.5	39.4	27.0	2021	10.9	14.0	11.9	9.9	33.3	22.8

주: 1) 고등교육기관은 재학생과 전임교원을 기준으로 산출함.  
2) 일반대학에는 대학원 교원 및 학생 수가 포함됨.

통계번호 EDU-33305

통계명 교육권 존중도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교육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교육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81.9%에서 2020년 86.0%, 2021년 90.1%로 매년 늘어났다. 이후 2022년에는 88.7%로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다.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서로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교육권 존중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81.9	82.1	81.6	82.9	80.5	78.9	81.0	85.0	82.7	80.6	82.1	88.6
2020	86.0	86.0	86.0	88.1	86.5	85.2	83.5	87.0	84.9	85.3	87.3	87.4
2021	90.1	89.9	90.3	90.8	88.4	89.1	89.7	91.4	91.4	90.3	89.4	88.8
2022	88.7	88.6	88.9	88.4	87.6	86.0	88.5	91.5	91.8	88.2	88.0	89.6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EDU-33306

통계명 교육기회 충족도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40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40R&conn_path=I3)

수록기간 2008-2022

통계해설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8년 39.9%에서 2022년 60.9%로 꾸준히 늘어났다. 교육기회 충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낮고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낮다.

통계표 성·연령·소득수준별 교육기회 충족도, 2008-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남자	여자	15-29세	13-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08	39.9	44.2	35.9	59.8	-	51.7	39.7	31.3	20.4	21.5	33.5	40.9	47.9	54.2	58.9	62.7
2010	45.4	50.3	40.8	63.4	-	58.9	47.0	35.2	27.2	26.3	39.6	46.3	52.4	57.9	59.7	67.3
2012	47.0	52.5	41.8	-	65.8	62.5	51.9	37.8	25.4	26.0	40.0	49.5	54.4	57.7	62.8	68.4
2014	50.2	55.1	45.6	-	68.8	68.4	55.8	41.5	27.5	27.0	41.7	51.2	56.6	60.6	65.8	69.4
2016	53.7	58.5	49.2	-	72.6	72.1	61.5	47.2	29.5	28.4	43.4	53.8	60.2	62.5	67.7	73.6
2018	56.2	61.7	51.0	-	77.7	73.9	64.5	50.8	32.2	29.2	44.4	55.2	60.8	64.1	67.7	72.8
2020	56.1	61.6	50.8	-	79.7	76.0	64.7	51.1	32.5	31.5	44.0	56.0	59.3	62.4	67.1	73.1
2022	60.9	65.9	56.1	-	82.5	82.3	72.8	58.4	35.4	32.9	43.1	59.0	65.6	67.3	71.1	76.5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학생은 제외.

통계번호 EDU-33307

통계명 교육비 부담도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자녀의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러운지에 대해 ‘약간 부담스럽다’ 또는 ‘매우 부담스럽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100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100R&conn_path=I3)

수록기간 2008-2022

통계해설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러운 가구의 비율은 2008년 79.8%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2년에는 57.7%로 낮아졌다. 가구의 교육비 부담도는 30대에 상대적으로 낮지만 40대와 50대가 되면 높아진다.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비 부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 부담을 적게 가진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교육비 부담도, 2008-2022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08	79.8	71.9	82.7	82.7	74.9	82.1	82.9	82.3	79.5	78.8	74.6	67.1
2010	78.4	72.5	79.8	79.8	75.4	84.6	82.4	82.9	77.6	75.3	72.8	63.8
2012	73.0	63.8	73.3	76.7	77.4	82.0	78.1	77.8	73.4	70.8	63.8	57.8
2014	69.3	61.6	68.7	73.4	70.4	71.4	74.7	73.5	69.7	70.8	66.3	57.0
2016	65.3	56.9	67.2	65.1	64.1	68.3	76.5	72.2	65.6	64.1	59.4	52.9
2018	64.4	55.9	66.5	64.1	65.1	69.4	73.1	70.3	66.5	66.0	63.1	54.0
2020	64.1	56.5	64.4	66.9	59.6	66.2	75.0	70.3	65.9	65.6	62.9	54.6
2022	57.7	46.1	58.4	60.8	53.2	64.4	64.6	60.6	65.5	58.3	56.1	51.3

주: 1) 학생 자녀를 둔 3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EDU-33308

통계명 기초학력 미달률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4수준 중 1수준 학생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자료출처

수록기간 2009-2021

통계해설 2021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중학생의 비율은 수학에서 11.6% 이고 국어와 영어에서 각각 6.0%와 5.9%이다. 같은 해 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수학에서 14.2%, 영어에서 9.8%, 국어에서 7.1%로 나타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에 더욱 늘어났다.

통계표

학교급별 기초학력 미달률, 2009-2021

연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2009	4.6	10.9	5.0	2.3	6.1	3.7
2010	3.2	6.1	3.9	4.0	4.3	3.7
2011	1.4	4.0	1.3	2.0	4.4	3.6
2012	1.0	3.5	2.1	2.1	4.3	2.6
2013	1.3	5.2	3.4	2.9	4.5	2.8
2014	2.0	5.7	3.3	1.3	5.4	5.9
2015	2.6	4.6	3.4	2.7	5.6	4.5
2016	2.0	4.9	4.0	3.3	5.3	5.2
2017	2.6	7.1	3.2	5.0	9.9	4.1
2018	4.4	11.1	5.3	3.4	10.4	6.2
2019	4.1	11.8	3.3	4.0	9.0	3.6
2020	6.4	13.4	7.1	6.8	13.5	8.6
2021	6.0	11.6	5.9	7.1	14.2	9.8

주: 1) 2016년까지는 전수평가 자료이고 2017년부터는 표집평가 자료임.

통계번호 EDU-33309

통계명 성인 문해력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수준 4 이상(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20&tblId=DT\\_420001\\_0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20&tblId=DT_420001_002&conn_path=I3)

수록기간 2014-2020

통계해설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중학교 학력 이상 수준)을 가진 인구의 비율은 2014년 71.5%, 2017년 77.6%, 2020년 79.8%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낮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성인 문해력, 2014-2020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성	여성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4	71.5	77.0	66.0	87.1	89.1	84.0	69.7	45.1	21.1	7.9	4.2	20.5	55.7	74.8	91.0
2017	77.6	81.9	73.4	93.6	92.6	91.3	80.4	54.0	27.6	12.5	5.2	22.7	50.1	84.2	94.9
2020	79.8	83.7	76.0	95.3	95.3	91.5	82.8	64.4	41.1	22.9	8.5	29.4	49.8	83.4	95.7

주: 1)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EDU-33310

통계명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수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의 수입.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1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11&conn_path=I3)

수록기간 2009-2021

통계해설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 지역의 수는 2009년 491개소에서 2013년 441개소로 줄었다가 이후 증가 추세로 바뀌며 2021년에는 554개소로 늘어났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수는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등 광역도 지역에서 많다.

**통계표** 시도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수, 2009-2021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491	3	7	2	15	4	2	4	-	13	26	35	45	65	82	103	84	1
2010	471	2	5	1	10	3	2	5	-	18	25	32	41	67	81	96	82	1
2011	474	2	7	-	10	3	1	4	-	18	25	32	53	64	79	93	82	1
2012	453	1	7	1	9	3	2	4	1	17	25	29	37	65	79	90	82	1
2013	441	1	6	1	5	4	3	5	1	13	26	29	34	63	77	87	85	1
2014	445	1	4	1	5	3	2	0	4	15	26	30	34	65	79	87	88	1
2015	466	1	7	0	4	3	2	3	1	20	25	32	36	66	79	93	93	1
2016	460	1	6	0	6	3	2	2	0	13	25	32	37	66	81	93	91	2
2017	466	1	4	0	6	3	1	2	0	11	25	33	39	67	83	96	93	2
2018	491	2	5	1	8	4	1	2	1	12	27	36	39	70	86	99	96	2
2019	516	3	5	2	8	5	1	2	1	13	29	36	44	71	92	103	99	2
2020	542	3	5	2	9	6	1	2	1	14	28	39	51	76	95	104	104	2
2021	554	4	6	3	9	6	1	3	2	17	30	38	52	75	96	107	103	2

주: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행정기관(행정동) 및 관할 법정동 기준임.

통계번호 EDU-33311

통계명 어린이집 취원율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어린이집 취원율 = (3-5세 어린이집 원아 수 ÷ 3-5세 인구) × 100.

3-5세 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5&conn_path=I3)

수록기간 2002-2021

통계해설 어린이집 취원율은 만 3-5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02년 28.5%에서 2006년 40.2%로 급상승한 후 최근까지 42-4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집 취원율은 3세에서 가장 높고 4세와 5세로 갈수록 낮아진다.

**통계표** 연령별 어린이집 취원율, 2002-2021

연도	전체	3세	4세	5세
2002	28.5	31.8	30.3	23.7
2003	31.2	34.5	32.4	26.8
2004	34.2	38.5	34.6	29.7
2005	36.9	43.3	36.8	31.7
2006	40.2	46.2	42.7	33.3
2007	42.5	49.8	43.4	35.0
2008	42.7	51.7	40.4	36.7
2009	42.4	52.4	43.7	32.0
2010	43.0	53.4	41.6	33.7
2011	43.2	56.3	40.3	31.7
2012	43.5	57.6	40.3	33.0
2013	43.8	57.7	41.1	33.6
2014	43.6	55.3	40.0	34.7
2015	41.7	53.8	37.6	33.3
2016	42.3	57.0	38.3	32.1
2017	42.6	54.5	40.9	33.3
2018	42.4	52.8	39.1	35.5
2019	43.1	55.8	39.2	34.3
2020	42.8	55.6	40.6	33.8
2021	43.5	54.8	41.7	36.0



통계번호 EDU-33312

통계명 유치원 취원율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text{유치원 취원율} = (3-5\text{세 유치원 원아 수} \div 3-5\text{세 인구}) \times 100.$   
3-5세 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유치원 취원율은 만 3-5세 아동 중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00년 26.2%에서 2010년 40.3%로 높아졌고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 2017년에 50.8%까지 상승하였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50.6%로 나타난다. 같은 해 어린이집 취원 아동(43.5%)을 포함하면 3-5세 아동의 94.1%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원해 있다.

통계표 유치원 취원율, 2000-2021

연도	취원율	연도	취원율
2000	26.2	2011	41.1
2001	27.1	2012	44.2
2002	28.4	2013	47.7
2003	29.0	2014	47.5
2004	29.1	2015	48.9
2005	31.1	2016	49.8
2006	34.0	2017	50.8
2007	36.4	2018	50.6
2008	38.0	2019	48.7
2009	39.6	2020	49.0
2010	40.3	2021	50.6

통계번호 EDU-33313

통계명 장애 아동·청소년 사교육 참여율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지난 3개월간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2&tblId=DT\\_112014\\_2020\\_05\\_01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2&tblId=DT_112014_2020_05_014&conn_path=I3)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사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50% 안팎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 56.5%로 다소 높아졌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사교육 참여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순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높다.

통계표

학교급 및 학교유형별 장애 아동·청소년 사교육 참여율, 2011-2020

연도	전체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2011	50.5	62.1	60.0	51.0	38.8	41.2	52.5	57.8
2014	48.7	67.4	57.4	43.3	37.9	37.4	49.3	62.1
2017	49.7	58.2	59.5	46.2	36.0	35.6	51.1	59.5
2020	56.5	74.6	63.7	49.1	42.4	43.1	59.0	66.3

통계번호 EDU-33314

통계명 장애 아동·청소년 특수교육 만족도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유치원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2&tblId=DT\\_112014\\_2020\\_05\\_18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2&tblId=DT_112014_2020_05_188&conn_path=I3)

수록기간 2014-2020

통계해설 학교(유치원 포함)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만족하는 장애인 학생 학부모의 비율은 2014년 58.6%에서 2017년 64.8%로 높아졌고 2020년에는 2017년과 비슷한 64.3%로 나타난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초·중·고 학교 간에는 만족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다.

**통계표** 학교급 및 학교유형별 장애 아동·청소년 특수교육 만족도, 2014-2020

연도	전체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2014	58.6	71.3	61.9	57.6	52.8	64.8	58.4	51.3
2017	64.8	76.5	65.7	64.4	61.3	70.6	65.1	59.7
2020	64.3	70.7	65.5	62.2	61.7	67.5	64.1	60.6

주: 1) 장애인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EDU-33315

통계명 청소년 학교생활 만족도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19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19R&conn_path=I3)

수록기간 2008-2022

통계해설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2016년까지 50% 안팎에 그쳤으나 2018년과 2020년에 58.0%와 59.3%로 늘어났다. 하지만 2022년에 51.0%로 다시 줄어들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더 높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저소득가구의 학생이 학교생활에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표

성 및 가구소득별 청소년 학교생활 만족도, 2008-2022

연도	전체	성별		가구소득별						
		남자	여자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200-300만 원	300-400만 원	400-500만 원	500-600만 원	600만 원 이상
2008	51.1	52.2	49.7	49.3	48.8	51.8	49.3	51.8	57.3	54.2
2010	46.5	48.0	44.9	47.8	41.3	46.3	47.2	46.2	49.5	53.8
2012	46.7	48.9	44.4	47.0	43.4	44.2	48.7	46.1	50.4	52.5
2014	49.8	51.6	47.7	50.0	45.5	49.6	48.2	50.7	51.9	53.7
2016	52.2	53.6	50.8	52.1	52.7	47.5	47.9	54.3	52.4	60.9
2018	58.0	59.2	56.8	50.2	54.9	51.1	54.2	59.5	62.3	64.7
2020	59.3	61.6	56.8	56.1	54.7	54.2	59.7	54.9	62.4	64.2
2022	51.0	52.3	49.7	46.5	47.1	51.3	48.8	46.4	59.1	52.0

주: 1) 2010년까지는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EDU-33316

통계명 취학률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취학률 = (각급학교 재적학생 수 ÷ 취학적령 인구) × 100.

단위 %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취학률은 각급학교 취학적령 인구 중 해당 학교급에 재적해 있는 학생의 비율을 나타낸다. 유치원 취원율은 2000년 26.2%에서 2021년 50.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97.2%, 95.0%, 89.4%에서 98.4%, 97.9%, 96.1%로 완전 취학에 가까운 수준이 되었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2000년 52.5%에서 2008년 70.6%로 빠르게 상승한 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70% 아래로 떨어졌다가 2020년과 2021년에 다시 70%대로 올랐다.

통계표 학교급별 취학률, 2000-2021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2000	26.2	97.2	95.0	89.4	52.5	2011	41.1	98.7	96.7	92.0	69.7
2001	27.1	97.5	96.1	89.9	55.4	2012	44.2	98.5	95.6	92.2	69.0
2002	28.4	97.6	95.4	89.0	56.8	2013	47.7	97.3	95.7	92.5	68.6
2003	29.0	98.4	93.7	90.6	59.0	2014	47.5	96.7	96.4	93.2	67.7
2004	29.1	97.9	92.5	90.7	62.2	2015	48.9	99.1	95.3	92.5	67.5
2005	31.1	98.8	94.3	92.1	66.1	2016	49.8	98.6	94.3	93.1	67.3
2006	34.0	98.9	95.6	91.2	67.9	2017	50.8	97.6	94.3	93.8	67.4
2007	36.4	99.2	96.0	91.5	70.3	2018	50.6	97.6	98.0	92.4	66.9
2008	38.0	99.4	93.3	89.7	70.6	2019	48.7	98.7	96.7	91.3	67.8
2009	39.6	98.4	95.8	91.5	70.2	2020	49.0	98.4	95.7	91.4	70.4
2010	40.3	99.1	96.5	91.7	69.3	2021	50.6	98.4	97.9	96.1	71.5

주: 1) 취학적령은 유치원 만 3-5세,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 만 18-21세임.

통계번호 EDU-33317

통계명 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진학률 = (진학자 수 ÷ 고등학교 졸업자 수) × 100.

진학자에는 대학, 전문대학, 전문기술교육과정 진학자가 포함됨.

단위 %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47](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47)

수록기간 2004-2022

통계해설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의 비율은 2004년 24.5%에서 꾸준히 늘어나 2020년에 50%를 넘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이보다 더 늘어난 54.5%와 56.2%로 높아졌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특수학교 졸업자와 일반학교 일반학급 졸업자에 비해 일반학교 특수학급 졸업자의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통계표

학교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 2004-2022

연도	전체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연도	전체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2004	24.5	29.6	10.0	20.0	2014	46.5	54.8	37.9	51.4
2005	33.6	37.1	19.7	41.2	2015	47.0	57.5	37.9	55.3
2006	35.7	39.8	24.1	35.6	2016	46.3	55.0	38.6	51.0
2007	38.0	43.2	23.2	44.7	2017	46.3	53.1	39.9	53.2
2008	45.4	50.4	33.9	50.1	2018	47.0	53.8	40.6	54.1
2009	44.8	50.4	31.9	58.5	2019	49.3	55.7	43.2	55.8
2010	39.8	50.8	34.2	31.3	2020	50.9	57.3	44.9	57.4
2011	45.3	51.0	34.8	56.9	2021	54.5	58.6	49.5	63.0
2012	45.9	54.1	35.3	52.3	2022	56.2	60.3	51.3	63.6
2013	45.8	55.0	36.2	50.2					

통계번호 EDU-33318

통계명 평생학습 참여율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tblId=DT\\_33409N\\_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tblId=DT_33409N_001&conn_path=I3)

수록기간 2007-2021

통계해설 평생학습 참여율은 최근 1년 동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성인(25-79세) 인구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0년 이후 30-40%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남녀의 평생학습 참여율에는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소득수준별 평생학습 참여율, 2007-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남성	여성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79세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50만원 미만	150-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2007	29.8	28.9	30.7	36.3	29.2	26.5	23.9	-	16.8	24.5	39.4	-	-	-	-
2008	26.4	24.4	28.4	32.7	27.5	21.3	20.8	-	14.9	22.1	34.3	21.2	24.6	26.1	35.7
2009	28.0	25.5	30.5	33.1	29.4	23.7	22.4	-	16.7	21.8	37.1	20.8	22.1	29.6	41.5
2010	30.5	28.7	32.3	37.3	33.1	25.2	21.2	-	19.3	25.2	38.4	25.8	26.3	30.5	41.1
2011	32.4	30.7	34.0	42.7	35.7	26.5	21.0	-	16.9	25.2	44.9	23.6	25.6	36.7	39.5
2012	35.6	31.8	39.4	39.3	35.8	34.7	31.5	-	22.0	33.6	40.9	30.1	30.8	35.8	44.1
2013	30.2	29.1	31.3	35.9	31.9	26.3	25.4	-	19.7	26.2	37.2	24.1	25.4	30.7	38.5
2014	36.8	37.5	36.1	43.5	38.9	33.1	29.2	-	22.3	29.6	48.4	21.1	29.3	37.8	50.1
2015	40.6	41.3	39.8	48.0	42.2	37.3	32.1	-	24.3	33.8	50.4	29.1	31.2	41.5	52.1
2016	35.7	34.4	37.1	46.6	39.1	31.6	26.5	-	20.0	29.1	45.3	21.1	31.3	34.8	42.7
2017	34.4	32.4	36.4	41.8	39.2	34.0	28.9	26.9	23.0	29.0	44.2	20.9	27.2	33.6	42.3
2018	41.2	39.5	42.9	52.0	44.1	41.8	34.8	32.7	27.9	35.0	52.3	32.2	33.6	39.2	46.8
2019	41.7	40.8	42.6	50.6	45.7	41.7	37.1	32.5	29.1	35.7	51.4	30.5	35.1	40.0	46.6
2020	40.0	39.7	40.3	50.2	46.4	39.9	33.9	29.5	28.4	31.4	51.5	29.7	30.1	38.2	45.4
2021	30.7	32.0	29.5	40.6	35.2	32.7	25.6	19.2	15.6	25.2	40.3	17.6	22.1	29.9	34.7

주: 1) 2016년까지는 25-64세, 2017년부터는 25-7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EDU-33319

통계명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조사 연도 3-5월 사이에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3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301&conn_path=I3)

수록기간 2007-2021

통계해설 사교육에 참여하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2007년 77.0%에서 2016년 67.8%로 낮아졌다. 2017년부터 진로·진학 학습상담이 사교육 항목에 포함되면서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졌는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올라 2021년에는 75.5%에 이른다. 사교육 참여율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높다.

**통계표**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2007-2021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7	77.0	88.8	74.6	55.0	62.0
2008	75.1	87.9	72.5	53.4	60.5
2009	75.0	87.4	74.3	53.8	62.8
2010	73.6	86.8	72.2	52.8	61.1
2011	71.7	84.6	71.0	51.6	58.7
2012	69.4	80.9	70.6	50.7	57.6
2013	68.8	81.8	69.5	49.2	55.9
2014	68.6	81.1	69.1	49.5	56.2
2015	68.8	80.7	69.4	50.2	56.8
2016	67.8	80.0	63.8	52.4	58.8
2017	71.2	82.7	67.4	55.9	62.2
2018	72.8	82.5	69.6	58.5	65.2
2019	74.8	83.5	71.4	61.0	67.9
2020	67.1	69.7	67.3	61.6	68.5
2021	75.5	82.0	73.1	64.6	71.3

주: 1) 2017년부터 진로·진학 학습상담이 사교육에 포함됨.



통계번호 EDU-33320

통계명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사교육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모두 포함한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임.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2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201&conn_path=I3)

수록기간 2007-2021

통계해설 초·중·고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2만 원에서 2016년 25.6만 원으로 늘어났다. 2017년부터 진로·진학 학습상담이 사교육 항목에 포함되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올라 2021년에는 36.7만 원으로 늘어났다. 사교육 지출은 학교급에 따라 다르다. 고등학생, 특히 일반고 학생의 사교육 지출이 가장 많고 중학생, 초등학생의 순으로 많다.

**통계표**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2007-2021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7	22.2	22.7	23.4	19.7	24.0
2008	23.3	24.2	24.1	20.6	24.9
2009	24.2	24.5	26.0	21.7	26.9
2010	24.0	24.5	25.5	21.8	26.5
2011	24.0	24.1	26.2	21.8	25.9
2012	23.6	21.9	27.6	22.4	26.5
2013	23.9	23.2	26.7	22.3	26.2
2014	24.2	23.2	27.0	23.0	26.9
2015	24.4	23.1	27.5	23.6	27.6
2016	25.6	24.1	27.5	26.2	30.4
2017	27.2	25.3	29.1	28.5	33.2
2018	29.1	26.3	31.2	32.1	37.6
2019	32.1	29.0	33.8	36.5	42.5
2020	30.2	23.5	34.2	39.6	45.7
2021	36.7	32.8	39.2	41.9	48.2

주: 1) 2017년부터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이 사교육비에 포함됨.

통계번호 EDU-33321

통계명 학급당 학생 수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학급당 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학급 수.

단위 명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1](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1)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전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000년 35.8명에서 2021년 21.5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38.0명에서 25.4명, 고등학교는 42.7명에서 23.0명으로 줄었다.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통계표**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000-2021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0	35.8	38.0	42.7	2011	25.5	33.0	33.1
2001	35.6	37.3	39.7	2012	24.3	32.4	32.5
2002	34.9	36.7	33.9	2013	23.2	31.7	31.9
2003	33.9	34.8	33.1	2014	22.8	30.5	30.9
2004	32.9	35.1	32.7	2015	22.6	28.9	30.0
2005	31.8	35.3	32.7	2016	22.4	27.4	29.3
2006	30.9	35.3	32.5	2017	22.3	26.4	28.2
2007	30.2	35.0	33.0	2018	22.3	25.7	26.2
2008	29.2	34.7	33.7	2019	22.2	25.1	24.5
2009	27.8	34.4	34.2	2020	21.8	25.2	23.4
2010	26.6	33.8	33.7	2021	21.5	25.4	23.0

통계번호 EDU-33322

통계명 학비 마련 어려움 경험률

통계분류 교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곤란하여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5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57&conn_path=I3)

수록기간 2014-2021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학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4년 15.9%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4.3%로 낮아졌다. 2021년에는 5.0%로 약간 올랐다. 학비 마련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다.

**통계표** 소득수준별 학비 마련 어려움 경험률, 2014-2021

연도	전체	소득수준별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14	15.9	18.4	22.2	19.1	14.5	13.2	12.8	11.8
2015	15.4	21.2	18.0	20.9	14.6	12.9	8.3	12.9
2016	9.5	15.3	14.4	10.4	10.6	5.5	7.2	8.8
2017	7.8	16.1	11.7	8.1	8.1	6.9	5.1	6.5
2018	5.6	12.4	7.5	7.2	5.4	5.8	3.8	3.7
2019	7.2	11.4	12.5	7.2	8.4	6.2	7.0	5.0
2020	4.3	5.5	5.6	5.8	4.8	4.9	2.1	3.1
2021	5.0	5.1	5.4	5.6	4.9	6.1	5.7	3.6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체	통계번호	통계명	취약집단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CUL-13401	난민 수용 찬성률	외국인
			CUL-13402	난민 인정률	외국인
			CUL-13403	난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CUL-13404	남녀대우 공정성에 대한 인식	여성
			CUL-13405	노인 차별 경험률	노인
			CUL-13406	다른 인종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CUL-13407	다문화 지향성	
			CUL-13408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성소수자
			CUL-13409	북한이탈주민 차별 경험률	북한이탈주민
			CUL-1341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도	북한이탈주민
			CUL-13411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도	성소수자
			CUL-13412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CUL-13413	여성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장애인, 여성
			CUL-1341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위협 인식	외국인
			CUL-13415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CUL-13416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에 대한 포용도	외국인
			CUL-13417	장애인 차별 경험률	장애인
			CUL-13418	장애인가정의 차별피해에 대한 인식	장애인
			CUL-13419	장애인시설 설립 반대율	장애인
			CUL-13420	장애인에 대한 포용도	장애인
			CUL-13421	장애인차별 만연에 대한 인식	장애인
			CUL-13422	전과자에 대한 포용도	
			CUL-13423	차별 경험률	중복
			CUL-13424	청소년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	
			CUL-13425	취약집단의 선출직 당선에 대한 태도	중복
			CUL-13426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존중도	
			CUL-13427	한부모가족 차별 경험률	
			CUL-13428	혐오표현 법적 규제 찬성률	
			CUL-13429	혐오표현 접촉 시 표현대상	
			CUL-13430	혐오표현 접촉경로	
			CUL-13431	혐오표현 접촉도	
				시민·정치적 권리	표현의 자유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체	통계번호	통계명	취약집단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화적 생활 권리	CUL-33601	1인당 문화재정	
			CUL-33602	공공공연시설 비율	
			CUL-33603	공연시설 장애인석 보유율	장애인
			CUL-33604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노인
			CUL-33605	문화권 존중도	
			CUL-33606	문화여가비 지출률	
			CUL-33607	생활체육 참여율	
			CUL-33608	여가비용 충족도	
			CUL-33609	여가생활 만족도	
			CUL-33610	여가여건 향상에 대한 인식	
			CUL-33611	월평균 여가비 지출액	
			CUL-33612	인구 10만 명당 공공도서관 수	
			CUL-33613	인구 10만 명당 공연시설 수	
			CUL-33614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CUL-33615	인구 대비 공공체육시설 수와 면적	
			CUL-33616	휴가 활용률	
		정보 접근권	CUL-33701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	중복
			CUL-33702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중복

통계번호 CUL-13401

통계명 난민 수용 찬성률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한국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거나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1년까지 30%대에 그쳤으나(2019년 37.5%, 2020년 33.1%, 2021년 38.7%) 2022년에 46.6%로 크게 늘어났다. 이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다소 더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졸 이상, 대졸 및 고졸, 중졸 이하의 순으로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거주지역별 난민 수용 찬성률,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37.5	40.2	34.8	33.8	32.6	40.8	41.8	37.4	35.1	38.3	36.4	51.9
2020	33.1	35.3	31.0	31.2	30.0	37.6	35.0	31.8	28.3	33.5	34.0	44.4
2021	38.7	39.9	37.5	35.8	35.6	42.5	42.6	36.9	35.6	39.2	39.2	44.6
2022	46.6	48.2	45.0	48.3	44.9	47.9	46.7	45.5	42.7	47.3	47.3	51.4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02

통계명 난민 인정률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text{난민 인정률} = (\text{난민 인정자 수} \div \text{난민 신청자 수}) \times 100.$

단위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0)

수록기간 2008-2020

통계해설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의 수는 2010년까지 500명 미만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부터는 50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1만 5000명을 웃돌았다. 하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외국인의 수는 매년 100명 안팎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률은 난민 신청자 대비 난민 인정자의 비율을 말한다. 난민 신청자 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난민 인정자 수가 늘어나지 않아 난민 인정률은 2015년 이후 1% 내외에 그치고 있다.

통계표 **난민 인정률, 2008-2020**

연도	난민 신청자 수(명)	난민 인정자 수(명)	난민 인정률(%)
2008	364	36	9.9
2009	324	70	21.6
2010	423	45	10.6
2011	1,011	42	4.2
2012	1,143	60	5.2
2013	1,574	57	3.6
2014	2,896	94	3.2
2015	5,711	105	1.8
2016	7,542	98	1.3
2017	9,942	121	1.2
2018	16,173	144	0.9
2019	15,452	79	0.5
2020	6,684	69	1.0



통계번호 CUL-13403

통계명 난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국제 난민으로 입국한 사람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20\\_22AA120100&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20_22AA120100&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21

통계해설 난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즉 국제 난민으로 입국한 사람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 48.0%에서 2018년 55.7%로 높아졌다가 2021년 48.7%로 낮아졌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난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5-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성	여성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4세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
2015	48.0	45.7	50.4	47.2	43.2	46.3	50.3	54.7	56.9	46.5	44.0	48.6	45.9
2018	55.7	53.6	57.9	51.7	50.8	57.4	56.7	61.5	70.0	54.9	55.2	52.4	46.5
2021	48.7	45.8	51.7	44.5	53.8	45.3	48.2	51.5	58.3	48.1	45.6	48.2	50.5

주: 1) 19-7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04

통계명 남녀대우 공정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우리 사회의 남녀대우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우리 사회의 남녀대우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4년부터 2019년 까지 45% 안팎 수준을 나타냈으나 2020년에 57.0%로 급등하였고 2021년에는 60.6%로 더 높아졌다. 2020년 자료로 보면 성별로는 남녀대우 공정성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보다 3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남녀대우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50.5	50.6	50.2	47.6	46.8	48.0	52.8	62.0	-	64.3	58.6	48.9	48.3
2014	46.3	47.5	45.0	46.1	41.8	45.0	49.3	51.5	-	55.4	45.9	45.6	45.9
2015	47.0	48.8	45.3	47.1	42.7	40.9	50.4	59.2	-	59.2	52.3	47.4	44.2
2016	45.2	46.7	43.7	41.2	40.2	44.8	48.5	53.3	-	50.6	46.4	45.5	44.2
2017	45.3	46.5	44.1	41.4	42.8	48.7	47.7	45.3	-	45.4	47.2	44.5	46.0
2018	44.2	45.3	43.0	42.3	40.9	43.0	47.8	47.2	-	45.6	45.3	44.6	43.6
2019	45.5	49.0	41.8	46.9	44.1	42.8	46.8	46.9	-	43.7	45.5	46.3	44.9
2020	57.0	59.0	55.1	53.5	53.5	58.3	55.1	-	61.4	62.9	61.1	56.7	55.4
2021	60.6	60.6	60.6	58.1	57.2	62.7	60.5	-	62.5	69.8	56.2	60.8	60.1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05

통계명 노인 차별 경험률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해당 상황에서 노인이기 때문에 무시(차별)당했다고 느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자료출처

수록기간 2020

통계해설 노인 차별 경험률은 지난 1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차별받은 적이 있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노인이 주로 차별당하는 상황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다. 노인의 20.8%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차별을 경험한다. 식당이나 커피숍을 이용할 때도 16.1%가 차별을 겪으며, 판매시설을 이용할 때와 병원을 이용할 때도 14.7%와 12.7%가 차별을 겪는다. 이 외에도 가족 내 의사결정 시 11.3%, 직장에서 10.6%, 공공기관 이용 시 8.7%가 차별을 경험한다.

통계표 **노인 차별 경험률, 2020**

차별 경험	경험률
대중교통 이용 시	20.8
식당·커피숍 이용 시	16.1
판매시설 이용 시	14.7
의료시설 이용 시	12.7
가족 내 주요 의사결정 시	11.3
일터(직장)	10.6
공공기관 이용 시	8.7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06

통계명 다른 인종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다른 인종 사람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20\\_22AA120100&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20_22AA120100&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21

통계해설 다른 인종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즉 다른 인종 사람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 25.7%에서 2018년 25.9%로 큰 변화가 없다가 2021년에 28.2%로 조금 높아졌다. 이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다. 다른 인종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60세 이상 연령층과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다른 인종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5-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성	여성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4세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
2015	25.7	23.4	27.9	21.5	19.3	23.7	29.9	35.8	39.0	24.7	22.2	23.3	17.2
2018	25.9	25.7	26.1	21.9	20.3	23.5	26.6	37.4	40.0	25.6	24.6	22.6	14.5
2021	28.2	26.8	29.6	23.6	28.7	26.4	28.1	33.2	39.2	29.3	27.2	22.8	27.3

주: 1) 19-7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07

통계명 다문화 지향성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외국 이주민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라는 3개 항목의 긍정응답률(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산술 평균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20\\_22AA240100&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20_22AA240100&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21

통계해설 다문화 지향성, 즉 다문화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 39.3%, 2018년 35.6%, 2021년 38.2%로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대체로 30% 중후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다문화 지향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지향성도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다문화 지향성, 2015-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성	여성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4세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
2015	39.3	41.3	37.4	46.2	41.6	38.6	37.5	31.6	30.2	35.6	42.1	45.9	59.0
2018	35.6	35.8	35.4	42.6	40.6	34.4	35.7	24.9	20.7	35.4	34.8	41.1	42.0
2021	38.2	40.3	36.1	44.2	40.2	37.3	35.5	35.2	34.0	35.5	39.3	43.1	45.9

주: 1) 19-7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08

통계명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20\\_22AA120100&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20_22AA120100&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21

통계해설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즉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 78.0%에서 2018년 69.0%로 낮아졌다가 2021년에 77.1%로 높아졌다. 이 비율은 남녀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5-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성	여성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4세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
2015	78.0	77.9	78.1	69.5	74.1	80.1	83.0	83.7	82.3	81.0	76.9	72.6	81.2
2018	69.0	69.1	68.9	57.5	63.4	69.2	74.9	79.0	81.5	70.1	69.3	63.2	66.6
2021	77.1	77.3	76.8	69.3	74.7	77.1	79.3	83.2	84.0	81.6	73.5	70.3	75.7

주: 1) 19-7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09

통계명 북한이탈주민 차별 경험률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7&tblId=DT\\_43701N\\_19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7&tblId=DT_43701N_194&conn_path=I3)

수록기간 2017-2021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2017년 23.1%에서 2018년 20.2%로 낮아졌고 이후 2021년에는 16.1%로 더 낮아졌다. 북한이탈주민의 차별 경험률은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연령별로는 30-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남한에 거주한 기간이 짧을수록 차별 경험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통계표 성·연령·남한거주기간별 북한이탈주민 차별 경험률, 2017-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한거주기간별			
		남자	여자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2017	23.1	23.0	23.1	7.9	17.4	24.2	26.2	27.8	17.1	24.8	25.0	22.2	23.1
2018	20.2	19.1	20.6	6.0	16.6	20.4	25.0	21.2	10.9	29.3	22.0	20.3	16.9
2019	17.2	16.7	17.4	8.8	15.1	16.9	19.4	18.3	14.7	24.6	21.9	15.8	15.1
2020	18.0	15.3	18.8	4.1	13.2	16.6	21.4	21.4	15.6	21.3	20.8	17.8	16.7
2021	16.1	16.8	15.9	4.9	11.8	15.3	16.8	22.1	12.3	19.6	15.3	15.6	16.0

주: 1)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10

통계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도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북한이탈주민을 나의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 중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6&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북한이탈주민을 자신의 이웃이나 직장동료나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85% 안팎 수준이었다가 2020년 81.6%, 2021년 74.9%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20년 자료로만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낮고, 60세 이상 연령층과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도,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80.1	83.0	77.2	80.1	82.3	82.0	78.6	75.0	-	73.1	79.2	79.6	82.0
2014	84.8	85.6	83.9	83.4	87.1	86.0	83.8	82.6	-	80.9	82.9	84.6	85.9
2015	87.3	87.5	87.0	86.0	87.6	89.1	87.2	85.7	-	84.4	83.7	86.9	88.8
2016	87.9	88.5	87.4	89.4	88.3	89.0	87.8	84.0	-	83.8	84.7	87.4	89.5
2017	85.8	86.7	84.7	87.7	87.1	84.6	85.0	83.8	-	80.8	82.9	84.2	87.9
2018	87.4	88.1	86.7	83.4	90.1	88.5	88.3	86.0	-	83.4	86.5	87.2	87.9
2019	74.5	76.0	72.9	76.0	73.0	76.3	74.0	72.6	-	76.6	79.6	73.5	74.7
2020	81.6	82.5	80.9	82.7	81.1	80.4	81.1	-	82.4	81.6	85.1	81.1	81.8
2021	74.9	76.6	73.4	77.4	77.3	76.2	76.3	-	70.6	69.7	68.6	77.0	75.0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11

통계명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도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성소수자를 나의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 중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6&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성소수자를 자신의 이웃이나 직장동료나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과 2018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40% 초중반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도,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37.9	36.0	39.8	52.4	44.3	37.3	27.6	22.2	-	20.0	22.9	37.5	44.7
2014	43.1	42.5	43.7	57.5	51.0	42.2	31.3	29.5	-	22.7	33.4	42.1	48.9
2015	42.3	40.8	43.7	54.5	47.5	41.8	35.2	28.7	-	24.6	29.1	42.5	46.5
2016	44.2	44.5	43.8	54.0	51.3	44.5	37.8	30.2	-	25.1	36.5	41.5	50.6
2017	42.8	42.9	42.8	55.2	46.7	40.8	38.4	31.6	-	23.3	30.4	43.1	45.9
2018	51.0	51.5	50.4	58.4	56.0	50.1	48.1	41.0	-	37.0	41.1	47.1	56.3
2019	43.0	42.8	43.3	54.6	47.8	43.5	35.7	32.9	-	28.8	29.5	41.7	46.0
2020	42.9	43.6	42.3	52.3	44.7	45.2	42.7	-	35.2	30.0	36.4	43.3	46.4
2021	46.0	47.8	44.1	48.3	50.6	51.0	46.1	-	39.0	35.3	34.0	46.4	48.5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12

통계명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에이즈 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20\\_22AA120100&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20_22AA120100&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21

통계해설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즉 에이즈 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 92.3%에서 2018년 87.9%로 약간 낮아졌다가 2021년에 91.5%로 높아졌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성별로 큰 차이가 없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에이즈 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5-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성	여성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4세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 이상
2015	92.3	92.2	92.4	90.7	90.3	92.1	94.2	94.6	92.6	92.8	91.7	92.0	90.9
2018	87.9	87.0	88.7	87.3	85.4	87.6	89.3	89.5	94.3	87.0	88.2	86.6	88.4
2021	91.5	90.6	92.4	88.7	91.0	90.8	92.6	93.8	94.5	91.1	91.9	90.5	95.8

주: 1) 19-7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13

통계명 여성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장애인 중 여성이 더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F010&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F010&conn_path=I3)

수록기간 2018-2020

통계해설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더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40% 수준으로 조사된다. 장애인 10명 중 4명이 여성장애인이 더 차별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이 더 차별받는다는 인식은 성별로 차이를 보인다. 즉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에게서 10%p가량 더 높게 나타난다.

**통계표** 성별 여성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2018-2020

연도	전체	남성	여성
2018	42.1	37.1	48.7
2019	42.5	37.0	49.5
2020	40.4	36.1	46.1

주: 1)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14

통계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위협 인식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그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우리나라에 외국 이주민과 외국인이 증가하면 그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4개 항목의 긍정응답률(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산술 평균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20\\_22AA250100&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20_22AA250100&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21

통계해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 40.8%에서 2021년 36.7%로 다소 낮아졌다. 이 비율은 최근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외국인 노동자가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위협 인식, 2015-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성	여성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4세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 이상
2015	40.8	40.2	41.3	32.2	35.6	40.8	44.5	52.5	54.8	41.9	35.8	36.7	23.3
2018	39.7	38.9	40.5	32.8	33.5	35.9	42.5	53.9	52.9	42.7	37.5	32.9	35.3
2021	36.7	33.6	40.0	34.0	36.9	32.0	38.9	41.2	41.8	37.8	33.8	35.5	33.4

주: 1) 19-7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15

통계명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20\\_22AA120100&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20_22AA120100&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21

통계해설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즉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2015년 31.8%, 2018년 29.5%, 2021년 29.4%로 큰 변화가 없다. 이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다.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60세 이상 연령층과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5-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성	여성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4세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
2015	31.8	29.2	34.4	30.8	28.3	27.5	33.9	40.2	40.8	29.4	34.0	29.9	22.0
2018	29.5	28.8	30.2	25.4	24.8	27.8	30.7	38.9	41.3	28.6	30.5	26.2	26.4
2021	29.4	27.4	31.5	25.5	29.7	27.6	29.7	33.9	36.8	29.7	30.7	24.9	33.2

주: 1) 19-7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16

통계명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에 대한 포용도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나의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 중 하나로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6&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자신의 이웃이나 직장동료나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로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90.1%에서 2017년과 2018년 94.3%까지 올랐다가 2019년부터 90% 안팎 수준으로 조금 낮아졌다.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에 대해서는 성,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큰 차이 없이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에 대한 포용도,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90.1	92.0	88.5	91.6	91.2	90.7	90.7	84.0	-	84.9	86.5	90.4	91.6
2014	92.0	92.1	91.8	91.8	93.1	92.5	92.0	89.7	-	88.5	86.4	91.9	93.6
2015	91.9	92.0	91.8	92.7	92.1	92.4	91.0	91.0	-	88.0	88.5	91.9	93.0
2016	92.9	93.5	92.2	93.8	93.6	92.6	93.1	90.6	-	90.3	90.9	92.4	93.9
2017	94.3	94.6	93.9	94.3	94.8	93.4	94.8	94.2	-	91.1	94.1	93.6	95.1
2018	94.3	94.7	93.8	95.0	94.4	94.7	93.7	93.1	-	91.1	92.9	94.1	94.8
2019	88.7	89.5	87.9	91.3	88.0	89.5	87.8	86.6	-	90.4	87.5	87.9	89.2
2020	90.1	91.0	89.2	90.8	89.2	90.0	90.6	-	89.8	90.9	88.1	91.0	89.4
2021	87.2	88.3	85.9	86.0	88.3	89.1	88.5	-	84.8	87.9	83.0	87.4	87.4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17

통계명 장애인 차별 경험률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해당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W0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W002&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19

통계해설 장애인이 차별을 많이 경험하는 상황은 2013년에 취업 시(27.0%), 보험제도 가입 시(19.2%), 직장생활 시(14.2%), 결혼 전이나 결혼생활 시(10.4%) 등의 순이었으나 2019년에는 보험제도 가입 시(11.1%), 직장생활 시(9.0%), 음식점·극장·공연장 등 이용 시(5.6%), 취업 시(5.5%)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취업 시 차별이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통계표** 장애인 차별 경험률, 2013-2019

연도	보험제도상 차별	직장 생활에서의 차별	생활서비스 (음식점, 극장, 공연장 등) 이용 시 차별	취업 시 차별	결혼 전 및 결혼 생활 중 차별	의료기관 이용 시 차별
2013	19.2	14.2	5.7	27.0	10.4	2.3
2016	12.0	5.8	2.9	10.3	2.8	2.0
2019	11.1	9.0	5.6	5.5	3.0	2.2

통계번호 CUL-13418

통계명 장애인가정의 차별피해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장애인가정으로 살면서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으로부터 어느 정도 차별받는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차별받는 편이다’ 또는 ‘매우 차별받는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CE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CE001&conn_path=I3)

수록기간 2018-2020

통계해설 주변으로부터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장애인가정 가구원의 비율은 2018년 26.0%, 2019년 27.8%에서 2020년에는 23.2%로 감소하였다. 이들이 차별을 가장 많이 느끼는 상황은 일상생활이다. 일상생활 다음으로는 취업이나 직장생활에서 차별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표** 장애인가정의 차별피해에 대한 인식과 차별피해 상황, 2018-2020

연도	차별피해 정도	차별피해 상황					
		일상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	입학 및 학교생활	지역사회 (공연, 음식점, 체육시설)	결혼	기타
2018	26.0	53.7	21.6	9.8	11.7	2.6	0.7
2019	27.8	51.8	24.8	9.3	10.9	3.0	0.2
2020	23.2	62.3	19.4	9.3	7.1	1.9	0.1

주: 1) 등록장애인 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19

통계명 장애인시설 설립 반대율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집 근처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약간 반대한다’ 또는 ‘매우 반대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WE110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WE110R&conn_path=I3)

수록기간 2009-2021

통계해설 자신의 집 근처에 장애인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반대하는 인구의 비율은 2013년 5.8%에서 2019년 15.0%까지 높아졌다가 2021년에 11.5%로 다소 낮아졌다. 이 비율은 성별, 연령별 그리고 거주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통계표** 성·연령·거주지역별 장애인시설 설립 반대율, 2009-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남자	여자	13-19세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동지역	읍면지역
2009	6.7	6.4	7.0	-	11.8	7.0	6.6	6.2	6.1	5.6	6.8	6.2
2011	6.2	6.3	6.2	9.2	-	6.4	5.4	5.5	6.5	5.8	6.3	5.8
2013	5.8	5.7	6.0	5.4	-	4.9	5.4	5.4	6.1	7.3	5.8	6.0
2015	7.0	6.6	7.4	5.3	-	6.9	6.6	6.9	7.2	8.4	7.0	7.5
2017	14.5	13.6	15.4	11.9	-	11.8	15.5	14.3	14.7	16.6	14.5	15.1
2019	15.0	14.1	15.9	13.0	-	13.7	16.0	14.7	15.1	15.9	14.9	15.1
2021	11.5	10.8	12.2	9.8	-	10.7	12.3	10.8	10.5	13.1	11.7	11.0

주: 1) 2009년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20

통계명 장애인에 대한 포용도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장애인을 나의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 중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6&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장애인을 자신의 이웃이나 직장동료나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년 95% 이상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에 대한 포용도는 성, 연령,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장애인에 대한 포용도,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97.3	97.5	97.3	97.7	97.3	97.9	96.1	97.6	-	96.1	98.2	97.2	97.4
2014	97.7	98.0	97.3	98.0	98.1	98.2	97.9	95.4	-	96.2	96.0	97.8	98.3
2015	97.4	97.4	97.3	97.2	97.6	97.2	97.3	97.6	-	97.0	97.1	96.8	98.1
2016	98.6	98.4	98.8	98.2	98.9	98.5	98.6	99.5	-	99.4	98.6	98.7	98.5
2017	98.3	98.1	98.2	98.1	98.2	98.0	98.9	97.8	-	95.7	98.4	98.0	98.6
2018	98.7	98.7	98.8	98.7	98.8	98.6	99.0	98.7	-	98.0	98.9	98.6	98.8
2019	95.0	95.1	94.8	96.6	94.8	95.2	94.3	93.6	-	95.9	94.7	94.0	95.6
2020	96.5	96.3	96.5	96.9	95.8	95.1	96.7	-	97.1	97.5	97.3	96.7	95.6
2021	96.7	97.1	96.5	97.4	96.8	96.3	97.0	-	96.6	94.9	95.6	97.1	97.0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21

통계명 장애인차별 만연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을 얼마나 차별하는지에 대해 ‘조금 차별한다’ 또는 ‘많이 차별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WE080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WE080R&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은 2017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65%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40대에서 50대, 60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장애인차별이 만연하다는 인식이 낮다.

**통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장애인차별 만연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전체	연령별						교육수준별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66.5	68.1	73.3	75.4	72.1	61.5	51.1	54.1	59.9	66.5	75.2
2015	65.8	68.4	73.3	75.5	71.4	61.2	50.3	53.5	58.8	66.2	73.4
2017	83.6	85.9	87.0	89.8	87.6	81.9	74.1	74.5	78.1	84.4	88.0
2019	67.9	70.5	73.8	75.8	75.6	65.0	54.8	55.4	61.6	68.1	74.0
2021	67.3	70.6	73.7	74.3	75.8	66.6	53.9	54.0	59.0	67.1	73.9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22

통계명 전과자에 대한 포용도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전과자를 나의 이웃, 직장동료, 절친한 친구, 배우자 중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6&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전과자를 자신의 이웃이나 직장동료나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8년을 제외하면 매년 3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과자에 대한 포용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학력별로는 초졸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전과자에 대한 포용도,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2013	31.6	37.1	25.8	30.8	33.5	33.8	31.5	24.7	-	21.3	25.8	32.3	33.6
2014	32.7	35.5	29.6	32.6	33.2	35.9	31.0	27.4	-	23.9	30.1	32.1	34.8
2015	33.5	38.4	28.4	35.7	32.1	37.1	30.3	31.5	-	28.3	30.6	34.0	34.2
2016	30.8	35.4	26.0	28.2	31.8	32.7	32.0	27.8	-	23.9	27.9	29.6	33.3
2017	30.5	34.0	27.0	33.1	30.0	30.3	30.5	28.8	-	21.3	27.9	30.7	31.8
2018	37.3	40.4	34.0	34.8	36.2	38.9	40.0	35.2	-	23.7	40.1	36.8	38.1
2019	32.0	35.8	28.1	37.3	31.0	33.0	29.6	28.9	-	22.2	30.9	32.1	32.6
2020	30.6	33.6	27.6	35.0	30.1	30.8	30.7	-	28.0	25.5	26.8	30.9	32.0
2021	32.6	35.4	29.9	33.0	34.8	36.8	33.7	-	27.8	22.4	26.9	32.7	34.5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23

통계명 차별 경험률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해당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지난 4년간 감소 추세에 있다.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성별로 인해 차별받은 사람들의 비율은 13.9%에서 5.4%로 감소하였고 나이로 인해 차별받은 사람들의 비율도 13.6%에서 5.2%로 감소하였다. 경제적 지위, 고용형태, 학력이나 학벌로 인해 차별받은 사람들의 비율도 각각 10.3%에서 4.0%, 7.8%에서 3.2%, 7.7%에서 2.5%로 줄어들었다. 지난 4년간 차별 경험은 줄었지만 주로 받는 차별 유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통계표 차별 경험률, 2019-2022

	2019	2020	2021	2022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13.9	11.8	7.6	5.4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13.6	12.9	7.5	5.2
직업이나 소득 등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10.3	13.0	6.2	4.0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7.8	11.0	5.4	3.2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7.7	8.7	4.2	2.5
키, 몸무게, 외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6.6	5.7	3.0	2.0
사상 또는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4.1	6.8	2.6	1.6
출신지역을 이유로	2.7	3.6	1.8	1.2
임신 또는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2.6	2.1	1.9	1.0
미혼(비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3.3	4.0	1.8	1.0
질병 및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2.3	2.7	1.4	1.0
장애를 이유로	1.7	2.0	1.4	0.9
한부모, 미혼(비혼) 모/부 등 가족상황을 이유로	1.2	2.2	1.2	0.9
종교를 이유로	2.2	2.5	1.4	0.8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	-	-	0.7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1.4	1.6	1.0	0.6

주: 1) 비해당 응답자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함.

2)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24

통계명 청소년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85백분위수 미만인 자 중에서 자신의 체형을 살이 찐 편이라고 인지하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_12\\_Y03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_12_Y034&conn_path=I3)

수록기간 2008-2021

통계해설 청소년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은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85백분위수 미만인 중·고등 학생 중에서 자신이 살이 찐 편이라고 인지하는 학생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4년까지 28% 이상 수준이었으나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22.2%까지 낮아졌다.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는데, 구체적으로는 여고생, 여중생, 남고생, 남중생의 순으로 높다.

통계표

성별 및 학교급별 청소년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 2008-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2008	28.1	22.4	34.2	28.4	24.1	33.0	27.8	20.6	35.6
2009	30.2	24.2	36.5	29.9	25.5	34.5	30.5	23.0	38.7
2010	29.4	22.9	36.3	29.0	23.9	34.3	29.8	21.8	38.4
2011	28.8	22.1	36.0	28.0	23.1	33.2	29.6	21.2	38.8
2012	28.5	21.7	35.6	27.6	22.8	32.6	29.2	20.7	38.6
2013	28.7	21.6	36.3	26.9	21.8	32.3	30.5	21.3	40.2
2014	28.3	21.3	35.6	25.9	21.2	30.9	30.5	21.3	40.1
2015	27.2	20.1	34.7	24.9	19.9	30.1	29.4	20.3	39.0
2016	26.6	20.1	33.3	24.0	19.5	28.6	28.8	20.6	37.3
2017	25.8	19.4	32.4	24.2	19.8	28.6	27.3	19.0	35.7
2018	24.2	17.9	30.4	22.4	17.8	26.9	25.8	18.0	33.7
2019	23.8	17.7	29.8	23.1	18.7	27.4	24.4	16.8	32.1
2020	23.9	19.0	28.6	23.9	20.0	27.5	23.9	17.9	29.8
2021	22.2	17.2	26.7	22.0	19.0	24.7	22.3	15.5	28.9

주: 1)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25

통계명 취약집단의 선출직 당선에 대한 태도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해당 집단의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 '다소 불편하다' 또는 '매우 불편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등 취약집단이 선출직으로 당선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1년 대비 2022년에 다소 감소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61.4%에서 59.5%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61.1%에서 58.0%로,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59.3%에서 56.9%로,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49.5%에서 45.5%로, 노인에 대해서는 29.0%에서 23.8%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23.8%에서 21.8%로, 청년에 대해서는 16.2%에서 13.1%로, 여성에 대해서는 8.3%에서 7.7%로 감소하였다. 취약집단별 거리감 순서는 2021년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다.

**통계표** 취약집단의 선출직 당선에 대한 태도, 2019-2022

	2019	2020	2021	2022
북한이탈주민	48.3	56.5	61.4	59.5
이주노동자	48.9	52.7	61.1	58.0
성소수자	54.2	58.4	59.3	56.9
결혼이주민	39.0	41.1	49.5	45.5
노인	33.1	35.1	29.0	23.8
장애인	20.6	20.5	23.8	21.8
청년	17.3	17.2	16.2	13.1
여성	7.6	8.0	8.3	7.7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26

통계명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존중도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59.0%에서 2020년 66.8%, 2021년 72.5%, 2022년 75.7%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대체로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존중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59.0	61.0	57.2	54.3	53.4	53.4	59.2	70.5	69.4	56.8	56.3	59.8
2020	66.8	66.5	66.9	63.3	62.3	66.6	63.5	73.8	73.2	65.8	64.2	65.9
2021	72.5	73.1	71.9	70.2	68.8	70.8	72.3	77.1	78.3	71.8	70.9	67.8
2022	75.7	75.4	75.9	74.4	72.4	74.5	74.9	79.3	81.6	75.7	73.7	66.5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27

통계명 한부모가족 차별 경험률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해당 항목에 대해 ‘차별을 받은 편이다’ 또는 ‘심한 차별을 받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37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371&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37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21300376&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18

통계해설 한부모가족의 차별 경험률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한부모가족의 부모가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은 ‘동네나 이웃주민으로부터’ 17.4%,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17.2%,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16.5%, ‘직장 및 일터에서’ 14.4%, ‘공공기관으로부터’ 12.5%로 나타난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차별을 겪는 비율은 ‘동네나 이웃주민으로부터’ 17.0%,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17.1%,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12.5%이다. 2015년과 비교하면 차별을 경험한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통계표

한부모가족 차별 경험률, 2012-2018

연도	부모					자녀		
	동네나 이웃주민	학교나 보육시설	가족 및 친척	직장 및 일터	공공기관	동네나 이웃주민	학교나 보육시설	가족 및 친척
2012	10.0	9.9	11.3	8.7	7.2	-	-	-
2015	15.2	15.2	16.2	12.7	12.1	14.4	18.0	11.4
2018	17.4	17.2	16.5	14.4	12.5	17.0	17.1	12.5

주: 1) 2015년부터 응답항목에 ‘한부모임을 밝히지 않음’이 포함됨.

통계번호 CUL-13428

통계명 혐오표현 법적 규제 찬성률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1년 67.9, 2022년 68.7%로 60% 후반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혐오표현 법적 규제 찬성률,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76.9	75.4	78.5	70.9	71.8	80.1	81.9	82.4	81.7	77.9	75.1	77.2
2020	78.8	77.1	80.4	73.1	74.4	80.3	82.3	81.3	81.6	78.9	77.3	77.7
2021	67.9	66.5	69.3	65.7	67.2	70.3	68.1	67.9	65.6	68.2	68.4	72.2
2022	68.7	67.6	69.8	69.8	68.9	70.3	69.7	66.3	65.2	68.6	70.1	69.8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29

통계명 혐오표현 접촉 시 표현대상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자신이 접한 혐오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률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들이 보거나 들은 혐오표현의 대상으로는 2022년 기준 정치인(44.1%)이 가장 많고 이어 성소수자(26.5%), 여성(25.7%), 장애인(24.0%), 특정 종교인(22.0%), 연예인(20.7%) 등의 순으로 많다. 이 중에서 정치인과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은 2021년에 비해 늘어난 반면 성소수자, 여성, 특정 종교인, 연예인에 대한 혐오표현은 줄어들었다.

통계표 혐오표현 접촉 시 표현대상, 2019-2022

	2019	2020	2021	2022
정치인	-	47.7	39.7	44.1
성소수자	37.4	40.0	28.5	26.5
여성	54.0	41.5	32.1	25.7
장애인	27.8	23.0	21.5	24.0
특정 종교인	20.6	42.8	27.0	22.0
연예인	-	27.9	23.6	20.7
남성	35.0	23.5	22.4	18.1
특정 지역 출신인	19.5	21.4	15.2	17.7
노인	29.6	20.1	17.3	16.6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15.3	11.9	15.5	15.4
난민	20.6	13.9	11.9	10.9
아동·청소년	-	-	11.9	10.7
노숙자	11.3	9.2	9.9	10.0
북한이탈주민	8.2	11.9	7.4	7.3
기타	6.3	1.2	1.3	0.5

주: 1) 2020년에는 정치인과 연예인, 2021년에는 아동·청소년이 보기항목에 포함됨.  
2) 복수 응답임.  
3)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30

통계명 혐오표현 접촉경로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혐오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률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혐오표현은 주로 TV·라디오(46.7%), 인터넷방송(39.7%), 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31.8%) 등을 통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외에 친구·가족·지인(18.9%), 사회관계망서비스(17.3%), 메신저서비스(16.6%), 캠페인·거리집회(13.6%) 등을 통한 혐오표현 접촉은 일부에 그친다. 이 중에서 인터넷방송과 캠페인·거리집회를 통한 혐오표현 접촉은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늘어났다.

통계표 혐오표현 접촉경로, 2019-2022

	2019	2020	2021	2022
TV·라디오	51.1	44.1	49.6	46.7
인터넷방송	40.6	43.2	36.7	39.7
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	46.6	45.7	38.4	31.8
친구·가족·지인	17.0	21.8	19.0	18.9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6.5	27.2	18.0	17.3
메신저서비스	17.5	17.6	16.1	16.6
캠페인·거리집회	16.1	17.1	8.2	13.6
기타	0.6	0.3	1.0	0.5

주: 1) 복수 응답임.

2)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13431

통계명 혐오표현 접촉도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평등권

다양성 존중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자주 있다’ 또는 ‘매우 자주 있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혐오표현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27.4%에서 2020년 25.9%, 2021년 20.9%, 2022년 18.1%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혐오표현은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더 많이 접한다.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혐오표현 접촉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혐오표현을 더 많이 접한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혐오표현 접촉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27.4	27.7	27.0	47.2	39.6	27.8	20.3	10.6	9.2	25.9	36.2	42.2
2020	25.9	27.0	24.8	42.7	37.5	26.0	20.6	12.2	9.4	25.3	33.8	39.0
2021	20.9	21.4	20.4	35.7	26.7	21.1	15.9	12.3	9.5	20.5	25.7	30.6
2022	18.1	20.1	16.3	28.8	24.2	19.6	15.3	9.7	6.0	17.5	23.0	30.0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23501

통계명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존중도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시민·정치적 권리  
표현의 자유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가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77.6%에서 2020년 81.1%, 2021년 83.2%, 2022년 83.6%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다.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존중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77.6	78.4	76.7	73.4	75.3	77.7	78.4	81.4	79.8	76.3	77.4	82.2
2020	81.1	81.2	81.0	80.1	80.8	85.3	79.0	80.5	79.9	81.1	81.8	80.2
2021	83.2	83.1	83.4	80.6	81.4	84.2	83.1	85.3	86.3	83.1	82.0	83.8
2022	83.6	83.5	83.7	83.2	82.2	82.2	83.4	85.7	87.4	83.3	82.5	80.9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33601

통계명 1인당 문화재정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화적 생활 권리

산출방법 1인당 문화재정 = 문화재정 지출액 ÷ 총인구. 총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73>

수록기간 2002-2020

통계해설 문화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문화 및 관광 일반 부문에 편성되는 예산과 기금 총액으로, 국민의 문화여가 향유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재원 투입 노력을 보여 준다. 1인당 문화재정은 문화재정 총액을 전체 인구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이 금액은 2002년 3만 7000원에서 2020년 12만 5000원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통계표** 1인당 문화재정, 2002-2020

연도	1인당 문화재정	연도	1인당 문화재정
2002	37,414	2012	74,092
2003	39,445	2013	81,398
2004	39,605	2014	87,147
2005	43,616	2015	97,930
2006	47,634	2016	107,283
2007	46,545	2017	110,921
2008	53,724	2018	101,925
2009	58,299	2019	114,427
2010	64,065	2020	125,015
2011	69,202		

주: 1) 문화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문화 및 관광 일반 부문에 편성되는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됨.

통계번호 CUL-33602

통계명 공공공연시설 비율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화적 생활 권리

산출방법 공공공연시설 비율 = (공공공연시설 수 ÷ 전체 공연시설 수) × 100.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2501&con\\_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2501&con_n_path=I3)

수록기간 2009-2020

통계해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공연시설의 수는 2009년 355개소에서 2020년 506개소로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민간공연시설은 417개소에서 501개소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공연시설에서 공공공연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46.0%에서 2020년 50.2%로 높아졌다.

통계표 공공공연시설 비율, 2009-2020

연도	공연시설 수(개소)			공공공연시설 비율(%)
	전체	공공	민간	
2009	772	355	417	46.0
2010	820	383	437	46.7
2011	868	420	448	48.4
2012	944	443	501	46.9
2013	984	456	528	46.3
2014	1,034	482	552	46.6
2015	1,026	483	543	47.1
2016	992	471	521	47.5
2017	1,019	493	526	48.4
2018	1,029	501	528	48.7
2019	1,028	505	523	49.1
2020	1,007	506	501	50.2



통계번호 CUL-33603

통계명 공연시설 장애인석 보유율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화적 생활 권리

산출방법 공연시설 장애인석 보유율 = (장애인석 보유 공연시설 수 ÷ 전체 공연시설 수) × 100.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2520&con\\_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2520&con_n_path=I3)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공연시설 장애인석 보유율은 전체 공연시설 중 장애인석을 보유한 공연시설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2년 48.6%에서 2014년 54.8%로 오른 후 55%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20년에는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57.5%로 집계되었다. 장애인석 보유율은 광역시 지역보다 광역도 지역에서 더 높다. 설립주체나 운영주체에 따라서도 다른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연시설은 민간에서 설립·운영하는 공연시설에 비해 장애인석 보유율이 두 배가량 높다.

**통계표** 지역·설립주체·운영주체별 공연시설 장애인석 보유율, 2011-2020

연도	전체	지역별		설립주체별		운영주체별	
		특별·광역시	광역시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2011	57.0	47.3	69.7	77.3	32.9	79.5	42.7
2012	48.6	44.5	54.0	68.6	26.5	71.6	28.3
2013	50.9	44.7	59.5	73.5	27.3	75.8	30.0
2014	54.8	44.2	69.1	77.4	30.9	78.9	34.4
2015	53.4	45.3	64.6	74.3	30.5	75.6	34.0
2016	53.6	44.3	65.8	75.0	29.3	76.5	32.3
2017	55.3	48.4	64.2	73.5	33.4	74.8	35.6
2018	55.4	47.9	65.2	73.6	33.4	74.6	35.8
2019	54.6	46.6	65.0	74.3	30.0	75.5	33.0
2020	57.5	51.5	65.1	74.0	35.9	75.4	38.1

통계번호 CUL-33604

통계명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화적 생활 권리

산출방법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65세 이상 인구) × 1,000.  
65세 이상 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개소/1000명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N\\_B000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N_B00003&conn_path=I3)

수록기간 2011-2021

통계해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2011년 6만 3300여 개소에서 2021년 6만 8800여 개소로 늘어났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2011년 11.5개소에서 매년 줄어들어 2021년에는 8.0개소로 감소하였다.

통계표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2011-2021

연도	시설 수(개소)				노인인구 1000명당 시설 수
	전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2011	63,375	281	61,537	1,557	11.5
2012	64,077	300	62,442	1,335	11.1
2013	64,983	319	63,251	1,413	10.8
2014	65,665	344	63,960	1,361	10.5
2015	66,292	347	64,568	1,377	10.1
2016	66,787	350	65,044	1,393	9.9
2017	67,324	364	65,604	1,356	9.5
2018	68,013	385	66,286	1,342	9.2
2019	68,413	391	66,737	1,285	8.9
2020	69,005	398	67,316	1,291	8.5
2021	68,823	357	67,211	1,255	8.0

통계번호 CUL-33605

통계명 문화권 존중도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화적 생활 권리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문화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문화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75.1%에서 2020년 80.4%, 2021년 84.0%로 늘어났다. 이후 2022년에는 82.5%로 약간 줄었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다소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일관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문화권 존중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75.1	75.3	74.8	78.2	75.3	74.7	72.2	75.1	71.5	73.3	78.1	81.1
2020	80.4	80.4	80.5	84.5	82.6	83.0	76.7	77.5	75.9	80.3	82.6	84.3
2021	84.0	84.3	83.7	85.8	82.3	83.9	83.4	84.4	83.3	84.2	84.3	80.7
2022	82.5	81.8	83.3	83.4	81.4	81.6	81.6	83.8	83.8	82.6	82.0	81.9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33606

통계명 문화여가비 지출률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화적 생활 권리

산출방법 문화여가비 지출률 = (가구 월평균 문화여가비 지출액 ÷ 가구 월평균 총지출액) × 100.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U0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U003&conn_path=I3)

수록기간 2017-2021

통계해설 가구의 월평균 총지출 대비 문화여가비 지출 비율은 2017년 5.3%에서 2018년 5.8%로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바뀌며 2021년에는 4.2%로 낮아졌다. 이 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여가비 지출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통계표** 소득분위별 문화여가비 지출률, 2017-2021

연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7	5.3	4.6	4.5	5.1	5.1	5.9
2018	5.8	4.5	4.9	5.4	5.6	6.6
2019	5.4	4.5	4.9	5.0	5.2	6.1
2020	4.3	4.0	4.3	4.3	4.5	4.2
2021	4.2	3.9	4.2	4.1	4.4	4.2

주: 1) 문화여가비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오락·문화 항목 지출액임.

통계번호 CUL-33607

통계명 생활체육 참여율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화적 생활 권리

산출방법 주 2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7810&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7810&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21

통계해설 주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0년 33.4%에서 2018년 52.4%까지 높아졌다가 2021년에 49.8%로 낮아졌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과거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2014년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져 최근으로 올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이 관찰되지 않는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생활체육 참여율, 2000-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2000	33.4	37.8	28.9	39.9	35.6	25.9	30.8	39.1	36.8	-
2003	39.8	41.4	38.3	32.6	24.4	35.8	46.8	54.0	53.3	-
2006	44.1	48.4	40.0	38.0	45.2	41.7	50.9	56.7	33.0	24.3
2008	34.2	35.5	32.8	30.5	30.2	31.8	37.8	40.6	39.6	28.5
2010	41.5	42.5	40.5	34.8	36.4	38.0	44.4	48.5	51.1	42.8
2012	35.0	35.1	34.9	27.4	30.3	32.1	38.5	41.4	39.8	37.1
2014	43.5	43.2	43.9	38.9	47.2	40.3	44.3	45.9	48.1	39.4
2015	45.3	44.1	46.6	36.2	46.0	42.3	48.3	47.9	51.0	44.6
2016	49.3	49.2	49.3	45.9	46.9	46.8	50.7	51.0	54.2	49.5
2017	48.2	45.6	50.8	45.3	46.5	51.1	47.8	47.2	52.1	48.8
2018	52.4	48.7	56.1	44.3	52.6	52.8	52.2	53.2	54.9	55.7
2019	52.2	48.8	55.6	34.1	55.9	55.5	56.2	51.9	55.3	50.1
2020	47.0	43.2	50.8	34.6	44.6	46.3	48.1	50.8	50.2	50.1
2021	49.8	46.1	53.5	41.4	53.3	48.4	50.3	48.0	51.8	53.4

주: 1) 2006년까지는 15세 이상, 2008년부터는 1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00년과 2003년에는 60대에 70세 이상이 포함됨.  
 3) 2000-2008년까지는 4년제 이상 대학교에 4년제 미만 대학이 포함됨.

통계번호 CUL-33608

통계명 여가비용 충족도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화적 생활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지출한 여가비용(한 달 평균)에 대해 ‘다소 충분하다’ 또는 ‘충분하다’ 또는 ‘매우 충분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84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8401&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1

통계해설 여가비용 충족도는 자신의 여가비용 지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6년 47.4%에서 2019년 49.7%로 올랐다가 2020년과 2021년에 42.1%와 40.1%로 떨어졌다. 최근 이 비율은 20대와 30대에 높았다가 60대와 70세 이상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비용 충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여가비용 충족도도 낮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여가비용 충족도, 2016-2021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600만원	600만원 이상
2016	47.4	39.8	47.7	45.4	45.8	50.8	49.7	49.7	47.5	49.3	46.5	46.7	47.7	45.8	49.8
2018	36.3	32.5	38.2	34.4	35.3	38.0	37.7	34.8	27.9	36.5	36.3	37.0	37.0	36.2	36.5
2019	49.7	38.1	49.9	50.3	50.1	53.3	50.2	47.0	45.4	43.6	46.7	49.4	48.7	53.0	54.7
2020	42.1	38.3	45.5	45.6	42.5	41.7	40.2	38.0	33.0	36.2	36.2	40.9	43.0	45.7	48.0
2021	40.1	44.0	44.1	45.8	39.4	41.4	36.2	30.6	30.1	31.9	35.5	37.3	40.6	45.1	49.7

주: 1)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33609

통계명 여가생활 만족도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화적 생활 권리

산출방법 평소 여가생활에 대해 '약간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CL091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CL091R&conn_path=I3)

수록기간 2009-2021

통계해설 여가생활 만족도는 자신의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1년까지 20% 내외 수준이었다가 2013년에 27.0%로 크게 오른 후 최근까지 큰 변화 없이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은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여가생활 만족도가 낮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여가생활 만족도, 2009-2021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09	21.8	25.1	26.1	20.9	21.4	21.4	18.6	12.9	16.0	-	16.9	21.2	24.0	28.5	31.2	36.4
2011	19.3	29.7	23.1	16.7	18.2	18.6	14.3	-	-	10.8	13.4	17.8	22.2	26.1	28.6	36.9
2013	27.0	40.0	33.9	26.5	27.3	23.8	18.1	-	-	16.1	19.4	24.9	30.4	34.9	39.9	45.6
2015	26.0	40.7	32.1	25.9	25.6	23.4	17.6	-	-	13.6	18.6	24.5	26.8	30.9	36.4	42.9
2017	27.2	43.6	33.9	26.5	26.9	25.1	19.2	-	-	14.0	20.4	23.2	28.0	30.5	37.9	42.4
2019	28.8	43.3	35.5	29.6	29.8	26.4	20.9	-	-	16.3	18.7	24.9	28.8	33.2	38.9	42.7
2021	27.0	47.9	32.7	26.7	27.3	26.5	18.8	-	-	14.0	18.7	22.8	27.2	29.8	33.4	41.4

주: 1) 2009년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33610

통계명 여가여건 향상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화적 생활 권리

산출방법 2년 전과 비교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여가생활 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 '약간 좋아졌다' 또는 '매우 좋아졌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WE014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WE014R&conn_path=I3)

수록기간 2009-2021

통계해설 문화여가생활 여건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9년 31.5%에서 2019년 46.7%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2021년에 27.8%로 급감하였다. 이 비율은 2013년까지 3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17년부터는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여건이 좋아졌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통계표

연령 및 소득수준별 여가여건 향상에 대한 인식, 2009-2021

연도	전체	연령별					소득수준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5세 이상	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2009	31.5	34.9	33.0	30.3	31.5	26.4	20.5	24.9	-	26.2	31.1	35.8	37.8	39.9	45.6	
2011	35.1	38.4	34.9	34.2	34.3	33.7	-	-	29.5	29.4	34.2	37.4	40.8	44.4	49.5	
2013	35.6	40.5	36.1	34.2	34.2	32.9	-	-	29.2	31.1	34.2	37.3	39.5	45.6	48.6	
2015	43.9	42.6	39.9	42.0	44.4	50.4	-	-	43.5	40.6	40.8	45.4	44.0	47.8	51.9	
2017	43.8	41.3	39.5	44.8	45.4	46.6	-	-	42.4	40.3	41.2	42.7	44.2	47.1	53.3	
2019	46.7	45.3	45.3	48.3	46.0	48.1	-	-	44.3	44.7	44.7	45.2	47.5	49.9	52.1	
2021	27.8	24.8	24.1	28.9	30.7	29.0	-	-	27.2	26.9	25.7	27.4	28.0	28.7	31.1	

주: 1) 2009년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33611

통계명 월평균 여가비 지출액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화적 생활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여가생활에 지출한 월평균 금액임.

단위 만 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8400&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8400&conn_path=I3)

수록기간 2014-2021

통계해설 월평균 여가생활 지출액은 2014년 13만 원에서 2019년 15만 6000원으로 늘어난 후 2021년에 14만 9000원으로 줄었다. 여가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지출한다. 여가비 지출은 20대부터 50대까지 줄지 않다가 60대에 들면 크게 감소하고 70대가 되면 20-50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가구소득이 낮을 수록 여가비 지출이 적다. 특히 최고 소득층의 여가비 지출액은 최저 소득층의 두세 배에 이른다.

**통계표** 성·연령·소득수준별 월평균 여가비 지출액, 2014-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남성	여성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상
2014	13.0	14.7	11.3	6.1	14.7	15.6	15.0	14.3	10.5	6.1	6.5	9.1	12.2	12.9	13.6	15.1	18.9
2016	13.6	15.4	11.8	7.4	14.3	15.9	15.9	14.7	12.4	7.8	7.0	10.0	12.3	13.6	13.4	14.7	17.8
2018	15.1	16.3	13.9	8.0	16.7	17.8	17.2	16.1	13.6	8.9	7.6	10.0	13.9	15.2	15.8	15.4	19.6
2019	15.6	18.3	13.0	7.6	16.5	19.5	18.1	17.7	13.2	8.8	6.5	10.4	13.1	15.0	15.5	17.2	23.5
2020	15.6	18.1	13.2	8.1	17.6	19.0	17.8	17.5	14.0	7.8	7.2	9.2	13.1	14.9	15.5	16.6	21.8
2021	14.9	17.4	12.4	9.0	17.6	19.1	17.3	16.0	12.3	6.8	6.6	8.4	12.3	13.8	14.1	17.1	23.1

주: 1)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33612

통계명 인구 10만 명당 공공도서관 수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화적 생활 권리

산출방법  $\text{인구 10만 명당 공공도서관 수} = (\text{공공도서관 수} \div \text{추계인구}) \times 100,000.$

단위 개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도서관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8309&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8309&conn_path=I3)

수록기간 2008-2019

통계해설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2008년에서 2019년 사이 인구 10만 명당 1.31개소에서 2.19개소로 늘어났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전남(3.90개소), 강원(3.82개소), 세종(3.34개소), 제주(3.31개소), 전북(3.26개소) 등에 상대적으로 많고 부산(1.30개소), 광주(1.54개소), 울산(1.66개소), 대전(1.73개소), 대구(1.76개소), 인천(1.80개소), 서울(1.86개소) 등에 상대적으로 적다. 인구 대비 도서관 수는 광역시보다 광역도 지역에 많음을 알 수 있다.

**통계표**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공공도서관 수, 2008-2019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8	1.31	0.77	0.68	0.73	0.63	1.09	1.13	0.82	-	1.15	3.04	1.86	2.29	2.35	2.90	2.05	1.45	4.04
2009	1.43	0.93	0.77	0.81	0.89	1.08	1.26	0.82	-	1.25	3.37	1.98	2.45	2.40	2.91	2.09	1.57	3.85
2010	1.53	1.00	0.86	1.05	0.95	1.07	1.45	1.00	-	1.40	3.16	2.10	2.45	2.51	3.21	2.20	1.65	3.83
2011	1.57	1.08	0.89	1.09	1.13	1.07	1.44	0.99	-	1.43	3.14	2.07	2.42	2.60	3.20	2.27	1.70	3.79
2012	1.65	1.16	0.90	1.09	1.29	1.13	1.43	1.07	0.98	1.54	3.12	2.32	2.45	2.70	3.31	2.33	1.78	3.74
2013	1.72	1.23	0.90	1.13	1.38	1.13	1.49	1.14	0.84	1.60	3.12	2.43	2.67	2.91	3.36	2.37	1.80	3.68
2014	1.83	1.32	0.93	1.21	1.47	1.33	1.48	1.48	2.27	1.77	3.31	2.60	2.73	3.01	3.52	2.40	1.90	3.60
2015	1.92	1.47	1.04	1.34	1.60	1.39	1.56	1.46	2.14	1.84	3.49	2.64	2.76	3.05	3.56	2.39	1.95	3.50
2016	1.97	1.49	1.16	1.42	1.62	1.46	1.56	1.46	2.13	1.94	3.55	2.75	2.77	3.16	3.56	2.39	1.95	3.40
2017	2.03	1.64	1.17	1.46	1.64	1.54	1.57	1.55	1.88	1.96	3.68	2.80	2.74	3.17	3.73	2.43	2.01	3.31
2018	2.12	1.78	1.26	1.67	1.70	1.55	1.59	1.65	3.31	2.03	3.75	2.78	2.85	3.18	3.84	2.43	2.12	3.36
2019	2.19	1.86	1.30	1.76	1.80	1.54	1.73	1.66	3.34	2.09	3.82	2.95	2.88	3.26	3.90	2.47	2.15	3.31

주: 1) 공공도서관에는 지자체 및 교육청 설립 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이 포함됨.

통계번호 CUL-33613

통계명 인구 10만 명당 공연시설 수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화적 생활 권리

산출방법  $\text{인구 10만 명당 공연시설 수} = (\text{공연시설 수} \div \text{추계인구}) \times 100,000.$

단위 개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25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2501&conn_path=I3)

수록기간 2009-2020

통계해설 전국의 인구 10만 명당 공연시설 수는 2009년 1.57개소에서 2014년 2.04개소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감소하여 2020년에는 1.94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서울, 제주, 강원은 10만 명당 3개소 내외에 이르지만 세종, 경기, 인천은 10만 명당 1개소 안팎에 불과하다.

**통계표**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공연시설 수, 2009-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1.57	2.78	1.06	1.29	1.11	1.76	1.19	1.09	-	0.96	2.49	1.65	1.37	1.62	1.29	1.10	1.22	2.75
2010	1.65	2.83	1.15	1.73	1.25	1.81	1.39	1.09	-	0.96	2.75	1.57	1.54	1.61	1.52	1.37	1.27	2.92
2011	1.74	3.10	1.35	1.89	1.31	1.93	1.64	1.26	-	0.92	2.74	1.49	1.47	1.55	1.52	1.29	1.20	4.69
2012	1.88	3.51	1.44	2.02	1.36	1.86	1.88	1.24	-	0.99	2.73	1.48	1.52	1.65	1.96	1.32	1.32	4.64
2013	1.95	3.77	1.45	2.02	1.34	1.93	1.88	1.23	-	1.02	2.79	1.53	1.50	1.81	1.96	1.47	1.31	4.56
2014	2.04	3.84	1.68	2.06	1.29	2.19	1.93	1.74	0.76	1.03	2.78	1.58	1.48	2.02	1.95	1.65	1.33	6.17
2015	2.01	3.80	1.71	2.07	1.25	2.32	2.01	1.72	1.07	0.96	2.64	1.57	1.47	2.13	2.17	1.64	1.38	5.17
2016	1.94	3.53	1.68	2.07	1.17	2.26	2.34	1.54	0.85	0.95	2.56	1.56	1.36	2.07	2.06	1.60	1.50	5.02
2017	1.98	3.63	1.78	2.24	1.23	2.27	2.49	1.55	0.75	0.95	2.76	1.55	1.67	2.02	2.12	1.57	1.44	4.73
2018	1.99	3.70	1.85	2.33	1.26	2.28	2.45	1.47	0.66	0.93	2.76	1.55	1.56	2.36	2.12	1.57	1.49	4.28
2019	1.99	3.72	1.89	2.42	1.15	2.35	2.26	1.48	0.61	0.90	2.83	1.60	1.60	2.48	2.01	1.61	1.49	4.07
2020	1.94	3.54	1.91	2.28	1.12	2.23	2.41	1.58	0.86	0.93	2.90	1.59	1.61	2.49	1.90	1.58	1.53	3.44

주: 1) 공공 및 민간 공연시설 수입.

통계번호 CUL-33614

통계명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화적 생활 권리

산출방법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 (문화기반시설 수 ÷ 주민등록인구) × 100,000.

단위 개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3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31&conn_path=I3)

수록기간 2003-2020

통계해설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시설을 말한다. 전국의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2003년 2.2개소에서 2020년 6.0개소로 2.7배가량 늘어났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제주(20.0개소), 강원(15.2개소), 전남(12.3개소), 전북(10.0개소), 충북(8.6개소), 충남(8.3개소), 경북(8.3개소) 등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반면 대구(3.8개소), 부산(3.9개소), 인천(4.1개소), 울산(4.1개소), 대전(4.2개소), 경기(4.2개소), 서울(4.4개소), 광주(5.1개소) 등은 전국 평균에 미달한다.

통계표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2003-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3	2.2	1.6	1.1	0.9	0.9	2.0	2.2	1.0	-	1.5	5.1	3.6	4.0	3.9	3.9	3.4	3.1	8.0
2004	2.4	1.8	1.2	1.1	0.9	2.2	2.4	1.2	-	1.7	5.2	3.8	4.1	4.2	4.2	4.0	3.2	8.6
2005	2.7	2.1	1.4	1.1	0.9	2.2	2.4	1.3	-	2.0	5.2	4.3	4.4	4.6	4.3	4.3	3.4	10.2
2006	2.9	2.3	1.5	1.2	0.9	2.3	2.7	1.5	-	2.3	6.6	4.6	5.0	4.9	4.7	4.5	3.8	11.8
2007	3.3	2.2	1.5	1.6	1.5	2.3	2.8	1.5	-	2.5	8.8	5.6	5.7	4.9	6.3	5.7	4.0	12.5
2008	3.5	2.4	1.5	1.7	1.7	2.6	2.9	1.8	-	2.7	9.3	5.7	5.8	5.7	6.5	6.0	4.2	13.9
2009	4.1	2.8	1.8	1.9	2.3	2.9	3.4	2.6	-	3.0	10.8	6.9	6.7	6.4	7.5	6.5	5.0	18.0
2010	3.9	2.7	1.8	2.1	2.4	2.8	3.2	2.3	-	3.1	10.2	6.5	6.2	5.8	7.4	6.2	4.5	15.8
2011	4.1	2.8	2.1	2.4	2.6	2.9	3.3	2.6	-	3.2	10.4	6.7	6.4	6.1	7.7	6.4	4.6	16.5
2012	4.3	2.9	2.1	2.4	2.7	3.1	3.3	2.5	5.3	3.4	10.9	7.1	6.5	6.2	8.5	6.7	4.8	17.3
2013	4.6	3.2	2.2	2.6	2.8	3.4	3.5	3.0	6.5	3.6	11.8	7.6	7.2	7.2	9.1	6.8	5.3	20.9
2014	4.9	3.4	2.2	2.6	3.0	3.7	3.5	3.4	6.4	3.9	12.8	8.0	7.2	7.9	9.4	7.1	5.6	20.6
2015	5.0	3.6	2.5	2.9	3.3	3.8	3.7	3.3	5.7	3.9	13.3	8.0	7.4	8.0	9.5	7.3	5.6	20.2
2016	5.1	3.7	2.8	2.9	3.3	3.9	3.8	3.4	5.3	4.0	13.6	7.9	7.5	8.4	10.0	7.2	5.7	19.5
2017	5.3	3.9	3.0	3.0	3.4	4.2	3.7	3.5	5.0	4.1	14.1	8.0	7.6	8.7	10.5	7.4	5.8	19.2
2018	5.5	4.1	3.1	3.2	3.5	4.3	3.7	3.7	6.0	4.1	13.9	8.1	7.8	8.6	10.9	7.5	6.1	20.2
2019	5.8	4.2	3.6	3.7	3.9	4.9	4.2	4.0	6.5	4.3	15.1	8.5	8.3	9.6	11.9	7.9	6.6	20.6
2020	6.0	4.4	3.9	3.8	4.1	5.1	4.2	4.1	6.5	4.2	15.2	8.6	8.3	10.0	12.3	8.3	6.8	20.0

주: 1)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이 포함됨.

통계번호 CUL-33615

통계명 인구 대비 공공체육시설 수와 면적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화적 생활 권리

산출방법 1만 명당 시설 수 = (시설 총수 ÷ 총인구) × 10,000. 총인구는 추계인구임.  
1인당 시설 면적 = 시설 총면적 ÷ 총인구. 총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개소/만 명, m<sup>2</sup>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자료출처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CurrentPage=2&pType=07&pTab=01&pSeq=1451&pDataCD=0417000000&pSearchType=01&pSearchWord=](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CurrentPage=2&pType=07&pTab=01&pSeq=1451&pDataCD=0417000000&pSearchType=01&pSearchWord=)

수록기간 2010-2019

통계해설 인구 1만 명당 공공체육시설 수는 2010년 3.06개소에서 매년 늘어나 2019년에는 5.83개소에 달하였다. 시설 수가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시설 면적도 늘어났는데, 인구 1인당 2.38m<sup>2</sup>에서 3.83m<sup>2</sup>로 증가하였다.

**통계표** 인구 대비 공공체육시설 수와 면적, 2010-2019

연도	시설 총수 (개소)	1만 명당 시설 수 (개소/만 명)	시설 총면적 (m <sup>2</sup> )	1인당 시설 면적 (m <sup>2</sup> )
2010	15,179	3.06	117,710,657	2.38
2011	16,127	3.23	122,573,914	2.45
2012	17,157	3.42	123,796,109	2.47
2013	19,398	3.85	138,294,000	2.74
2014	21,317	4.20	151,117,761	2.98
2015	22,662	4.44	156,083,763	3.06
2016	24,303	4.75	163,932,737	3.20
2017	26,927	5.24	177,614,312	3.46
2018	28,578	5.54	188,756,984	3.66
2019	30,185	5.83	198,051,572	3.83

통계번호 CUL-33616

통계명 휴가 활용률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문화적 생활 권리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700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7005&conn_path=I3)

수록기간 2014-2021

통계해설 휴가 활용률은 지난 1년 동안 휴가를 다녀온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4년 62.3%에서 2018년 68.1%까지 올랐다가 이듬해인 2019년에 55.3%로 낮아졌다. 이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43.3%와 29.7%로 급감하였다. 휴가 활용 인구의 비율은 30대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휴가 활용률이 낮다.

**통계표** 성·연령·소득수준별 휴가 활용률, 2014-2021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남성	여성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이상
2014	62.3	63.6	61.0	47.6	69.7	80.0	74.6	60.3	40.9	23.7	22.8	39.7	59.2	66.4	68.6	72.7	80.9
2016	64.2	66.5	61.9	51.1	71.4	80.4	76.8	66.6	45.8	29.4	21.3	32.5	54.3	65.0	69.2	77.3	79.3
2018	68.1	70.0	66.3	57.7	74.7	81.9	80.6	71.0	53.4	35.4	29.9	41.2	60.4	71.4	72.2	75.7	82.7
2019	55.3	56.2	54.4	43.0	63.4	70.2	64.7	57.5	42.5	26.0	20.4	31.8	47.3	56.7	60.2	63.6	71.0
2020	43.3	44.9	41.8	28.8	47.5	60.7	56.0	45.4	32.2	12.5	13.5	18.3	31.7	42.5	48.2	52.4	57.0
2021	29.7	31.7	27.7	18.4	36.6	45.5	39.4	30.8	17.4	5.7	5.9	11.6	25.5	28.5	32.3	39.1	42.0

주: 1)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CUL-33701

통계명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정보 접근권

산출방법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한 취약계층의 상대적 디지털정보화 수준임.

단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12017N00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12017N008&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12017N009&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12017N009&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12017N0010&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12017N0010&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12017N001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12017N0011&conn_path=I3)

수록기간 2014-2021

통계해설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을 포함하는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일반국민 대비 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2014년 72.5%에서 2021년 95.4%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장애인은 60.2%에서 81.7%로, 농어민은 51.4%에서 78.1%로, 고령층은 42.4%에서 69.1%로 높아졌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제외한 장애인·농어민·고령층의 정보화 격차는 여전히 크다. 세부적으로 보면 접근성에서는 일반국민에 근접해 있지만 역량과 활용 면에서는 크게 못 미친다.

**통계표**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 2014-2021

연도	종합수준				접근수준				역량수준				활용수준			
	저 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저 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저 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저 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2014	72.5	60.2	51.4	42.4	82.2	79.9	68.1	67.3	66.8	45.0	40.7	23.4	70.3	59.7	48.6	39.7
2015	74.5	62.5	55.2	45.6	87.8	83.5	73.4	68.5	67.2	47.0	41.2	29.6	71.5	62.4	55.5	44.9
2016	77.3	65.4	61.1	54.0	89.2	88.1	84.8	82.5	69.1	49.8	46.2	34.9	76.9	64.6	59.0	52.2
2017	81.4	70.0	64.8	58.3	94.7	91.6	90.4	89.9	78.5	57.7	53.4	41.0	77.7	71.5	63.3	59.9
2018	86.8	74.6	69.8	63.1	94.9	92.0	91.0	90.1	85.3	66.9	63.0	50.0	84.3	73.6	65.9	62.8
2019	87.8	75.2	70.6	64.3	95.2	92.6	91.3	90.6	86.5	67.8	63.6	51.6	85.4	74.0	67.2	63.9
2020	95.1	81.3	77.3	68.6	98.3	95.4	94.8	92.8	92.5	74.2	69.0	53.7	96.1	81.4	76.9	71.4
2021	95.4	81.7	78.1	69.1	98.7	95.6	94.9	93.1	92.9	74.9	69.6	53.9	96.3	81.5	78.1	72.3

- 주: 1) 접근수준은 컴퓨터, 모바일 스마트기기, 인터넷 등에 대한 접근성 정도를 나타냄.
- 2) 역량수준은 컴퓨터, 모바일 스마트기기, 인터넷 등의 기본적인 이용 능력을 나타냄.
- 3) 활용수준은 컴퓨터, 모바일 스마트기기, 인터넷 등의 양적 및 질적 활용 정도를 나타냄.
- 4) 고령층은 2015년까지는 50세 이상, 2016년부터는 55세 이상 인구임.

통계번호 CUL-33702

통계명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통계분류 문화·미디어·정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정보 접근권

산출방법 최근 한 달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12017N00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7&tblId=DT_12017N006&conn_path=I3)

수록기간 2004-2021

통계해설 인터넷 이용률은 최근 한 달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저소득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4년 38.4%에서 2021년 89.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장애인 34.8%에서 82.9%로, 농어민은 16.9%에서 80.7%로, 고령층은 19.3%에서 79.3%로 높아졌다.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93.0%인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농어민·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진다.

**통계표** 일반국민과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2004-2021

연도	일반국민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2004	70.2	38.4	34.8	16.9	19.3
2005	72.8	44.2	41.0	23.0	22.5
2006	74.1	48.4	46.6	29.4	28.3
2007	75.5	52.8	49.9	33.4	34.1
2008	76.5	54.6	51.8	35.2	35.6
2009	77.2	55.7	52.7	36.2	37.6
2010	77.8	56.5	53.5	37.5	39.3
2011	78.0	57.4	54.4	38.9	41.1
2012	78.4	58.5	55.5	40.2	42.6
2013	82.1	60.4	56.7	42.2	48.5
2014	83.6	64.2	59.1	47.1	42.8
2015	85.1	73.9	66.8	56.2	50.0
2016	88.3	76.0	70.6	59.9	59.3
2017	90.3	79.2	74.5	67.5	66.5
2018	91.5	83.3	77.4	71.3	69.3
2019	91.8	85.3	78.3	72.5	74.0
2020	91.9	88.7	80.3	79.9	76.6
2021	93.0	89.1	82.9	80.7	79.3

주: 1) 고령층은 2015년까지는 50세 이상, 2016년부터는 55세 이상 인구임.



## 10 환경과 생태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번호	통계명	취약집단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쾌적한 환경 권리	ENV-33801	1인당 도시공원 면적			
			ENV-33802	1인당 생활권도시립 면적			
			ENV-33803	7대 도시 미세먼지(PM10) 농도			
			ENV-33804	7대 도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			
			ENV-33805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ENV-33806	녹지환경 만족도			
			ENV-33807	대기환경 만족도			
			ENV-33808	도시 소음도			
			ENV-33809	소음환경 만족도			
			ENV-33810	시도별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 초과율			
			ENV-33811	시도별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초과율			
			ENV-33812	토양환경 만족도			
			ENV-33813	환경권 존중도			
			ENV-33814	환경분쟁조정 발생건수			
			ENV-33815	환경성질환 유병률			
			ENV-33816	환경예산 비율			
				식수 및 위생 권리	ENV-33901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율	
					ENV-33902	수질오염사고 발생건수	
			ENV-33903	하천환경 만족도			

통계번호 ENV-33801

통계명 1인당 도시공원 면적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쾌적한 환경 권리

산출방법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도시공원 조성면적 ÷ 용도지역기준 도시인구.

단위 m<sup>2</sup>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도시지역에 조성된 공원의 총면적은 2000년 214km<sup>2</sup>에서 2012년 412km<sup>2</sup>로 두 배가량 늘어났고 이후에도 증가하여 2020년에는 525km<sup>2</sup>에 달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총면적이 늘어나면서 도시인구 1인당 면적도 증가하였다.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2000년 5.0m<sup>2</sup>에서 2020년 11.0m<sup>2</sup>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통계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2000-2020

연도	도시공원 조성면적(km <sup>2</sup> )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m <sup>2</sup> )	연도	도시공원 조성면적(km <sup>2</sup> )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m <sup>2</sup> )
2000	214	5.0	2011	386	8.3
2001	230	5.3	2012	412	8.9
2002	219	5.1	2013	404	8.6
2003	304	6.9	2014	406	8.6
2004	361	8.2	2015	418	8.8
2005	304	6.9	2016	437	9.2
2006	292	6.6	2017	455	9.6
2007	329	7.4	2018	480	10.1
2008	461	10.3	2019	498	10.4
2009	368	8.1	2020	525	11.0
2010	384	8.4			

통계번호 ENV-33802

통계명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쾌적한 환경 권리

산출방법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 = 생활권도시림 면적 ÷ 도시인구.

단위 m<sup>2</sup>

자료 산림청, 「전국도시림현황통계」.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0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08)

수록기간 2005-2020

통계해설 도시인구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은 2005년 6.56m<sup>2</sup>에서 2019년 11.51m<sup>2</sup>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작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6.87m<sup>2</sup>), 경기(8.37m<sup>2</sup>), 인천(9.89m<sup>2</sup>) 지역의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은 전국 평균에 미달한다.

**통계표** 시도별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 2005-2019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5	6.56	5.06	7.17	5.70	3.59	4.17	5.18	8.67	-	6.36	9.88	3.75	4.04	12.08	8.26	8.24	10.85	13.62
2007	7.00	4.13	11.60	4.76	3.27	6.89	6.30	6.11	-	4.84	10.99	9.29	7.12	13.60	8.86	10.96	15.11	20.15
2009	7.76	3.05	12.36	5.27	10.34	11.36	8.92	9.74	-	7.35	12.71	10.55	8.16	16.41	11.70	9.59	6.39	5.86
2011	7.95	4.01	10.19	5.65	6.23	8.80	11.95	15.02	-	6.29	15.88	10.78	9.41	17.21	14.94	10.32	9.72	8.35
2013	8.32	4.35	9.90	7.88	5.95	9.12	12.08	16.16	5.66	5.29	18.91	13.04	10.25	23.34	13.19	11.25	10.63	9.20
2015	9.91	5.35	12.07	11.26	7.56	11.75	13.14	16.61	18.45	6.62	21.19	13.84	10.69	22.80	17.75	13.59	12.32	11.85
2017	10.07	4.38	12.49	11.52	8.23	11.27	10.46	17.87	24.22	7.69	19.73	15.29	11.40	18.56	17.97	15.00	13.00	15.72
2019	11.51	6.87	13.32	12.50	9.89	12.29	11.24	19.12	21.18	8.37	21.03	16.40	12.41	19.88	22.05	15.40	16.89	14.27

주: 1) 생활권도시림은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도시림을 말함.

통계번호 ENV-33803  
 통계명 7대 도시 미세먼지(PM10) 농도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쾌적한 환경 권리  
 산출방법 해당 지역 1-12월 농도의 평균값임.  
 단위  $\mu\text{g}/\text{m}^3$   
 자료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3\\_020004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3_0200045&conn_path=I3)  
 수록기간 2010-2020  
 통계해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포함하는 7대 도시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에 미세먼지(PM10) 농도가 크게 낮아졌는데, 지역에 따라 적게는  $5\mu\text{g}/\text{m}^3$ 에서 많게는  $12\mu\text{g}/\text{m}^3$ 까지 감소하였다.

**통계표** 7대 도시 미세먼지(PM10) 농도, 2010-2020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0	49	49	51	55	45	43	48
2011	47	48	47	55	43	44	50
2012	41	43	43	47	38	39	46
2013	45	49	45	49	42	42	47
2014	46	48	45	49	41	41	46
2015	46	49	46	56	46	48	48
2016	48	44	42	50	40	44	43
2017	44	44	44	47	40	45	43
2018	40	42	40	40	41	44	40
2019	42	37	39	43	42	41	37
2020	35	30	34	33	30	33	30

통계번호 ENV-33804  
 통계명 7대 도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쾌적한 환경 권리  
 산출방법 해당 지역 1-12월 농도의 평균값임.  
 단위  $\mu\text{g}/\text{m}^3$   
 자료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3\\_020014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3_0200145&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20  
 통계해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서울을 제외한 6대 도시에서 낮아졌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에는 7대 도시에서 일제히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낮아졌는데, 지역에 따라 적게는  $3\mu\text{g}/\text{m}^3$ 에서 많게는  $6\mu\text{g}/\text{m}^3$ 까지 감소하였다.

**통계표** 7대 도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 2015-2020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5	23	26	26	29	27	28	25
2016	26	27	25	26	23	23	23
2017	25	26	24	25	24	21	25
2018	23	23	22	22	24	22	23
2019	25	21	23	23	24	22	20
2020	21	17	20	18	18	17	17

통계번호 ENV-33805

통계명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쾌적한 환경 권리

산출방법  $GDP \text{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 (\text{환경보호지출액} \div \text{명목 GDP}) \times 100.$

단위 %

자료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27\\_010000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27_0100005&conn_path=I3)

수록기간 2004-2019

통계해설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규모는 2004년 1.77%에서 2009년 1.98%까지 높아졌다가 2010년부터 감소 추세로 바뀌면서 점차 낮아져 2019년에는 1.51%에 그쳤다. 환경보호지출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공공부문의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은 2009년 0.98%에서 2019년 0.53%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1.00%에서 0.98%로 0.02%p 감소하는 데 그쳤다.

통계표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2004-2019

연도	전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2004	1.77	0.85	0.92
2005	1.84	0.88	0.96
2006	1.94	0.91	1.03
2007	1.93	0.89	1.04
2008	1.91	0.86	1.05
2009	1.98	0.98	1.00
2010	1.81	0.84	0.97
2011	1.75	0.81	0.95
2012	1.74	0.80	0.94
2013	1.72	0.81	0.90
2014	1.69	0.77	0.91
2015	1.65	0.75	0.90
2016	1.70	0.78	0.92
2017	1.58	0.66	0.92
2018	1.47	0.54	0.92
2019	1.51	0.53	0.98

통계번호 ENV-33806

통계명 녹지환경 만족도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쾌적한 환경 권리

산출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녹지환경에 대해 ‘약간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5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5R&conn_path=I3)

수록기간 2010-2022

통계해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녹지환경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6년까지 40%대에 그치다가 2018년에 50.2%로 크게 늘어났고 이후 2020년에도 58.7%로 더 늘어났다. 2022년에는 5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녹지환경 만족도는 도시지역보다 농촌 지역에서 더 높다. 최근 농촌지역의 녹지환경 만족도는 70%에 육박하지만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통계표** 거주지역별 녹지환경 만족도, 2010-2022

연도	전체	거주지역별	
		도시	농어촌
2010	41.9	37.8	60.8
2012	43.8	40.9	57.7
2014	41.2	38.3	55.2
2016	41.2	39.8	48.6
2018	50.2	47.3	63.6
2020	58.7	56.3	69.6
2022	59.2	57.1	68.7

주: 1)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도시는 동 지역, 농어촌은 읍면 지역임.

통계번호 ENV-33807

통계명 대기환경 만족도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쾌적한 환경 권리

산출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해 ‘약간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는 응답자의 비율  
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1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1R&conn_path=I3)

수록기간 2010-2022

통계해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며 28.6%까지 떨어졌으나 2020년에 38.2%로 반등한 데 이어 2022년에도 42.3%로 올랐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의 대기환경 만족도가 도시지역보다 훨씬 더 높다. 하지만 도농 간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통계표** 거주지역별 대기환경 만족도, 2010-2022

연도	전체	거주지역별	
		도시	농어촌
2010	36.0	30.5	60.5
2012	40.1	34.3	67.4
2014	36.0	30.2	63.7
2016	31.7	27.0	54.0
2018	28.6	24.2	49.5
2020	38.2	34.5	55.2
2022	42.3	39.1	57.4

주: 1)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도시는 동 지역, 농어촌은 읍면 지역임.



통계번호 ENV-33808

통계명 도시 소음도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쾌적한 환경 권리

산출방법 도로변 ‘가’(학교, 병원, 전용주거, 녹지) 및 ‘나’(일반주거, 준주거) 지역 소음도임.

단위 dB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71](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71)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대도시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는 일부 지역에서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광주에서는 낮과 밤 소음도가 모두 개선되었고 대구에서는 밤 소음도, 대전에서는 낮 소음도가 개선되었다. 서울, 부산, 인천에서는 낮과 밤 소음도 모두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표** 주요 도시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 2000-2020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2000	71	65	71	63	69	67	68	64	72	66	67	56
2001	70	66	70	64	69	65	66	61	68	60	65	58
2002	70	65	70	63	68	63	67	62	67	61	65	59
2003	70	66	69	63	69	63	67	62	66	61	61	58
2004	70	66	69	64	69	63	68	62	66	61	61	56
2005	70	66	68	63	69	63	68	63	66	61	62	56
2006	69	66	68	63	68	62	68	64	65	60	62	56
2007	69	65	68	63	68	63	68	64	66	60	62	56
2008	68	65	68	63	69	64	67	63	63	59	63	56
2009	68	64	67	63	68	64	67	63	63	58	62	56
2010	68	65	67	63	67	63	66	63	64	59	62	56
2011	68	65	67	62	67	62	66	62	64	59	61	55
2012	68	65	67	62	68	63	67	63	63	58	61	55
2013	68	65	67	62	68	63	66	62	64	59	60	54
2014	68	66	67	62	67	63	66	62	63	58	60	55
2015	69	66	67	62	67	62	66	62	63	57	60	56
2016	68	66	67	62	65	61	66	62	63	57	60	54
2017	68	66	68	62	67	61	66	61	62	57	61	55
2018	68	66	66	61	67	60	66	62	63	58	60	53
2019	68	66	65	58	67	62	66	61	62	57	60	53
2020	68	65	65	59	67	61	66	61	63	56	61	54

주: 1)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 환경기준은 낮 65dB, 밤 55dB임.  
2) 낮 시간대(6-22시) 소음도는 각 측정지점에서 2시간 이상 간격으로 4회 이상, 밤 시간대(22-6시) 소음도는 낮 시간대에 측정된 지점에서 2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출 평균한 값임.

통계번호 ENV-33809

통계명 소음환경 만족도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쾌적한 환경 권리

산출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소음 및 진동 환경에 대해 ‘약간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4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4R&conn_path=I3)

수록기간 2010-2022

통계해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소음환경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8년까지 30% 미만에서 등락하다가 2020년과 2022년에 35.7%와 36.6%로 높아졌다. 소음환경 만족도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높다. 하지만 도농 간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통계표** 거주지역별 소음환경 만족도, 2010-2022

시점	전체	거주지역별	
		도시	농어촌
2010	27.3	23.1	46.8
2012	29.0	23.9	52.8
2014	26.9	22.1	50.0
2016	27.5	23.8	45.3
2018	29.9	26.1	47.8
2020	35.7	32.4	51.0
2022	36.6	33.5	51.0

주: 1)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도시는 동 지역, 농어촌은 읍면 지역임.

통계번호 ENV-33810

통계명 시도별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 초과율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쾌적한 환경 권리

산출방법 환경기준 초과율 = (환경기준 초과 측정소 수 ÷ 유효 측정소 수) × 100.  
환경기준은 연평균 기준임.

단위 %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자료출처 [https://www.airkorea.or.kr/web/detailViewDown?pMENU\\_NO=125](https://www.airkorea.or.kr/web/detailViewDown?pMENU_NO=125)

수록기간 2000-2020

통계해설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 초과율은 미세먼지 유효 측정소 중 환경기준을 초과한 측정소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07년 75.6%에서 점차 낮아서 2018년과 2019년에는 4.1%와 5.5%에 그쳤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에는 전국의 모든 측정소에서 환경기준 이내의 수치를 나타냈다.

**통계표** 시도별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 초과율, 2000-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0	2.8	8.0	0.0	0.0	0.0	0.0	0.0	0.0	-	5.5	0.0	0.0	0.0	0.0	0.0	0.0	0.0	0.0
2001	23.8	38.5	11.1	33.3	0.0	25.0	0.0	16.7	-	50.0	0.0	25.0	0.0	33.3	0.0	0.0	0.0	0.0
2002	31.7	70.4	53.8	28.6	20.0	0.0	0.0	0.0	-	46.5	0.0	0.0	0.0	0.0	12.5	10.0	0.0	0.0
2003	15.5	25.9	0.0	9.1	18.2	0.0	0.0	0.0	-	36.2	0.0	20.0	0.0	0.0	0.0	10.0	0.0	0.0
2004	17.3	3.7	18.8	11.1	18.2	0.0	0.0	0.0	-	37.3	16.7	33.3	20.0	0.0	0.0	20.0	14.3	0.0
2005	12.9	7.4	17.6	22.2	9.1	0.0	0.0	0.0	-	27.3	16.7	0.0	0.0	0.0	0.0	9.1	10.0	0.0
2006	13.8	0.0	17.6	0.0	50.0	0.0	0.0	0.0	-	32.1	0.0	0.0	0.0	0.0	0.0	18.2	0.0	0.0
2007	75.6	100.0	82.4	72.7	91.7	42.9	28.6	58.3	-	98.4	47.1	85.7	71.4	80.0	9.1	63.6	46.7	0.0
2008	71.3	92.6	58.8	90.9	86.7	57.1	14.3	76.9	-	90.3	71.4	85.7	42.9	50.0	27.3	72.7	33.3	0.0
2009	59.8	96.0	37.5	18.2	93.3	14.3	14.3	46.2	-	87.5	42.9	100.0	28.6	66.7	16.7	27.3	26.7	0.0
2010	51.9	32.0	47.1	45.5	80.0	14.3	0.0	46.2	-	86.2	42.9	85.7	28.6	70.0	7.1	18.2	25.0	33.3
2011	44.4	4.0	35.3	36.4	71.4	14.3	0.0	38.5	-	81.2	42.9	62.5	14.3	72.7	7.7	23.1	14.3	0.0
2012	23.2	0.0	22.2	27.3	26.7	14.3	0.0	30.8	-	36.8	42.9	55.6	14.3	36.4	0.0	23.1	0.0	0.0
2013	37.5	0.0	42.1	27.3	40.0	14.3	0.0	21.4	-	64.7	42.9	77.8	14.3	50.0	0.0	42.9	36.8	0.0
2014	38.8	4.0	42.1	44.4	40.0	0.0	0.0	14.3	-	71.8	42.9	55.6	14.3	41.7	0.0	35.7	36.8	33.3
2015	34.4	4.0	21.1	27.3	53.3	16.7	12.5	14.3	-	66.7	42.9	55.6	14.3	50.0	6.3	15.4	15.8	0.0
2016	28.4	24.0	10.5	9.1	40.0	0.0	12.5	7.1	0.0	62.5	33.3	11.1	14.3	42.9	0.0	0.0	10.5	0.0
2017	20.1	0.0	10.5	0.0	20.0	0.0	12.5	7.1	0.0	50.0	14.3	10.0	28.6	35.7	0.0	0.0	0.0	0.0
2018	4.1	0.0	0.0	0.0	0.0	0.0	12.5	0.0	0.0	6.8	0.0	0.0	5.3	12.5	0.0	12.5	5.0	0.0
2019	5.5	0.0	0.0	0.0	0.0	0.0	0.0	0.0	0.0	18.3	0.0	0.0	13.8	0.0	0.0	0.0	4.0	0.0
202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 1) 연간 대기환경기준은 2001-2006년 70 $\mu$ g/ $m^3$ , 2007년 이후 50 $\mu$ g/ $m^3$ 임.

2) 2000년까지는 6개월 미만 측정치 미산정, 2001년부터는 유효측정 비율 50% 미만 미산정, 2009년부터는 75% 미만 미산정.

통계번호 ENV-33811

통계명 시도별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초과율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쾌적한 환경 권리

산출방법 환경기준 초과율 = (환경기준 초과 측정소 수 ÷ 유효 측정소 수) × 100.  
환경기준은 연평균 기준임.

단위 %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자료출처 [https://www.airkorea.or.kr/web/detailViewDown?pMENU\\_NO=125](https://www.airkorea.or.kr/web/detailViewDown?pMENU_NO=125)

수록기간 2015-2020

통계해설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초과율은 초미세먼지 유효 측정소 중 환경기준을 초과한 측정소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15년 35.0%에서 2018년 100%까지 오른 후 2020년에 83.2%로 다소 낮아졌다. 2020년 자료로 보면 서울,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전북 지역에서 100% 초과율을 나타낸 가운데 초과율이 50% 미만에 그친 지역은 전남뿐이었다.

**통계표** 시도별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초과율, 2015-2020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	35.0	12.0	42.1	57.1	25.0	33.3	100.0	33.3	-	40.0	50.0	-	-	-	33.3	-	54.5	0.0
2016	53.3	68.0	73.7	42.9	50.0	16.7	0.0	0.0	-	68.8	66.7	44.4	100.0	100.0	30.0	100.0	45.5	0.0
2017	39.1	16.0	52.6	18.2	33.3	16.7	0.0	50.0	0.0	66.7	28.6	70.0	60.0	76.9	0.0	12.5	18.2	0.0
201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9	98.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4.7	100.0	100.0	100.0	90.0	93.8	92.3	100.0
2020	83.2	100.0	64.0	100.0	100.0	88.9	90.0	100.0	100.0	100.0	70.0	95.7	96.6	100.0	37.1	63.9	56.3	66.7

주: 1) 연간 대기환경기준은 50 $\mu$ g/ m<sup>3</sup>임.  
2) 유효측정 비율 75% 미만은 미산정.

통계번호 ENV-33812

통계명 토양환경 만족도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쾌적한 환경 권리

산출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토양환경에 대해 ‘약간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는 응답자의 비율  
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3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3R&conn_path=I3)

수록기간 2010-2022

통계해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토양환경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8년까지 30% 안  
팍 수준에 그쳤으나 이후 증가 추세로 바뀌며 2020년과 2022년에 36.7%와 40.2%로  
늘어났다. 토양환경 만족도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높다. 하지만 도시지역에  
서 토양환경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도농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통계표** 거주지역별 토양환경 만족도, 2010-2022

연도	전체	거주지역별	
		도시	농어촌
2010	30.4	26.5	48.0
2012	33.5	29.1	54.8
2014	30.5	26.2	51.4
2016	29.3	26.1	45.4
2018	29.4	26.2	44.7
2020	36.7	34.3	47.9
2022	40.2	38.3	49.5

주: 1)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도시는 동 지역, 농어촌은 읍면 지역임.

통계번호 ENV-33813

통계명 환경권 존중도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쾌적한 환경 권리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환경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되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환경권이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64.2%에서 2020년 72.7%, 2021년 78.9%로 매년 늘어났다. 하지만 2022년에는 7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연령별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환경권 존중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64.2	64.4	63.9	64.7	60.3	60.7	62.5	70.1	69.2	62.1	63.7	66.1
2020	72.7	72.1	73.4	74.7	71.7	74.0	68.2	74.5	74.9	72.5	72.2	69.2
2021	78.9	78.4	79.4	78.9	76.8	77.1	79.2	81.2	83.7	77.3	78.8	71.5
2022	75.9	75.5	76.2	77.5	72.4	73.7	74.8	78.7	80.9	75.3	74.5	73.4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ENV-33814

통계명 환경분쟁조정 발생건수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쾌적한 환경 권리

산출방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환경분쟁 건수임.

단위 건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자료출처 <http://stat.me.go.kr/portal/stat/envStatYearbookPage.do>

수록기간 2000-2019

통계해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환경분쟁 건수는 2000년 95건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증하여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14년에 이어 2018년과 2019년에는 500건을 넘었다. 환경분쟁의 80% 이상은 소음·진동 때문에 발생한다. 최근에는 대기와 수질 문제로 인한 환경분쟁이 줄어들고 일조 문제로 인한 환경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표** 환경분쟁조정 발생건수와 피해원인별 발생비율, 2000-2019

연도	총발생건수(건)	피해원인별 발생비율(%)				
		소음·진동	일조	대기	수질	기타
2000	95	83.2	0.0	12.6	4.2	0.0
2001	167	83.8	0.0	10.2	6.0	0.0
2002	297	86.2	0.0	10.8	1.7	1.3
2003	349	90.5	0.0	5.4	2.9	1.1
2004	402	90.8	0.2	4.2	2.7	2.0
2005	384	88.0	0.0	4.9	2.1	4.9
2006	396	88.9	0.0	6.3	2.3	2.5
2007	387	86.6	0.0	5.4	2.1	5.9
2008	383	85.9	5.7	5.5	1.3	1.6
2009	440	87.5	0.0	4.1	0.9	7.5
2010	321	85.4	3.7	2.8	2.8	5.3
2011	321	87.2	1.9	5.9	1.2	3.7
2012	409	84.1	0.0	6.6	1.7	7.6
2013	355	80.3	0.0	7.3	2.3	10.1
2014	560	87.0	3.2	5.0	0.9	3.9
2015	462	87.9	2.8	3.2	1.1	5.0
2016	366	84.7	6.8	4.4	0.5	3.6
2017	369	90.5	4.9	0.8	0.3	3.5
2018	520	88.8	3.1	1.2	1.2	5.8
2019	512	84.4	7.8	2.5	0.0	5.3

주: 1) 피해원인별 발생비율 = (피해원인별 발생건수 ÷ 총발생건수) × 100.

통계번호 ENV-33815

통계명 환경성질환 유병률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쾌적한 환경 권리

산출방법 환경성질환 유병률 = (환경성질환 환자 수 ÷ 총인구) × 100. 총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자료출처

수록기간 2006-2020

통계해설 전체 인구 중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2006년 13.7%에서 점차 늘어나 2018년에는 16.8%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에는 12.6%로 크게 감소하였다. 질환종류별로 보면 비염 환자가 대부분이며 아토피 피부염 환자와 천식 환자는 일부에 그친다. 천식 환자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통계표 환경성질환 유병률, 2006-2020

연도	전체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비염(J30)	아토피 피부염(L20)	천식(J45) 및 천식지속(J46)
2006	13.7	8.2	2.2	4.8
2007	14.1	8.8	2.2	4.7
2008	14.6	9.4	2.2	4.7
2009	15.9	10.9	2.1	4.7
2010	15.8	11.1	2.1	4.5
2011	15.9	11.3	2.0	4.4
2012	15.9	11.7	1.9	4.1
2013	15.7	11.8	1.9	3.6
2014	16.3	12.5	1.9	3.5
2015	15.8	12.3	1.8	3.3
2016	16.6	13.1	1.8	3.2
2017	16.6	13.4	1.8	2.9
2018	16.8	13.6	1.8	2.8
2019	16.6	13.6	1.8	2.6
2020	12.6	10.0	1.9	1.6

주: 1) 전체 유병률 집계에는 중복 질환자가 제외됨.



통계번호 ENV-33816

통계명 환경예산 비율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쾌적한 환경 권리

산출방법 환경예산 비율 = (환경예산 ÷ 정부예산) × 100.

단위 %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자료출처 <http://stat.me.go.kr/portal/stat/envStatYearbookPage.do>

수록기간 2004-2019

통계해설 정부의 전체 예산 대비 환경부문 예산은 2007년 1.86%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로 바뀌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2017년부터 2% 아래로 떨어지면서 2019년에는 1.99%에 그쳤다. 전체 환경예산의 대부분은 환경부 예산 이고 환경부 외 부처의 환경예산은 3-4%에 지나지 않는다.

통계표 **환경예산 비율, 2004-2019**

연도	전체	환경부	환경부 외
2004	1.93	0.90	1.03
2005	2.12	1.70	0.42
2006	1.94	1.71	0.23
2007	1.86	1.82	0.04
2008	1.87	1.82	0.05
2009	1.94	1.85	0.08
2010	2.07	1.98	0.08
2011	2.11	2.03	0.08
2012	2.07	2.01	0.06
2013	2.07	1.99	0.08
2014	2.04	1.98	0.07
2015	2.07	2.01	0.07
2016	2.02	1.94	0.08
2017	1.99	1.91	0.08
2018	1.80	1.73	0.08
2019	1.99	1.91	0.07

주: 1) 전체는 환경부 예산과 환경부 외 부처의 환경예산을 합한 환경부문 총예산임.

통계번호 ENV-33901

통계명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율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식수 및 위생 권리

산출방법  $\text{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율} = (\text{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지점 수} \div \text{검사지점 수}) \times 100.$

단위 %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자료출처 <http://stat.me.go.kr/portal/stat/envStatYearbookPage.do>

수록기간 2000-2019

통계해설 먹는물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시설별로 다르다. 수도꼭지와 정수장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0.1% 미만으로 매우 낮지만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약수터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매우 높는데, 200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20-30%를 오르내린다.

**통계표** 시설별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율, 2000-2019

연도	정수장			수도꼭지			소규모 수도시설			약수터		
	검사 지점 수 (개소)	수질기준 초과지점 수(개소)	수질기준 초과율 (%)	검사 지점 수 (개소)	수질기준 초과지점 수(개소)	수질기준 초과율 (%)	검사 지점 수 (개소)	수질기준 초과지점 수(개소)	수질기준 초과율 (%)	검사 지점 수 (개소)	수질기준 초과지점 수(개소)	수질기준 초과율 (%)
2000	1,141	7	0.61	3,611	13	0.36	-	-	-	7,064	918	13.00
2001	1,078	1	0.09	3,601	6	0.17	-	-	-	7,078	696	9.83
2002	1,088	7	0.64	3,639	16	0.44	-	-	-	6,945	1,024	14.74
2003	1,079	13	1.20	3,680	24	0.65	-	-	-	6,903	1,156	16.75
2004	1,062	10	0.94	3,652	20	0.55	-	-	-	10,472	2,421	23.12
2005	937	5	0.53	3,806	12	0.32	-	-	-	10,120	2,215	21.89
2006	1,032	1	0.10	4,194	1	0.02	-	-	-	9,919	2,242	22.60
2007	1,017	2	0.20	4,513	15	0.33	-	-	-	9,751	2,379	24.40
2008	1,007	4	0.40	4,646	8	0.17	-	-	-	9,347	2,049	21.92
2009	971	0	0.00	4,649	1	0.02	-	-	-	9,156	2,092	22.85
2010	969	1	0.10	4,695	1	0.02	-	-	-	8,688	1,911	22.00
2011	947	1	0.11	4,603	1	0.02	-	-	-	7,982	2,030	25.43
2012	-	-	-	6,989	1	0.01	-	-	-	8,500	2,283	26.86
2013	-	-	-	884	0	0.00	-	-	-	8,384	2,374	28.32
2014	-	-	-	2,350	0	0.00	-	-	-	7,702	2,326	30.20
2015	-	-	-	-	-	-	-	-	-	6,696	1,902	28.41
2016	-	-	-	2,908	16	0.55	-	-	-	6,630	2,106	31.76
2017	5,455	13	0.24	72,014	44	0.06	74,097	2,331	3.15	4,985	1,802	36.15
2018	5,440	4	0.07	73,001	16	0.02	71,900	2,590	3.60	5,795	2,011	34.70
2019	5,429	3	0.06	75,360	19	0.03	71,022	2,701	3.80	5,420	1,391	25.66

주: 1) 2012년에는 서울시 등 7개 지역 수도꼭지 검사만 실시, 2013년은 '수돗물 사랑마을' 수도꼭지 검사 결과임.

통계번호 ENV-33902

통계명 수질오염사고 발생건수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식수 및 위생 권리

산출방법

단위 건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자료출처 <http://stat.me.go.kr/portal/stat/envStatYearbookPage.do>

수록기간 2008-2020

통계해설 수질오염사고는 2012년까지 매년 100건 미만 발생하는 데 그쳤으나 2013년에 157건으로 급증하였고 2014년에는 212건이나 발생하였다. 이후 2018년에 113건까지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 162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수질오염사고의 주된 유형은 유류 유출이다. 유류 유출은 수질오염사고의 40%가량을 차지한다.

**통계표** 수질오염사고 유형별 발생건수, 2008-2020

연도	전체	유류 유출	화학물질	물환경 변화 (물고기 폐사)	기타
2008	53	20	6	10	17
2009	60	23	5	19	13
2010	86	46	6	17	17
2011	68	38	6	11	13
2012	83	42	3	14	24
2013	157	69	24	24	40
2014	212	89	16	70	37
2015	133	58	7	48	20
2016	116	55	7	38	16
2017	122	53	16	37	16
2018	113	55	7	27	24
2019	138	56	20	38	24
2020	162	60	27	40	35

통계번호 ENV-33903  
 통계명 하천환경 만족도  
 통계분류 환경과 생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식수 및 위생 권리  
 산출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하천환경에 대해 ‘약간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는 응답자의 비율  
 임.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2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2R&conn_path=I3)  
 수록기간 2010-2022  
 통계해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하천환경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2년 36.9%에서  
 2018년 29.3%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추세가 바뀌며 2020년과 2022년에 37.7%와  
 41.1%로 증가하였다. 하천환경 만족도는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높다. 하지만 도농 간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통계표** 거주지역별 하천환경 만족도, 2010-2022

연도	전체	거주지역별	
		도시	농어촌
2010	33.9	29.4	54.2
2012	36.9	32.0	59.8
2014	34.8	30.1	57.9
2016	33.1	29.3	51.5
2018	29.3	25.8	45.4
2020	37.7	35.2	49.0
2022	41.1	39.0	51.1

주: 1) 2010년은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도시는 동 지역, 농어촌은 읍면 지역임.

## 11 가치와 의식

인권영역	권리유형	인권주제	통계번호	통계명	취약집단		
가치와 의식	인권실태 평가		VAL-04001	본인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VAL-04002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VAL-04003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VAL-04004	정부의 인권침해 및 차별 대응에 대한 평가			
			VAL-04005	차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VAL-04006	청소년의 가정 내 인권존중감	아동청소년		
			VAL-04007	청소년의 교내 인권존중감	아동청소년		
			VAL-04008	청소년의 사이버공간 내 인권존중감	아동청소년		
			VAL-04009	청소년의 한국사회 인권존중감	아동청소년		
			인권 인식과 교육		VAL-04101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
					VAL-04102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경험률	아동청소년
					VAL-04103	‘인권’ 접촉도	
					VAL-04104	인권교육 경험률	
					VAL-04105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VAL-04106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시 대처방법	
					VAL-04107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시 대처하지 않은 이유	
					VAL-04108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시 도움 요청 기관	
	VAL-04109	인권침해 및 차별 대처방법 인지도					
	VAL-04110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주도해야 하는 집단					
	VAL-04111	인권활동 참여율					
	VAL-04112	장애인 인권교육 경험률	장애인				
	VAL-04113	장애인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장애인				
	VAL-04114	장애인으로서의 존중감	장애인				
	VAL-04115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VAL-04116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	아동청소년				
	VAL-04117	혐오표현 접촉 시 대처방법					
	VAL-04118	효과적 인권증진 방안					

통계번호 VAL-04001

통계명 본인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실태 평가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받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받는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71.3%에서 2020년 79.4%, 2021년 82.9%, 2022년 88.4%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연령별로는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본인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71.3	71.0	71.6	76.3	73.4	72.3	66.6	69.3	64.2	68.2	76.5	85.0
2020	79.4	78.8	79.9	82.3	79.1	82.1	75.8	78.4	78.3	77.0	82.2	81.8
2021	82.9	82.4	83.4	86.2	83.0	84.4	82.1	80.4	78.7	81.2	86.4	81.2
2022	88.4	88.2	88.6	89.6	87.6	90.1	87.4	87.7	86.2	87.6	89.8	92.1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002

통계명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실태 평가

산출방법 지난 1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조금 좋아지고 있다’ 또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지난 1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0년 36.8%, 2021년 36.3%에서 2022년에는 31.2%로 감소하였다. 이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낮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난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62.4	64.0	60.9	53.7	64.3	68.0	65.4	60.8	56.6	58.8	67.4	76.9
2020	36.8	37.8	35.8	33.2	38.5	44.9	38.9	31.1	28.2	36.0	41.5	43.0
2021	36.3	38.8	33.8	36.7	37.0	40.0	39.9	30.6	27.9	33.6	41.8	45.4
2022	31.2	33.0	29.4	34.0	34.1	33.3	30.3	27.2	21.9	29.9	35.5	41.1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003

통계명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실태 평가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다소 심각하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 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54.0%에서 2020년 30.4%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41.8%로 반등한 후 2022년에 34.8%로 다시 감소하였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54.0	51.6	56.3	51.4	53.6	56.5	58.3	50.7	50.1	56.3	53.7	52.7
2020	30.4	29.9	30.9	29.7	30.7	30.5	35.0	27.2	26.4	32.2	30.3	32.3
2021	41.8	41.6	42.0	42.3	42.3	41.5	44.9	39.3	36.2	45.2	40.9	45.0
2022	34.8	34.8	34.9	36.9	38.2	38.2	36.0	29.1	26.3	36.4	36.5	42.7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004

통계명 정부의 인권침해 및 차별 대응에 대한 평가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실태 평가

산출방법 정부의 인권 관련 대응 평가에 대해 ‘어느 정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정부가 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해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49.6%에서 2020년 63.0%, 2021년 66.6%, 2022년 73.3%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 하지만 남녀 간의 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2019년 39.8%, 2020년 48.2%, 2021년 53.8, 2022년 55.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21년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으나 2022년에는 여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정부의 인권침해 및 차별 대응에 대한 평가, 2019-2022

		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하고 있다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전체		49.6	63.0	66.6	73.3	39.8	48.2	53.8	55.6
성별	남자	52.3	65.0	67.6	73.9	41.4	49.2	54.4	54.7
	여자	46.9	61.1	65.6	72.8	38.3	47.4	53.3	56.5
연령별	20대 이하	46.5	58.7	61.6	70.6	32.7	44.9	47.7	53.5
	30대	46.7	58.4	63.5	69.3	36.0	41.9	50.8	52.0
	40대	48.0	64.9	67.0	73.1	38.0	48.2	51.9	51.8
	50대	49.6	62.9	68.3	72.9	41.5	48.2	55.3	55.5
	60대 이상	54.9	67.3	69.8	77.5	47.3	54.2	59.4	61.1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52.0	66.7	71.2	78.1	45.8	55.3	61.6	62.4
	고졸	47.8	62.6	65.3	72.4	38.8	48.1	52.4	56.2
	대졸	48.9	61.1	65.9	72.5	37.3	45.1	52.2	53.0
	대학원졸 이상	61.8	66.4	64.6	69.4	45.7	43.8	46.7	43.5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005

통계명 차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실태 평가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다소 심각하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0년 33.7%에서 2021년 47.4%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 37.6%로 감소하였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 비해 60대 이상에서 낮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대학원졸 이상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차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69.1	67.1	71.2	69.9	73.6	74.7	71.2	59.7	58.5	72.3	71.6	63.7
2020	33.7	33.8	33.7	37.1	39.3	34.7	36.4	25.7	24.2	35.7	36.3	37.0
2021	47.4	46.6	48.3	52.4	51.6	49.2	47.8	40.7	38.8	49.6	48.5	57.4
2022	37.6	38.1	37.1	42.3	41.4	40.7	39.4	29.8	26.9	39.4	39.7	48.7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006

통계명 청소년의 가정 내 인권존중감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실태 평가

산출방법 가정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받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받는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02\\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02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가정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2013년 90.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96.6%로 높아졌다. 이 비율은 학교급별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학업성적과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정에서의 인권존중감이 낮다.

통계표

학교급·학업성적·소득수준별 청소년의 가정 내 인권존중감, 2013-2021

연도	전체	학교급별					학업성적별			소득수준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상	중	하
2013	90.1	92.2	87.8	-	91.6	85.4	93.1	92.0	83.9	93.4	90.0	81.6
2014	92.9	94.0	92.7	-	92.8	90.2	95.2	93.7	89.2	95.1	92.7	87.6
2015	94.5	95.1	94.6	-	94.8	91.6	96.1	95.7	90.5	96.8	93.7	87.7
2016	94.3	95.2	93.7	94.1	94.6	91.5	96.0	94.7	91.1	95.9	94.2	87.3
2017	94.8	95.7	93.7	94.7	95.2	92.6	95.7	95.6	91.6	96.6	94.7	84.9
2018	95.2	96.3	94.8	94.5	94.8	93.3	97.2	95.6	91.4	96.7	94.8	87.4
2019	95.6	96.3	95.1	95.5	95.4	95.9	97.6	96.2	91.5	97.3	95.2	86.6
2020	96.3	97.3	96.5	95.1	95.5	93.6	97.5	97.0	93.4	97.9	95.9	85.8
2021	96.6	96.7	96.6	96.4	96.6	95.0	97.6	97.1	94.0	97.9	96.2	88.7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007

통계명 청소년의 교내 인권존중감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실태 평가

산출방법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받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받는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02\\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02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2013년 80.1%에서 2021년 95.2%로 꾸준히 높아졌다. 이 비율은 초·중·고 학생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학업성적과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하위권 성적 학생과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내 인권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낮다.

통계표

학교급·학업성적·소득수준별 청소년의 교내 인권존중감, 2013-2021

연도	전체	학교급별					학업성적별			소득수준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상	중	하
2013	80.1	87.0	78.7	-	77.4	68.1	85.4	83.2	69.6	84.1	79.3	71.2
2014	84.1	89.6	85.6	-	79.6	73.1	88.2	86.2	76.0	86.4	84.4	76.9
2015	88.5	90.7	90.6	-	84.6	85.0	92.6	89.4	81.1	91.6	86.9	79.5
2016	88.5	93.1	89.4	84.2	85.3	80.0	92.1	89.1	82.8	90.4	88.1	81.1
2017	89.3	94.3	87.7	86.8	86.8	86.9	91.9	90.4	83.4	91.5	88.1	81.1
2018	89.0	94.1	88.9	85.2	85.1	85.5	91.9	90.7	81.8	91.2	88.5	78.6
2019	91.5	94.1	91.3	89.5	89.6	89.2	94.5	92.2	85.5	93.5	90.5	83.3
2020	95.6	96.2	96.2	94.5	94.6	94.6	97.5	96.2	92.2	96.6	95.7	88.4
2021	95.2	95.4	95.7	94.5	94.6	94.1	96.7	95.6	92.1	96.0	95.2	90.4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008

통계명 청소년의 사이버공간 내 인권존중감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실태 평가

산출방법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받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받는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02\\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02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4-2021

통계해설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2014년 76.2%에서 2015년 79.3%로 오른 후 최근까지 80% 안팎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존중감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낮다. 학업성적이 낮고 가구소득이 낮은 학생일수록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존중감이 낮다.

통계표

학교급·학업성적·소득수준별 청소년의 사이버공간 내 인권존중감, 2014-2021

연도	전체	학교급별					학업성적별			소득수준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상	중	하
2014	76.2	79.4	79.6	-	71.0	68.8	78.2	77.7	71.6	79.2	75.9	68.7
2015	79.3	79.5	82.5	-	76.2	75.5	81.7	79.7	75.5	81.9	77.8	73.0
2016	79.6	81.1	81.5	76.7	76.9	75.9	81.7	79.7	76.8	81.8	79.2	71.3
2017	80.2	82.0	82.4	77.1	76.2	80.4	82.6	80.4	76.5	83.1	78.6	70.2
2018	78.4	77.4	80.5	77.6	76.8	80.8	80.0	78.7	75.5	79.4	79.0	70.8
2019	81.1	81.7	84.1	77.9	77.1	80.7	82.9	81.7	76.8	83.7	79.3	71.2
2020	82.3	83.8	84.6	78.7	78.2	80.7	84.6	82.2	79.5	83.7	82.0	72.4
2021	81.7	83.0	82.6	79.6	79.3	80.6	83.7	81.9	78.4	83.6	80.6	73.1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009

통계명 청소년의 한국사회 인권존중감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실태 평가

산출방법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받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 받는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02\\_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02_1&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2013년 67.6%에서 2018년 77.9%로 높아졌고 2020년에는 83.7%로 더 올랐다. 2021년에는 전년보다 약간 낮은 82.4%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학교급별로는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학업성적과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학업성적이 낮고 가구소득이 낮은 학생일수록 한국사회에서의 인권존중감이 낮다.

통계표

학교급·학업성적·소득수준별 청소년의 한국사회 인권존중감, 2013-2021

연도	전체	학교급별					학업성적별			소득수준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상	중	하	상	중	하
2013	67.6	66.3	70.6	-	67.4	58.2	71.8	69.6	60.1	71.6	68.0	56.0
2014	70.8	70.9	75.2	-	67.7	62.1	75.2	72.4	63.2	74.3	71.7	58.8
2015	74.2	75.4	77.3	-	70.2	71.6	79.3	74.2	67.4	78.2	72.2	63.4
2016	76.2	78.8	78.4	72.2	72.5	71.3	80.2	76.1	70.8	79.3	75.9	63.1
2017	77.3	78.3	78.6	75.5	75.4	76.6	81.0	78.2	70.4	80.8	76.4	62.7
2018	77.9	76.8	80.1	77.0	76.3	79.6	81.0	78.8	71.8	80.6	76.8	65.9
2019	77.1	77.9	78.8	75.0	75.4	72.8	81.8	77.1	69.9	80.3	75.4	63.8
2020	83.7	82.2	86.1	83.0	83.7	80.9	86.5	84.0	79.7	85.7	83.6	70.0
2021	82.4	80.5	84.6	82.4	82.5	82.0	84.7	82.2	79.7	84.4	81.8	72.0

주: 1)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101

통계명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 인식과 교육

산출방법 초·중·고 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다' 또는 '매우 동의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초·중·고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86.0%, 2020년 95.6%, 2021년 90.0%, 2022년 87.4%로 90% 안팎 수준에 있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86.0	85.2	86.8	88.6	87.4	89.2	82.8	83.5	84.3	86.2	86.6	85.7
2020	95.6	95.1	96.0	96.5	95.8	96.0	95.6	94.3	94.4	95.9	96.0	94.4
2021	90.0	89.2	90.7	89.1	89.9	90.2	88.8	91.2	92.3	90.3	88.8	87.5
2022	87.4	86.9	87.8	86.1	85.8	89.0	86.7	88.4	88.4	86.8	87.4	88.3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102

통계명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경험률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 인식과 교육

산출방법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0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04&conn_path=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2013년 54.4%에서 2018년 70.1%로 높아졌다. 조사문항이 변경된 2019-2021년 기간에도 46.0%에서 48.0%로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인권교육 경험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더 높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고 이어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높다.

통계표

성 및 학교급별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경험률, 2013-2021

연도	전체	성별		학교급별				
		남학생	여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3	54.4	53.6	55.2	68.6	51.4	-	44.9	49.4
2014	64.4	63.1	65.8	73.5	66.1	-	54.7	60.5
2015	65.3	60.5	70.5	72.8	67.5	-	57.7	56.6
2016	70.0	67.3	73.0	78.5	72.6	61.5	62.2	58.7
2017	66.7	62.5	71.0	69.0	70.2	61.8	62.9	57.6
2018	70.1	68.2	72.4	69.9	71.0	69.8	72.1	60.5
2019	46.0	42.9	49.4	55.3	43.0	40.4	42.0	33.5
2020	46.5	42.3	51.1	55.2	47.0	38.2	39.6	32.6
2021	48.0	44.3	51.8	60.7	45.6	37.6	37.8	36.7

주: 1) 2018년까지는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로 질문하였고, 2019년부터는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로 질문함.  
2)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103

통계명 '인권' 접촉도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 인식과 교육

산출방법 평소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 접하는지에 대해 '거의 매일 접한다' 또는 '비교적 자주 접한다' 또는 '가끔 접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평소에 '인권'이라는 말을 가끔이라도 접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80.7%, 2020년 79.9%, 2021년 80.7%, 2022년 80.4%로 매년 8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다소 낮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확연히 낮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인권' 접촉도는 70%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 수록 낮게 나타난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인권' 접촉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80.7	84.1	77.3	87.0	84.0	84.8	85.7	66.8	58.5	82.3	88.4	92.8
2020	79.9	83.7	76.2	88.1	85.2	87.9	83.8	63.6	52.4	83.1	89.5	95.4
2021	80.7	84.1	77.4	86.4	86.9	87.1	85.6	66.1	53.8	83.1	89.6	91.2
2022	80.4	84.2	76.6	86.3	87.5	87.3	84.4	66.3	54.4	81.7	88.9	92.5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104

통계명 인권교육 경험률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 인식과 교육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9년 14.6%, 2020년 19.4%, 2021년 13.1%, 2022년 11.8%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인권교육 경험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적을수록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인권교육 경험률,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14.6	16.6	12.6	19.4	18.1	18.4	15.1	5.7	4.4	12.8	19.1	37.7
2020	19.4	20.4	18.4	25.9	25.8	25.1	20.5	6.8	5.0	16.7	26.8	46.1
2021	13.1	14.7	11.6	20.1	19.4	17.0	11.9	3.7	2.4	9.9	18.7	44.9
2022	11.8	13.6	9.9	18.5	16.5	14.7	11.8	3.5	2.4	9.0	16.6	38.5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105

통계명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 인식과 교육

산출방법 인권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필요한 편이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0년 92.6%에서 2021년 84.4%, 2022년 80.5%로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91.8	91.0	92.6	90.6	92.9	93.8	92.3	89.8	88.2	91.8	93.3	93.5
2020	92.6	92.0	93.2	93.0	94.4	94.1	92.5	90.3	88.8	92.6	94.3	94.0
2021	84.4	83.7	85.1	86.1	87.8	87.1	84.0	80.1	78.3	85.0	86.3	90.4
2022	80.5	81.6	79.4	84.5	85.2	83.0	80.4	74.2	70.6	79.5	84.7	93.5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106

통계명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시 대처방법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 인식과 교육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응답률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으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이 외에 가해자에게 시정 요구,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통계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시 대처방법, 2019-2022

	2019	2020	2021	2022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	77.4	71.2	72.8	73.1
가해자에게 시정 요구	12.5	14.4	14.3	13.7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	6.8	8.2	8.7	10.4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	1.6	2.1	5.0	4.8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3.4	7.8	4.8	3.6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1.5	4.1	1.4	2.0

주: 1) 복수 응답임.

2)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107

통계명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시 대처하지 않은 이유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 인식과 교육

산출방법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률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27.8%),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25.8%),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19.3%),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16.4%) 등의 순으로 높다 (2022년 기준).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21년 8.2%에서 2022년 19.3%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통계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시 대처하지 않은 이유, 2019-2022

	2019	2020	2021	2022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	25.7	34.3	33.9	27.8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36.7	24.4	21.8	25.8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가해자 처벌 어려움 등)	7.8	10.5	8.2	19.3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21.3	15.4	21.6	16.4
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5.0	9.2	6.1	5.4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1.2	2.4	3.4	2.6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1.6	2.2	3.0	2.3
기타	0.6	1.6	2.1	0.3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108

통계명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시 도움 요청 기관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 인식과 교육

산출방법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각각 어디인지에 대한 응답률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으로는 검찰·경찰(36.5%), 지방자치단체(29.7%), 기타 국가기관(24.4%), 국가인권위원회(23.2%), 청와대(20.8%)의 순으로 많다. 도움을 요청한 민간기관으로는 시민사회단체(54.3%), 언론기관(48.8%), 법률가(26.2%)의 순으로 많다(2022년 기준). 언론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2021년 18.6%에서 2022년 48.8%로 크게 늘어났다.

**통계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시 도움 요청 기관, 2019-2022

		2019	2020	2021	2022
공공기관	검찰·경찰	49.1	28.4	39.4	36.5
	지방자치단체	-	47.7	26.0	29.7
	기타 국가기관	21.3	4.5	21.6	24.4
	국가인권위원회	26.3	18.6	23.8	23.2
	청와대	8.4	9.2	14.9	20.8
민간기관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46.3	48.7	47.4	54.3
	언론기관	17.7	17.6	18.6	48.8
	법률가	36.8	37.6	37.5	26.2
	기타	6.7	5.9	12.1	0.0

주: 1) 2020년에는 공공기관 보기항목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됨.  
 2) 복수 응답임.  
 3)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109

통계명 인권침해 및 차별 대처방법 인지도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 인식과 교육

산출방법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아는 편이다’ 또는 ‘매우 잘 안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년 45% 안팎 수준으로 나타난다. 성별로는 여성의 인지도가 남성보다 낮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대처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대학원졸 이상 학력층의 인지도는 중졸 이하 학력층의 두 배 이상에 이른다.

**통계표** 성·연령·교육수준별 인권침해 및 차별 대처방법 인지도, 2019-2022

연도	전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2019	40.6	45.2	35.9	43.6	36.5	42.7	46.0	34.9	26.4	41.4	45.0	53.6
2020	50.4	55.8	45.2	58.4	47.0	53.8	56.9	40.7	30.9	53.0	56.5	65.8
2021	45.0	49.4	40.8	50.6	51.3	49.0	48.9	33.0	24.9	45.1	52.6	64.8
2022	46.4	51.1	41.9	55.7	51.3	51.0	49.2	33.8	24.7	47.1	53.2	73.2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110

통계명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주도해야 하는 집단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 인식과 교육

산출방법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어느 집단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률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인권침해와 차별을 해소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집단으로는 정부 등 공공기관(54.7%)을 압도적으로 많이 꼽는다. 공공기관 다음으로는 언론(16.1%)을 꼽는다. 이외에 차별받는 개인 또는 집단(9.9%), 교육기관(9.5%), 시민사회단체(8.8%)는 10% 미만에 그친다(2022년 기준).

**통계표**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주도해야 하는 집단, 2019-2022

	2019	2020	2021	2022
정부 등 공공기관	63.4	67.0	60.4	54.7
언론	10.5	9.0	12.2	16.1
차별받는 개인 또는 집단	3.9	6.3	8.6	9.9
교육기관	15.9	10.6	9.4	9.5
시민사회단체	5.5	6.4	8.3	8.8
국제기구	0.6	0.5	0.8	0.9
기타	0.3	0.3	0.1	0.1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111

통계명 인권활동 참여율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 인식과 교육

산출방법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 해소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인권 관련 활동으로는 서명운동(5.2%)과 기부(5.1%)가 가장 많다. 이들 활동 다음으로는 글쓰기나 댓글 달기(3.7%), 자원활동(2.5%)에 많이 참여한다. 피해자 조언·상담(1.8%), 온라인 또는 거리 캠페인이나 집회(1.2%), 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1.0%) 등은 1% 안팎에 그친다(2022년 기준). 전반적으로 인권활동 참여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통계표 인권활동 참여율, 2019-2022

	2019	2020	2021	2022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14.5	12.5	8.1	5.2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기부	12.0	10.6	5.9	5.1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나 댓글 달기	9.0	5.6	3.7	3.7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활동	11.9	6.8	3.1	2.5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상담	8.7	3.7	1.7	1.8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2.5	1.7	2.1	1.2
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	1.6	1.4	1.1	1.0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112

통계명 장애인 인권교육 경험률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 인식과 교육

산출방법 지난 1년 사이 장애 관련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F00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F006&conn_path=I3)

수록기간 2018-2020

통계해설 지난 1년 사이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2018년 3.2%, 2019년 2.4%, 2020년 2.8%로 매년 3% 안팎에 그친다. 인권교육 수강 내용으로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43.4%)가 가장 많은 가운데 착취·폭력·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15.2%), 문화·여가·체육 활동에 참여할 권리(8.6%), 건강권(7.9%), 노동권(6.8%)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2020년 기준).

**통계표 장애인 인권교육 경험률과 인권교육 내용, 2018-2020**

연도	인권교육 경험률	인권교육 내용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문화, 여가, 체육 활동에 참여할 권리	건강권	노동권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기타
2018	3.2	47.2	6.0	8.8	5.9	6.3	7.2	18.7
2019	2.4	37.7	7.7	9.0	4.4	14.2	10.0	16.9
2020	2.8	43.4	15.2	8.6	7.9	6.8	5.5	12.7

주: 1)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2) 장애 관련 인권교육 내용은 1순위 응답률임.

통계번호 VAL-04113

통계명 장애인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 인식과 교육

산출방법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률임.

단위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F01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F011&conn_path=I3)

수록기간 2018-2020

통계해설 장애인 인권증진 방안에 대해 장애인의 40%가량이 ‘비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교육 강화’는 27% 안팎에 그친다.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 교육이 우선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표** 장애인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2018-2020

연도	비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의 인권홍보 강화	장애인 차별금지 법과 같은 법률 강화	장애인폭력 전문 상담센터 구축	장애인의 교육수준 향상	기타	없음
2018	39.4	26.8	11.1	12.6	5.6	4.3	0.1	0.1
2019	42.8	26.9	10.3	10.4	6.1	3.5	-	0.0
2020	41.4	27.2	11.6	10.4	5.0	4.4	-	-

주: 1)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114

통계명 장애인으로서의 존중감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 인식과 교육

산출방법 자신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존중받고 있는 편이다' 또는 '매우 존중받고 있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F00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F007&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F00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8&tblId=DT_438001_AF008&conn_path=I3)

수록기간 2018-2020

통계해설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2018년 56.3%에서 2019년 57.4%, 2020년 60.1%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더 존중받아야 할 장애인의 권리로는 신체 자유와 안전 권리, 건강권,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노동권, 문화, 여가, 체육 활동에 참여할 권리, 교육권,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법 접근권, 기타 없음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표** 장애인으로서의 존중감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2018-2020

연도	장애인으로서의 존중감	더 존중받아야 할 장애인 권리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건강권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노동권	문화, 여가, 체육 활동에 참여할 권리	교육권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법 접근권	기타	없음
2018	56.3	34.6	13.9	21.0	7.6	6.6	2.6	3.1	1.9	8.5	0.2
2019	57.4	33.3	17.6	19.5	8.3	7.0	2.4	3.1	2.0	6.8	-
2020	60.1	31.7	20.9	17.3	8.6	7.1	3.9	2.8	2.7	5.0	0.0

주: 1) 더 존중받아야 할 장애인 권리는 1순위 응답률임.

2)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115

통계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 인식과 교육

산출방법 최근 1년 이내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34500111&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34500111&conn_path=I3)

수록기간 2015-2018

통계해설 최근 1년 이내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5년 90.8%, 2018년 91.0%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 비율은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고용형태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가 낮다.

통계표

성·연령집단·고용형태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2015-2018

연도	전체	성별		연령집단별				고용형태별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2015	90.8	91.4	90.4	84.4	93.0	93.7	90.6	92.0	80.4
2018	91.0	91.3	90.6	87.9	92.1	91.7	90.3	91.7	85.7

주: 1)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116

통계명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 인식과 교육

산출방법 최근 1년 이내에 근로권익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81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811&conn_path=I3)

수록기간 2016-2020

통계해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은 최근 1년 이내에 근로권익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을 나타낸다.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시설, 아르바이트 업체 등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2016년 대비 2020년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노동인권교육 경험률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다.

**통계표** 학교급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 2016-2020

연도	학교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			청소년시설			아르바이트 업체나 업체 분사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2016	26.5	24.5	28.3	6.2	5.9	6.6	6.7	7.6	5.8	2.7	2.6	2.9
2018	33.8	26.0	40.3	8.5	7.9	8.9	8.1	9.1	7.2	3.2	3.0	3.4
2020	49.1	43.2	54.6	9.4	8.5	10.3	8.2	7.9	8.4	4.8	3.9	5.7

주: 1)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117

통계명 혐오표현 접촉 시 대처방법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 인식과 교육

산출방법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대한 응답률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혐오표현을 접했을 때 취한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가 75%에 달한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경우에는 반대하는 의견을 내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행동이 동조하는 행동보다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표** 혐오표현 접촉 시 대처방법, 2019-2022

	2019	2020	2021	2022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음	66.6	65.3	75.7	74.6
반대하는 의견을 내거나 시정을 요구함	24.1	24.5	17.3	16.5
동조하는 의견이나 행동을 취함	9.3	10.2	7.0	8.8

주: 1)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통계번호 VAL-04118

통계명 효과적 인권증진 방안

통계분류 가치와 의식

-

인권 인식과 교육

산출방법 인권 보호와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응답률임.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9-2022

통계해설 인권증진에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54.5%)을 가장 많이 꼽는다. 이 외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대응(43.0%),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41.7%), 인권교육 강화(35.9%), 인권 캠페인이나 홍보활동(20.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2022년 기준).

통계표 효과적 인권증진 방안, 2019-2022

	2019	2020	2021	2022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	53.0	62.5	54.5	54.5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대응	30.0	32.6	41.2	43.0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	40.8	41.7	45.0	41.7
인권교육 강화	45.7	38.1	34.5	35.9
인권 캠페인이나 홍보활동	29.8	23.5	21.5	20.8
기타	-	0.1	0.1	0.1

주: 1) 1순위와 2순위 복수 응답임.

2) 2021년까지는 19세 이상, 2022년부터는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한국의 인권통계 2022

| 인쇄일 | 2022년 11월 30일

| 발행일 | 2022년 11월 30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02)2125-9822

| F A X | 02)2125-0918

ISBN : 978-89-6114-932-7 93310 비매품